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2008.2~2013.2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03

경제 2

세계를  
경제영토로

#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2008.2 ~ 2013.2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

## 세계를 경제영토로

03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0434-01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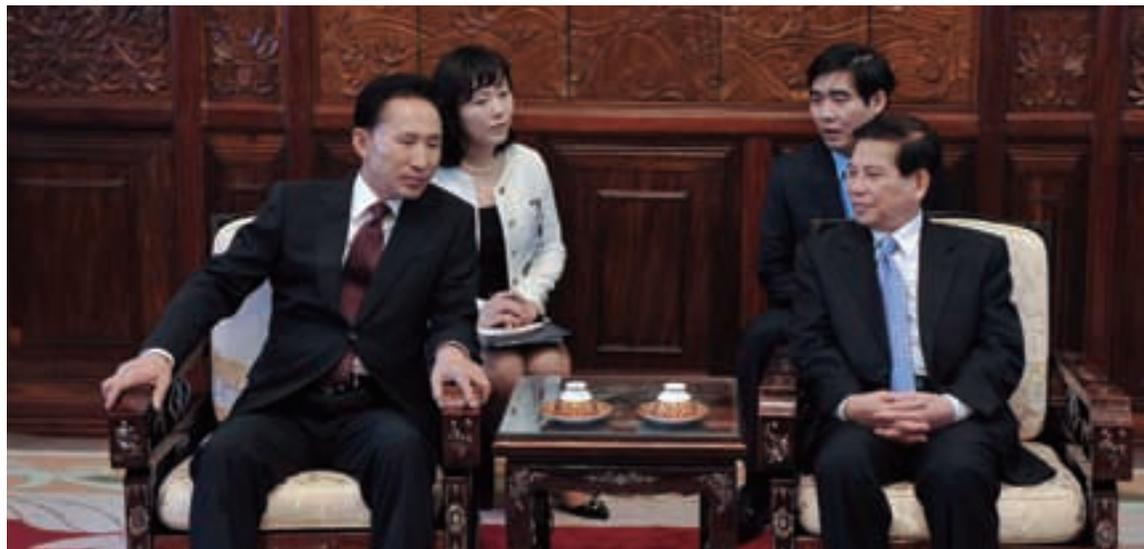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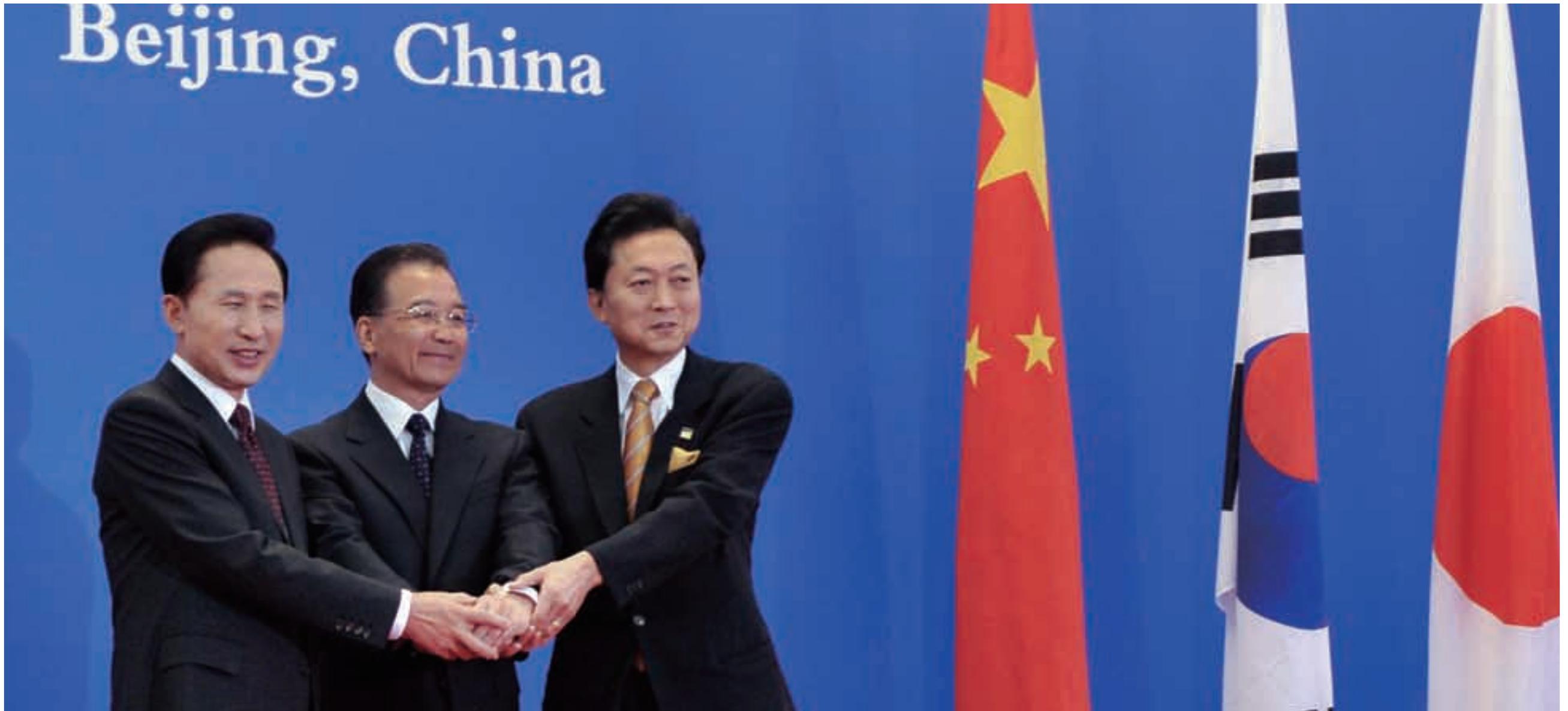
# 세계를 경제영토로

03



2011. 10. 13 이명박 대통령 미국 의회 연설

Beijing, China



- ① 2009. 10. 10  
한·중·일 정상회담
- ② 2009. 10. 21  
한·베트남 정상회담
- ③ 2010. 11. 15  
한·페루 FTA 협정 서명식



- ① 2011. 10. 12 이명박 대통령 미 상공회의소 주최 경제인과의 오찬 연설
- ② 2010. 10. 06 한·EU FTA 서명 및 한·EU 정상회담



- 1 2011. 10. 13  
한·미 공동기자회견
- 2 2011. 10. 14  
GM 조립공장 방문  
(디트로이트)
- 3 2011. 10. 14  
현대모비스 공장 방문  
(디트로이트)

# 14<sup>th</sup> ASEAN - ROK SUMMIT INDONESIA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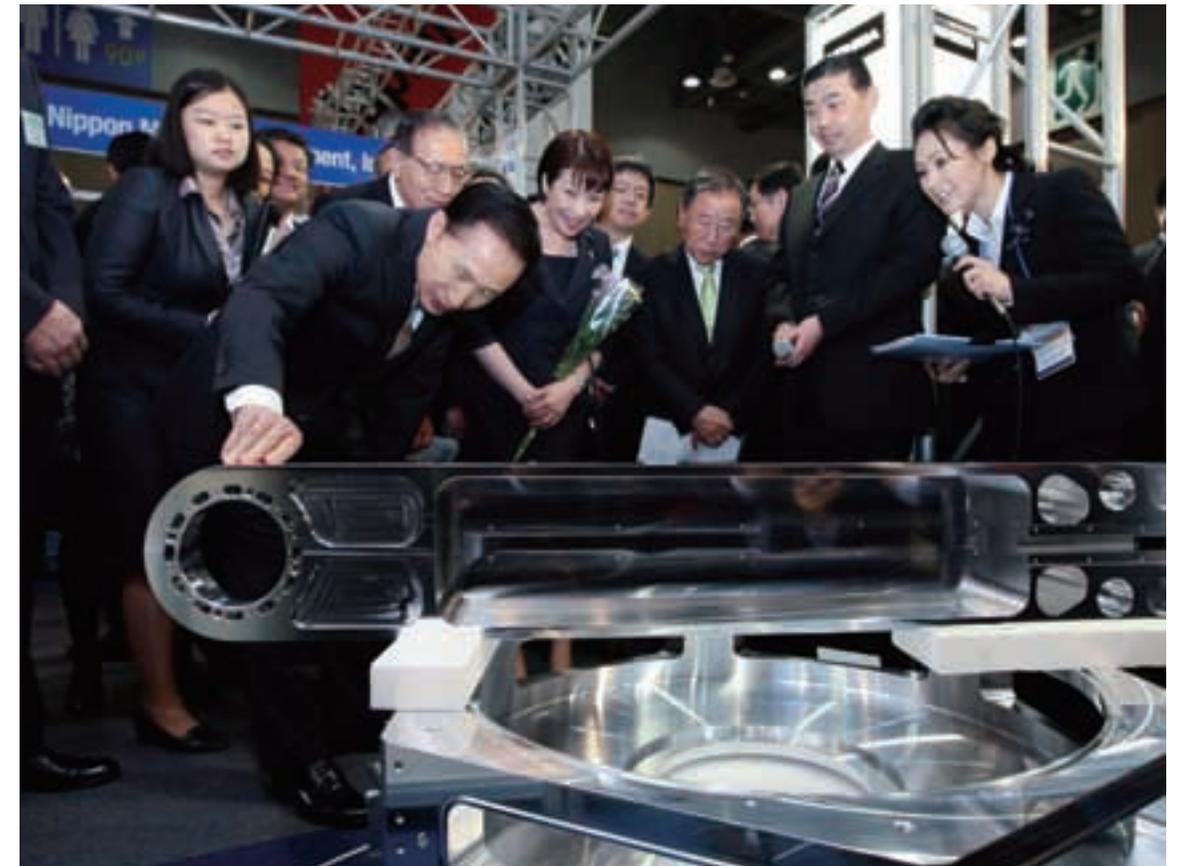




- ① 2011. 11. 29 한·미 FTA 부수협안 서명식
- ② 2012. 06. 25 한·콜롬비아 FTA 협상 타결
- ③ 2012. 03. 15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방문



- 1 2008. 11. 04 제2회 무역투자진흥회의
- 2 2008. 12. 15 수출 4,000억 달러 달성기념 격려오찬



- 1 2009. 04. 16 제3회 무역투자진흥회의
- 2 2009. 04. 16 한·일 부품소재전시회 방문(킨텍스)



- ① 2012. 02. 15 중견기업 CEO와의 대화
- ② 2012. 01. 19 제11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및 수출기업 방문
- ③ 2009. 03. 26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2010. 05. 01 2010 상하이 엑스포 대한민국관 개관식 참석 및 시찰



- 1
- 2

1 2011. 12. 12 제48회 무역의날 행사(무역 1조 달러 달성기념)  
 2 2012. 02. 03 제1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포스트무역 1조 달러 전략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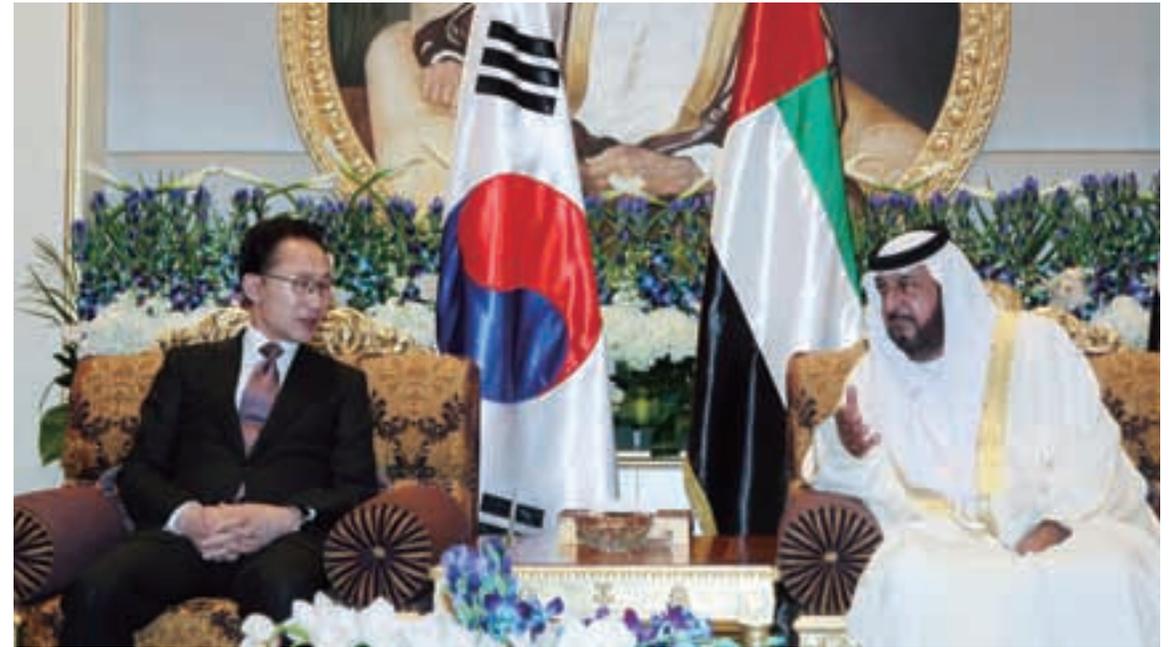


- 1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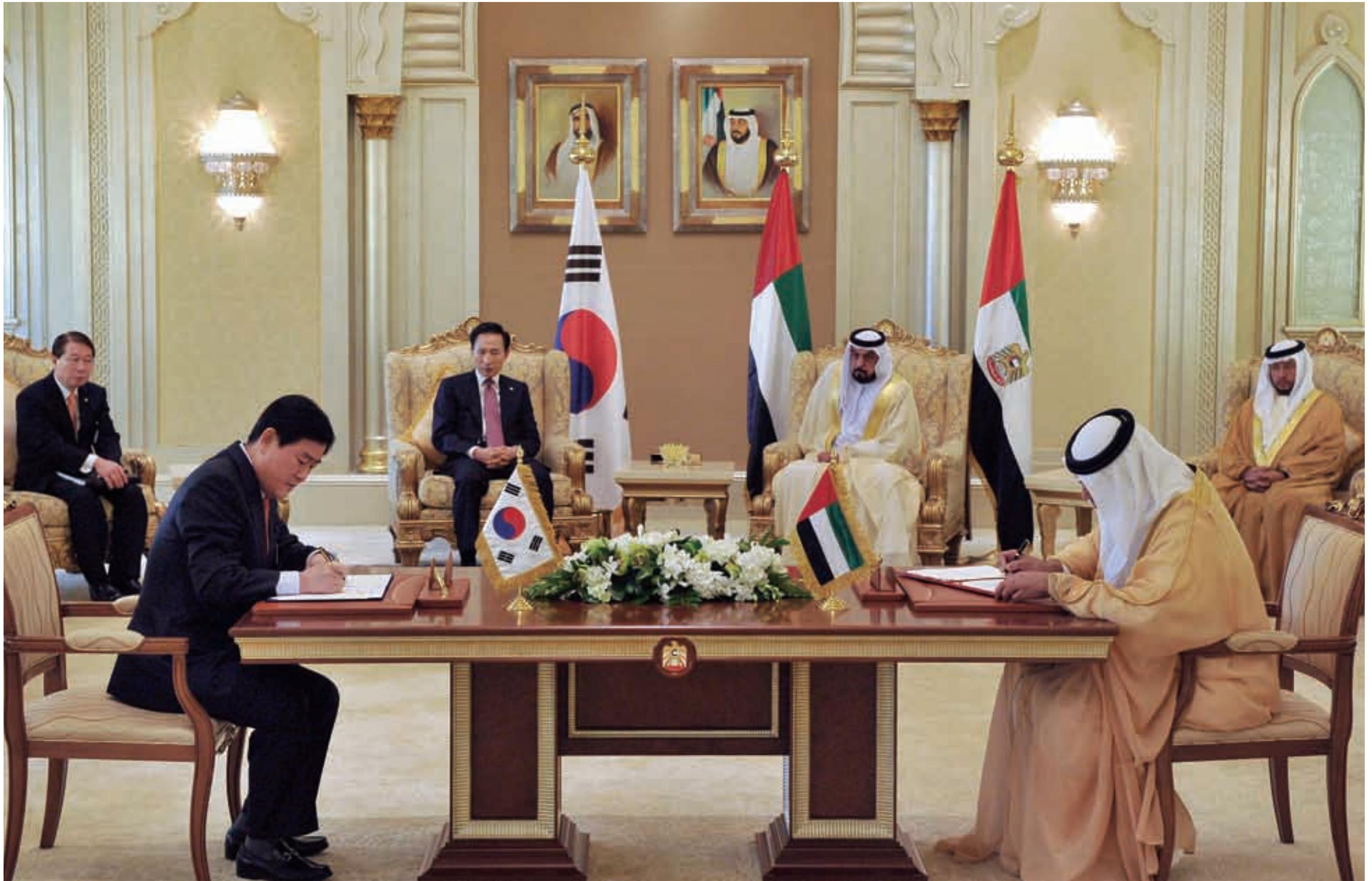
1 2012. 08. 09 제1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매출 천억원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  
 2 2012. 10. 05 제136차 비상경제대책회의(2012년 4분기 수출확대 지원과제) 및 글로벌 비즈니스 플라자 2012 부스 방문



- ❶ 2009. 02. 24 한·이라크 경제-에너지 협력 양해각서 체결
- ❷ 2009. 05. 11 우즈베키스탄 국민만찬(수르길 프로젝트 논의)



- ❶
- ❷
- ❸
- ❶ 2009. 12. 27 한·UAE 원전수출계약 서명식
- ❷ 2011. 03. 13 한·UAE 정상회담
- ❸ 2011. 03. 14 UAE 원전에정부지 기공식 참석



2009. 12. 27 한·UAE 경제협력 협정 서명식



- ① 2012. 02. 16  
해의 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전략회의  
(제114차 비상경제대책회의)
- ② 2012. 02. 16  
광물공사 전시실 방문
- ③ 2012. 03. 20  
UAE 유전개발 관련  
격려 오찬

세계를 경제영토로

##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 위원장

하금열 대통령실 대통령실장

### 간사위원

이동우 대통령실 기획관리실장

김대기 대통령실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이달곤 대통령실 정무수석

정진영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인주 대통령실 사회통합수석

천영우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

노연홍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

박범훈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

최금락 대통령실 홍보수석

안광찬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실장

장다사로 대통령실 총무기획관

김명식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유명희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김상협 대통령실 녹색성장기획관

이중화 대통령실 국제경제보좌관

김영수 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직제순

##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 위원장

정정길 前 대통령실 대통령실장

### 간사위원

박형준 前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동관 前 대통령실 홍보수석

강만수 前 기획재정부장관

곽승준 前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김태호 前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

류우익 前 대통령실 대통령실장

박재완 前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백용호 前 대통령실 정책실장

윤증현 前 기획재정부장관

윤진식 前 대통령실 정책실장

임태희 前 대통령실 대통령실장

현인택 前 통일부장관

※ 가나다순

### 편찬실무

(대통령실)

최원목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김종열 선임행정관

김도형 행정관

윤정식 행정관

고제신 행정관

맹석인 행정관

이경만 행정관

김 건 행정관

박태현 행정관

조인철 행정관

## 국정백서 권별 집필·감수(대통령실)

### 1권 총론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 2권 경제 ①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 3권 경제 ② 세계를 경제영토로

집필책임 강남훈 지식경제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 4권 외교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집필책임 장호진 외교비서관 / 윤영범 국방비서관

감수책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 이중화 국제경제보좌관

### 5권 통일·안보 원칙 있는 대북·통일정책과 선진안보

집필책임 윤영범 국방비서관 / 최보선 통일비서관

김희철 위기관리비서관

감수책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

### 6권 미래준비 녹색성장과 미래성장동력

집필책임 임성빈 기후환경비서관 / 최종배 과학기술비서관

김대회 방송정보통신비서관

감수책임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

김상협 녹색성장기획관

### 7권 국토 녹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집필책임 정내삼 국정과제2비서관

감수책임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 8권 고용·복지 친서민 중도실용

집필책임 김효겸 서민정책비서관 / 이강성 고용노사비서관

최영현 보건복지비서관 / 이재인 여성가족비서관

조현수 국민소통비서관 / 이동권 국민권익비서관

김혜경 시민사회비서관

감수책임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 노연홍 고용복지수석

### 9권 교육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집필책임 이성희 교육비서관

감수책임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 10권 문화 세계 속의 문화강국

집필책임 김석봉 문화체육비서관 / 안경모 관광진흥비서관

감수책임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 11권 제도개혁 선진화 개혁

집필책임 최원목 경제금융비서관 겸 국정과제1비서관

감수책임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 12권 국정자료 재임일지·어록·인사

집필·감수책임 김명식 인사기획관

김영수 연설기록비서관

### 영상실록 영상으로 보는 이명박정부 5년

제작책임 김재운 국정홍보비서관

감수책임 최금락 홍보수석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발행일 2013년 2월 15일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콘텐츠과(02-3704-9827)

편집·집필 협력 (주)사사연

인쇄·제본 삼화인쇄주식회사

##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하여 코리아 루트를 열어갑시다

우리 국민은 식민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불과 두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하였습니다. 이명박정부는 그 업적과 민족의 저력을 바탕으로 ‘선진화’의 앞길을 여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향한 발걸음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전대미문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고, 그 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유럽발 재정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너무나 높은 경제구조 때문에 위기극복을 최우선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쳤으며 근로자, 기업인,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밤낮없이 땀을 흘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각 부문의 국가 순위를 끌어올리며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모범적으로 극복하여 경제의 새 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역 1조 달러를 2년 연속 달성하며 세계 8대 무역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한·미, 한·EU FTA를 통하여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경제영토를 개척하였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모두 추락하는 유례없는 악조건 속에서 우리의 신용등급은 지난 5년간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이 상승하였습니다. 세계 7번째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나라들 대열에 합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의 중심으로 진입하며 글로벌 코리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세계경제를 구하기 위하여 새롭게 구성된 G20 정상회의와 세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나라’에서 ‘세계의 규칙을 만드는 나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전후 독립한 최빈개도국 가운데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여 개발도상국이 가장 따르고 싶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가치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녹색성장의 비전은 전 인류적 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환경과 성장을 조화시키는 환경분야 코리아 루트입니다. 그 비전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주도하고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국제기구로 만들었습니다.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대형 국제기구로 성장할 녹색기후기금(GCF) 본부도 유치하였습니다. 4대강살리기사업으로 오염된 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와 기문에 대비하는 동시에 국민 모두가 자연과 함께 쉬고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세계 경제위기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친서민 중도실용주의의 기조 하에 공생발전을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예산을 편성하여 복지 혜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제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에 힘써 왔습니다. 한 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을 돕기 위하여 ‘미소금융’ 같은 서민금융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습니다. 마이스터고를 새롭게 시작하여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일하며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학력보다 능력이 대우받는 신고졸시대를 열었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을 시작하여 학부모의 육아 부담도 덜어 주었습니다.

굳건한 한·미 안보동맹을 토대로 주변국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안보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졌습니다. 원칙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통일재원인 ‘통일항아리’를 만드는 등 다가올 통일시대 준비도 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숏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스포츠강국, 문화강국으로 힘차게 뻗어가고 있습니다.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에 이어 2012 런던올림픽에서도 세계 5위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섰으며, 드라마, K-POP, 한식 같은 한류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아직도 무수한 도전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희생을 감내하고 위험을 무릅쓰며 힘을 합친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이명박정부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였던 정책 부작용,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심화되는 새로운 정책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차례에 걸친 세계적 경제 위기는 선진화의 기틀을 다지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나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감수하였지만, 제도화를 위해서는 좀 더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지만 저출산 문제도 지속적이고 보다 충실한 범국민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흐름과 맞물려 계속 진행되는 양극화가 잠시 주춤거리는 하였지만,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가장 핵심적 원인인 일자리 부족 문제는 해결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명박정부의 대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 조기퇴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의 노력과 인내심 있는 국민들의 이해가 해결을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이명박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녹색성장정책과 과감한 R&D 투자는 성장동력을 확충시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역사의 문 앞에서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코리아 루트'를 개척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무수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기적으로 달성하였듯이, 선진복지국가의 건설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에는 세계로 약진하는 큰 힘이 용솨음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꿈과 열정을 불태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다시 한 번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품격 높은 나라, 국토는 작아도 국력이 높은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명을 안고 국민과 함께 한 지난 5년에 대하여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낍니다.

'국정백서' 1권은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입니다.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 운영 성과,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의 평을 담았습니다. 이 한 권으로 이명박정부 5년 동안의 국정 흐름과 성과 전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권과 3권은 경제편입니다. 2권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과정, 3권은 경제영토 확장 등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4권과 5권은 외교·안보편입니다. 4권은 글로벌 리더십과 국격 제고, 5권은 원칙있는 대북·통일정책과 안보체계의 선진화 노력을 실었습니다. 6권은 녹색성장과 미래 성장동력, 7권은 녹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8권은 친서민 중도실용, 9권은 교육개혁과 신고졸시대 개막, 10권은 세계 속의 문화강국, 11권은 선진화 개혁, 12권은 재임일지와 어록, 인사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국정백서'는 국정의 큰 줄기를 담았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처·청과 대통령직속위원회의 '정책자료집'에 실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백서'로도 펴낼 예정입니다. 객관적 자료와 지표를 바탕으로 이명박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가급적 객관적으로 기록하고자 힘썼으며, 각계의 평가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책의 효과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문제점이나 부작용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정책에 대하여 편향된 의견을 갖기 쉽습니다. 이러한 편향된 의견은 국정운영에 참고로 하는 경우나,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정책이나 과업을 평가하여 계속 추진여부나 수정 보완 등을 시도할 때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이나 과업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과업의 내용, 추진 의도 및 기대효과 등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기술하여 많은 사람들이 균형 잡힌 의견을 갖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백서 편찬 전 과정에 열과 성을 다하신 국정과제1비서관실을 비롯한 대통령실 직원 여러분과 원고 집필과 감수에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박형준 전 정무수석, 이동관 전 홍보수석, 백서의 운문·제작을 위하여 수고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사연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백서가 '더 큰 대한민국', '함께 가는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실장 하 금 열  
국정백서 편찬자문위원회 위원장, 전 대통령실장 정 정 길

## 국토는 좁지만 세계에서 가장 넓은 경제영토를 개척하였습니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각국은 FTA를 통한 시장개척과 해외 자원개발 확대 등 치열한 경제영토 확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토가 좁고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대외 개방과 무역을 통하여 성장하여 왔으며 그 결과 무역의존도가 90%를 넘습니다. FTA 확대, 세계시장 개척, 해외 자원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여야 할 우리 경제 사활의 문제입니다. 본서는 경제영토 확장을 위하여 5년간 발로 뛰고, 땀 흘린 과정과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이자 기록물입니다.

본서의 본문은 총 3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편에서는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한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 과정과 성과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명박정부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한·미, 한·EU 등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경제영토를 확보하였습니다. 본편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얻기까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기관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미 FTA, 한·EU FTA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내 여론과 정치권 등의 오해와 우려를 적극 설득하는 한편 상대국과의 적극적인 정상외교 등을 통하여 양국이 상호 win-win하는 대안을 도출하여 넘으로써 장애요인을 극복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제1편에서는 이를 위한 추진 과정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제2편에서는 수출주도의 경제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50여 년 만에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대 수출강국으로 발돋움한 과정과 성과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교역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술개발과 해외 시장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과 온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성

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50여 회의 해외 순방을 통하여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막고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주재하면서 무역금융 확대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제3편은 이명박정부의 해외 자원외교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원과 에너지의 수입대국인 우리나라가 해외 자원개발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 것 또한 경제영토 확장 전략의 큰 성과입니다. 출범 초기부터 자원민족주의 확산, 자원시장의 불안정성 등 어려운 대외환경에 직면한 이명박정부는 발로 뛰는 정상외교로 이를 극복하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원전 선진국들을 제치고 UAE 원전 건설 수주라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에 4.2%에 불과하였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2011년 13.7%로 비약적 증가를 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제영토 전략은 이명박정부가 수립하고 상당부분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를 더욱 확장하고 완성하는 것은 다음 정부 또는 이후 세대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앞에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등 악화된 대외여건에 대응하여 지속 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FTA를 통하여 개방도를 높이고 세계시장 개척과 자원개발 추진 노력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는 지난 5년간의 경험들이 훌륭한 길잡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본서가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김대기

## 03 세계를 경제영토로

권두 화보  
발간사  
머리글

제1편 총론: FTA와 글로벌 경제영토	045
제2편 FTA 허브 구축	055
제1장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 전략	056
제1절 경제영토 확장 전략의 배경과 의미	056
1. 세계 경제영토 확장 경쟁의 흐름	
2. 경제영토 확장 전략의 필요성	
제2절 FTA 확대 전략	061
1. 우리나라의 FTA 확대 전략	
2. 중국·일본·미국 등의 FTA 확대 전략	
제2장 한·미 FTA 체결	067
제1절 한·미 FTA 추진 경과	067
1. 한·미 FTA 협상 및 비준·발효과정	
2. 대국민 이해제고 노력	
제2절 한·미 FTA의 내용과 효과	080
1. 한·미 FTA 주요 내용	
2. 한·미 FTA의 기대효과 및 성과	
제3절 취약부분 경쟁력 제고 대책	098
1. 2007년 마련한 보완대책의 이행	
2.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2011.8) 마련	

3. 추가대책(2012.1) 마련	
제3장 한·EU FTA 체결	112
제1절 한·EU FTA 추진 경과	112
1. 한·EU FTA 협상 및 비준·발효과정	
2. 대국민 이해제고 노력	
제2절 한·EU FTA의 내용과 효과	118
1. 한·EU FTA 주요 내용	
2. 한·EU FTA 기대효과 및 성과	
제3절 취약부분 경쟁력 제고 대책	129
제4장 신흥지역으로의 FTA 확산	134
제1절 한·ASEAN FTA 체결	134
1. 한·ASEAN FTA 체결과정	
2. 한·ASEAN FTA 서비스·투자협정 주요내용	
제2절 한·중 및 한·일 FTA 추진	137
1. 한·중 FTA 협상개시	
2. 한·일 FTA 협상재개를 위한 협의 지속	
3. 한·중·일 FTA 협상개시	
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개시	
제3절 기타 신흥국 등과의 FTA 추진	144
1. 한·페루 FTA 발효	
2. 한·인도 CEPA 발효	
3. 한·터키 FTA 상품협정 발효 예정	
4. 한·콜롬비아 FTA 발효 예정	
5. 한·인도네시아 CEPA 추진	
6. 한·베트남 FTA 추진	
7. 한·호주 FTA 추진	
8. 한·뉴질랜드 FTA 추진	
9. 한·캐나다 FTA 추진	
10. 한·말레이시아 FTA 추진 준비	
제5장 FTA 효과 제고	157
제1절 FTA 활용지원	157
1. FTA 효과 극대화의 추진 필요성	
2. FTA 활용지원 정책의 추진 경과	
3. 범정부적 종합지원체제의 구축	



4. 기업의 FTA 활용역량 강화	
5. FTA 허브 이점을 활용한 투자유치 활성화	
6. 보완대책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7. 소비자 체감효과 극대화	
제2절 협정이행 제고	166
제3절 수입유통 구조 개선	168
<b>제6장 앞으로의 과제</b>	171
제1절 FTA 네트워크 허브 완성	171
1. 현재 진행 중인 FTA 조속타결 추진	
2. 성장 유망 지역으로의 FTA 지속 확대	
3. 이미 체결한 FTA 내실화	
제2절 동아시아 경제통합 전략적 대응	175
1.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동향	
2.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제3절 WTO DDA 협상 대응	178
1. WTO DDA 협상경과	
2. 향후 대응방향	
<b>제3편 무역 1조 달러의 선진 무역강국 도약</b>	183
<b>제1장 무역 1조 달러의 의의</b>	184
제1절 세계 9번째 무역대국 실현	184
제2절 경제발전을 위한 디딤돌	190
제3절 새로운 시대를 향한 출발	194
<b>제2장 무역 1조 달러 달성의 원동력</b>	199
제1절 든든한 수출 버팀목, 핵심산업 고도화	199
1. 선박	
2. 무선통신 기기	
3. 일반기계	
4. 석유화학	
5. 철강제품	
6. 반도체	
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8. 석유제품	
9. 디스플레이	
10. 섬유	
11. 가전	
12. 컴퓨터	
13. 농식품	
14. 문화콘텐츠	
제2절 수출의 허리, 중소·중견기업 육성	234
1.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2.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제3절 해외시장, 전략적 개척	249
1. 전략적 산업자원 협력	
2. 해외 마케팅 지원	
3. FTA 활용 지원	
제4절 무역 인프라, 세계일류로	282
1. 무역금융	
2. 국내 전시회	
3. 전자무역	
4. 무역인력 양성	
<b>제3장 선진 무역강국을 향한 새로운 비전</b>	296
<b>제4편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b>	305
<b>제1장 해외자원개발 필요성 및 주요 정책</b>	306
제1절 해외자원 개발 필요성	306
제2절 해외 자원시장 동향	308
제3절 해외자원개발정책	315
1.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2.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로 추진력 강화	
3. M&A를 통한 지역별 거점 확보와 역량 강화	
4. 국내외 민간 자원개발 진출 지원	
5. 인력, 기술, 자본 등 자원개발 인프라 강화	



<b>제2장 해외자원개발, 우리의 자원영토 확장</b>	329
제1절 자주개발물의 획기적 제고	330
1. 석유·가스	
2. 광물	
제2절 정상급 외교로 중동지역 최초 진출	336
1. '석유개발 1번지' UAE 아부다비 진출과 결실	
2. 이라크 대형 생산광구 및 가스전 개발 사업 참여	
제3절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가스전 발견	341
1. 모잠비크 Area4 가스전 발견 성공 의의	
2. 모잠비크 가스전 개발계획	
제4절 프린티어 지역 진출 확대	342
제5절 자원과 기술을 결합한 동반성장 모델 구축	344
1.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프로젝트	
2. 페루 56·88 가스전 개발, 액화플랜트 건설	
제6절 주요 전략광물 수급 거점 마련	347
1. 전력·제철산업의 근간인 유연탄 수급 거점 구축	
2. 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새로운 자원개발 모델 확립	
3. 자동차 산업의 핵심원료 아연 확보	
4. 녹색성장을 위한 청정 에너지자원 우라늄 확보	
5. 전기·전자산업의 핵심 원료자원 동(銅)의 자주개발 확대	
6. 경제성장의 지표 니켈의 지속적 미래 공급원 확충	
제7절 안정적 희유금속 공급기반 마련	352
1. 2차전지의 핵심원료 리튬 확보 기반 마련	
2. 첨단산업의 비타민, 희토류 자주개발 확대	
<b>제3장 UAE원전 수출의 쾌거</b>	356
제1절 UAE원전 수주 과정	357
1. UAE의 원자력발전 도입 배경	
2. 200억 달러 경쟁의 시작	
3. 험난하였던 원전 수주의 길	
4.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 수주지원	
5. 국내외 반응	
제2절 한국형 원전의 수주 성공요인	369
1. 고위급 외교전의 승리	
2. 한국 원자력 기업들의 역량 집중	



3.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및 우수성	
제3절 UAE원전사업 개요 및 경제협력	374
1. UAE원전사업 개요	
2. UAE원전 건설 진행 현황	
3. 한국-UAE 간 경제협력	
제4절 UAE원전사업의 의의 및 효과	377
1. 원전 수출의 의의	
2. UAE원전 수주 효과	
3. 향후 시장 전망	
제5절 향후 과제	384

<b>제5편 앞으로 남은 과제</b>	389
----------------------	-----

<b>부록</b>	395
-----------	-----

(부록 1) 우리나라 원자력 개발 도전의 역사	396
---------------------------	-----

(부록 2) 대한민국, 자원강국으로 가는 길	400
--------------------------	-----

(부록 3) 정책일지	424
-------------	-----

(부록 4) 집필참여자	430
--------------	-----

제1편

총론:

FTA와 글로벌 경제영토

## 두 차례 글로벌 경제위기 조기극복

‘경제 살리기’라는 국민적 여망 속에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때마침 확산되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외부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비상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20세기 말엽에 겪은 외환위기에 이어 갑작스럽게 찾아 온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 경제로서는 또 하나의 시련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리 경제가 불과 10년 사이에 두 차례나 생존의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외부에서 비롯된 위기의 전이를 차단하는 동시에 경제적 내실을 착실하게 다져서 그 영역을 넓혀 나가는 전략으로 국가적 경제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침체된 경기를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규제개혁을 통하여 보다 나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에 주력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경기부진 및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국의 산업과 고용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 성격의 조치를 발동하기 시작한 것과 달리 FTA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자원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신보호주의 확산방지의 롤 모델이 되는 동시에 모든 FTA 상대국들과 서비스 개방 및 투자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는 수준 높은 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국가경제활동의 외연을 확대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우리의 취약한 자원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취약한 자원 수급 구조로 인하여 자원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구조적 취약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단적인 예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거의 전량을 단순 수입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11년 한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에 1,725억 달러를 지출하였는데 이는 전체 수입의 32.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라늄, 니켈, 유연탄 등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전략광물 역시 거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수급 구조 때문에 우리는 국제 자원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자원 빈국의 서러움을 겪어야 하였다. 특히 우리 경제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일본 등 다른 선진국만큼 유가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체질이 아니다. 자원가격 상승은 생산비용 상승을 수반하여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경제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 스스로 해외 개발에 참여하여 자주개발 비율을 높여 부족한 자원 및 에너지원을 해외에서 확보하는



현재 한·미 양국 간 교역은 830억불 규모이며,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7위의 교역 상대국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증가세를 보여온 한·미 간 통상 규모를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한·미FTA입니다. 한·미FTA가 갖추고 있는 강화된 투자 및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는 양국 간 투자 교류를 증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역 확대와 투자 증진은 미국 내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미FTA는 동북아시아와 미국과의 경제적 역동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미FTA는, 한·미동맹이 군사안보동맹의 차원을 넘어 경제와 사회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미국외교협회 공동주최 오찬(2009. 9. 21)



데에도 주력하였다.

그와 같은 노력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위기의 조기극복으로 나타났고, 세계 주요 언론들의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The Economist, August 15, 2009).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되던 와중에서 우리나라는 2009년에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변신하였다. 무역규모 역시 2011년에 1조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들어서는 등 우리나라의 대외적 국가위상은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 FTA 허브 구축으로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

우리 경제영토의 확장은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진행된 과업이었다. 위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불시에 다가오기 마련인데, 이에 대하여 임기응변적으로만 대응할 수는 없다. 어떤 난관이 닥쳐도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다 더 견고한 영역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영토 측면에서는 세계 109위(남한면적 기준)로 매우 협소한 편이지만, FTA의 체결을 통하여 확보한 경제적 영토(자국 및 FTA 발효국의 GDP 합을 전 세계 GDP로

나는 값을 비교) 측면에서는 2012년 5월 현재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국가로 도약하였다. 세계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엮여가는 글로벌 시대에 지역과 국가 간의 경계는 더 이상 경제교류와 비즈니스를 제약하지 못한다. 따라서 한반도라는 물리적 영토 공간뿐만 아니라 시장을 개척하고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곳이 경제적으로는 우리의 영토인 셈이다. FTA를 비롯한 통상외교적 노력으로 이러한 '경제영토'는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직접 체험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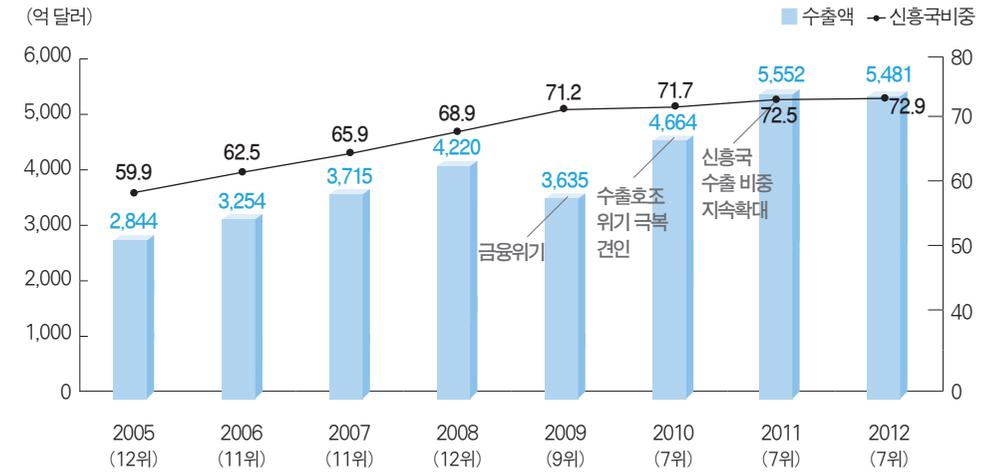
실제 이명박정부의 출범 당시에는 칠레, 싱가포르,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ASEAN 등 비교적 소규모 경제권과 4건의 FTA가 체결된 상태였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FTA를 통한 교역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대외의 존도가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추세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세계경제의 주변 국가에 머물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이명박정부의 경제영토 확장 노력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곤 한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대외 개방의 확대에 대한 일부 국내 반대 여론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통상정책의 추진으로 경제영토의 확장을 실현하였다. 이를 통하여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는 추진력과 성장 동력을 확충하였음은 물론이다. 둘째, 선진경제권 및 신흥경제권의 주요국을 포함한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자원협력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였다. 셋째, 대외 개방의 확대에 대비한 국내 대책을 충실히 추진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개방을 통한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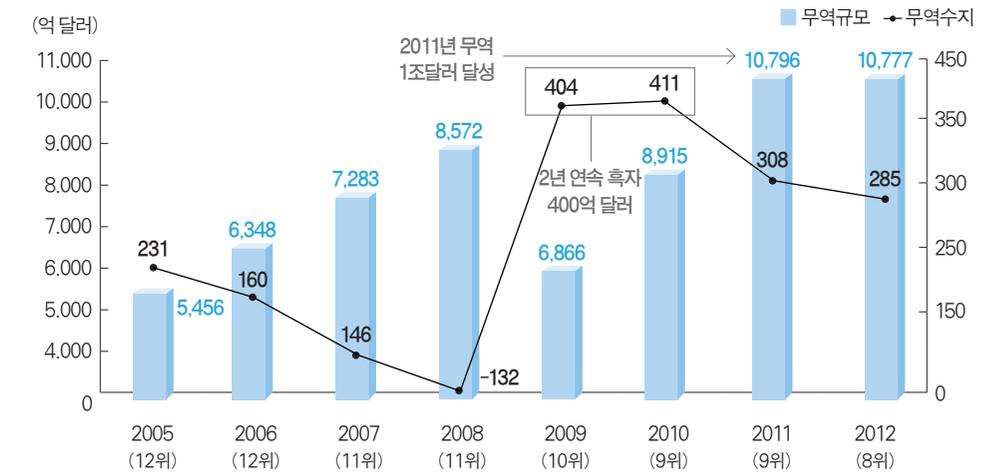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바로 FTA의 체결을 통한 경제영토의 확장이 안보 강화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국가들은 자국 기업의 교역 및 투자 활동을 독려하고자 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불안한 안보상황 전개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이는 곧 FTA 체결국들이 우리나라의 안보 측면에서 우군의 역할을 자임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맺는 FTA 체결이 경제동맹을 맺는 것과 동시에 안보동맹을 맺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FTA가 정치경제적 효과를 넘어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명박정부는 한·미 FTA, 한·EU FTA 등을 체결, 발효시킴으로써 미국, 유럽, 아시아를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나라를 전 세계 교역과 투자의 허브

### 7대 수출국 도약



### 무역 1조 달러 시대 개막



(Hub)로 육성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즉 한·EU FTA를 2011년 7월 잠정 발효시켰고, 한·미 FTA는 2012년 3월 15일 공식 발효시켰다. 이와 같은 거대경제권과의 FTA 뿐 아니라 지난 2010년 1월에는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동반자 협정), 2010년 8월에는 페루와의 FTA를 발효시켰다. 이로써 이명박정부 들어서 총 8건의 FTA가 45개국과 발효된 상태이다. 특히 한국은 ASEAN을 포함하여 세계 3대 경제 블록과 FTA를 체결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1876년 개항 후 135년 만에 동아시아의



지난 해 우리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흑자도 당초 예상을 뛰어넘은 308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전국을 휩쓴 구제역, 백년만의 집중 폭우, 유럽발 재정위기도 우리의 전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온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땀흘려 일한 기업인,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 2012년 신년 국정연설(2012.1.2)



소국에서 벗어나 세계 무역의 중심국 반열에 오르는 큰 성취를 이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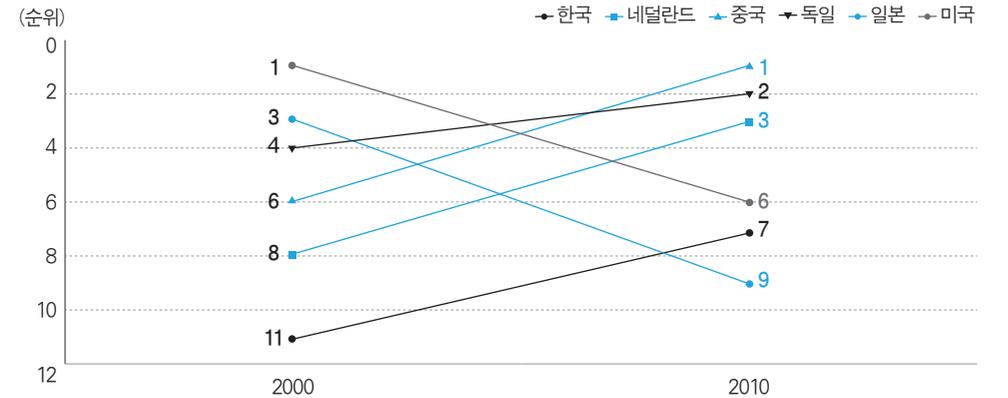
이와 같이 FTA를 통한 경제적 영토가 날로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 무역규모도 크게 늘어나 마침내 2011년에는 1조 달러의 고지를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무역규모 1조 달러는 신흥대국인 중국을 제외하고는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주로 선진국들만 달성한 위업이다. 이는 곧 우리나라가 지구촌 경제와 무역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무역 1조 달러 달성, 세계 무역의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열악한 수출여건에서 이룬 것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8~2010년) 세계 무역은 5.9%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 무역은 4.0%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1년 세계 7대 수출국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다(중국 20.3%, 한국 19.0%, 독일 17.1%, 미국 15.8%, 프랑스 14.0%, 일본 6.9%). 아울러 금융위기 이전 우리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7%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3.0%로 증가하였다.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마침내 2010년에 국내총생산(GDP) 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데 이어 이룩한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GDP와 무역 규모의 확충을 통하여 21세기의 새로운 전진을 위한 도약대가 마련된 셈이다. 1951년에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1억 달러였으니, 만 60년 만에 1만 배의 성과를 이룩하여 낸 것이다. 개발연대 이래 별다른 부존자원 없이 무역입국의 꿈을 지니고 수출확대에 주력한 지 50년 만의 쾌거이기도 하다.

무역 규모 1조 달러의 달성은 비단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의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글로벌 무역네트워크 지수 순위 변화(2000~2010)



※ 자료: Luca Errico and Alexander Massara, Assessing Systemic Trade Interconnectedness-An Empirical Approach, IMF Working Paper, Sep. 2011.

관점에서 보아도 무역 규모 1조 달러의 달성은 큰 의미가 있다. 즉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대사의 변두리에 머물지 않고 그 중심에 합류하였다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세계화의 진행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수세적 방어나 소극적 개방에 그치지 않고 진취적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진출하였다. 물론 GATT 가입, WTO 출범, 수입선다변화 제도 폐지, 스크린쿼터 조정, 일본문화 개방, 외국 유통업체 진출 허용 등 일련의 개방조치가 내려질 때마다 두려움이 컸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한·칠레 FTA를 비롯하여 FTA를 체결할 때마다 대내적으로 갈등을 겪었던 것도 생각하여 보면 기대 못지않게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이유가 크다.

그러나 결국 시장개방의 결과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스크린 쿼터 조정 이후 한국 영화의 질적 수준은 더욱 높아졌으며, 국내 유통업체들은 월마트, 까르푸 등 외국 유통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았다. 또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는 수입선다변화제도의 철폐 이후 국내 가전업체 및 자동차업체는 오히려 세계적인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 세계화의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결국 세계화의 성과를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은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무역 네트워크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무역에서 각국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IMF 세계무역 네트워크 지수를 보면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11위에서 7위로 순위가 바뀌었다.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에 치우친 국가, 일본을 모방한 국가라는 우리의 위상이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 과정에서 이제 세계무역의 선도적 위치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자원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대전환

우리나라는 무역대국임에 틀림없지만, 자원과 에너지의 수입대국이기도 하다. 특히 국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96%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 4위의 에너지 수입국이다. 최근 글로벌 자원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면서 자원이 우리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해외의존형 에너지·자원 수급 구조를 지닌 우리나라로서는 글로벌 에너지·자원 정세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출범 초기부터 자원민족주의 확산, 자원시장의 불안정성 등 날로 악화되는 대외환경에 직면한 이명박정부는 그에 대한 해법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주목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였다. 특히 에너지·자원 수급의 급격한 변화와 가격 상승의 충격을 흡수하는 데에 정책의 중점을 두었다.

우리나라가 자원개발의 중요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역사와 경험은 실로 일천하다. 저비용 고수익의 유망 광구를 해외 메이저들이 선점한 상황에서 후발주자로서 자원개발에 진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자원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면서 자원부국들과 오랫동안 끊임없는 교류를 통하여 신뢰를 쌓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미안마 가스전과 동해 가스전 발견 등의 성과도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이명박정부는 급격히 변화하는 자원개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석유 및 가스, 6대 전략광종(철, 유연탄, 우라늄, 동, 아연, 니켈), 희토류를 비롯한 신전략광물 등의 자주개발률이 지난 5년 사이에 크게 상승하였다. 단적으로 이명박정부가 출범하기전인 2007년에 4.2%에 불과하였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2011년 13.7%로 비약적 증가를 하여 에너지안보에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전 세계 자원 보유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자원외교를 펼쳐 총 22개국에서 69건의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따라 2005년 179건에 불과하던 자원개발 진행사업 수는 2011년 506건으로 급증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원 확보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동반자적 입장에서 자원부국과의 산업협력과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자원외교의 핵심 철학을 이

루었다. 특히 2009년의 UAE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는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여 발주국의 산업기반 확보를 지원하기로 한 노력이 큰 역할을 한 사례라고 하겠다. 아울러 원전수출은 국내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면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적 목표 달성 넘어 질적 수준 제고로

이와 같이 이명박정부에 들어서 우리 경제영토는 급속도로 확장되었고, 활발한 자원외교에 힘입어 해외 자원개발 사업도 급팽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영토의 확장, 무역 1조 달러의 달성 및 자원외교 전개의 이면에는 양적 목표의 달성은 이루어졌되 질적 수준의 제고에는 미진하였던 한계가 있다. 예컨대 FTA 네트워크가 확대되었으나, 그 활용률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한·ASEAN FTA의 수출 활용률(특혜관세 대상품목 중 실제 특혜관세를 적용 받는 품목의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무역규모 측면에서는 외형적으로 1조 달러를 달성하였지만, 국내 고용창출과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자원개발과 관련하여서도 MOU 체결 건수와 해외 자원개발 사업 진행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자원 자립도를 나타내는 자주개발률은 여전히 OECD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는 경제영토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의 제고에도 주력하여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남아 있는 셈이다.

## 제2편

# FTA 허브 구축

- 제1장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 전략
- 제2장 한·미 FTA 체결
- 제3장 한·EU FTA 체결
- 제4장 신흥지역으로의 FTA 확산
- 제5장 FTA 효과 제고
- 제6장 앞으로의 과제

## 제1장

#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 전략

### 제1절 경제영토 확장 전략의 배경과 의미

대한민국의 영토는 세계 109위(남한면적 기준)로 좁은 편이다. 그러나 세계가 경제적으로 촘촘히 엮여가는 글로벌 시대에 지역과 국가간의 경계는 더 이상 경제교류와 비즈니스를 제약하지 못한다. 따라서 한반도라는 물리적 영토 공간뿐만 아니라 시장을 개척하고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곳이 경제적으로는 우리의 영토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FTA를 통하여 이러한 '경제영토'는 넓어진다. 이명박정부는 한·미 FTA, 한·EU FTA 등을 체결, 발효시킴으로써 미국, 유럽, 아시아를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나라를 전 세계 교역과 투자의 허브(Hub)로 육성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한국은 ASEAN(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포함한 세계 3대 경제 블록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1876년 개항 후 135년 만에 동아시아의 소국에서 벗어나 세계 무역의 중심국 반열에 오르는 큰 성취를 일궈냈다.

#### 1. 세계 경제영토 확장 경쟁의 흐름

세계 경제 여건이 더욱 글로벌화됨에 따라 각국은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



과거의 세계국가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였다면 지금은 FTA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영토'를 넓혀가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통상 중심국가가 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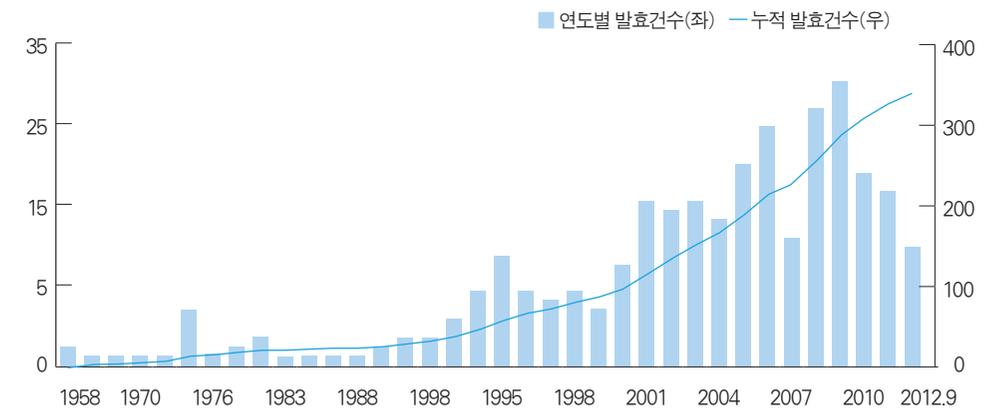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 연설(2011.1.3)

자본·자원·경험·기술, 그 어느 것도 없었던 대한민국이 먹고살 길은 수출입국, 무역대국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통상대국 대한민국의 꿈을 안고 중동의 사막에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뛰며 땀과 눈물로 세계 아홉 번째의 무역대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우리의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경제영토는 더욱 확장되어야 합니다. 통상대국 대한민국의 꿈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한·미 FTA 비준동의에 관한 국정 연설(2011.10.28)



연도별 RTA 발효 현황



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이어지고 있다. 수출을 늘리고 경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동맹을 체결하는 국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9월 현재 WTO에 통보되어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은 누계기준으로 총 340건이며, 그 가운데 FTA는 19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58%)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국제경제의 주요 흐름은 바로 FTA인 셈이다.

RTA는 FTA·관세동맹·서비스협정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1947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출범 이후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0년 들어 급증하였다. 2010년에만 14개,

2011년 11개의 RTA가 WTO에 통보되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FTA다. 2001년부터 10년간 발효된 RTA 302건 중 FTA가 182건이다.

FTA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배경에는 각국의 수출 주도권 경쟁이 있다. 또한 다자자유무역체제를 위한 도하개발 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가 10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자 각국이 대안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저성장·고실업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공세적인 수출확대 중심의 통상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 도하개발 어젠다(DDA)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서비스, 규범(반덤핑, 보조금, 지역무역협정), 무역원활화, 무역과 개발, 무역과 환경,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양해 등 총 9개 분야가 주요 협상의제였다.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등의 분야에 대한 협상방식(modality)을 합의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 바, 농업의 경우 관세인하에 초점을 둔 시장접근(market access), 보조금을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초점을 둔 국내보조(domestic support) 등이 가장 중요한 쟁점사안이다. WTO 회원국들은 DDA 협상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 간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교착상태이다.

## 2. 경제영토 확장 전략의 필요성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후발국의 추격을 받는 등 선진국 진입을 위한 중대 기로에 서 있었다. 좁은 국토에 부존자원마저 빈약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한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이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 변화로 6~8%를 기록하던 경제성장률이 1990년대 중반 이후 하향세를 보여 왔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4% 중반의 낮은 수준에 그쳤다.

성장률 저하의 대내적 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문제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이 지적되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는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어 2005년 우리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인 1.08명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총저축률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 저하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우리가 갈 길은 분명합니다.

지원도 없고 내수시장도 좁은 우리로서는 수출 없이는 성장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FTA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EU 27개국, ASEAN 10개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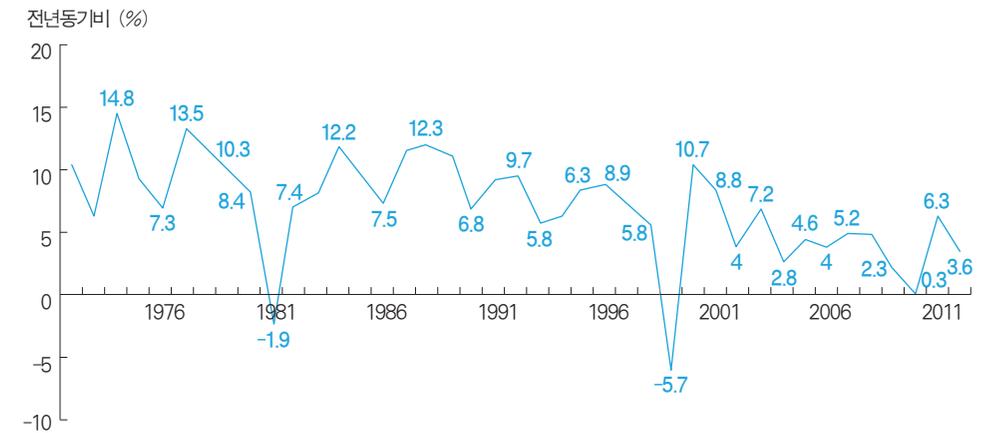
전 세계 61%가 우리 경제영토가 된 셈입니다.

한때 세계 번방에 위치한 '은둔의 나라' 한국이 한 세기 만에 세계적인 통상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2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2011.10.17)



연도별 실질 GDP 성장률 추이



대외적으로는 '세계화로 인한 무한경쟁'에 직면하고 있었다. 전 세계 모든 국가 간 교역 확대와 국제 자본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고 주요 시장에서의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하여지고 있었다. BRICs로 대표되는 신흥 개도국들은 우리와의 경제적·기술적 격차를 좁혀오고 있는 반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우리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시장 여건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대외교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2007년 기준)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각국의 지역주의 추세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있었다. FTA 체결국 간에는 관세인하 등으로 상호 무역이 증대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비체결국(역외국가)의 수출여건은 무역전환효과에 따라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가 취하여야 할 가장 시급한 성장 전략은 우리 경제의 개방

### 자유무역협정의 개념과 중요성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 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역내 관세철폐	역외 공동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경제 정책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자유무역협정 (NAFTA 등)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공동시장 (EEC, ANCOM 등)				
완전경제통합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 이후의 EU)				

FTA는 다자무역 질서의 근간인 최혜국 대우(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하여서는 안 됨.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 전보다 더 후퇴하여서는 안 됨.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계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 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으로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넓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 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예컨대 19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하여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다. 2011년에 세계 총 무역 중 FTA 내 무역비중은 49.2%로 추정되고 있고 그 뒤로도 FTA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과 국제화를 가속화하고 이를 통하여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양자간·지역 간 FTA, 특히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는 21세기 우리의 살 길을 여는 핵심전략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개방과 국제화를 추진하는 데는 FTA 외에도 여러 다자간 협상을 고려할 수 있으나 FTA가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시장개방과 국제화의 대안이기 때문이었다. EU와 같은 경제통합을 동북아 지역에서 구현하는 것은 지역 내 국가들 간의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며, WTO/DDA와 같은 다자협정 역시 합의주체의 수가 많은 만큼 단시간 내에 가시적 개방성고를 얻어내기 어렵다.

FTA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03년 이전까지는 FTA 체결건수가 하나도 없는 FTA 후발국가였다. 2004년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 2007년 4월까지 싱가포르,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및 미국과 추가로 FTA를 체결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FTA 체결건수는 주요국가에 비하여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상국과의 교역비중도 그다지 크지 못한 수준이었다. 특히 2007년 우리나라는 동북아 국가 중 최초로 미국과 FTA를 타결시키는 개가를 거두었지만, FTA 비준이 지연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과의 FTA 체결국들에 비하여 고관세 등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들과의 경제영토 전쟁에서 살아남고 글로벌 선진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마무리 짓고 자원협력, 신흥시장 개척 등을 위한 새로운 FTA 전략이 필요한 중대한 시기였던 것이다.

## 제2절 FTA 확대 전략

### 1. 우리나라의 FTA 확대 전략

과거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다자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에 초점을 두고 수립되었다. 196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서명하면서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에 편입되었고, 다자무역협상을 통하여 달성된 관세인하 및 무역장벽의 해소는 수출주도형의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들어 지역주의(regionalism)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아시아 지역까지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동참하게 되자, 우리나라는 FTA 정책으로 통상정책의 초점을 전환하게 되었다. 1999년 12월 칠레와 첫 FTA 협상을 시작하였고, 2004년 4월 우리나라의 첫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담을 쌓은 나라는 망하고, 길을 닦은 나라는 융성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통상국가의 길을 가지 않고 폐쇄적인 자족 경제의 길로 갔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관한 국정 연설(2011.10.28)

위기가 닥쳤다고 보호주의를 하여선 안 됩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세계 위기 때 각자 살겠다고 보호주의 하였을 때  
그 위기 극복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 일수록 문을 열고  
통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FTA가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오찬 연설(2011.10.12)



의 'FTA 시대'가 개막되었다.

이명박정부에 들어서면서 미국 금융의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가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외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FTA 추진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우리나라는 2008년 8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 무역·투자 제한조치 신설 금지(standstill) 원칙을 제시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세계 정상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FTA에 있어서도 기존의 주요 교역국 시장 확대 이외에 에너지·자원 협력, 신흥시장 개척 등 다양한 전략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세계 에너지·자원의 수급구조 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보다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공급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여졌기 때문이다. 또한 BRICs 등 신흥거대 경제권의 내수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흥 경제권과의 적극적인 FTA 추진이 요구되었다. 이명박정부는 미국·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 완성, 중국·일본 등 동북아 경제권 및 인도·페루·터키 등 신흥 경제국과의 FTA 추진에 역점을 두고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을 능동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현재 미국, EU, 인도, ASEAN, 칠레, 싱가포르, EFTA, 페루(총 8건, 45개국)와의 FTA가 발효되었다.

FTA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라는 통상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갔다. FTA 후발국가로서 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 협상을 진행하여 나갔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부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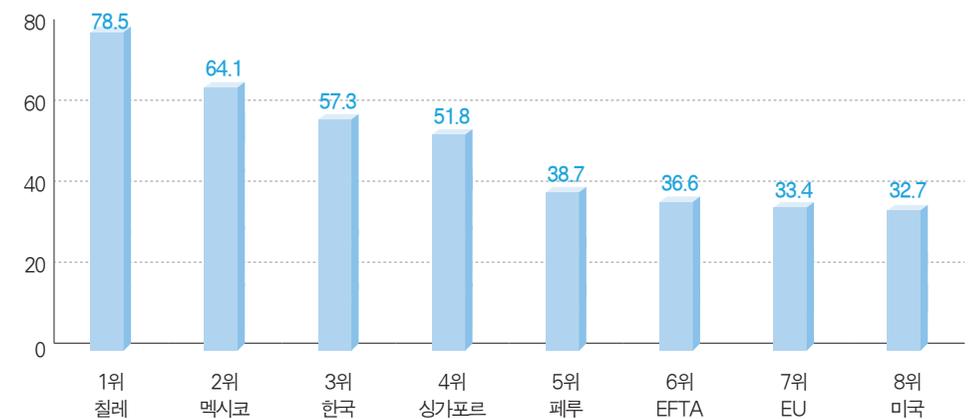
#### 보호무역주의 동결 원칙

이명박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G20 정상회의(2008.11.14~15)에서 무역·투자 제한조치 신설 금지(standstill) 원칙을 제시하여 회원국 정상들의 만장일치 지지를 획득하였으며, 동 원칙은 정상선언문 합의사항으로 채택되었다. 무역·투자 제한조치 신설 금지 원칙은 자유무역을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으며, 지금까지의 G20 정상회의 합의들 가운데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지 동시에 추진하였다.

우리나라가 단계적·순차적 추진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여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한 측면이 크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FTA를 체결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FTA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경우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 역외 국가로서 우리는 상대적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여러 개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여 발효시킴으로써 각 FTA 별로 서로 다른 효과를 상쇄,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전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방의 수준에 있어서도 상품 분야에서의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 FTA에 따른 세계 주요국 경제영토 순위



※ 2012년 5월 현재(2010년 명목 GDP 기준)

※ 경제영토 = 자국·FTA 발효국 GDP 합계 / 전 세계 GDP 합계

한국의 FTA 추진 동향

발효(8건, 45개국)	타결(2건, 2개국)	협상진행(8건, 13개국)
칠레(2004.4) 싱가포르(2006.3) EFTA(2006.9) ASEAN(상품 2007.6, 서비스 2009.5, 투자 2009.9) 인도(2010.1) EU(2011.7) 페루(2011.8) 미국(2012.3)	콜롬비아(2012.6 타결) 터키(2012.8 정식서명)	캐나다(2008.3 13차 협상) 멕시코(2008.6 2차 협상) GCC(2009.7 3차 협상) 호주(2010.5 5차 협상) 뉴질랜드(2010.5 4차 협상) 인도네시아(2012.7 1차 협상) 베트남(2012.9 1차 협상) 중국(2012.10 4차 협상)

※ 한중일 FTA와 RCEP에 대한 협상 개시(2012.11)

※ 자료: 기획재정부

한·인도 CEPA가 2010년 1월 1일, 한·EU FTA가 2011년 7월 1일, 한·페루 FTA가 2011년 8월 1일,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 각각 발효되었다. 이러한 FTA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영토는 2007년 세계 경제규모 대비 6.0%에서 2011년 60.9%로 확장되었다. 이는 칠레, 멕시코에 이어 경제영토가 셋째로 넓은 국가로 도약한 것으로 미국, EU 등의 경제영토를 능가할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경쟁국 경제영토의 약 4배 수준이다. 터키와는 2012년 11월 22일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콜롬비아와의 FTA가 지난 8월 31일 가서명되는 등 신흥경제국과의 FTA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의 제1위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FTA 협상도 수년간의 준비작업 끝에 개시되어 2012년 5월 14일 제1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환태평양 경제통합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현재 한·중 FTA, 한·중·일 FTA, ASEAN+6,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등 세계는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하여온 것처럼 무역개방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미 협상을 시작한 한·중 FTA는 지금까지의 FTA와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다. 2012년 5월 2일 중국의 베이징에서 한·중 FTA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한 데 이어 7월 3~5일 제주도에서 2차 협상, 8월 22~24일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의 3차 협상, 10월 30일~11월 1일 경주에서 4차 협상까지 이뤄진 상태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2%(2011년 기준)로 미국(10.1%), EU(10.0%)를 합한 것보다도 크고, 수입 비중도 16.5%에 이른다. 한국이 중국과 FTA를 체결하게 된다면 한국의 경제영토는 주요국 중 현재 3

위(57.3%)에서 멕시코를 제치고 칠레에 이어 2위에 올라서게 된다.

우리나라가 맺은 FTA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기대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하여야 할 일도 많아지고 있다. 이미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어느 정도 FTA 활용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영세한 중소기업들까지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교육·컨설팅·상담기회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 FTA 활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또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수출 증가와 일자리 증가라는 FTA 효과 또한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2. 중국·일본·미국 등의 FTA 확대 전략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장기적인 전략적 고려에 따라 FTA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초기에는 중화권 및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FTA를 체결하였으나 이후 대상국가 범위를 넓히고 있다. 홍콩 및 마카오와의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비롯하여 ASEAN,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 등과의 FTA를 발효 중이며, 대만과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도 체결하였다. 2012년 9월 현재 FTA 공식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는 SACU(남아프리카 관세동맹), 아이슬란드, GCC(걸프협력회의), 노르웨이, 호주, 스위스 등이며, 2012년 5월에는 한국과 FTA를 개시하였다.

일본은 상품, 서비스 중심의 FTA보다 투자, 인적교류 확대 등을 포함하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ASEAN 개별국과도 EPA를 별도로 체결한 경우가 많다.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ASEAN, 스위스, 베트남, 인도, 페루와의 EPA 총 12건과 칠레와의 FTA를 발효 중이다. 일본이 협상을 추진 중인 국가는 GCC, 몽골, 호주 등이며 우리나라와의 FTA는 2004년 11월 6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그 밖에 캐나다, 한·중·일, 콜롬비아, EU와의 FTA 추진을 검토 중이며, TPP(환태평양파트너십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 참가 여부는 국내 농업부문의 반대로 인하여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국은 NAFTA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경제적 유대관계가 깊거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들과의 FTA에 적극적이다. 1985년 이스라엘과의 FTA를 시작으로 NAFTA(캐나다, 멕시코), 요르단, 싱가포르, 칠레, 호주, 모로코, 바레인, CAFTA-DR수출 확대 방향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FTA인 TPP를 적극 추

## 제2장

# 한·미 FTA 체결

### 제1절 한·미 FTA 추진 경과

#### 1. 한·미 FTA 협상 및 비준·발효과정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다. 2000년대에 국제 경제환경은 급변하였다. WTO 중심의 DDA 협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과거 중소국가 중심으로 진행되던 FTA에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강대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주의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경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2003년 'FT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미국을 중장기(3년 이상)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두번째로 수출규모가 큰 수출대상국이며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인 미국에서의 우리 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개방과 경쟁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상품무역을 자유화하고 서비스 산업 및 일부 취약한 산업을 개방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자유화 물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6년 협상이 시작된 한·미 FTA는 2007년 타결되었지만 한·미 양국에서 모두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다가 2009년과 2010년 추가협상을 진행하여 타결된 이후에 2011년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비준되

진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신규 FTA 협상을 개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더 많은 국가들과 더욱 높은 수준의 지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TPP 확대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EU는 '글로벌 유럽' 전략에 따라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장률 둔화 현상을 해외 수요 확보를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EU는 그동안 지중해권, 과거 식민지 지역 등 역내·인근 국가와의 FTA 또는 관세동맹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한국과의 FTA를 발효하고 페루, 콜롬비아, 중미 국가들과 FTA를 타결하는 등 협상 대상국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이다. 인도·말레이시아와 협상을 진행 중이고 일본·필리핀 등과의 협상도 고려하고 있다.

인도·남미·호주 등도 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도는 1991년 이른바 '동방 정책'을 바탕으로 한국·일본·ASEAN과 FTA를 체결한 뒤 EU 등 거대 경제권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과의 FTA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남미에서는 칠레와 페루가 FTA에 적극 나서고 있다. 칠레는 한국·중국·일본·EU·미국 등 세계 주요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최근 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 등 ASEAN 국가로도 그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페루 역시 칠레와 마찬가지로 한국·미국·EU·중국·일본 등과 FTA를 체결하였다.

호주는 광물과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유망 시장인 아시아 지역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이며 EU에 맞서 태평양 지역에서의 리더십 확보를 위하여 도서지역 국가들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뉴질랜드는 호주를 비롯한 남태평양 역내 국가들로 국한되어 있던 양자협상 대상을 2000년 이후 환태평양 전체로 확대하여 TPP·중국·ASEAN·홍콩 등과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 또한 멕시코는 44개국과 12건의 FTA를 발효하였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미국·EU와 모두 FTA를 맺은 유일한 나라가 됩니다.  
 우리의 국토는 좁지만, 경제영토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넓어질 것입니다.  
 경제강국 대한민국의 꿈이 영글어갑니다.

이명박 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5기 출범식 축사(2011.7.1)



고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서 한·미 FTA는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 체결로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조기 선점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한·미 FTA는 2006년 2월 3일 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2006년 6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07년 3월말 고위급 협상에 이르기까지 총 10차례 협상을 개최하였다. 2007년 4월 2일 서울에서 협상을 타결하고, 2007년 6월 30일 워싱턴에서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한미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고 서비스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하여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를 한층 확대,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2007년 6월 30일 서명 이후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양국 내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로 비준 및 발효가 계속 지연되었다. 당초 정부는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기에 비준, 발효시켜야 한다는 인식 아래 2007년 9월 7일 17대 국회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동의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2008년 5월 29일 17대 국회의 임기 종료로 폐기되었다. 정부는 2008년 10월 8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였고 동의안은 2009년 4월 22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미국에서는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2007년 9월 ‘한·미 FTA의 미국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의회 심의 이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후 미국의 경기침체 지속과 자유무역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하여 미 의회의 한·미 FTA 인준절차는 지연되어 왔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2차례에 걸친 정상회담(6월 26일, 11월 11일)에서 한·미 FTA의 경제적·전략적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한·미 FTA 진전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확인하였다. 2010년 6월 26일 토론토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 FTA 진전을 위한 양국 정부 간 협의 개시에 합의하여 한·미 FTA 진전을 위한 모멘

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협의를 토대로 양국 통상장관은 2010년 10월 26일(샌프란시스코)과 11월 8~10일(서울) 2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양국 간의 전반적인 의견차와 실질적 협의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그 이후 2010년 11월 11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2010년 11월 30일~12월 3일간 워싱턴 인근(메릴랜드주 콜롬비아시)에서 양국 통상장관 간 추가 협상이 진행되었다. 추가협상은 이미 맞춰진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을 깨뜨

**한·미 FTA 추가협상 주요 내용**

품목	적용	기존 협정	추가 협상	
승용차	미국	관세 2.5% - 3000CC 이하 즉시철폐 - 3000CC 초과 3년 철폐	발효 후 4년간 유지 후 철폐	
	한국	관세 8% 즉시철폐	발효 즉시 4% 인하 4년간 유지 후 철폐	
전기차	미국	관세 2.5% 10년 철폐	5년간 균등 철폐	
	한국	관세 8% 10년 철폐	발효 즉시 4% 인하 4년간 균등 철폐	
자동차	픽업트럭	미국	관세 25% 10년 철폐	10년 철폐 유지, 단, 발효 8년차부터 균등 철폐
	세이프가드	공동	-	한EU FTA 세이프가드의 6개 절차요소 반영한 세이프가드 도입
	안전기준	한국	6,500대 미만 제작사에 한하여 미국기준과 한국기준 중 선택적 사용	제작사별 2만 5,000대까지 미국기준 충족 시 원전동등성 인정
연비·CO <sub>2</sub> 기준	한국	-	-	제작사별 2009 판매대수 기준 4,500대까지 19% 완화된 기준 적용 2016년 이후 미래규정 추후협의
	냉동냉장고	한국	관세25%, 2014.1.1.까지 균등 철폐	냉동기타 목살, 갈비살(25%)에 대하여 2012년부터 관세 감축하여 2016.1.1 철폐
의약품허가 특허 연계	한국	18개월간 연계의무에 대한 분쟁을 해소할 수 없음	36개월간 이행의무 자체를 유예	
기업내전근자 비자	한국	-	-	기존 사업체 근무자 비자 유효기간 3년 → 5년으로 연장, 사업체 신설을 위한 근무자 비자 유효기간 1년 → 3년으로 연장

※ 자료: 기획재정부



저는 한·미 FTA가 세계경제의 성장에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번영과 평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미 FTA로 한·미 관계는 안보동맹을 맺은 지 60년 만에 경제동맹을 더하여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경제적 번영을 위하여 평화가 필요하며, 튼튼한 한·미동맹은 주변국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내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더 깊은 동북아 경제통합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한·미 FTA 비준동의에 관한 국정 연설(2011.10.28)



리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제한된 분야에 한하여 진행되었다. 미국이 요구한 자동차 관세철폐 부분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돼지고기 관세철폐 일정의 연장, 기존 합의문에 수록된 복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유예 등 우리 측 요구사항도 협상 결과에 반영시켜 합의를 도출하였다. 한·미 양국은 2011년 2월 10일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합의문서를 서명, 교환하였다.

추가협상 합의 도출은 오랜 기간 동안 진전을 보지 못하던 한·미 FTA의 비준·발효 추진을 위한 결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었다. 또한 양국이 경제적·전략적인 의미에서 상호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우리로서는 장기간 지연되어온 한·미 FTA의 경제적 혜택을 실현하고, 한·미 경제·통상 관계를 강화하며, ASEAN·인도·EU에 이어 미국을 실질적인 우리 경제영토로 확장하는 효과 외에도 한·미 양국 간 전반적인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미 FTA 인준절차는 미국에서 먼저 마무리되었다. 미국에서는 2011년 10월 12일(이하 현지 시간) 한·미 FTA 이행법안이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미의회를 통과하였다. 2011년 10월 3일 오후 늦게 제출된 한·미 FTA 이행법안은 신속한 처리과정을 거쳐 의회 회기일로 6일째 되는 10월 12일, 하원에서 찬성 278, 반대 151, 상원에서 찬성 83, 반대 15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 처리되었다. 법정 회기일 기준으로 6일 만에 미 의회를 통과한 것은 역사상 가장 빨리 처리된 미·모로코 FTA 처리와 같은 기록이다.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통과를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에서부터 연방정부 예산안 삭감, 국가부채 상한 인상, 2009 무역조정지원제도 연장과 같은 고비를 넘기면서 미 행정부 및 민주당, 공화당이 상호 양보와 조정을 통하여 이루어낸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대외 경제정책 연구원(‘한·미 FTA 이행법안 미 의회 통과 의미와 시사점’, 2011.10.13)은 타협의 배

경으로 미국 경제의 재침체 우려, 한·EU FTA 발효에 따른 한국 시장에서의 미국 기업의 상대적 불이익, 내년 선거를 앞둔 미국 내 정치일정,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등을 꼽았다.

대외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 12월 한·미 FTA 추가협상의 타결이 한·미 FTA 미의회 통과와 단초가 되었다. 양국 정부는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우리나라는 농산물과 의약품에서 일부 양허일정을 늦추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협상을 타결시킴으로써 양국 간 자동차 무역의 불균형을 이유로 그동안 한·미 FTA를 반대하여 온 미 의회 내 여론을 반전시키고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얻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이후 미국 내 의회 및 언론의 동향을 감안할 때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비준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2011년 봄(3~4월, 늦어도 5월 초)까지는 미 의회의 비준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2011년 2월 초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2월 말 혹은 3월 초경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 발표하고, 2011년 봄 비준을 희망한다는 행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복병이 나타났다. 대선을 앞둔 미 행정부와 공화당의 정치적 대립이 그것이었다. 먼저 2011년 2월 연방정부 예산안 삭감문제가 불거졌다. 2011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놓고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이를 감축하려는 공화당과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확보 차원에서 이를 지키려는 미 행정부 및 민주당과의 대립으로 FTA 이행법안에 대한 논의가 뒤로 밀려났다. 이후 예산안 문제가 타협되면서 다시 3월 중에 한·미 FTA 이행법안이 제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2011년 3월 7일 상원 재무위와 하원 세입위 등 의회의 FTA 소관 상임위 앞으로 서한을 보내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정부 차원의 준비작업이 모두 끝났다.”면서 언제라도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예산안 삭감이 타협되자 이번엔 공화당의 다수 하원이 한·미 FTA를 포함하여 지난 부시 행정부 때 협상을 끝낸 파나마 및 콜롬비아와의 FTA 등 3개의 FTA 이행법안을 동시 제출할 것을 미 행정부에 요구하였다. 2012년 대선을 앞둔 공화당으로서는 한·미 FTA 이행법안만을 통과시킬 경우 자칫 한·미 FTA의 공적이 모두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시 행정부 때 협상이 끝난 파나마 및 콜롬비아 FTA도 함께 통과시키는 것이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에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3개 FTA 동시 제출을 요구한 것이었다. 한·미 FTA는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의회 통과에 문제가 없으나, 미·콜롬비아 FTA는 민주당의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어 의회 통과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3개 FTA를 함께 의회에 제출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특히 민주당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전미



한·미 FTA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중·소상공인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일자리를 잃어버려서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FTA가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자신 있게 FTA 추진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미 FTA 비준을 목전에 두면서 세계가 또 한 번 경제 위기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어려움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위기는 세계 경제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이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세계를 위기에 빠지게 할 것인가, 세계 모든 전문가들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한 나라가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미국, 유럽국가도, 독일도 한 나라 혼자서 못합니다. 지역 간 협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오찬 연설 (2011.10.12)



산별노조가 콜롬비아 정부의 노조탄압을 이유로 미·콜롬비아 FTA에 적극 반대하고 있어, 내년 선거를 앞둔 오바마 행정부로서도 미·콜롬비아 FTA를 그대로 의회에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이행법안의 3월 말 미 의회 비준은 물거품이 되었으며, 콜롬비아 정부의 노조에 대한 국내 조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비준시기를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후 미 무역대표부와 행정부는 미·콜롬비아 FTA의 비준을 위하여 콜롬비아 정부와 지속적으로 접촉, 예상 외로 이른 시간에 콜롬비아 정부로부터 노동자 권리향상을 위한 추가조치 단행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4월 중순, 3개 FTA의 의회 동시제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후에도 무역조정지원제도 연장문제 등 추가적인 걸림돌이 있었으나 미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의 하원 간 대립 구조가 조정을 거쳐 타협에 이르게 되었다.

대외경제연구원은 미 행정부와 의회 간 타협의 배경으로, △더블딕 우려 등 미국 내 경기침체에 따른 돌파구 마련, △한·EU FTA 발효에 따라 한국시장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미 업계의 한·미 FTA 조기 발효 요구 수용,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일정을 고려한 조기처리 필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 따른 정치적 고려 등을 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의식하여 그동안 추구하여 온 5년 이내 수출 두 배 증가라는 정책의 성과를 제시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최근 미국 경기의 재침체가 우려되자 그 돌파구로서 한·미 FTA 조기발효를 활용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등 미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EU



지난 60여 년의 한·미 동반자 관계를 나타내는 한국어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바로 같이 갑시다.' 이것이 영어로 하면, 'We go together.'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60년을 함께 하여 왔습니다.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미 양국 모두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존경하는 베이너 하원의장, 바이든 부통령,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한·미 양국관계는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마침내 여러분의 손에서 어제 밤 통과가 되었습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통과된 바로 이 자리에서,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비준됨으로써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章)이 열렸습니다. 이로써 한·미 관계는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한·미 FTA는 양국 모두 윈윈(win-win) 하는 역사적 성과입니다.

한·미 FTA를 통하여 두 나라는 모두 미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우리 양국의 기업인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소규모 상인,

그리고 창조적 혁신을 꿈꾸는 모든 이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미국 상하원의회 합동회의 연설(2011.10.13)



FTA 발효로 한국시장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미 업계의 한·미 FTA 조기비준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012년 1월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대선 분위기에 들어가는 미국 내 정치 일정도 타협의 배경이 되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도 이러한 조기타협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근거의 하나로써 정부의 FTA 이행법안 제출이 10월 3일 오후 5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오후 하원 세입위 위원장이 3개의 FTA 이행법안을 심의하겠다는 공고를 낸 것을 들고 있다. FTA 이행법안은 하원 세입위의 심의를 거쳐야 본회의 상정 표결이 가능한데 세입위 심의공고는 최소 심의 3일 이전(공지 당일 및 심의 당일 포함)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입위 심의 당일(10월 5일)로 3개 FTA 이행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가결되고, 이후 하원 본회의의 표결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 72시간을 충족시켜 10월 12일 본회의의 표결에 이르게 된 데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고려한 미 의회 지도부의 한·미 FTA 이행법안 조속 처리라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평가다. 특히 상원 본회의의 표결에 필요한 법안당 20시간의 토론시간을 상원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단축시킨 상원의 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0월 13일 이뤄진 미 상·하 양원 합동연설에서 한·미 FTA 이행법

안의 미 의회 통과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으며,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양국관계에 있어 한·미 FTA가 가지는 의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미국 의회의 한·미 FTA 인준은 우리나라에 서의 비준안 처리 속도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정부가 2011년 6월 3일 추가협상 결과를 포함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의안은 2011년 9월 1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이후 정치권의 갈등과 이견으로 한·미 FTA 비준은 계속 지연되었다. 그러자 경제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011년 11월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각각 성명을 내고 한·미 FTA 비준 지연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치권에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였다.

한편 이러한 비준 과정에서 정부는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범국민적인 이해도 제고 및 지지의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경제계·국회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비준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총리실 및 농림수산물부, 지식경제부 등 각 부처 실장급 등 20인이 참여하는 'FTA 비준지원 실무추진단'을 2011년 1월에 구성하였다. 2011년 한 해 동안 총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FTA 비준여건을 점검하고 FTA 국내대책과 관련된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시민사회 및 경제계와의 협력을 위하여도 노력하였다. 2006년 2월 3일 한·미 FTA 협상개시 선언과 더불어,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를 포함한 42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가 같은 해 4월에 구성되었다. 정부는 민간대책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FTA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 한·미 FTA 공적을 놓고 공방이 전개된 미 대선과정

미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한·미 FTA 체결의 공적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간의 공방이 계속되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 롬니 후보는 2012년 10월 13일 외교정책에 관한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단 1건의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를 포함하여 파나마,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하였으나 이는 모두 공화당시절에 시작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3개의 FTA가 모두 공화당때 시작된 것은 맞지만, 오바마 정부의 공적 또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부시 행정부에서 시작되었다가 자동차 관세, 노동자 인권 등의 문제로 방치되어 있던 한국·파나마·콜롬비아와의 FTA를 모두 정비하여 의회 비준을 마치고 발표시켰다는 주장이다.

국회를 대상으로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농림수산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참석하여 한·미 FTA와 관련된 쟁점들을 설명하였다. 특히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는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었다.

동 협의체는 정부 측 4인(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물부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과 여·야 각 5인(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농림수산물위원회 위원장 및 농림수산물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간사 등), 총 14인이 참여하였다.

6월 24일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1차 회의 이후 10월까지 8차례 걸친 회의 및 3차례의 소협의체를 통하여 '한·미 FTA 추가협상 영향 분석',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FTA 환경 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등을 보고·발표하였다.

이외에도 협의체에서는 추가보완대책에 대한 논의 등이 지속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 10월 31일 여·야 원내대표는 국내보완대책과 관련된 사항(농어업분야 13가지, 중소기업인 관련 4가지)에 합의를 이루었으며, 합의사항은 2012년 1월 2일 발표된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보완대책'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을 기반으로 2011년 11월 22일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2007년 6월 한미 양국이 협정에 공식 서명한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한국은 이로써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세계 1·2위 경제권역인 유럽연합(EU)·미국과 동시에 FTA를 맺은 나라가 되었다. ASEAN(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포함하여 세계 3대 경제 블록과 FTA를 체결한 곳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2011년 11월 23일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예측불허인 상황에서 한·미 FTA를 포함하여 세계 경제 영토를 61% 넓힌 것은 어떤 경쟁국보다 한 발 앞선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한·미 FTA 성과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정부와 기업, 근로자 모두 힘을 합하여 큰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하였다.

세계 언론은 한국 국회의 한·미 FTA 비준 소식을 긴급뉴스로 보도하였다. 일본·중국·대만 등 경쟁국들은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에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들은 자국 기업들이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과 경쟁할 때 훨씬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이란 점을 우려하였다.

2011년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 법안이 의결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한·미 FTA 비준 절차를 마무리 하였다.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양측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011년 11월말부터 2012년 2월 21일까지 상호 법령정비 등 한·미 FTA의 발효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한·미 FTA 이

## 한·미 FTA 비준에 대한 경제계 반응

- 전국 13만 기업을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과의 경제 고속도로가 구축되고 우리나라가 유럽과 아시아, 북미 3대륙을 잇는 자유무역 중심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내년 초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논평을 통하여 “글로벌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한·미 FTA가 비준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일국가로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무역·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며, 더욱 치열해진 국제경쟁 속에서 중소기업이 시장 선점을 통하여 굳건히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 시장 전략 품목의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출 지향형 강소기업 육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였다.
- 통상전문가들은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환영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혁신적인 전략과 마인드로 미국시장 진출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던 우리나라가 주요 동맹국과의 FTA를 통하여 한 배를 탔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며 “중국·일본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고 진단하였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는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쟁국에 앞서 미국 시장을 넓혀나가야 한다.”며 “이후 예상되는 중국, 일본 등의 FTA 요청에도 적극 응하여 시장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수출이 7, 8월 이후 줄어들고 내수도 감소하는 등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내년엔 더욱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미 FTA 발효는 경기 위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는 “한·미 FTA 비준 동의안 통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서비스업 등의 제도가 투명해지고 선진화될 것이라는 신뢰를 준 것도 효과 중 하나”라며 “한·미 FTA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FTA 소식, Vol 46(2011.11.28)

행준비상황 점검협의를 진행되었다. 이행점검 협의 결과 양측은 협정의 이행 준비 상황이 대체로 양호하다고 평가하였으며, 2012년 2월 21일(서울 시간) 한·미 FTA 이행점검협의를 마무리하였다.

이행점검협의를 마무리된 후 한·미 FTA는 양측 간 합의로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으며, 2012년 5월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 통상장관을 대표로 하는 제1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양측은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공동위원회 의사규칙’을 채택하고 이에 기반하여 공동위원회 산하에 수석대표 회의를 설치하였다. 또한 패널 구성의 세부

## 세계가 본 한·미 FTA

• **미국** 미국정부는 11월 22일 한국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직후 환영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 무역대표부 론 커크 대표는 “한국 국회의 비준안 처리를 환영한다.”며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윈윈(win-win)협정”이라고 평가하였다. 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싱크탱크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사무총장은 “한·미 양국에 모두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말하였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연구 책임자는 “한·미 FTA가 한국과 EU 양쪽에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과 같이 한·미 FTA 역시 양국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 **일본** 우리 국회가 22일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다른 어느 나라보다 관심 있게 지켜본 국가는 일본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무역개방 추진 일정이 한국의 FTA 비준 동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미·일 FTA라 할 수 있는 TPP 교섭 참가를 표명한 일본 입장에선 한·미 FTA의 비준안 통과가 향후 세계 무역 질서 재편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언론들은 지난 11월 22일 한국 국회의 비준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보도하며 자국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였다. 일본 최대 신문인 요미우리 “한·미 FTA가 내년 1월 초 발효될 전망이다. 그럴 경우 95%의 물품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및 주요 부품 관세도 5~10년 안에 모두 사라진다.”고 소개하였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일본 수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였다.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은 “한국은 한·미 FTA로 자동차 부품 등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보다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한·미 FTA의 성패 여부가 일본 TPP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니혼게이지아 신문은 “한국 측 마무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1월 한·미 FTA가 발효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일본 기업은 한국 기업에 비하여 관세 등 측면에서 불리한 경쟁 조건에 놓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 신문은 “한·미 FTA가 양국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미국 주도하에 협상 중인 TPP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였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이 EU에 이어 미국과도 FTA를 마무리하자 절박한 상황에 몰린 일본의 입장을 언론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 **대만** 한국의 또 다른 수출 경쟁국인 대만에서도 한·미 FTA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만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한·미 FTA가 대만에 미칠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한국이 주요 수출 경쟁국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영향은 이 보다 클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연구소 측은 “이번 FTA로 미국 기술의 한국 이전이 가속화하고 미국과 한국 간 투자가 보다 쉽게 진행될 것”이라 지적하였다.

• **중국** 중국은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이다. 현지 언론들은 한·미 FTA가 한국 국회에서 비준된 사실만 보도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이 EU에 이어 미국과 FTA를 마무리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의 귀썬강(郭憲綱) 부소장은 “한·미 FTA나 TPP보다 한·중·일 FTA가 3국 모두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통점이 많은 한국과 중국이 먼저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방한한 리커창 부총리는 공개석상에서 한·중 FTA를 서두르자며 적극적인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한·중 FTA 체결 문제 논의의 최대 지연 요소였던 한·미 FTA비준 문제가 해결되어 한·중 FTA도 추진 동력을 얻게 되었다는 판단이다. 중국은 한·중 FTA가 미국 주도의 TPP 구상에 맞서는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북아시아 전체가 한·미 FTA가 일으킨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 FTA 소식, Vol 46(2011.11.28)

한·미 FTA 추진 일지

<b>2004</b>	<b>2009</b>
11 한·미 FTA 예비협약 개시 합의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4.22 한·미 FTA 비준 동의안 국회 상임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5.14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워싱턴)
<b>2005</b>	7.27~28 제2차 한미 통상협의 개최(워싱턴)
2~3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1차 회의 (서울) 등 FTA 추진 논의	12.17~18 제3차 한미 통상협의 개최(서울)
3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2차 회의 (워싱턴)	<b>2010</b>
4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3차 회의 (워싱턴)	5.4~5 2010년 한미 통상협의 개최(워싱턴)
9 미 정부, 한국 등 4개국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	9.15~16 2010년 제2차 한미 통상협의 개최 (서울)
	10.26 한미 통상장관 회의 개최 (샌프란시스코)
<b>2006</b>	11.4~5 한·미 FTA 관련 실무협의 개최(서울)
2.2 FTA 공청회 개최	11.8~9 한·미 FTA 관련 통상장관 회의 개최 (서울)
2.3 한·미 FTA 협상 출범 공식 선언	11.30~12.3 한·미 FTA 관련 통상장관 회의 개최(메릴랜드주 콜롬비아시)
3.6 제1차 한·미 FTA 비공식 사전 준비 협의	12.3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4.17~18 제2차 한·미 FTA 비공식 사전 준비 협의	
6.5~9 제1차 협상 개시(워싱턴)	<b>2011</b>
7.10~14 제2차 협상(서울)	2.10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
9.6~9 제3차 협상(시애틀)	5.4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
10.23~27 제4차 협상(제주)	6.3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12.4~8 제5차 협상(몬타나)	9.16 한·미 FTA 이행법안 외통위 상정
<b>2007</b>	10.3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제출
1.15~19 제6차 협상(서울)	10.12 미 상·하원 본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2.11~14 제7차 협상(워싱턴)	10.2 미 오바마 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
3.8~12 제8차 협상(서울)	11.22 한·미 FTA 비준 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3.19~22 한·미 FTA 고위급 협상 개최(워싱턴)	11.29 이명박 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
3.26~4.2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 개최(서울)	
4.2 한·미 FTA 협상 타결	<b>2012</b>
6.30 한·미 FTA 공식 서명	3.15 한·미 FTA 발효

절차, 분쟁해결 절차상 문서 제출 기한, 분쟁해결 절차의 공개 등의 내용을 규정한 '분쟁해결 모범절차 규칙'도 채택하였으며, 공동위 산하 위원회 및 작업반의 향후 일정 등에 합의하였다.

## 2. 대국민 이해제고 노력

이명박정부는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여 한·미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한·미 FTA 홍보활동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한·미 FTA의 경제적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한·미 FTA로 의료비가 폭등하고 공공정책이 무력화된다는 것과 같은 오해에 대응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이었다.

한·미 FTA 발효를 전후로 장비구니 물가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 등 일반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혜택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특히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매체인 대중교통, 온라인 등을 집중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제고하였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및 객차 내에는 한·미 FTA의 소비자 혜택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만화를 게재하였으며, 무가지 및 전국 주요지역 전광판에도 광고를 게재하였다. 또한 네이버 등 젊은 층의 방문이 높은 포털사이트에 관세인하 혜택에 대한 배너광고를 게재하는 등 국민이 FTA를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소통활동을 전개하여 나갔다.

한편 한·미 FTA 비준을 계기로 트위터 등 SNS 매체를 통하여 한·미 FTA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가자 이에 대응하여 FTA에 대한 올바른 사실관계와 근거를 제시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신문과 무가지 등 전통적인 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이고, 젊은 층의 접속률이 높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정책 홍보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한·미 FTA에 대한 식량 안보, 의료비 폭등, 지적 재산권,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등 주요 쟁점의 오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리기 위하여 FTA 간행물, 홍보 리플렛 등을 활용하여 올바른 근거를 제시하여 왜곡된 정보를 시정하여 알리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 제2절 한·미 FTA의 내용과 효과

### 1. 한·미 FTA 주요 내용

한·미 FTA는 상품,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경쟁,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FTA이다. 양국은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고, 공산품의 경우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조기에 철폐하여 시장선점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한편 농산물은 국내 영향이 없거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하여는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으나,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취급하거나 15년 이상 관세 존속 기간을 확보하는 등 민감도에 따라 관세철폐 기간을 차별화하였다.

서비스 분야는 선택적·단계적으로 개방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공교육·의료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포괄적 유보를 통하여 정책 자율권을 확보하였으며 국내 전문직 서비스 및 금융 등의 분야는 단계적·제한적으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 (1) 상품분야

공산품, 임·수산물 등 상품 분야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액 기준 약 94% 품목의 조기(3년 내) 철폐에 합의하였다.

미국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승용차는 관세 2.5% 발효 후 5년 후 관세를 철폐하며, 화물자동차는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승용차의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5년 후 철폐하기로 하였다. 전기자동차는 우리나라는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우리나라(4%)와 미국(2.5%) 모두 5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하였다. 또한 일반 세이프가드 외에 한·EU FTA 세이프가드와 같이 관세 철폐 후 10년간 적용가능, 발동기간은 최대 4년, 발동 횟수 미제한, 점진적 자유화의무 미규정, 잠정조치 절차요건 간소화, 2년간 보복금지의 6개 절차적 요소가 반영된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섬유 분야에서는 미국이 수입액 기준으로 61%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린넨, 여성 재킷, 남성셔츠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하여 원사기준 적용 예외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미국 측의 우려를 반영하여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2) 농산물 분야

우리 농업의 민감성과 미국의 시장접근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수확기 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 등에 대하여는 현행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였다.

또한 세 번 분리를 통하여 우리 농산물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감자와 대두의 경우 관세율표상 세 번(품목분류번호)을 식용과 가공용으로 분리하여 국내 생산에 영향을 줄

한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단계	품목수 (총 8,434개)	주요 품목 (관세율)		
		공산품	임산물	수산물
즉시	7,160	자동차 부품(3~8), 크실렌(5), 통신용광케이블(8), 기어박스(8), 전자계측기(8), 헬륨(5.5), 할로겐전구(8), 도난/화재/가스경보기(8), 카본블랙(5.5), 광섬유(8) 등	원목(2), 기타 비금속광물 (3~8), 벼루(8) 등	브라인슈림프알(8), 냉동굴(20), 검정대구(10, 냉동), 연어(10-산것, 냉동), (20-신선·냉장, 훈제) 등
3년	719	폴리카보네이트(6.5), 요소(6.5), 실리콘오일(6.5), 폴리우레탄(6.5), 골프채(8), 콘택트렌즈(8), 냉각기(8), 삼푸(8), 향수(8), 알칼리망간간전지(13), 제초제(6.5) 등	제재목류(5), 단판(5~8)	해삼(20), 왕게(20), 먹장어(10, 산것), 등
5년	228	승용차(8), 고주파증폭기(8), 안전면도날(8), 환자감시장치(8), 면도기(8), 헤어린스(8), 치석제거기(8) 등	창문/틀(8), 로진(6.5), 코르크(8), 바구니(8), 등	명란(10, 냉동), 대구(10, 냉동), 바다가재(20), 새우살(20, 냉동), 은대구(10, 냉동) 등
10년	323	아크릴니트릴(6.5), 기초화장품(8), 페놀(5.5), 초음파 영상진단기(8), 자기공명 촬영기기(8), 볼베어링(13), 폴리에틸렌(6.5), 복합형 확성기(8), 아세트(5.5), 안전벨트(8), 내시경(8) 등	목제식탁용품(8), 목재틀(8), 마루판(12) 등 (10년 비선형) 파티클보드(8), 섬유판(8), 합판(12) 등	홍어(27, 냉동), 임연수어(10, 냉동), 문어(20, 냉동) 등 (10년 비선형) 명태어육(10, 냉동 필레트), 오징어(24, 냉동), 꽂치(36, 냉동), 등
12년(비선형)	1			고등어(10, 냉동)
12년(TRQ)	2			민어(63, 냉동), 기타 넙치(10, 냉동)
15년(TRQ)	1			명태(30, 냉동)

※ 자료: 기획재정부

것으로 우려되는 식용감자와 식용대두에 대하여는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경쟁력이 강한 과일류에 대하여는 계절관세를 도입하거나 세 번을 분리하여 국내에서 주로 생산, 소비되는 품종은 관세철폐 기간을 장기화하였다. 오렌지, 포도는 수확기와 비수확기를 구분하여 우리 수확기 동안에는 현행관세를 유지(오렌지)하거나 관세를 17년이라는 장기기간에 걸쳐 철폐(포도)하기로 하였다. 사과, 배는 국내에서 주로 생산, 유통되는 품종에 대하여는 세 번을 별도로 신설하여 20년 동안 철폐하기로 하고, 나머지 품종은 10년간 철폐(사과는 23년간 농산물 셰이프가드 유지)하기로 하였다.

민감한 우리 농업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 특별 셰이프가드를 도입하여 FTA로 인한 피해 보호를 강화하였다. 농산물 특별 셰이프가드를 통하여 소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 민감품목,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 고관세 적용 품목에 대하여 관세철폐로 인하여 일정물량 이상 수입이 급증할 경우 자동으로 관세를 다시 올려 국내시장의 교란을 방지하도록 완충장치를 도입하였다.

한편 추가협상 시 자동차 외 여타 분야에서 이익균형 확보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제기하여 반영된 사항으로서 돼지고기 중 냉동기타(목살, 갈비살 등) 품목의 관세철폐 일정을 2년 연장하여 2016년 1월 1일 철폐하기로 하였다.

### (3) 개성공단

개성공단 제품도 한국산과 동일한 협정상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 한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단계	품목수 (총 8,434개)	주요 품목 (관세율)
즉시	6,171	캠코더(2.1), TV카메라(2.1), 자동차 부품(2.5), 엔진(2.5), 헤드폰(4.9), 폴리아세탈수지(6.5), 에폭시수지(6.1), 피아노(4.7), 핸드백(3.3~20), 매트리스(3~6), 유리거울(6.5~7.8), 제트유 및 등유(배럴당 10.5~52.5센트) 등
3년	356	실리콘수지(3), 콘택트렌즈(2), 금속절삭가공기계(4.4), 유기계면활성제(4), 10인 이상 승용자동차(2) 등
5년	206	승용차(2.5), 레드알타이어(4), 실리콘망간철(3.9), 폴리에스테르(6.5), 면직물(0~12.5) 등
10년	344	가정용 전자레인지(2), 폴리에스테르수지(6.5), 베어링(2.4~9), ABS수지(6.5), 삼유건조기(3.4), 화물자동차(25) 등 ※ 10년 비선형: 참치캔(6~35), 세라믹타일(8.5/10), 철강(4.3~6.2)
10년 초과	1	특수신발(20~55.3, 12년 비선형)

※ 자료: 기획재정부

마련하였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치하여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서 역외가공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미 FTA 협정문에 명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경협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 (4) 무역구제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관세류, 강관 등이 반덤핑 규제를 받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한·미 FTA 협정문에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우선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국 관련기관 간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조사개시 전 사전통지 및 협의, 가격 또는 물량 합의에 의하여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에 합의하였다. 상대국이 실질적 피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 셰이프가드 적용 대상에서 재량적으로 제하기로 하였다.

### (5) 서비스·투자 분야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우리 측은 교육·의료·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포괄적으로 유보하되, 사업서비스 등 개방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단계적 또는 부분적인 개방계획을 마련하였다.

법률 서비스는 3단계에 걸쳐서 개방하고, 회계 서비스는 2단계로 개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방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방송채널 사업의 외국인 의제 규제철폐(협정 발효 3년 후), 방송쿼터 일부 완화 등 부분적으로 개방하되, 외국방송 재송신, IPTV, 인터넷 VOD 등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등 주요 정책사항은 정부의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하였다. 그리고 외국방송 재송신 더빙은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스크린쿼터는 규제수준을 현재와 같이 동결하기로 하였다.

협정 발효 즉시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을 구성하여 양국이 상호 합의한 분야(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獸醫))를 중심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전문직 서비스 종사자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 ① 통신

통신 분야에서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하여 기존 외국인의 직접투자 지분 49%를 계속 유지하되 15%인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적인 투자제한을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

였다. 다만 KT와 SK텔레콤은 제외하였다.

미국은 통신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국내 시장의 협소성, 자원배분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미국 측을 설득하였다. 결국 정당한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기술표준정책 추진 권한을 인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다만, 기술 표준에 관한 정부의 규범을 제정할 경우 국내외 통신사업자들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며,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

IPTV 등 융합 서비스에 대하여는 아직 국내 규제제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의 정의, 외국인 투자한도, 내용편성에 대한 규제, 상업적 주재 의무 등 규제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하였다.

## ② 금융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경제위기 시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일시적 세이프가드 조치(예: 자본거래허가제 등)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미국이 체결하였던 FTA에서 도입하지 않았던 제도로서 처음 도입된 것이다. 발동 조건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 시 미국과 협의 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몰수(confiscatory)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중 환율제(dual exchange rate)도 금지된다. 외환규제로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국내에 묶인 자산의 운용에 제약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발동 대상은 정상거래와 자본거래이며 외국인 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상거래에 발동하더라도 IMF의 승인과 분야에 따라 미국과의 협의(Coordination)가 필요하다.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발동 기간의 1년 이상 연장인데,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발동이 원칙이다.

서민, 농민, 중소기업 지원 등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책금융기관들(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농협, 수협)은 협정의 예외로 인정하였다. 또한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수출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 신용보증은 정부 자체 기능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들 기관들은 공적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정부의 지급보증, 손실보전 등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한국)에는 있으나 한국(미국)에는 없는 신금융서비스는 엄격한 조건 하에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외무역 촉진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부대 금융 서비스에 한하여 금융 서비스의 국경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에 현지 법인·지점 등을 설립하지 않고, 해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경 간 거래는 한정적으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금융감독당국 간 협력채널도 확보하였다. 우리 소비자 보호 및 금융기관의 글로벌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감독기관(FRB, SEC 등)들 간의 MOU 체결 등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은 상대국이 금융협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농업·상품 등 타업종에 대하여도 교차보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주장하였으나 금융에만 보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 ③ 기타 서비스

국제특급배달 서비스는 종전에 무역관련 서류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것을 국제서류를 추가로 개방하였으며, 특급배달 서비스 분야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소송(ISD)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6) 의약품

의약품과 관련하여 미국의 주요 요구사항인 신약의 최저가 보장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근간을 유지하였다. 이와 더불어 독립적 의의신청 절차 마련 등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투명성 제고, 의약품 시험기준 및 복제약 시판허가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등을 합의하였다. 의약품 지재권 관련 사항은 대부분 현행 국내 규정 수준으로 합의하였으나, 복제의약품 시판허가 시 특허침해 여부 검토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 제약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특허 존중을 통하여 연구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환경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7) 기타 분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기존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되, 협정문 발효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다. 정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출원 후 3년 이상 등록이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손해배상액의 상·하한을 사전에 법으로 정하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되,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인 실손해배상 원칙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관련 표준 및 기술규정 개발과정에 상대국인의 비차별적 참여를 허용하는 내국인 대우 원칙에 합의하였고, 새로운 기술규정의 제·개정이 있을 경우, 상대국에 이를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아울러 각 당사국이 자국의 시험·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상대국의 시험·인증기관에 대하여 비차별적 대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FTA 확대로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 농업도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농업에도 큰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 농업이 새롭게 도약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13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영상메시지(2012.8.8)

최근 한류의 영향과 ASEAN, 인도, 미국, EU 등과의 FTA 체결로 우리 말과 우리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글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30회 한국어 국제 교육 학술대회 축하 메시지(2012.7.27)



## 2. 한·미 FTA의 기대효과 및 성과

### (1) 기대효과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실질 GDP는 5.6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신규 고용창출 규모는 35만 명 정도로 전망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수출과 생산 증가 등에 따라 고용이 4,300명 증가하고 향후 10년간 생산성 향상 등 FTA 효과로 취업자가 3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FTA는 양국 간 교역 확대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향후 15년간 대미 수출은 연평균 13억 달러,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억 4000만 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장 관세가 철폐되는 우리 주력 업종인 자동차 및 부품, 석유제품, 전자, 반도체 등이 FTA 혜택을 많이 볼 것으로 보인다. 관세 등 거래 비용이 줄고 통상 마찰이 완화되어 그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하여 지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산업 생산증가 효과가 향후 15년간 연평균 2조 9,000억 원으로 가장 크고, 전기전자(2조 원), 화학(9,000억 원)순으로 혜택을 볼 전망이다. 특히 경제 전반에 걸쳐 물가 안정과 저축액 증대, 한국산 제품의 품질제고 노력에 촉매제로 작용, 외환위기 침체 국면에 있는 한국경제에 활력을 주게 될 것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소비자 후생도 증대된다. 농축산물 및 자동차·화장품 등 미국산 수입상품의 가격을 떨어뜨려 우리 소비 생활은 더욱 윤택하여질 전망이다. 미국과의 문화·교



2007년 이후 최근 5년간 수주액은 3,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을 부르는 국제사회의 요청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세계 45개국과 체결한 FTA는 더욱 넓어진 경제 영토를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건설의 날 기념식 차사(2012.7.2)

그동안 정부가 체결한 FTA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 대한 EU와 일본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투자도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19대 국회 개원 연설문(2012.7.2)



육·인적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크다. 국내 제도를 선진화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한·미 FTA효과는 삼겹살·치즈·체리 등 미국산 농수축산물 및 식료품에 대한 관세 철폐다. 관세가 줄어드는 만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경감된다.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식료품의 관세 22.5%가 점진적으로 철폐(10년)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게 된다. 아이들의 간식을 비롯하여 각종 요리 재료로 사용되는 체다 슬라이스 치즈에 부과되는 관세 36%도 점진적으로 철폐(체다 치즈 10년, 일반 치즈 15년)된다. 캘리포니아 건포도(21%), 캘리포니아 아몬드(8%), 체리(24%) 가격은 한·미 FTA 발효 즉시 관세가

### 한·미 FTA 발효의 경제 효과(향후 10년간)



철폐되어 가격 인하가 기대된다. 미국산 와인에 부과되는 15%의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미국산 자동차·화장품·의류 등 공산품 가격이 인하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커질 전망이다. 발효 즉시 미국산 수입 차량에 부과되는 관세(8%)가 4%로 인하되고, 발효 5년차부터는 무관세가 돼 2,000cc를 초과하는 대형차의 경우 12% 가량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미국산 화장품(8%), 의류(13%), 셔츠(13%), 넥타이(8%), 모자(8%) 등 생활용품에 부과되는 관세도 철폐된다. 인터넷 쇼핑을 통하여 미국산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의 관세 혜택을 볼 수 있어 온라인 직접 구매가 활발하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산 비타민·오메가3 건강기능식품(8%, 5년), 가방(8%, 즉시), 의류(13%, 즉시) 등 생활용품을 온라인에서 구입 시 관세 혜택을 직접 볼 수 있게 된다.

각종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10%에서 5%로 경감(발효 3년 후)되고, 매년 납부 하는 자동차세도 대형차를 중심으로 경감돼 소비자들의 세금부담이 완화된다.

미국 지사로 파견되는 우리 근로자에 대한 비자 유효 기간이 연장되어 비자 갱신을 위한 비용과 불편도 줄어든다. 미국 현지법인 파견 근로자들에게 발급되는 L비자 유효 기간을 신설 사업체 1년, 기존 사업체 3년에서 모든 사업체 5년으로 연장된다. 1~3년마다 본인과 가족이 해외로 나가 비자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는 것이다.

**한·미 FTA 중소기업 10대 수출 유망 상품**

산업	품목별	관세(%)	양허유형	2010 대미 수출액 (백만 달러)	2010 수출 증가율 (%)
자동차 부품	브레이크 패드	2.5	즉시 철폐	270	84
	냉간단조부품 (엔진블록, 피스톤 등)	0~2.5	즉시 철폐	779	89
	볼트·너트	5.7~12.5	즉시 철폐	122	126
섬유	폴리에스터 섬유사	4.3	즉시 철폐	137	29
	카펫	6.7	즉시 철폐	19	100
기계	볼베어링	9	10년 균등	34	36
	펌프	2.5	즉시 철폐	29	480
전기전자	터치스크린 모니터	2.7	즉시 철폐	95	36
석유화학	에폭시수지	6.1	즉시 철폐	34	79
정부조달	리튬일차전지	2.7	즉시 철폐	33	226

※ 자료: KOTRA

상표·표장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도 증명표장 제도를 도입하여 상표의 품질보증 기능을 내실화할 수 있게 된다. 증명표장 제도는 K마크와 같은 기존의 인증 마크와 달리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인증도 보호하여 더 강력한 재산권 보호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마련된다. 한·미 FTA로 미국 측 관세율이 인하되면 자동차 부품, 섬유, 통신기기, 전기·기계 등 중소기업의 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한다.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 관세는 0~17% 수준으로 제조업 평균 관세보다 높은 편이다. 한·미 FTA에 따른 관세 철폐가 우리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이유다.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뿐 아니라 대기업 납품 증대를 통한 간접 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기은경제연구소는 대기업 납품 중소기업의 54.7%가 한·미 FTA로 미국 수출 확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였다. 통상전문가들은 우리 중소기업이 관세철폐 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한류 활용 상품을 새로운 수출 모델로 개척하면 미국 수출 길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미 FTA 추가협상으로 원 협정의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계량화가 가능한 자동차, 돼지고기, 의약품 등 3개 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개 연구기관이 독립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2011년 7월 22일 국회의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에 보고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하였다.

자동차 분야는 추가협상을 통하여 관세철폐 일정을 4년간 유예하고 발효 5년차부터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이는 완성차에 한정되고 우리 대미 수출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은 원 협정과 마찬가지로 발효일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되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분야는 원 협정에 비하여 대미 수출이 연간 5,500만 달러, 수입이 200만 달러 감소하여 대미 흑자가 연간 5,3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무역수지는 여전히 연간 4억 9,000만 달러 수준의 흑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추가협상에 따른 자동차 분야의 경제적 효과**

(단위: 억 달러)

구분	원 협정(A) (2003~2005 통계)	원 협정(B) (2006~2008 통계)	추가협상(C) (2006~2008 통계)	증감(C-B)
대미 수출	5.93	6.14	5.59	△ 0.55
수입	0.52	0.73	0.71	△ 0.02
대미 무역수지	5.41	5.41	4.88	△ 0.53

※ 자료: 기획재정부

돼지고기 '냉동 기타(목살, 갈비살 등)' 품목은 원 협정에서는 발효일부터 2014년까지 관세를 균등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추가협상을 통하여 관세철폐 일정이 2016년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축산농가가 한·미 FTA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원 협정에서 연평균 1,001억 원으로 예상되었던 생산 감소액이 931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행을 유예하여 우리 제약회사가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원 협정에서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발효일부터 시행하되, 발효일로부터 18개월간 분쟁해결 절차 적용을 유예하기로 하였으나 추가협상을 통하여 아예 제도 자체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연간 534~1,167억 원으로 분석되었던 제약산업의 기대 매출손실 규모는 490~1,070억 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추가협상의 영향을 2007년 원 협정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연간 406억 원~459억 원 수준의 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관세철폐 일정을 4년 유예하면서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반면, 우리의 피해가 예상되었던 돼지고기와 의약품 분야에서는 관세철폐 일정 유예와 의약품 허가-특허제도 시행 유예로 기대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추가협상에 따른 돼지고기 분야의 경제적 효과**

(단위: 억 원)

구분	원 협정(A) (2008 통계)	원 협정(B) (2008 통계)	추가협상(C) (2008 통계)	증감(C-B)
생산감소액	876	1,001	931	△ 70

**추가협상에 따른 의약품 분야의 경제적 효과**

(단위: 억 원)

구분	원 협정(A)	추가협상(B)	증감(B-A)
매출손실액	534~1,167	490~1,070	△ 44~97

**추가협상 분석결과 종합**

합계(연간)	자동차(무역수지)	돼지고기(생산액)	의약품(매출액)
406~459억 원(↓)	573억 원(↓)	70억 원(↑)	44~97억 원(↑)

※ 자동차 분야의 무역수지는 분석당시인 2011년 6월 평균 환율로 환산한 금액

※ 자료: 기획재정부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 추가협상은 자동차 등 대기업의 이익 감소를 감수하면서 취약한 축산농가와 제약산업의 이익을 보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주로 중소기업의 영역인 자동차부품은 원 협정과 동일하게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므로 우리 중소기업에게 큰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 급증 추세에 더하여 중소 부품기업의 지속적인 생산·수출 증가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자동차 완성차의 경우 관세철폐 시기가 4년 뒤로 늦어졌을 뿐, 5년차부터는 원협정과 동일한 대미 수출증가 효과가 나타나게 되며, 추가협상을 반영하더라도 자동차 수출은 연간 5억 5,900만 달러라는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며, 무역수지 흑자도 연간 4억 8,8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국회 비준이 지연되면서 경제적 효과를 재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타결 이후 4년여 간 경과함에 따라 양국 간 교역규모, 관세율 등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2010년 12월 이루어진 추가협상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하여서였다. 이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들이 최신 통계를 활용하고, 추가협상으로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여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재분석' 결과를 2011년 8월 5일 발표하였다. 2007년 분석과의 비교를 위하여 분석방법은 동일하게 사용하였으며 제조업, 농업 등 분석대상 분류와 FTA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는 분석기간 등도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재분석**

KIEP 등 10개 국책연구기관 합동분석 (2011. 8)		
G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2% 증가(단기)(교역증대·자원배분 효율화)</li> <li>• 5.66% 증가(장기)(자본축적·생산성 향상)</li> <li>• 10년간 35만 명 고용증가</li> <li>• 10년간 연평균 23~32억 달러 FDI 추가유입</li> </ul>	
후생수준	• 단기 5억 3,000만 달러 ~ 장기 321억 9,000만 달러 증가	
무역수지	• 15년간 연평균 1억 4,000만 달러 대미 흑자폭 증가	
교역 (한국 → 미국)	• (수출) 15년간 연평균 12억 9,000만 달러 증가	
교역 (미국 → 한국)	• (수입) 10년간 연평균 11억 5,000만 달러 증가	
산업별 수출입	농업	• 향후 15년간 연평균 대미수입 4억 2,000만 달러 증가 → 축산업 연간 생산감소액 4,866억 원
	수산업	• 향후 15년간 연평균 대미수입 1,178만 달러, 수출 78만 달러 증가
	제조업	• 향후 15년간 연평균 대미수출 12억 9,000만 달러, 수입 7억 1,000만 달러 증가 → 자동차: 연평균 7억 2,000만 달러 대미수출증가(대 세계 11억 7,000만 달러)

※ 자료: 기획재정부

이 분석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장기적으로 실질 GDP는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5.66% 증가하고, 후생 수준은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소비자 선택폭 확대 등으로 321억 9,000만 달러의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보고서는 한·미 FTA 이행으로 10년간 35만 명 고용이 증가하고, 외국인의 국내투자 여건 개선에 따라 연평균 23~32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미 FTA로 향후 15년간 대세계 무역수지는 연평균 27억 7,000만 달러 흑자 확대, 대미 무역수지는 연평균 1억 4,000만 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미 FTA에 따른 실질 GDP와 후생 증가 효과**

구분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 효율화(단기)	자본 축적	
			생산성 증대 미고려(중기)	생산성 증대고려(장기)
실질 GDP (%)	2007 분석	0.32	1.28	5.97
	2011 분석	0.02	0.48	5.66
후생 (억 달러)	2007 분석	17	39.8	208.6
	2011 분석	5.3	25.5	321.9

※ 자료: 기획재정부

**한·미 FTA의 고용효과**

(단위: 천 명)

구분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 효율개선(단기)	자본 축적	
		생산성 증대 미고려(중기)	생산성 증대고려(장기)
고용창출 효과	4.3	40.6	351.3
• 제조업	2.3	14.8	81.6
• 농림어업	△ 0.7	△ 2.0	0.5
• 서비스업	2.7	27.8	269.2

※ 자료: 기획재정부

재분석 결과를 2007년 분석과 비교하여 보면 장기적인 GDP 증대 효과는 5.66%로 나타나 2007년 분석(5.97%)과 유사한 반면, 단기와 중기 효과는 다소 낮게 전망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재분석에 사용된 모형에서는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하향 조정되어 해당 물품을 중간재로 투입하는 산업의 소비·투자 수요 증가폭이 낮아진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관세가 철폐된 중장기 이후에는 경쟁촉진 등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 장기적인 성장효과는 2007년 분석과 큰 차이가 없었다. 소비자 후생은 관세철폐에 따른 가

**한·미 FTA에 따른 무역수지 증감(15년간 연평균)**

(단위: 천 명)

구분	수출 증가		수입 증가		무역수지	
	대 세계	대 미	대 세계	대 미	대 세계	대 미
제조업	3,167	1,285	138	711	3,029	573
농업	-	-	264	424	△264	△424
수산업	-	0.8	-	11.8	-	△11.0
합계	3,167	1,285	402	1,147	2,765	138

※ 자료: 기획재정부

**한·미 FTA에 따른 제조업 생산 증가액(연평균)**

(단위: 억 원)

구분	합계	구분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일반기계	화학	철강	기타
기존분석(A)	55,324	28,542	11,903	4,846	1,539	3,584	591	4,304
재 분석(B)	87,691	28,813	20,490	3,006	5,607	9,007	5,073	15,695
증감(B-A)	32,367	271	8,587	△1,840	4,068	5,423	4,482	11,391

※ 자료: 기획재정부

격 하락과 소비자 선택폭 확대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5억 3000만 달러, 장기적으로는 32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고용 효과는 단기적으로 수출증대와 생산증가 등에 따라 4,300명의 취업자가 늘어날 것으

**한·미 FTA에 따른 농업의 경제적 효과(15년 연평균)**

구분	기존분석(1980~2005 통계)	재분석(1980~2008 통계)
대 미 수입 증가(백만 달러)	370	424
생산감소(억 원)	6,698	8,150

※ 자료: 기획재정부

**한·미 FTA에 따른 수산업의 경제적 효과(15년 연평균)**

구분	기존분석(2004~2006 통계)	재분석(1980~2008 통계)
대 미 수출(천 달러)	776	776
대 미 수입(천 달러)	11,738	11,777
생산 감소(억 원)	281	295

※ 자료: 기획재정부

로 분석되었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35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농수산업도 단기에는 취업자가 감소하나 장기적으로는 농식품 가공산업의 비중 증대로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전반적인 취업자 증가효과는 장기 GDP 증가효과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존 분석(33만 6,000명)과 유사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대 세계 무역수지는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27억 7,000만 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연평균 30억 290만 달러 흑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농수산업에서는 연평균 2억 6,000만 달러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 미 무역수지도 연평균 1억 3,800만 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출은 대 세계 수출증가가 대 미 수출증가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한·미 FTA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의 수출도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수입의 경우는 대 세계 수입증가가 대 미 수입증가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던 물품이

한·미 FTA에 따른 서비스업의 경제적 효과

(단위: 억 원)

구분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 방송쿼터 축소 - 소득 감소	51.9	49.3	53.2	53.2
• PP시장 개방 - 생산 증가	323.2	22.8	176	770.8
- 소득 증가	89.8	6.3	48.6	214.3
• 저작권보호기간 연장 - 저작권료 지불	89.4	64.7	84.8	97.3
• 통신시장 개방 - 생산 증가	710	184	935	1,166
- 소득 증가	310	80	409	510

※ 자료: 기획재정부

기존 분석과의 비교(10년간 연평균)

구분	기존분석	재분석	증감(B-A)
대미 무역수지(만 달러)	△1,640	△1,590	50
생산감소(억 원)	904~1,688	686~1,197	△218~△491
소득감소(억 원)	372~695	457~797	85~102

※ 자료: 기획재정부



한·미 FTA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의 수출도 18%가 늘어났습니다.  
한국에 대한 투자도 지금 활발하여지고 있습니다. EU의 한국 투자는 FTA 발효 이후에 35%가 늘었고,  
일본은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140%, 미국과 중국도 각각 84%, 8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KOTRA 50주년 기념식 축사(2012.6.14)



한·미 FTA에 따라 가격이 인화된 미국산으로 수입선이 전환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등을 중심으로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8조 7,691억 원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존 분석에 비하여 생산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이는 그간 제조업 생산의 증가추세가 모형에 반영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업은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8,150억 원, 수산업은 연평균 295억 원의 생산 감소가 전망되어 당초 분석에 비하여 생산 감소폭이 다소 증가하였다. 농업의 경우 최신통계 반영 과정에서 그간의 농산물 대 미 수입의 급증과 생산증가 추세가 반영된 것에 기인하며, 수산업은 최신 통계에 반영된 수산물 대 미 수입은 기존 분석 시와 유사한 수준이나 생산은 기존 통계 대비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업은 분야별로 경제적 손익의 방향이 다르게 분석되었다. 방송 분야에서는 국산 쿼터 축소에 따라 영화·애니메이션 산업의 소득이 연평균 52억 원 감소하나, PP(Program Provider)시장 개방에 따른 시장 확대에 힘입어 연평균 90억 원의 소득증가가 예상되었다. 지재권 분야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해외에 추가로 지불할 저작권료가 연평균 89억 원 수준으로 전망되었다. 통신서비스 분야는 외국인의 진입 확대에 따라 향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710억 원, 소득은 31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약업의 대 미 수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23만 달러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334만 달러 증가하여 대 미 무역수지 적자가 연간 1,590만 달러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복제의약품 생산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1,197억 원 감소, 소득은 457~79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기존 분석과 비교하여서는 대 미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07년 분석과 유사하나, 생산 감소액은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3년 유예됨에 따라 기존 분석에 축소(부정적 효과가 줄어들)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전반적으로 재분석 결과 분석의 기초가 되는 통계를 업데이트함에 따라 항목별로 구체적인

경제 효과가 2007년 분석과 일부 차이가 있으나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성장·고용·무역 수지 증가를 통하여 국익에 기여한다는 점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수산업 부문은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8,445억 원(총 12조 7,000억 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피해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농수산업 지원대책이 추진되고 있었고, 이를 더욱 보완할 계획이므로 이러한 피해는 충분히 보전될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

서비스업 개방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진으로 서비스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되었다. 특히 법률·회계 분야는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교육·의료 분야는 개방에서 제외하는 등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공공성 침해 소지가 있는 분야는 개방에 따른 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2) 한·미 FTA 체결성과

한·미 FTA 발효 이후 교역 및 투자, 소비자 가격인하 등 주요지표를 살펴본 결과 FTA는 유럽 재정위기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FTA 혜택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증대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유치가 증가하고 주요 소비재가격도 인하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출기회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6개월간(2012.3.15~9.14) 대 세계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한 데 반하여 대 미 수출은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TA 혜택 품목군(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등)은 13.9% 증가하여 비혜택품목은 1.5% 감소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대 미 수출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미 수입은 전체적으로 6.5% 감소하였으나, FTA 혜택품목의 수입은 3.1% 증가한 반면, 비혜택품목 수입은 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오렌지(32.8%), 호두(53.1%), 아몬드(77.4%) 등의 식료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한 것이다.

활용률은 미국 측의 높은 개방수준, 컨설팅 등 활용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한 결과 수출의 경우 63%를 기록하여 다른 FTA 발효 1년차 활용률(한·ASEAN FTA 3.5%, 한·인도 CEPA 17.7%)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수입활용률도 56.7%로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발효(2012.3.15) 이후 8월 31일까지 전년 동기(8억 9,300만 달러) 대비 72.8% 증가한 15억 4,400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주요 소비재의 가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는 10개 조사품목 중 오렌지, 체리, 와인 등 9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FTA 확대를 계기로, 농업·축산업·수산업을 위시한 취약 분야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도 계속 추진하여 건강한 시장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19대 국회 개원 연설문(2012.7.2)



### 외국에서 바라본 한국의 FTA '글로벌 경쟁력 갖춘 FTA 허브 부상'

#### • '한·미, 한·EU FTA로 올 하반기 한국 경제 성장세 확대될 것'

2012년 하반기 한국경제는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과 최근 발효된 한·EU 및 한·미 FTA로 완만하게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략) 교육 및 의료산업의 경쟁개선 및 은행 주도의 중소기업 구조조정 가속화는 한·미 및 한·EU FTA 하에 진행되는 규제완화 조치와 더불어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높일 것이다.

- IMF 연례협의(2012.6.12)

#### • '(한·미 FTA 발효 이후) 4월 한 달간 미국의 대한 수입은 전월대비 14.6% 증가 사상 최고치 기록'

한국이 미국보다 양국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더 큰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석 달 가까이 지난 가운데, 지난 8일 발표된 무역 통계자료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미국이 한국에서 들어온 상품은 총 54억 7,000만 달러로 전월(47억 7,800만 달러) 대비 14.6%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올해 들어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월 44~47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미국이 한국으로 상품을 수출한 금액은 37억 600만 달러로 전월보다 12% 감소하였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총 17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월(5억 5,200만 달러) 대비 3배 증가하였다. -미상무부(2012.6.8)

#### • '일, 한·미 FTA 본받아 농업 경쟁력 강화하여야'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일본 제품은 한국의 경쟁 제품에 비하여 크게 불리하여졌다. 한국은 EU와도 FTA를 체결하여 지난해 7월부터 발효된 상태다. 일본 정부의 통상정책 지연으로 경제의 핵심인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제한받고 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본은 우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서둘러 참여하여야 한다. 한·미 FTA가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정부가 자유화를 강력히 반대하던 국내 농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중략) 즉,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자유화에 견딜 수 있도록 농가의 경영 체질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친 것이다. -미상무부(2012.6.8)

이와 관련하여 2012년 9월 26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Joint Economic Committee)가 2012년 상반기 중 대 한국 상품 무역에서 110억 달러 적자를 보이는 등 한·미 FTA 발효 이후 무역적자가 증가하였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 제3절 취약부분 경쟁력 제고 대책

한·미 FTA 비준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피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2007년 11월에 수립한 기존의 FTA 대책을 추가 보완한 종합대책을 2012년 1월 마련하였다. 보완된 추가 대책은 농수산업 분야에서 10년간(2008~2017) 24조 1,000억 원을 투입하여 품목별 경쟁력 강화와 수입급증에 따른 직접적 피해보전을 지원하고, 면세유 공급, 영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일몰연장분을 포함하여 29조 8,000억 원 규모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제조업·서비스업 분야에서는 R&D 지원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무역조정지원 제도를 통한 용자 및 컨설팅을 제공하며, 제약산업의 경우 '경쟁력 강화방안(2007.6)'을 마련하여 R&D 투자와 인프라 구축에 10년간(2008~2017) 1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 분야에서는 실직 전·후 단계별로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 마련 및 우수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하여 고용안정을 강화하였다.

한·미 FTA 국내 대책(2008~2017 합계)

(단위: 조 원)

구분	2007 대책 (A, 2007.11)	수정대책 (B, 2011.8)	추가대책 (C, 2012.1)	증감 (C-B)	
합계	49.9	51.1	54.0*	2.9*	
재정	21.1	22.1	24.1	2	
세제	일몰 연장분				
	면세유	15.2	15.2	15.2	-
	영세율	13.6	13.6	13.6	-
	소계	28.8	28.8	28.8	-
일몰연장 외 제도개선	-	0.2	1	0.8	
소계	28.8	29	29.8	0.8	

※ 농사용 전기료 확대에 따른 지원규모 1,000억 원 포함

※ 자료: 기획재정부

### 1. 2007년 마련한 보완대책의 이행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후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이해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7년 6월 28일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단기적 수입피해 보전장치를 확충하고 피해 품목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 등의 체질 개선 등을 위하여 향후 10년간(2008~2017)의 재정지원 방안을 별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6일에는 농어업 분야의 경우 재정계획을 포함하고 농어업인 단체 등의 추가 요구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후속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2008년부터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을 추진하였다.

국내 보완대책은 한·미 FTA를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보완대책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직접적 피해 지원과 함께 산업별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방안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다.

직접적 피해보전 방안은 무역조정지원제도 농어업 분야의,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등으로 세분화하고,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은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제조업·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로 나누었으며,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은 도시자본의 농촌투자 촉진, 농어촌 지역산업 육성, 농어촌 관광활성화 및 농어민 생활여건 개선 분야로 구분하였다.

농어업 분야의 직접적 피해보전은 피해보전 직불제와 폐업지원제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피해보전 직불제 대상품목을 사전지정 방식에서 사후지정 방식으로 개선하는 한편 소득보전비율을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였다. 폐업지원 제도의 경우에도 대상품목을 사전지정에서 사후지정 방식으로 개선하고, 경쟁력강화 지원과 폐업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구조조정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제조·서비스업의 경우 무역조정 지원대상 서비스업의 범위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였다.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를 위하여 전직지원 제도를 활성화(전직지원 비용 전액 지원, 전직지원서비스 민간위탁제도 도입)하고 훈련지원 체계를 개선(지역별 훈련과정 공모, 전담훈련기관 지정 확대)하는 한편 훈련연장급여 지원 강화(무역조정기업 등 소속 근로자를 훈련연장급여 프로그램 지원대상자로 우선 선정, 훈련연장급여 지급수준을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FTA 신속지원팀을 운영하여 무역조정기업 지정 절차, 각종 지원시책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농수산업, 제약업, 방송·문화 산업 등 주요 업종별 고용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농수산업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의 폐업지원

금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1년간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월 30~60만 원)하도록 하였고 제약업의 경우 제약업 전담 고용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였다. 방송·문화 산업의 경우에도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리더 양성(3년간 2,000여 명)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경쟁력 강화 방안은 농업, 수산업, 제조업·서비스업으로 나누어 분야별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농업은 유통체계 개선·품질고급화 등을 통하여 생산비용 절감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축산업은 소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 실시하는 한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축사시설 현대화, 분뇨 공동처리 등을 지원하였다. 낙농 분야도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우수수급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였다. 닭·오리의 경우에는 사육단계에서부터 HACCP를 도입하도록 하였으며 2009년부터 포장유통 의무화를 전체 도축작업장으로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원예분야의 경우 과실류는 우수 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 등이 이루어 지도록 하였으며, 전업농을 중심으로 생산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채소류의 경우에는 우수 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생산시설 현대화뿐만 아니라 우량 품종의 개발·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계약재배 면적이 확대되도록 하였다. 인삼은 인삼 수출전문단지를 신규로 육성하는 한편 계열화사업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식량·임산물 분야의 경우에도 콩·감자는 고품질 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계약재배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보리는 사료작물(총체보리)과 에너지 작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고, 생산량을 적정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하였다. 임산물의 경우에도 목재류 및 호두·밤 등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체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농업 구조 및 체질 개선을 위하여 고령농을 대상으로 지급기간을 70세에서 75세까지로 연장하는 등 '경영이양직불제'를 보완하도록 하였고, 전업농을 대상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주업농에 대하여 해당연도 농업소득(조수입)이 기준소득보다 일정수준 이상 하락 시 그 격차의 일부를 보전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영안정 장치를 확충하였으며, 농지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영농규모화도 촉진하도록 하였다.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의 기반인 농가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농업법인체에 전문경영인 영입 촉진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농업전문 PEF(Private Equity Fund)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에 대한 투자지원이 확대되도록 하였다.

농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농식품 클러스터를 신규 조성(2014년까지 2개)하는 등 농업의 고부가가치산업화를 추진하고, 30대 수출상품을 선정하여 수출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농식품 수출이 2017년까지 60억 달러(2007년 25억 달러)를 달성하도록 지원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지산업 육성 및 농림 바이오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농업을 첨단지식·기술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였다.

수산업 분야는 원양어업(명태, 민어), 연근해어업(고등어, 오징어), 양식어업(넙치·볼락, 뱀장어 등)의 생산 및 유통설비 현대화를 통한 품질고급화,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또한 총허용어획량(TAC) 관리어종 확대 및 자율관리어업 참여 어촌계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수산자원 회복 정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이 확충되도록 하였고, 수산자원보호·환경관리 등을 위한 수산보전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여 수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산가공·유통산업 육성, 관상어, 고유 토산어 등 고부가가치 내수면 양식품 종 개발 및 산업화 지원, 안정적인 어업 경영기반 확충 지원 등을 통하여 수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조업·서비스업 분야는 제약업 및 조리기개방 업종(정밀기계·정밀화학 등)에 대한 R&D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기업 경영환경 개선, 유망 서비스 발굴·육성, 해외소비 국내전환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한·미 FTA 활용지원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제약산업의 경우 의약품 품질관리체계(GMP) 및 인허가 절차를 국제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제약 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고, R&D 확충, 임상시험센터 확대 등 제약사의 신약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미국 등에 의약품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해외박람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등 제약산업 수출촉진을 지원하였다.

수혜업종인 섬유산업의 경우, 우회수출 우려 완화, 통관신속화 등을 위하여 기업의 생산현황 및 무역동향을 파악하는 섬유생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밀화학·정밀기계 등 조기기개방업종에 대한 R&D 확충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제조업·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2007년 6월 25일 발표)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였다. 토지·인력 등 핵심 생산요소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기업친화적 경영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고, 동의명령제 도입,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등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래비용 절감을 위한 법·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서비스업 분야는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한 관광·레저산업을 활성화하고, RFID(무선주파수인식방식: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등 첨단 ICT 확산 R&D 투자확대 등 생산성

분야별	계	부처별(과제수)
농수산업	153	농식품부(농업 121, 수산업 31), 환경부(1)
제조·서비스업	48	재정부(2), 법무부(2), 문광부(17), 지경부(14), 중기청(3), 금융위(1), 방통위(9)
제약업	33	교과부(1), 복지부(32)
고용	26	고용부(26)
계	260	12개 부·청·위원회

※ 자료: 기획재정부

제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금융·방송·통신 등 시장개방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지역별 FTA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윈스톱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활용지원 체계를 강화하였다.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은 농어촌 지역의 소득원이 농어업 외에도 제조업·물류·관광산업 등으로 다변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농어촌 경제활성화 및 구조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향토자원 발굴·육성, 자연경관 관광자원화 등을 통하여 농어촌 자원을 산업화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농어촌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확대, 농어촌 숙박시설 규제완화 및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등을 통하여 농촌관광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어업인이 농지를 출자하고 도시자본 투자를 통하여 개발 사업 추진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도시민의 농어촌 투자를 촉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 추진을 위하여 10년간(2008~2017) 총 21조 1,000억 원을 지원(2007.11)하기로 하였다. 농업부문의 20조 4,000억 원을 살펴보면 품목별 경쟁력 제고 7조 원, 농업체질 개선 12조 2,000억 원, 단기적 피해보전 1조 2,0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산부문 7,000억 원은 직접적 피해지원에 765억 원, 품목별 경쟁력 강화에 541억 원,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5,956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의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08~2012년까지 총 7조 9,918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08~2011년까지 5조 8,687억 원의 예산 중 4조 7,536억 원을 집행(집행률 81%)하였다. 2008~2011년 국회 예산안 심의 시 소득보전직불금(현, 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등 한·미 FTA 비준 시까지 집행을 유보한 사업들과 경영이양직불,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등 추진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일부 사업들은 한·미 FTA가 비준, 발효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 수립된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과제를 총 260개로 재분류(기존과제 224개+신규과제 36개)하고, 각 과제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분야별, 기관별로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하고 있다. 2012년 6월 말 현재, 총 260개 과제는 모두 완료 또는 정상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현장방문을 통한 농어업인 등의 의견수렴, 체감도가 높은 과제의 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FTA 국내 보완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하여 나가고 있다.

## 2.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2011.8) 마련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그동안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국내 보완대책의 수정·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2011년 8월 18일 제21차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FTA 환경 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하였다.

이 대책은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마련한 'FTA 국내보완대책(2007.11)' 수립 이후 3년여가 경과하여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2010년 말에 발생한 구제역 등으로 농수축산업의 여건이 변화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책의 방향과 내용을 평가하고 농어업인 의견 수렴, 농어업 현장점검 등을 바탕으로 농어업인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기존 대책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평가 및 농림수산식품부 평가로 이루어졌다. 전문가 평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참여하여 3년간의 추진성과와 미비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축산, 곡물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사업별로 점검하였으며,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필요성도 검토하였다(2010.12~2011.2). 또한 2011년 3월에는 전문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한편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주요지역별 현장점검 및 선도 농어업인 대상 간담회도 실시하였다. 주요 권역별로 농어업인 대상 간담회와 농업부문, 축산, 과수·원예, 수산부문 등 업종별 대표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이 이루어졌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현장 점검 및 의견 청취 등이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기존 대책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으나, 시설현대화 등의 사업은 당초보다 수요가 증가하였고, 농어업인은 피해보전 직불제, 농어업용 면세유 확대 등 직접적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평가에 의하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등은 축산물 수요증가에 기여하였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하여 기술 경쟁력이 제고되어 과수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 수요가 지원규모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원규모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농림수산물부 평가에서도 축산·원예시설 현대화 등은 지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제기되었으며, FTA 대책의 내실화 및 확충을 위하여 추가적인 농어업인 의견수렴, 사업 추진방식 변경(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되,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질적 지원을 늘려나가는 방향 전환을 모색) 등이 제안되었다. 농어업인 여론수렴 결과에 따르면 시설현대화 사업, 유통구조 개편 등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여 줄 것 등이 건의되었고, 축사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보조를 모두 용자로 전환하여서라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에 따라 FTA 환경 하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FTA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하여 재정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농어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규모는 확대하여 재정지원 방식을 효율화하고, 인프라 구축 및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사업을 확충하는 한편 농어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세제지원을 병행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직접적 피해보전 강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확충,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등의 추진과제 및 이의 실행을 위한 세부과제가 마련되었다.

특히 대책에서 중점을 두었던 것은 농어업인의 수요가 많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규모를 21조 1,000억 원에서 22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그와 더불어 집행이 부진한 경영이양직불 사업 등은 실제 소요에 맞추어 지원 규모를 축소 조정하고, 농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생산비 절감 등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병행하여 대책에 반영하였다.

추진 과제별로는, 먼저 직접적 피해보전 분야에서는 농축수산업의 경우 2007년의 기존 대책에 비하여 피해보전 직불제의 발동요건을 완화(평균가격 대비 80% 하락 → 85% 하락)하고 보전비율을 상향조정(차액의 80% → 90%)하는 한편 대상 품목 확대(사전지정: 키위, 시설포도 → 사후지정: 모든 품목) 등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피해보전 기능을 강화하였다. 폐업지원 제도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향후 10년간 시행하며 농어가에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였다.

한편 제조·서비스업에서는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기존 제도는 FTA 체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6개월간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하여 융자 및 컨설팅을 제공하던 것을 20%이상 감소한 기업으로 지원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대상업종을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서비스업 전체로 확대하여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하였다.

농어업인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하였다. FTA로 인하여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업인·근로자를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고용촉진 지원금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촌 등 자치단체 주도로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은 핵심 인프라 시설 지원, 유통체계 개선, 우수 브랜드 육성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품질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기술개발·수출지원을 통하여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을 육성하도록 하였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축사·과수·원예전문단지 시설 등 농어업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대폭 확대(2조 2,000억 원 → 4조 원)하도록 하였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당초 5천 호 지원 계획을 전업농 중 시설취약 농가의 100%인 1만 2,000호까지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지원규모는 정부지원규모를 확대(1조 5,000억 원 → 2조 원, 이차보전 포함)하되, 농협자금(1조 원)을 활용하여 실제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1조 5,000억 원 → 3조 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설원에 품질개선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을 전문단지에서 일반시설로까지 확대하여 일반원예시설 3,000ha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농업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규모 산지를 중심으로 산지거점유통센터를 균형적으로 배치하여 규모화에 따른 경영안정 및 수급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발작물 브랜드 지원 규모를 당초 40개소에서 67개소로 확대하는 등 소규모 농공단지 등을 중심으로 과수, 원예, 발작물, 축산 분야의 우수 브랜드를 육성하여 고품질 생산 및 경영안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농림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방안도 추진하였다. 과수재배의 근간인 무병·우량 묘목을 생산, 공급하는 데에는 장시간(8~13년)이 소요되므로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등 미래 성장을 위한 가축 품종개량 및 종묘·종자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기로 하였다. 또한 생명공학을 활용한 농림 분야 기술의 사업화 연구 지원 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실현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였다.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 및 재해보험 대상품목 지속 확대 등을 통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확충하도록 하였으며, 친환경 농어업 지원(어업

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및 친환경 부표·생분해성 어구 지원확대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였다.

제도 개선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개선, 임차농 보호제도 마련, 축산업 허가제 도입 및 방역체계 강화,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지속 확대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개선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12월 사이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거부율이 건수 기준 35.1%, 금액 기준 42.5%에 달하는 등 담보부족에 따른 농어가 융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 보증한도를 1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확대하고,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 위주의 심사에서 농업 경영체의 기술력 및 성장 잠재력 등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보증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축산업 허가제의 경우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2년부터 허가제를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은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별(2012년: 기업농→2013년: 전업농→2014년: 준전업농→2015년: 소규모 농가)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허가제 도입과 연계하여 구제역 등 질병에 대비한 방역시설 설치를 2012년부터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세계지원 역시 다양하게 마련하였다. 2012년 6월 30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용 면세 유류 공급제도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 기종을 2개 추가하여 39종에서 41종으로 늘렸다.

또한 배합사료·영농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11년 12월 31일~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적용대상 기자재 5종을 추가 129종에서 134종으로 확대하였다.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에 농어업 여건 변화에 따라 활용도가 높아진 기자재 5종을 추가하여 64종에서 69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와 관련된 세계지원(법인세, 증권거래세 등)방안도 마련하였다.

### 3. 추가대책(2012.1) 마련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1년 10월 31일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고, 피해보전뿐만 아니라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원칙 아래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보완대책'을 마련하여 2012년 1월 2일 발표하였다. 이는 농어업 등 취약산업에 대한 피해대책이 소홀할 경우 자칫 FTA의

기대이익을 상쇄할 정도의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 하에 국내 보완대책의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세계 및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포함하였다.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에서는 재정지원 'FTA 환경 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의 22조 1,000억 원에 2조 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2017년까지 24조 1,00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면세유 공급, 영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의 일몰 연장으로 지속되는 지원규모를 포함한 세계지원 규모 29조 8,000억 원 및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감면되는 지원규모 1,000억 원을 모두 망라하는 경우 실질적인 지원규모는 총 54조 원 규모에 이른다.

대책은 크게 피해산업 지원,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농어가의 생산비 절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으로 나뉜다.

피해산업 지원 분야는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무역조정 지원제도 개선, 폐업한 1인 사업주 지원,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 확대, 축산발전기금 확충, 감귤지원 확대, FTA 이행지원센터 설치 등이다. 피해보전 직불제는 FTA로 인한 수입 증가로 농수산물의 해당연도 가격이 직전 5개년에서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 대비 85% 미만으로 하락되는 경우 발동되던 것을 9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발동요건을 완화하였다. 이 경우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을 반영하여 품목별 지급한도를 법인 5,000만 원, 개인 3,500만 원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다.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경우에도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6개월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하여 융자 및 상담지원을 제공하던 것을 5~10% 이상 감소로 기준을 완화하였다.

FTA로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업인·근로자에게 제공되던 취업성공 패키지를 FTA에 따른 무역피해로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도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고용촉진 지원금을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도 적용하여 최대 860만 원의 고용촉진 지원금이 지원되도록 하였다(일반 650만 원).

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비과세 부업 소득의 대상과 범위를 추가, 확대하였다. 농가부업 소득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양어·민박·음식품 판매·특산물제조 등 농업 외 소득을 통칭하는 것이다. 어업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양식어업이었지만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축산업의 경우 가축별 공제두수를

소·젓소는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확대하였다. 또한 공제 두수를 초과하는 가축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과 어업 등 기타 부업 소득을 합한 총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비과세 소득금액도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안정적인 축산업 지원을 위하여 축산발전기금 재원을 10년간 2조 원을 추가로 확충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종축시설 현대화 등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거점산지유통센터,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과원 영농규모화 등의 사업을 통하여 과실 중 FTA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감귤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산업에 대한 조사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FTA 이행지원센터(농어업인등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종자산업 육성,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농어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사업인 축사시설 현대화,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시설원에 품질개선 등의 사업은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어업분야의 경우 양식시설현대화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였다. 특히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보조 없이 용자만 지원받을 경우 용자금리를 3%에서 1%로 인하하여 농어업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부담을 경감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리·배수 시설, 다목적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신규사업인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를 통하여 수출 전략형 최고 품질의 종자를 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종자산업을 육성하도록 하였다.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를 마련하여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경쟁력 강화와 함께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필수적이므로 각종 직접지불제를 도입, 정비하였고 임차농 보호를 위하여 농지법을 개정하였다. 먼저 주요 식량작물의 지급률을 높이고 밭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신규로 도입된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19개 품목(밀, 콩, 보리 등)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ha당 연간 4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섬 지역 어가의 안정적인 소득 지원을 위하여 도입한 수산직접지불제의 경우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부터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유기농·무농약 사용 등 친환경 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친환경 직접지불제의 단가를 50% 수준에서 상향조정하였다(유기농에 대하여는 지급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조건불리 지역 직접지불제의 경우 직접지불금 대상 면적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비 부담률을 30%에서 20%로 완화하였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최소계약기간(3년),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등을 새로 반영함으로써 임차농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영농 보장을 강화하였다.

농어가의 생산비 절감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므로 수입 사료 원료에 대한 무관세 적용,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 및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 유지, 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를 추진하였다. 수입 사료 원료에 대한 관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료가격 안정을 통한 축산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사료원료 품목을 11개에서 22개로 확대(무관세 품목은 16개)하였다.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10년간 유지하고 공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농어업용 스킵로더는 2톤 미만에 대하여서만 면세유를 공급하던 것을 4톤 미만으로 확대하였으며, 농어업용 1톤 트럭에 대하여도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료·비료·농약·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로도 10년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산업용 전기료가 적용되던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일부 농어업용 시설(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수산물저온저장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Fisheries Base Processing Center), 가축분뇨 처리시설에는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여 농어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별도의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 직전연도 관세징수액의 3%를 기준으로 정부가 출연하도록 하였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합의 도출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한편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군·구 조례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최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1달에 1~2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제공 대상 국가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정보제공 대상 국가를 점차적으로 확대,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소위 스파게티볼 효

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FTA 체결 대상 국가별로 상이한 무역정보를 통합하여 중소기업에 제공하도록 하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 제공 사업의 속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책을 통하여 2011년 10월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농어업 피해보전대책 13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 4개)을 모두 수용하였다. 다만, 일부 사항에 대하여서는 국제규범, 재정여건, FTA 피해지원 대책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국회의 예산 및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하거나 대안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의 경우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이를 강제하는 것은 WTO 등 국제 무역질서와의 부합 여부, 자율적 시장경제 원칙 등을 감안, 동반성장위원회의 민간자율 절차를 유지하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위원회가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하였다. 소상공인 지원자금 출연금도 국회 법제화 과정에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정(여·야 합의 사항은 직전 회계연도 수출액의 1/1000 이상을 정부가 출연)된 것이며,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에서 미국종합처리장 도정 시설이 제외된 것은 쌀이 FTA 피해부문이 아님을 감안한 것이었다.

## 산 너머 산이었던 한·미 FTA 협상

2004년부터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한국을 주요 FTA 파트너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한국도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통하여 선진통상국가로 발전하여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나는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2004)과 경제부총리(2005~2006)로서 우리 FTA정책의 돌파구로 작용할 한·미 FTA에 관여하였다.

입안과정에서는 FTA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협상과정에서는 협상을 진행하기 위하여 협상의 장소로 결정된 제주도 중문단지까지 대표단을 수송하기 위하여 제주공항에서부터 중문단지까지 헬기수송을 검토하기까지 하였다. 다행히 비상수송계획이 필요 없도록 상황은 개선되었으나 국민들과의 충분한 이해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문제는 협상만 끝나면 양국 모두 바로 비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나 낙관적인 것으로 판명된 것이었다. 새로이 2009년 출범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 비준이 2010년 미의회의 중간선거가 끝난 후가 아니면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자동차, 소고기에 대한 추가 협상이 없으면 비준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2010년 6월 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2010년 11월 초 한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까지 추가 협의를 끝내고 비준절차에 들어가기로 하였으나 협상은 타결되지 못하였다. 한국은 자동차에 대한 협상에는 응하되 소고기에 대한 양국 간 재협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 당시 미국에서는 우리 자동차의 판매비중이 FTA 협상이 타결된 2002년 4%에서 9%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우리 자동차 업계도 자동차에서의 약간의 양보는 한·미 간 자동차 교역질서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 입장을 취하여주었다. 2010년 12월 초

에 자동차, 돼지고기, 제약분야에서의 양국 간 통상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한 추가협상은 타결되었다.

그로부터 한·미 FTA가 미국상원에서 통과되기까지 다시 10개월이 소요되었다. 한·미 FTA 비준을 위하여 2009년부터 주미대사로 근무하면서 31개 주 67개 도시를 방문하였고 상하원의원 270명을 개별면담하였다.

2011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미국의회는 초당적 노력을 기울여 한·미 대통령의 정상회담 하루 전에 한·미 FTA를 상하원 모두 통과시키는 역사적 과제를 완수하였다. 미상하원 합동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하여 미 전역에 생중계되는 특별연설을 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자 최고의 시장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미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다른 시장에서는 거저먹는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FTA는 가격에 민감한 불황기 마케팅에 중요한 지렛대가 되고 있다. 다만, FTA에 의한 수출비중을 높이고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FTA라는 고속도로에 쉽게 올라탈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게 지원체제를 가다듬어야 한다.

- 한덕수(한국무역협회 회장/전 주미대사)

## 제3장

# 한·EU FTA 체결

### 제1절 한·EU FTA 추진 경과

#### 1. 한·EU FTA 협상 및 비준·발효과정

2011년 7월 1일 세계 제1의 경제권, 우리의 제3의 교역 상대국이자 제1의 투자국인 EU와의 FTA가 잠정 발효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선진 경제권인 EU 27개국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었다.

EU와의 FTA를 추진한 것은 EU(5.6%)가 미국(3.5%)보다 평균관세율(2008년 기준)이 높고,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10%), TV 등 영상기기(14%), 섬유·신발(최고 12~17%) 등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한·EU FTA는 세계 최대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개선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업계에 가시적 혜택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우리의 교역확대에 실질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EU와의 FTA 체결은 우리나라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 허브'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커다란 의미를 가질 것으로 평가되었다.

EU와의 FTA 협상은 2007년 5월 협상 출범 공식 선언으로 개시되었으며 제1차 협상은 서울에서 2007년 5월 7일~11일 간 개최되었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첫 한·EU FTA 협상(제7



올해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됩니다.  
저는 한·EU FTA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EU는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를 따르는 나라와만 FTA를 맺기 때문에  
EU와 FTA를 맺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파리7대학 인문학 명예박사학위 수락 연설(2011.5.13)



차 협상)은 2008년 5월 13일~15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되었으며, 이후 2009년 3월 23일~24일까지 서울에서 제8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공식협상에 추가하여 2차례 확대수석대표 회의(1차: 2008.8.27~29, 서울, 2차: 2008.12.15~18, 비엔나) 및 통상장관회담, 수석대표회의 및 분과별 회의 등이 수시 개최되어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마침내 2009년 7월 13일 한·스웨덴 정상회담에서 한·EU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발표하였다.

2009년 7월과 9월 두 차례의 법률검토회의를 거친 후 2009년 10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시튼(Catherine Ashton)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한·EU FTA 협정문에 서명하였다. 이후 2010년 10월 6일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스티븐 바나케르(Steven Vanackere) EU의장국(벨기에) 외교장관과 카렐 드 후흐트(Karel De Gucht)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한·EU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였다.

한·EU FTA 발효를 위한 비준절차는 EU 측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한·EU FTA 동의안은 2011년 2월 7일 유럽의회 상임위원 국제통상위원회, 2월 17일 유럽의회 본회의를 순차적으로 통과하였다.

우리는 2010년 10월 25일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외교통상통일 위원회에서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3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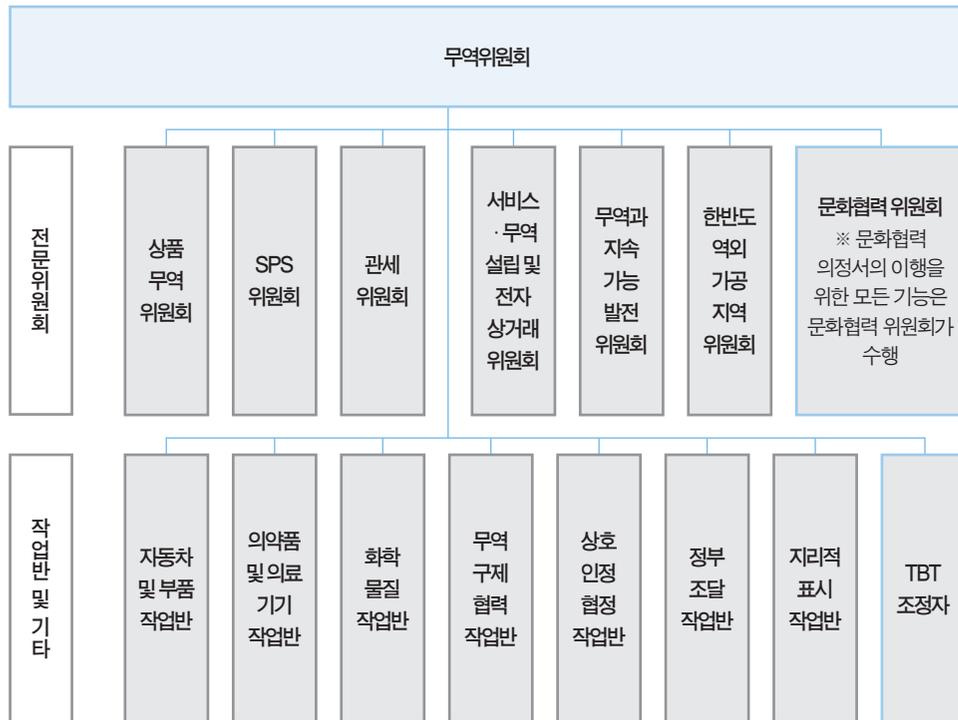
#### 한·EU FTA 체결 과정



한·EU FTA 비준동의안 국회통과 각계 메시지

- '무역 1조 달러 성취하는 기폭제 될 것' (무역협회 회장)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계기가 되어야' (대한상의 회장)
- '한·EU FTA 발효 후에도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여·야·정 합의를 지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 부품업체 수출 확대에 기여'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회장)
- '양국 시장 접근성 개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 (주한 독일대사)

한·EU FTA 이행체계



※ 문화협력의정서를 제외한 협정의 모든 분야가 무역위원회의 관할 대상

이명박정부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심의 과정 중 제기된 협정문 번역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정문에 대한 전면적인 한글본 재검독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한·EU FTA 피해분야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등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한·EU FTA에 대한 비준 준비 작업을 완료하였다.

비준 과정에서 이루어진 한·EU FTA 보완대책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먼저 비준동의안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2011.4.28) 과정에서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폐업을 전제로 양도하는 경우 990m<sup>2</sup>를 한도로 양도세를 감면(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이후 5월 2일에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여·야·정의 인사들이 모여 한·EU FTA 대책 관련 합의문을 도출하였다.

합의문은 ① 피해보전직접지불제 개선, ② 배합사료·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시행기간 10년 유지, ③ FTA 이행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5년간 1조 원 지원, ④ 구제역 사업으로 전용된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예산의 2012년 예산에의 반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한·칠레 FTA 당시 시행되었던 피해보전직접지불제에 비하여 발동기준을 완화(평균가격 대비 80% 이하 하락→85% 이하 하락)하고, 보전비율을 상향조정(85%→90%)하는 한편 시행기간을 연장(7년→10년)하였다.

한편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추가대책도 마련되었다. SSM 입점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전구역을 500m에서 1km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 5월 4일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비준되었다. 이후 한·EU 양측은 한·EU FTA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법령 정비 등을 마치고 2011년 6월 21일 한·EU 수석대표 간 이행 협의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 7월 1일 한·EU FTA가 잠정발효되었다. 잠정발효는 EU 27개 회원국의 개별 비준이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한·EU FTA 추진 일정

2006

5	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 FTA를 전제하지 않고, 양측 간 예비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	11	EU가 FTA 주요 협상국에 한국을 지목함에 따라 양국 간 예비협의를 가속화 전망
7	제1차 한·EU FTA 예비협회의 개최-비관세장벽 및 규제/서비스/TBT/SPS/정부조달 협의		-한·EU FTA 공청회 개최, 업계 및 학계 등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9	월 제2차 한·EU FTA 예비협회의 개최-상품/원산지/통관절차, 투자,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경쟁·환경·노동 등 협의	12	FTA 민간자문회의의 개최, 업계 및 학계 등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2007		9	한·EU FTA 제2차 법률검토회의(서울)
4	FTA 추진위원회 개최, 한·EU FTA 추진방안 협의	10	한·EU FTA 가서명 예정(브뤼셀) - 한·EU FTA 가서명(브뤼셀)
5	대외 경제장관회의 개최, 한·EU FTA 협상 출범 승인	2010	
	- 양국 협상 개시 공식 출범 선언 - 제1차 공식협상 개최	3	제8차 한·EU 공동위원회 개최(브뤼셀) - 한·EU FTA 수석대표회담 개최(파리)
7	제2차 공식협상 개최(벨기에 브뤼셀)	9	한·EU 통상장관회담 개최(벨기에 브뤼셀)
9	제3차 한·EU FTA 협상 개최(벨기에 브뤼셀)	10	한·EU FTA 정식 서명(벨기에 브뤼셀)
10	제4차 한·EU FTA 협상 개최(서울)	2011	
11	제5차 한·EU FTA 협상 개최(벨기에 브뤼셀)	2	한·EU FTA 동의안의 유럽의회 상임위 통과
		2	한·EU FTA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프랑스)
2008		4	한·EU FTA 비준동의안 우리 국회 외교 통상통일위원회 통과
1	제6차 한·EU FTA 협상 개최(서울)	5	한·EU FTA 비준동의안 우리 국회 본회의 통과
3	서비스투자분과 회기 간 회의(파리)	6	한·EU FTA 수석대표 협의 개최(서울) - 제9차 한·EU 공동위원회 개최(서울)
5	제7차 한·EU FTA 회의(브뤼셀)	7	한·EU FTA 잠정발효
8	한·EU FTA 협상 확대 수석대표 회의(서울 외교부, 상품, 서비스, 표준 3개 분과+ 원산지 등)	10	제1차 한·EU 무역위원회 개최(서울)
11	한·EU 통상장관 회담 개최(파리)	2012	
12	한·EU FTA 확대 수석대표 간 회담(비엔나)	9	제10차 한·EU 공동위원회 개최(브뤼셀) - 한·EU FTA 분야별 위원회 회의 개최(브뤼셀)
2009			
1	한·EU 통상장관회담 개최(서울)		
3	한·EU FTA 수석대표 간 협의(브뤼셀) - 한·EU FTA 8차 협상(서울)		
4	한·EU FTA 통상장관회담 개최(런던) - 협상 타결 지연		
5	한·EU FTA 통상장관회담 개최(서울)		
6	한·EU FTA 통상장관회담 개최(파리)		
7	한·EU FTA 타결(스톡홀름) - 한·EU FTA 제1차 법률검토회의(브뤼셀)		

EU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 사항만 우선적으로 발효시키는 제도로 EU의 특수성 때문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한·EU FTA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관련 조항, 문화협력의정서 관련 일부 협력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잠정발효에 포함되므로 잠정발효와 정식발효 간 차이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한·EU 양측은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2011년 10월 12일 서울에서 제1차 한·EU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한·EU FTA의 이행체제 수립 및 운영방안, 협정이행 관련 한·EU 간 주요 관심사항, 교역 증대를 위한 협력증진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무역위원회 결정사항의 승인 및 2012년도 한·EU 무역위원회 산하기구 회의 일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2011년 12월 23일 한·EU 양측은 한·EU 무역위원회 결정사항으로 한·EU 무역위원회 의사 규칙 및 일반분쟁 해결 패널 명부를 채택하였다.

이 외에도 한·EU FTA 이행을 위하여 한·EU 무역위원회 산하에 6개의 전문위원회 및 7개의 작업반이 설치되었으며, 별도로 문화협력의정서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문화협력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제2차 한·EU 무역위원회는 2012년 10월 브뤼셀에서 개최되었다.

## 2. 대국민 이해제고 노력

이명박정부는 세계 최대 경제권과의 FTA인 한·EU FTA의 성공적인 발효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수출기업의 활용기반 조성과 같은 국내대책 집행과 더불어 한·EU FTA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활동을 동시에 전개하였다.

특히 한·EU FTA 국회비준 이후 한·EU FTA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한·EU FTA 발효를 계기로 FTA의 경제적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소재자 '한·EU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을 발간하여 전국 공공기관 및 주민센터, 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하였다. 동 책자는 국민들이 한·EU FTA를 보다 밀접하게 느낄 수 있도록 상품 가격하락, FTA시대의 유망직종 등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소비자 혜택과 FTA 시대에 필요한 기업실무, 농어업인을 위한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였다.

한편 국민들이 FTA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FTA의 주요 기대효과와 쟁점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FTA를 연성화(soften)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하여 한·EU FTA를 비롯하여 FTA 전반을 쉽게 설명한 만화 'FTA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넓어집니다'를 발간하는 한편 정기간행물 주간 'FTA소식', 격월간 'FTA세상(현재, 함께하는 FTA)'을 발간하여 국민들의 FTA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한·EU FTA 국회비준 및 잠정발효 등 주요 계기별로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은 물론이고 정책간담회 등 현장교육도 시행하였다. 한국정책방송(K-TV) 등 TV 매체, 전국 주요 지역 전광판, 일간지 지면광고,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한·EU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의 개최와 농어업인 대상 현지간담회 등의 현장교육을 통하여 소통활동을 펼쳐 나가는 등 한·EU FTA의 성공적 발효를 위한 노력을 입체적으로 전개하였다.

## 제2절 한·EU FTA의 내용과 효과

### 1. 한·EU FTA 주요 내용

2011년 7월 1일 잠정발효된 한·EU FTA는 27개국 시장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 단일경제권과의 FTA로서 교역 및 투자 기반 확대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U의 GDP는 2010년 기준 16조 3,000억 달러로서 미국의 14조 7,000억 달러를 능가하는 규모이다. 이런 거대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미국, 일본, 중국 등)에 앞서 FTA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한·EU FTA는 EU가 아시아 국가와 맺은 첫 FTA이기 때문에 EU 입장에서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 한·EU FTA는 신개념 FTA

무역, 투자 등 EU의 대외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카를 더휘르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011년 7월 잠정 발효된 한·EU FTA를 '신개념 FTA'로 규정하며 향후 20년 동안 한·EU 무역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는 "EU는 20여 개국과 여러 형태의 무역협정을 맺었지만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협정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최초의 신개념(New Generation) FTA로 여겨고 있다."며 한·EU FTA가 양측 간 무역과 경제활동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에 대한 EU의 의지를 밝힘으로써 아시아, 나아가 세계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하였다.

-FTA 소식 vol.21(2011.05.30)

선진 경제권인 EU와의 교역, 투자 및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경제 성장과 서비스업 발전 등 산업구조 선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EU산 제품이 싼 가격으로 수입되고 수입품목도 다양하여짐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확대되었다.

한·EU FTA는 한·미 FTA와 같이 매우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이다.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를 비롯하여 상당한 수준의 서비스 시장개방과 지적권, 정부조달, 무역구제, 경쟁 등 모든 주요 무역규범을 망라하고 있다.

한·EU FTA의 주요 내용은 상품 분야에서 품목 수 기준으로 양측 모두 99.6%, 수입액 기준으로는 100% 양허하여 높은 수준으로 협정을 체결하였다. 특히 승용차, 전기·전자, 섬유류 등 EU측 고관세 품목의 관세철폐로 관련 업계의 수출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었다. 상품양허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한·EU FTA 상품 양허 결과

양허단계	한국				EU			
	품목수	비중(%)	수입액 (억 달러)	(%)	품목수	비중(%)	수입액 (억 달러)	(%)
즉시철폐	9,195	81.7	182.7	66.7	9,252	94.0	318.7	76.6
3년 철폐	625	5.5	60.6	22.2	282	2.9	68.6	16.7
5년 철폐	718	6.4	22.2	8.1	269	2.7	28.1	6.8
(5년 이내)	10,538	93.6	265.5	97.0	9,803	99.6	415.4	100.0
7년 철폐	111	1.0	3.6	1.4	-	-	-	-
10년 철폐	399	3.5	3.0	1.1	-	-	-	-
10년 초과	169	1.5	1.3	0.5	-	-	-	-
양허계	11,247	99.6	273.4	100.0	9,803	99.6	415.4	100.0

※ 자료: 기획재정부

특히 개방에 취약한 농수산물의 경우 양측 간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양허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 측은 1,449개 품목 중 610개 품목(42.1%)만을 즉시 철폐한 반면, EU 측은 2,064개 품목 중 1,896개 품목(91.8%)을 즉시 철폐하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쌀 및 쌀 관련 16개 민감품목은 아예 양허 제외하였으며, EU 측 주요 관심품목이었던 낙농제품, 돼지고기의 경우 우리가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세존속 기간을 장기화(10년 이상)하거나 부위별로 차등 양허하였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양허표에 기재한 분야에 한하여 개방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양허하였

양허 구간별 주요 품목

구분	우리 측	EU 측
즉시	자동차부품(8), 기타정밀화학원료(1~8), 계측기(8), 직물제의류(8~13), 칼라TV(8), 냉장고(8), 선박(5), 타이어(8), 광학기계(8), 화학기계(8), 전구(8), 섬유기계(5~8), 식품포장기계(8) 등	자동차부품(4.5), 무선통신기기부품(2~5), 스웨터(12), 편직물(8), 냉장고(1.9), 에어컨(2.7), 라디오(9~12), 스키부츠(8~17), 폴리에스테르 직물(8), 진공청소기(2.2), 연속전지(3.7), 리튬전지(4.7) 등
3년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8), 기타정밀화학제품(5~8), 펌프(8),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8), 무선통신기기부품(8), 안경(8), 의약품(6.5), 화장품(8), 철도차량(5), 철도차량부품(5), 선박용부품(8) 등	중·대형(1,500cc 초과) 승용차(10), 베어링(8), 타이어(2.5~4.5), 합성수지(6.5), 고무벨트(6.5), 복사기(6), 전자레인지(5), 주방용도자기제품(12), 항공기(7.5~7.7), 기타신발(17), 자전거(15) 등
5년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8), 하이브리드카(8), 벨브(8), 베어링(8), 시멘트(8), 윤활유(7), 기초 화장품(8), 접착제(6.5), 합성고무(8), 제재목(5), 원동기(8), 펌프(8), 화물자동차(10), 의료용전자기기(8), 기타오염제품(8) 등	소형(1,500cc 이하) 승용차(10), 하이브리드카(10), 칼라TV(14), 모니터(14), 카스테레오(10), 광학기계부품(6.7), 순모직물(8), 모사(3.8), 영상기록재생용기기(14), 화물자동차(22) 등
7년	순모직물(13), 동조가공품(8), 수산화나트륨(8), 건설중장비(8), 인쇄기계(8), 금속절삭가공기계(8), 기타기계류(16), 합판(8~12), 섬유판(8) 등	-

\* 우리 측만 일부 민감품목에 대하여 7년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

\* 자료: 기획재정부

다. 이는 WTO 서비스 협정에서의 양허 방식이기도 하다. WTO 서비스 분류 155개 섹터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15개 분야, EU는 139개 분야를 개방하였다. 우리나라는 법률, 회계와 같은 전문직, 부동산업, 육상 운송, 우편 및 건설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미 FTA 수준으로 양허 하였으며 일부 분야(환경, 통신 등)에 한하여 한·미 FTA보다 추가된 수준으로 개방하였다. 다만 공교육, 의료 및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는 제외하였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지리적 표시(농식품 및 포도주, 증류주) 품목을 협정 부속서에 기재하여 상호 보호하는 데에 양측이 합의하였다. 한국의 보성녹차, 이천쌀, 고려홍삼, 진도홍주 등 64개 품목과 EU의 보르도, 샴페인, 꼬냑 등 162개 품목이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한·미 FTA 보다 추가된 수준의 개방

- 방송용 국제위성전송회선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시 외국 위성사의 국내위성사업자와의 상업적 협약 체결 의무 철폐(유예기간 2년)
- 생활하수 처리 서비스의 민간위탁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시 내외국 기업 간 비차별대우를 보장하되(유예기간 5년), 지자체 직영, 공기업 독점, 민간위탁 시 수익계약 등을 유지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 유보
- 법률 서비스 관련, 외국법자문사의 자국 명칭(home title)사용 허용

한·EU의 분야별 양허 범위(중분류)

구분	중분류	WTO 분류	양허(개방) 섹터수	
		섹터수	한국	EU
1	전문직 서비스	11	8	10
2	컴퓨터	5	5	5
3	R&D	3	3	3
4	부동산	2	1	2
5	장비 임대	5	5	5
6	기타 사업서비스	20	19	20
7	우편	1	0	1
8	쿠리어	1	1	1
9	통신	15	15	15
10	시청각	6	0	0
11	기타 통신	1	0	0
12	건설	5	5	5
13	유통	5	4	4
14	교육	5	2	5
15	환경	4	3	4
16	보험	4	4	4
17	은행 등	12	11	12
18	기타 금융	1	0	0
19	의료/복지	4	0	3
20	관광	4	3	3
21	오락/문화	5	3	4
22	국제해운	6	6	6
23	내륙해운	6	0	6
24	항공운송	6	3	3
25	철도운송	5	4	5
26	도로운송	5	3	5
27	파이프라인운송	2	1	2
28	운송부수	4	4	4
29	기타 운송	1	1	1
30	기타 서비스	1	1	1
합계		155	115	139
양허 비율			75.30%	91.50%

Indication) 보호대상 품목으로 결정되었다. 저작권의 경우 기존 50년이던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으로 연장하되, 보호기간 연장시점을 협정 발효 후 2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한·미 FTA의 저작권 관련 사항과 동일한 수준이다.

## 2. 한·EU FTA 기대효과 및 성과

### (1) 한·EU FTA의 기대효과

2010년 10월 한·EU FTA가 체결됨에 따라 협상내용에 기초하여 한·EU FTA가 우리 거시경제와 개별산업에 미칠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10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2010년 10월 6일 발표하였다. 각 연구기관들은 해당 분야의 분석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다만,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관 간 정기협의회를 개최하여 분석방법과 범위를 조정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들의 검토·자문을 거쳐 최종결과를 확정하였다.

GDP와 후생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되 산업별 미시분석 결과와의 정합성을 점검하였다. CGE모형은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내부의 상호 의존적인 개별부문과 수출입 등 대외 부문을 통합한 모형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FTA의 효과 분석에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모형이다.

분석 결과 한·EU FTA는 FTA가 없을 때와 비교하여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장기적으로 5.62%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기적으로는 교역증대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개선, 장기적으로는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GDP 증가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후생은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과 소득 증대로 GDP 대비 3.8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고용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최대 25만 3,000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무역수지는 부분균형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산업과 품목별로 관세철폐 스케줄이 다르므로 이를 모형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였던 것이다. 분석 결과 한·EU FTA에 따라 발효 후 15년간 대 EU 수출은 연평균 25억 3,000만 달러 확대되는 데 비하여 대 EU 수입은 21억 7,000만 달러 확대되어 대 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억 6,160만 달러 흑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산업별로는 농수산업에서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3,34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에서는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3억 9,500

### 한·EU FTA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구분	교역 증대 및 자원배분 효율화 (단기)	자본 축적(장기)	
		생산성 증대 미고려	생산성 증대 고려
실질 GDP(%)	0.1	0.64	5.62
후생(%)	0.18	0.47	3.84
고용(천 명)	29.9	47.8	253.1

※ 자료: 기획재정부

### 한·EU FTA의 연평균 무역수지 효과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농업	7	38	△31
수산업	10.3	12.7	△2.4
제조업	2,520	2,125	395
합계	2,537.30	2,175.70	361.6

※ 자료: 기획재정부

### 한·EU FTA에 따른 제조업 생산 증감 효과

(단위: 억 원)

구분	연평균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자동차	19,432	14,345	21,951	21,951
섬유	1,124	1,152	1,124	1,110
철강	842	303	1,087	1,083
생활용품	453	276	535	535
전기전자	273	△73	444	430
석유화학	140	240	88	86
선박	△164	△131	△186	△186
비철금속	△395	△383	△395	△396
정밀화학	△2,483	△2,087	△2,693	△2,693
기계	△2,456	△2,245	△2,564	△2,578
제조업 전체	15,156	9,791	17,772	17,718

※ 자료: 기획재정부

만 달러의 무역수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생산 측면에서는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생산은 증가하고, 농수산업은 피해가 예상되었다. 제조업은 자동차, 섬유, 철강 등을 중심으로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1조 5,156억 원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생산 증가 효과(연평균 1조 9,000억 원)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섬유(1,000억 원), 철강(800억 원) 순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관세철폐 결과 적자가 커지는 산업은 동시에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계, 정밀화학 등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농수산업은 축산업을 중심으로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1,870억 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부분의 피해가 농업에서 발생하며, 수산업은 연평균 94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피해규모가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EU FTA에 따른 농수산업 생산 감소 효과

(단위: 억 원)

구분	연평균	연평균			
		1~5년	6~10년	11~15년	
농업	감자 전분	10	0	8	23
	돼지고기	828	328	943	1,214
	닭고기	218	105	231	319
	낙농	323	40	277	651
	포도(가공주스)	32	32	32	32
	키위	42	18	43	63
	토마토(가공)	43	23	52	54
	소고기	280	58	279	501
	합계	1,776	604	1,865	2,857
수산업	넙치류	26	19	27	32
	참다랑어류	19	18	20	20
	골뱅이	10	7	12	12
	불락류	10	6	11	12
	기타연체동물	8	6	9	9
	기타	21	13	23	27
	합계	94	69	102	112
	농수산업 합계	1,870	673	1,967	2,969

※ 자료: 기획재정부

공동제작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연평균, 억 원, 명)

구분	연평균	연평균		
		1~5년(2010~2014)	6~10년(2015~2019)	11~15년(2020~2024)
생산유발효과	102.5	46.5	85.6	175.5
부가가치유발효과	45.8	20.8	38.3	78.5
고용유발효과	72.3	32.8	60.4	123.7

※ 자료: 기획재정부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적 해외 지불 비용(연평균)

(단위: 억 원)

구분	연평균	연평균			
		1~5년(2010~2014)	6~10년(2015~2019)	11~15년(2020~2024)	16~20년(2025~2029)
출판	21.3	7.3	28.9	29.3	25.8
음악	0.5	0.1	0.4	0.6	0.7
합계	21.8	7.4	29.3	29.9	26.5

※ 자료: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은 문화·관광 분야, 통신 분야, 금융 분야, 법률 분야, 환경 분야로 나뉘어 분석되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 EU 27개국과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10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46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출판·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이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20년 연장됨에 따라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하여야 하는 저작권료가 향후 20년간 연평균 22억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보건산업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단위: 천 달러)

구분	수출증가액(A)		수입증가액(B)		무역수지 추가발생액(A-B)	
	5년 연평균 (1년~5년)	15년 연평균 (1년~15년)	5년 연평균 (1년~5년)	15년 연평균 (1년~15년)	5년 연평균 (1년~5년)	15년 연평균 (1년~15년)
의약품	10,679	16,986	36,603	93,671	△25,923	△76,685
의료기기	5,652	16,245	31,440	80,310	△25,788	△64,065
화장품	9	33	32,703	54,045	△32,693	△54,012
합계	16,340	33,264	100,746	228,026	△84,404	△194,762

※ 자료: 기획재정부

## 한·EU FTA의 산업별 기대효과

### 한·EU FTA와 정유·석유화학 수출

한국 석유화학 산업은 과거 대규모 장치산업, 저마진 단순 수출산업에서 향후 고부가가치 소재산업, 지식산업으로의 대대적인 변신을 꾀하고 있다. 또한 국내 석유제품은 세계적인 품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EU FTA가 발효되면 정유·석유화학 분야의 유럽시장 진출은 확대될 게 확실하다. 현재 유럽에 국내 기업들이 수출하는 석유 제품 관세는 항공유 4.7%, 운항기유 3.7%이다. 한·EU FTA 발효로 무관세가 적용되면 이미 세계적인 품질경쟁력을 갖춘 국내 석유제품이 가격경쟁력까지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항공유 수출 등이 급감하였지만, 한·EU FTA 발효 후 이 같은 침체 기조는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EU는 인도산과 중동산 항공유를 '역내 제품'으로 인정하여 그간 관세를 물리지 않았는데, 이들과 경쟁하여야 하였던 국내 업체에는 EU의 수입관세 철폐가 상당한 혜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석유화학 제품 역시 한·EU FTA 체결 이후 유럽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2009년 말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한·EU FTA 체결에 따른 수출유망품목 및 대일 수입전환 가능 품목 검토' 보고서는 플라스틱, 정밀화학, 석유화학 제품이 FTA 체결에 따라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는 대표적 분야라고 분석하였다.

- 기획재정부 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 FTA 소식 vol.16(2011.4.25)

### 한·EU FTA와 섬유산업

한·EU FTA 잠정발효를 앞두고 섬유업계는 부푼 꿈을 꾸고 있다. 4~13%에 달하는 섬유에 대한 관세 철폐를 통하여 유럽 시장(중국에 이어 2위 규모)에 대한 국내 제품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한·EU FTA로 향후 EU 수출이 연평균 25억 2,000만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섬유 수출로만 전체 수출 증가분의 약 9% 가량인 2억 2,000만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경쟁국인 중국, 터키, 인도 등과의 가격 경쟁에서도 우위를 발휘할 것이 확실하다.

한편 섬유업계 일각에서는 유럽 시장을 공략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하여 FTA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는 '방심 금물론'도 제기되고 있다. 노희찬 섬유산업협회 회장은 슈퍼, 나노, 스마트, 친환경 섬유의 중장기적인 R&D 개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관세철폐는 상호적인 것이므로 오히려 FTA 발효를 기점으로 유럽 고급 섬유 제품의 공습이 우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저렴한 가격만을 앞세우기보다 소재 개발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 기획재정부 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 FTA 세상, No.9(2011.3.2)

통신 분야에서는 협정 발효 2년 내에 기간통신사업자(KT, SKT 제외)에 대한 외국인 간접 투자를 100%까지 허용하였으나 이러한 간접투자 확대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외국인의 진입 확대 등으로 국내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소득 증가 및 요금인하 효과 발생 등으로 발효 후 15년간 생산은 연평균 584억 원, 소득은 255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금융 부분에서는 한·EU FTA를 계기로 한국과 EU 금융시장의 상호진출이 활성화되고, 금융시장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유럽 선진 금융사들의 영업기법 유입 및 경쟁 촉진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법률 분야에서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고급법률 서비스의 선택폭이 넓어지면서 이용편의를 제

고하고, 국내 로펌들의 선진법률 서비스 노하우 습득 및 서비스 노력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국내 법률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었다. 환경 분야에서는 분석 결과, 환경서비스업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EU의 경쟁력이 높은 의약품, 화장품 등 보건산업은 수입 증가에 따라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1억 9,476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생산 감소액은 15년간 연평균 2,060억 원으로 예상되었다.

## (2) 한·EU FTA 체결 성과

한·EU FTA 발효 1년(2011.7.1~2012.6.30)간 한·EU간 교역은 EU 재정위기 등 대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하였다. 수출 509억 달러, 수입 490억 달러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무역 흑자폭은 전년 동기의 145억 달러에서 19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이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수입 위축 및 우리나라의 선박, 무선통신기기 및 반도체 등의 대EU 수출 감소에 따른 결과였다.

## 한·EU FTA 이후 한국 자동차 유럽 수출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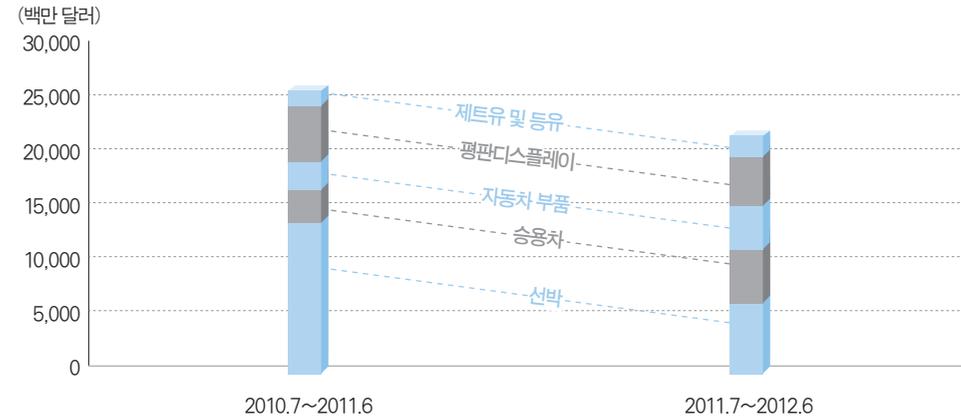
한·EU FTA 발효 후 유럽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급증하자 유럽 자동차업체가 한·EU FTA 개정을 위한 로비에 나섰다. 한국 세관에 따르면, 한·EU FTA가 발효된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9개월 동안 한국 자동차업체들의 대 유럽 수출은 약 67% 증가한 반면, 유럽 자동차들의 대 한국 수출은 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의 한 관계자는 "고품질, 브랜드 인지도 개선, 가격 경쟁력 등에 힘입어 유럽에서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미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2012.5.3 Europe auto makers seek to revise Korea trade deal)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특혜관세 혜택품목의 경우에는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대EU 무역수지 흑자가 유지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EU FTA 비혜택 품목은 전기 대비 30.7% 감소한 반면, 특혜관세 혜택품목은 16.3% 증가하였다. 특히 자동차(29.4%), 자동차부품(14.7%), 석유제품(29.7%) 등 FTA 수혜 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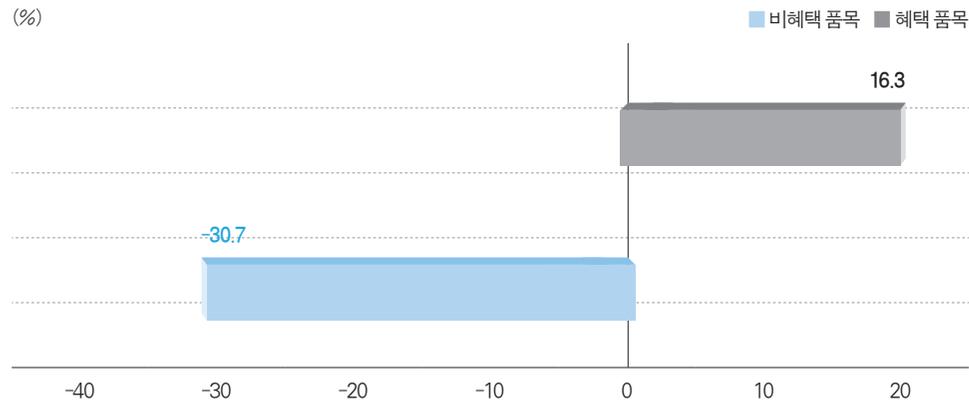
한·EU FTA의 효과는 투자분야에서도 두드러진다. 한·EU FTA 발효 1년(2011.7.1~2012.6.30)간 EU의 대 한국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한 43.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대 EU 수출상위 5대 품목



※자료: 한국무역협회

대 EU 수출(전년 동기비)



※ 기간: 2011.7.1~2012.6.30(1년)

한편 이러한 성과로 인하여 2012년 8월 프랑스 정부는 한·EU FTA로 한국 자동차 판매가 급증하여 자국 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EU에 우선 감시(prior surveillance)를 요청하였으나, EU 집행위원회는 법적 근거 미충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2012.10.22).

제3절 취약부분 경쟁력 제고 대책

이명박정부는 한·EU FTA 체결 이전부터 축산업 및 보건·의료 산업 등 피해예상 분야의 업계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였고, 2009년 10월 15일 한·EU FTA 가서명 이후에는 FTA 국내 대책위원회를 개최(2009.10.21), 한·EU FTA 체결에 따른 경쟁력 강화대책의 추진방향을 논의, 발표하였다. 이후 2010년 10월 한·EU FTA의 정식서명 및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 발표되었고, 관계부처 실무협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같은 해 11월 17일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하였다.

대책의 기본 방향은 기 마련된 FTA 국내 보완대책 등을 통하여 대처하여 나가되, 한·EU FTA 추진으로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산업에 대하여는 추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또한 직접적 피해보전보다는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은 한·EU FTA로 피해가 집중되는 축산업·화장품·의료기기 산업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다. 직접적 피해보전은 농수산업 분야의 경우 기존의 소득보전직불제(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제조업·서비스업 분야는 기(既) 마련된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피해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융자 및 컨설팅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으로는 한·EU FTA 효과를 조기에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한·EU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먼저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축산 분야의 경우 한·EU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양돈, 낙농, 양계, 한육우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지원역량을 집중하였다. 특히 시설현대화 지속 추진, 방역관리를 통한 질병근절 사업 강화, 유통구조 개선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양돈 분야는 종전 대책이 브랜드 경영체 육성, 위생·안전 관련 제도 정비에 집중하였던 것에 비하여 백신지원을 통한 질병근절,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우수·무병 종돈 공급 및 분뇨 처리시설 확충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백신지원으로 2014년까지 돼지 열병 청정화를 달성하도록 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대상을 종전의 전업농·농장에서 확대성장 가능농·우수 종축장으로까지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축장 종합평가제 실시 및 전문 원종돈장 육성 지원을 통하여 우수·무병 종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2020년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여 돼지분뇨 발생량(1,700만 톤)의 50%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낙농 분야는 가공원료유 지원, 유가공산업 활성화 및 학교 우유급식 확대를 통한 근본적인

수급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종전 대책은 낫소개량, 조사료 재배 확대 등을 통한 생산비 절감에 치중하였다. 구체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20만 톤의 잉여원유를 2011년부터 가공원료유로 공급하도록 하였고, 직관 쿼터제 도입과 낙농체험 관광사업 연계를 통하여 목장형 유가공업 활성화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 지원대상을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양계분야는 난계대 전염병 등 질병근절, 대형 닭 생산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수출확대를 위한 도계·가공장 위생수준 제고에 주력하였다. 질병 근절을 위하여 일제조사, 병아리 이력관리 체계 구축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생산비 절감 및 위생수준 제고를 위하여 에너지 절감형 LED 점등 등을 통하여 소형 닭 위주의 생산에서 대형 닭(2.5kg 이상) 중심으로 생산을 유도하였다. 아울러 전문 원종계장 육성, 종계장 현대화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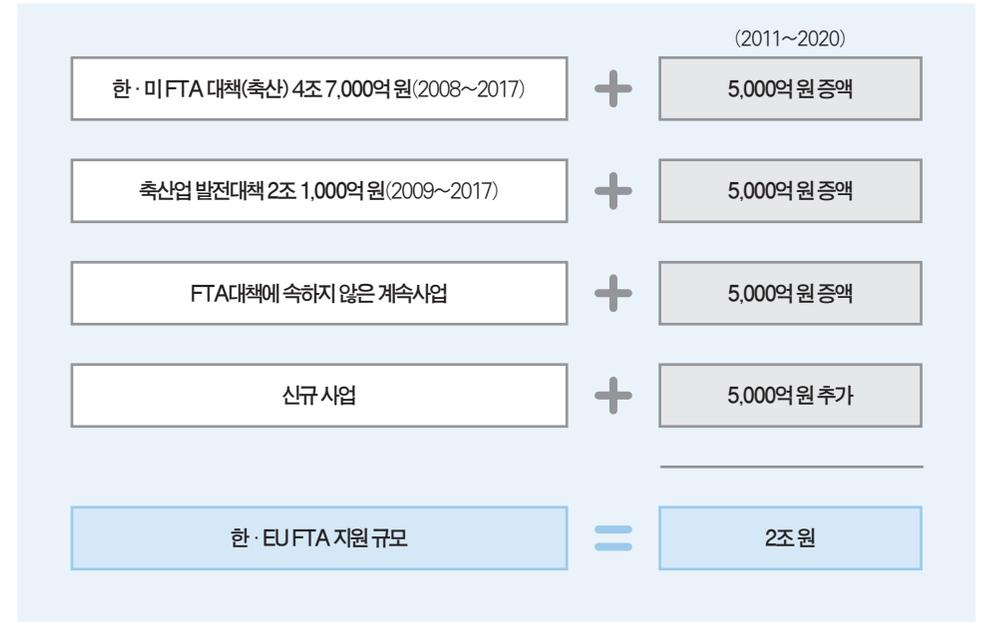
한육우 분야는 EU로부터 소고기가 수입되지 않는 점을 고려, 기 마련한 대책을 보완하면서 육우고기 전문판매장 등 수요창출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초·광역 한우사업단 육성 및 이와 연계한 암소 개량사업 추진을 통하여 한우농가 조직화를 추진, 경영 및 유통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육우 수요 창출을 위한 직매장 확대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유통·가공 분야는 생산자 중심의 축산물 대형 가공·유통 전문업체 육성, 도축장 HACCP 기준 및 운영실태 점검 강화, 위생관리 정보공개, 장기휴업 도축장 허가 취소 등을 통하여 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비용절감 및 소비자 신뢰 구축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4년까지 돼지고기 열처리가공자의 시설현대화를 지원하여 저지방 부위 가공제품 수출 확대 등 새로운 가공 제품 개발을 통한 수요 창출 및 수출 다변화를 도모하였다.

축산 분야 재정지원은 기존 FTA 대책의 지원규모 확대 및 신규사업 추가를 통하여 10년간 2조 원을 투입하도록 하였다. 한·미 FTA대책의 축산대책(4조 7,000억 원) 중 가축분뇨 처리 시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등에 5,000억 원을 증액하고, 축산업 발전대책(2조 1,000억 원) 중 도축·가공업체 지원, 수출작업장 현대화 사업 확대 등에 5,000억 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계속사업 중 시·도 가축방역사업 등에 5,000억 원을 증액하고, 가공원료유·한우조직화 지원 등 신규사업에 5,000억 원을 추가하였다.

세계 지원을 위하여 축산농가의 기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 공제액을 기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축산농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기자재를 중심으로 10개 품목을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에 추가(기존 12개→22개)하였으며, 축사의 경우 가축 배설물에 따른 조기 노후화를 감안,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행 4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였다. 또한 이력관리 체계 확대, 가축분뇨 퇴·액비의 활용률 제고 등 8개의 제도 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2013

한·EU FTA 재정지원대책의 구성



년까지 완료하도록 하였다.

화장품·의약품 분야에서는 EU에 비하여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R&D 투자와 인프라 구축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5년간(2011~2015년) 화장품 분야는 700억 원, 의약품 분야는 1,000억 원 수준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화장품 분야는 한·EU FTA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화장품, 메이크업·방향용 제품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2011~2015년까지는 직접지원 단계로 제도개선 및 핵심기술 개발과 무역활성화를 위한 R&D투자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2015년 이후에는 수출기업이 자립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간접적 지원을 지속하도록 하였다. 신소재·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하여 '글로벌 코스메틱 연구개발 사업단'을 통하여 융합기반기술, 화장품품 개발과 미래유망 화장품 및 신소재 분야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글로벌 화장품 수출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하여 국가별 피부정보은행을 구축하여 맞춤형 화장품을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무역확대 및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규제 및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0개 과제를 선정, 2013년까지 완료하도록 하였다.

의약품 분야는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의 개발 지원을 위한 R&D 투자, 신뢰성 제고를 위

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선진화 차원으로 기술 확보가 시급한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R&D 투자를 확대하고, 내구성·신뢰성 시험 등을 지원하는 '신뢰성 기술센터' 구축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EU의 의료기기 규격강화에 대응하고, 선진국 수준의 인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내 시험인증 기반 강화를 추진하였다. KOTRA의 의료산업 해외마케팅지원센터를 통하여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유럽 수출을 위한 CE-마크(Mark)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인허가 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선진국 수준의 품질관리체계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허가·관리제도 개선 등 총 5개 과제를 선정, 2013년까지 완료하도록 하였다.

직접적 피해보전을 위하여 농수산업 분야에서 소득보전 직불제(피해보전 직불제)의 운용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2008년 종료된 폐업지원 제도를 협정 발효 후 5년간 운용되도록 재도입하였다. 제조업·서비스업 분야 지원은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지정기준 완화 및 컨설팅 지원비용 한도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FTA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공동의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였는데 기업대상 설명회·컨설팅 지원, 인증수출자 조기 지정, 무역정보 제공 역량 확충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한·EU FTA 활용 설명회를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고 지자체, 농협, 단체간부 등 지역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전국 7개 광역권 별 관계부처 합동 국내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기업인의 FTA 활용증진 및 EU 국가 내 우호적 비준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해외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EU 바이어에 대하여 홍보지인 'Korea Buyer's Guide'에 협정 내용 및 유망상품 정보를 게재하고, 파리 텍스월드, 하노버 산업전시회 등 EU 지역 주요 상품전시회에 FTA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 중인 FTA 컨설팅을 EU수출 기업 위주로 집중 지원하였으며, 한·EU FTA 발효에 대비하여 사전에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또한 FTA 상대국으로 수출을 모색하는 기업에게 FTA 특혜관세, 비관세장벽, 시장정보 등을 지원하는 통합무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 한식당에서도 계속된 한·EU FTA 협상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FTA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왔다. 특히 정부는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여 미국, 중국과 함께 EU를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이명박정부는 EU와의 FTA 추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전 포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2005년 7월 노르웨이·스위스·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된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의 FTA 타결을 통하여 유럽대륙에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이후 미국, ASEAN, 인도 등과의 적극적인 FTA 추진을 통하여 EU 측이 우리와의 FTA 협상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우리는 EU 측과의 두 차례 예비협(2006년 7월, 9월)을 통하여 상호 관심사항을 확인하였다. 국내절차를 거쳐 마침내 2007년 5월 6일 한·EU FTA 협상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였다. 당시 나는 한·EU FTA 서비스/투자분과 공동분과장으로 제3차 협상부터 참여하여 한·EU FTA 협상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협상 준비과정에서 우리와 EU측이 서로 농업에 대한 민감성을 인정하였으며, 이미 한·미 FTA를 타결한 이후였기에 한·EU FTA 체결에 따른 추가 부담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과정에서 범국민 등 일부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한·EU FTA 추진에 대하여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반면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조사 결과, 수출 전선에 있는 기업들은 한·EU FTA 체결의 효과를 기대하며 대부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EU측의 서비스 분과장이었던 Petros Soumelis는 그리스 출신이었는데, 우리 측 개방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처음부터 강하게 압박을 가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 측도 전체 협상전략 하에서 서비스 분야의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6차 협상이 끝난 2008년 2월에도 협상의 진전이 더딘 상태를 보였다. 결국 양측은 서비스 분과만의 별도 협상을 몇 차례 개최하였고, 협상 기간 중 공식 협상 이외에 분과장들 간 비공식 오찬이나 면담 등을 통하여 의견 차이를 좁혀나갔다.

특히 EU 측의 서비스 분과장은 한국 음식을 좋아하여 한 식당에도 초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음식을 먹으면서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이것이 협상의 진전에도 기여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8차 협상을 앞둔 2009년 2월에는 서비스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타결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후 협상의 마무리까지 필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후임자에게 짐을 넘기게 되어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협상 타결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다.

한·EU FTA는 상품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법률·회계·세무 등 서비스 분야에서 본격적인 개방을 이룬 FTA이다. 한·EU FTA 발효가 개방을 통하여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이동재(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경쟁력기획관/  
전 기획재정부 통상조정과장)

## 제4장

# 신흥지역으로의 FTA 확산

### 제1절 한·ASEAN FTA 체결

#### 1. 한·ASEAN FTA 체결과정

ASEAN은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ASEAN은 총인구 약 5억 7,000만 명, 총면적 약 450만km<sup>2</sup>에 걸친 거대 시장을 이루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하여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축으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ASEAN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 체결하여 왔다.

한·ASEAN FTA는 양자 FTA이면서 동시에 ASEAN 10개국과 동시에 협상하는 일종의 다자간 협상의 형태를 띠고 있어 협상의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하여 효율적인 협상 진행을 위하여 협상 분야별로 단계적으로 집중하여 완료하는 순차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상품무역협정은 2007년 6월 발효되었으며, 이명박정부에서는 서비스무역협정과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여 2009년 5월과 9월에 각각 발효시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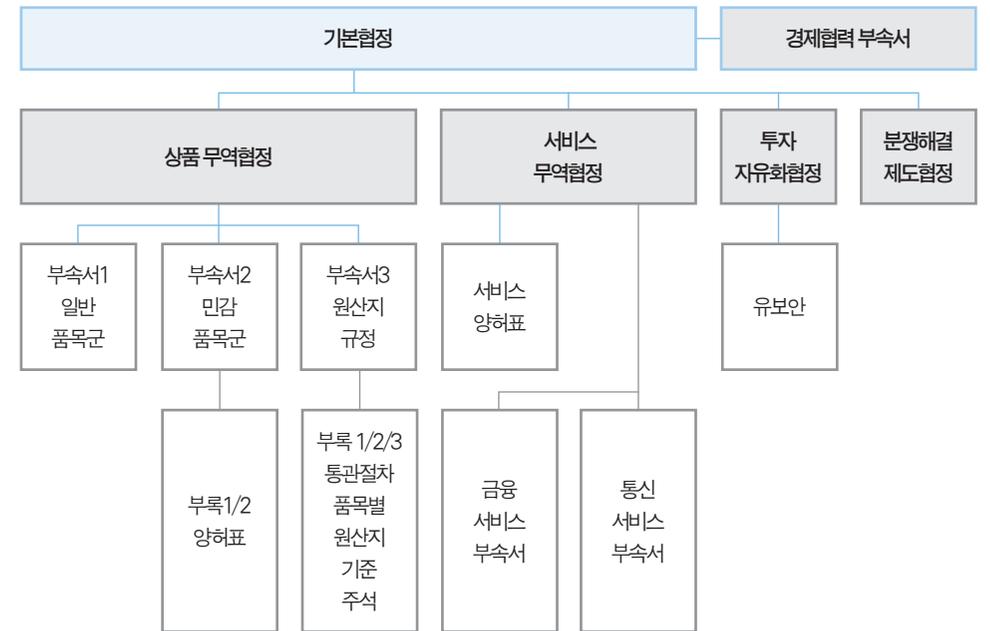


ASEAN은 오늘날 인구 6억 명, GDP 2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한국은 ASEAN 변영의 동반자로서 그동안 ASEAN과의 경제협력에 심화시켜 왔습니다. 특히 2007년 FTA 체결 이후 지난 4년간 세계 경제위기의 파고 속에서도 양측 간 교역은 연평균 13%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교역량 1,500억 달러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ASEAN 비즈니스 투자 서밋 개최식 기조연설(2011.11.17)



한·ASEAN FTA 협정 구조



※자료: 한국무역협회

#### 2. 한·ASEAN FTA 서비스·투자협정 주요내용

서비스무역협정은 당사자국들 간의 실질적인 모든 차별의 제거 또는 철폐를 목표로 하되, ASEAN 측의 이해를 고려하여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수준에서 타결하되, 보조금 및 안보상 예외 등 일부 조항을 명확히 하였다. 양허 수준에서는 ASEAN 대부분의 국가가 컴퓨터, 통신, 해운, 건설, 금융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 관심분야를 포함한 다수의 분야를 추가 개방하여 GATS보다 월등히 높은 자유화 수준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로 통신, 건설, 해운 등 우리기업의 주된 관심분야에서 기존보다 향상된 수준의 개방을 확보하여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ASEAN 국가들에 비하여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서비스 분야에서 GATS 수준을 월등히 상회하도록 ASEAN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더 큰 자유화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투자협정은 사업 친화적인 환경과 함께 자유롭고, 원활하고, 투명하고 경쟁적인 투자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투자제도의 점진적인 자유화, 투자협력 강화, 투자 촉진, 투자 관련 규정의 투명성 증대, 투자제도에 의한 투자자 보호 제공 등을 지향하였다. 투자협정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투자 환경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ASEAN FTA 발효 이후 관련국들은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한·ASEAN FTA 이행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제7차 이행위원회까지 개최되었으며, 양허 스케줄 이행, 현지 법령 정보 교환 등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국가명	추가 개방분야 내용
말레이시아	데이터프로세싱, 연구개발, 유통(도매, 소매), 교육(기타 고등교육), 의료(전문서비스, 민간병원), 해운(화물선 임대 추가 개방, 유지보수 및 국제해운운송에서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항공(유지보수, 관측), 회계, 엔지니어링, 여행사, 통신(이동통신 등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금융(인력이동 분야 제한 완화) * 통신과 해운은 ASEAN 내부 서비스 개방 수준 상회
인도네시아	법률, 건설(건축설계, 통합엔지니어링, 도시계획 포함), 컴퓨터, 레스토랑, 관광지문, 해운화물처리, 항공(유지보수, 컴퓨터 예약, 항공기 관측), 학제 간 연구개발, 기술시험분석, 사업유지보수, 프로젝트 경영, 금융(합작회사 설립 제한 및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통신(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및 서비스 공급독점 폐지)
태국	컴퓨터(소프트웨어 실행 등), 과학 컨설팅, 건설, 캠프, 해운(화물처리, 해운대리점업, 국제화물운송), 항공(유지보수, 마케팅, 컴퓨터 예약), 교육(강사 체류기간 연장), 철도 운송
필리핀	에너지 유통, 통신(위성, 데이터·메시지 전송), 광산개발, 폐수처리, 레스토랑, 금융(은행 주식 취득 제한 완화), 호텔업 및 여행사업(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 국제회의 조직
브루나이	호텔업, 통신(음성메일, 텔렉스, 전보), 건설, 해운(여객 및 화물 운송), 항공 유지보수
미얀마	회계·감사, 엔지니어링, 광고, 출판인쇄, 통번역, 영화 제작 및 상영, 토목건설, 금융(손해사정·보험계리, 대표사무소), 통신(전자 및 음성 메일, 전자데이터 교환, 텔렉스), 해운(여객 및 화물 운송), 운송(화물처리 및 창고), 항공(유지보수, 판매 및 마케팅, 컴퓨터 예약)
라오스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광고, 환경, 건설, 관광, 교육, 금융(예금, 대출, 보증) * WTO 미가입국으로 모두 신규 양허

※자료: 외교통상부

## 제2절 한·중 및 한·일 FTA 추진

### 1. 한·중 FTA 협상개시

#### (1) 추진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2년 중국과 수교를 맺어 2012년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였다. 그 사이 양국 관계는 '우호협력관계'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또한 교역액은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서 2011년 2,206억 달러로 증가하여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상호 방문자 수는 13만 명에서 641만 명으로 증가하여 양국 관계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한·중 FTA는 이러한 양국 관계를 더욱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기체결된 한·ASEAN FTA와 한·중 FTA를 통하여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주도적 역할을 확보할 수 있고, 한·EU, 한·미 FTA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 또한 거대 시장인 중국의 내수시장 선점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에 진출하여 있는 우리 기업 및 국민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EU, 한·미 FTA 활용을 위한 중국의 대한 투자 증대 및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대한 투자 또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중 교역현황

(단위:억 달러, ()는 증감률)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교역비중 (대세계교역액)
수출	694.60	819.90	913.90	867.00	1,168.40	1,342.00	24.10%
	-12.20	-18.00	-11.50	(△5.10)	-34.80	-14.90	(5,565.10억 달러)
수입	485.60	630.30	769.30	542.50	715.70	864.30	15.20%
	-25.60	-29.80	-22.10	(△29.50)	-31.90	-20.80	(5,243.80억 달러)
무역수지	2090.00	189.60	144.60	324.60	452.60	477.80	
총교역액	1,180.20	1,450.10	1,683.20	1,409.50	1,884.10	2,006.30	20.40%
	-17.40	-22.90	-16.10	(△16.30)	-33.70	-36.10	(10,808.90억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중 FTA와 관련하여 중국은 조속한 협상 개시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중 FTA는 경제는 물론 안보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우선적으로 농산물과 민감한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가 이뤄져야  
 다음 단계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에 대하여 중국도 동의하였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 기업들도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의사를 전하여 왔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게 되면  
 우리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중국 기업은 세계시장으로 널리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8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2012.1.16)



## (2)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

한·중 FTA는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2007년 3월~2010년 5월까지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2010년 9월부터 한중 양국 간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 한·중 FTA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2012년 1월 9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하여였다.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중국은 2012년 첫 국빈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초대함으로써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동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중 FTA의 조속한 체결이 양자 경제협력에 더욱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양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우리 국내 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농수산물 등 민감분야에 대한 우려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양국이 협상개시에 합의함에 따라 협상개시 준비를 위한 국내절차가 하나씩 진행되었다. 먼저 2012년 2월 24일 한·중 FTA 공청회를 개최하여 농민단체, 중소기업, 학계 및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와 함께 범부처 차원의 의견수렴 활동을 총 110회 이상 진행하였다.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한·중 FTA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동 계획을 2012년 4월 13일 FTA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4월 16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어서 4월 23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한·중 FTA 추진 계획을 보고함으로써 국내절차를 마무리하였다.

양국은 5월 2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통상장관 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단계별 협상, 민감분야 보호방식, 역외가공지역 등에 대한 협상원칙이 담긴 양국 공동성명문을 발표하였다.

1차 협상은 킥오프미팅(Kick-off Meeting) 형식으로 5월 14일 베이징에서 개최하였으며, 협상운영세칙(TOR) 확정, 협상의 범위, 협상그룹 구성, 자료 및 정보 교환, 향후 협상일정 등을 협의하였다.

2차 협상은 7월 3~5일까지 3일간 제주에서 개최되었으며, 상품분야 모델러티(Modality: 협상세부원칙)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고, 서비스·투자 분과 작업반을 설치하여 서비스·투자 모델러티(Modality: 협상세부원칙) 협상을 개시하였다. 아울러 1차 협상에 이어서 협상의 범위 및 별도 챕터(Chapter) 구성 분야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3차 협상은 8월 22~24일까지 중국 웨이하이에서 개최되었으며, 상품분야 품목군별 정의와 처리방안, 품목군별 비중 설정시 적용기준 등에 대한 논의의 진전이 있었다. 아울러 서비스,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 모델러티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경쟁정책, 정부조달, 지적권 및 전자상거래 관련 전문가 대화를 개최하였다. 4차 협상은 10월 30일~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하였다.

한·중 FTA의 목표 중 하나는 우리 민감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높은 자유화를 추구하여 FTA로 인한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협상타결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국내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한·중 FTA는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비관세장벽 등이 포함된 포괄적 FTA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상품 분야의 관세/비관세 장벽 인하 및 철폐를 통하여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 장벽의 완화 및 철폐, 투자 자유화 촉진 및 보호 강화를 통하여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투명성 증진, 지적권 보호 강화, 경제협력 증진 등을 통하여 중국 내 우리 기업·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 및 한·중 FTA 연구지원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치밀한 협상전략과 대책을

## 한·중 FTA 협상방향

양국간 합의에 따라 한·중 FTA 협상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였다. 1단계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상 모델러티(Modality: 협상세부원칙)를 도출한다. 우선 상품 분야의 경우 품목을 일반·민감·초민감 품목군으로 구분하고, 장기관세철폐, 양허제외 등 다양한 보호방식을 마련한다. 또한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 및 비관세장벽 등 상품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질의·응답 세션을 가지고 서로의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2단계 협상의 기초가 될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이렇게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및 협력 분야 등 전 분야에 대한 본격 협상을 진행하며, 전 분야의 일괄타결(single undertaking) 방식으로 협상을 추진한다.

양허 시나리오	발효 후 5년			발효 후 10년		
	GDP(%)	후생(억 달러)	고용(천 명)	GDP(%)	후생(억 달러)	고용(천 명)
낮은 수준	0.95	176.5	187.5	2.28	275.9	244.4
높은 수준	1.25	233.3	247.3	3.04	365.8	325.6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2.2)

마련함으로써 한·중 FTA를 통한 국민후생 증대, 고용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민감한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2. 한·일 FTA 협상재개를 위한 협의 지속

한국과 일본은 2003년 10월 한·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일 FTA 협상을 개시하였다. 2003년 12월~2004년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FTA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농수산물 시장 개방 수준 등 핵심쟁점에 대한 양국 간 이견으로 협상이 중단되었다.

2008년 4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FTA 협상 재개 검토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개최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5차례의 과장급 실무협의, 2차례의 심의관급 실무협의, 2차례의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여 일본 내 비관세 장벽(NTB) 문제 등 한·일 FTA 협상재개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및 시장개방 수준 등 협상재개 시 예상되는 주요사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양국 간의 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자 첨단 기술과 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의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과의 FTA는 중장기적으로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 증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일 FTA 추진에 있어 현재 한·일 간 상당한 규모의 무역역조가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우리 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일 FTA가 궁극적으로 대일 무역수지 개선과 우리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에 기여하여 양국 간 상호이익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일 FTA 추진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지금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차 중국 베이징에 와 있습니다. ...  
세 나라 간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상호 투자의 안정성을 더욱 높이고,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한·중·일 FTA 협상을 연내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9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2012.5.14)



## 3. 한·중·일 FTA 협상개시

2009년 10월 10일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3국은 2010년 1월 준비회의를 거쳐 5월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출범 시켰다. 제1차 회의에서는 2012년까지 공동연구의 종료 등 공동연구의 운영세칙에 대하여 합의하고, 6년(2003~2009년)간 진행되어 왔었던 민간 공동연구의 결과와 3국의 경제·통상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이후 3국은 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3국 간 FTA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를 진행하여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 3월 30일~4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부터 본격적인 보고서 작성이 진행되었다.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는 당초 2012년 정상회의 개최 전까지가 종료 목표시한이었으나, 2011년 5월 개최된 3국 정상회의에서 종료 목표시한을 2011년 말까지로 조기 완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작업일정을 가속화하여 2011년 12월 14일~16일간 평창에서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종료되었다.

공동연구 보고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기타 이슈(지재권, 정부조달 등 규범 이슈 및 수산, 식품 등 협력 이슈 포괄) 등 향후 3국 간 FTA에서 다뤄질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각국의 산업 및 정책 현황, 3국 간 FTA로 인한 영향 및 권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3국 간 FTA가 실현 가능하며, 3국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3국 정부가 한·중·일 FTA를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지를 결정하고 향후 행동계획을 발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공동연구 보고서의 결론과 권고는 2012년 5월 한·중·일 정상회의에 보고되었으며, 3국은 보고서의 권고를 바탕으로 한·중·일 FTA의 연내 협상개시를 위한 준비작업에 즉시 착수할 것에 합의하였다. 3국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정부는 3국 FTA 추진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의견수렴 작업과 함께 향후 협상방식 및 협상목표 등에 대한 3국 정부 간 실무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세 차례에 걸친 3국 간 실무협에서 협상방식 및 수준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고, 국내의견 수렴 과정 등에서 3국 FTA 추진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2년 11월 20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중·일 통상장관회담에서 3국은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3국은 2013년부터 3월부터 3~4개월을 주기로 본격적인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 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개시

##### (1) 추진 필요성 및 기대효과

2000년대 들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동아시아 역내 통합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한·중·일과 ASEAN 국가가 참여하는 경제통합체가 형성될 경우 역내 무역증진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2011년 11월 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과 FTA를 이미 체결한 6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제시되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ASEAN+6개국이 참여한 형태로 타결될 경우 명목 GDP 기준으로 EU를 능가하고 환태평양파트너십 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버금가는 거대한 경제통합체가 형성될 것이다. 특히 RCEP 참여국 중에는 우리의 1, 2, 3위 교역 대상국인 중국, ASEAN, 일본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RCEP은 수출중심적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안정적인 교역기반을 제공할 전망이다. 실제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 RCEP, TPP, EU 간 주요지표 비교

구분	무역규모(2011)		명목GDP(2011)		인구(2011)	
	십억 달러	대세계%	십억 달러	대세계%	백만 명	대세계%
RCEP	10,131	27.7	19,764	28.4	3,399.0	48.7
TPP(일본 제외)	8,508	23.2	20,734	29.8	656.9	9.5
TPP(일본 포함)	10,185	27.8	26,604	38.2	784.7	11.3
EU	12,270	33.5	17,510	25.1	502.0	7.2

※ 자료: 기획재정부

##### RCEP의 경제적 효과 분석

양허 시나리오	발효후5년		발효후10년	
	실질 GDP(%)	대세계%	실질 GDP(%)	후생(억 달러)
낮은수준	0.38	89.21	1.21	113.51
높은수준	0.46	104.34	1.39	140.43
완전개방	0.68	138.56	1.76	194.56

※ 자료: 기획재정부

RCEP 발효 후 10년 경과시 실질 GDP는 1.21~1.76%, 후생은 113억 5,100만~194억 5,6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RCEP은 여러 국가가 동시에 참여하는 다자 FTA이므로 다수의 양자간 FTA를 체결함에 따른 부작용을 경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가령 RCEP 국가 간 통합원산지규정 제정 등을 통하여 원산지증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RCEP 협상을 통관절차·수입허가 등 개도국 관세행정의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 각종 비관세조치 개선 등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RCEP은 정체되었던 동아시아 지역통합 논의를 재가동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바, 한국은 RCEP 협상 참여를 통하여 역내 국가 간 경쟁구도, 정치적 대립의 완화를 주도하고, 역사적·경제적·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지역 통합의 중재자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 (2) 추진 성과 및 계획

2011년 11월 ASEAN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관하여 ASEAN이 구상한 기본틀(framework)이 제시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ASEAN과 FTA를 이미 체결한 6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이 참여하고, 높은 상품 개방수준을 모색하고 서비스교역 및 투자를 중시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2012년 8월 ASEAN+6 통상장관회의에서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RCEP 협상개시 선언을 위한 목표 시점으로 설정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RCEP 협상지침도 확정하였다.

우리나라는 RCEP 협상에 참여하기 위하여 공청회(10.24), FTA 추진위원회 심의(10.31-11.7), 대경장 의결(11.13),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보고(11.19) 등 국내절차를 11월 19일자로 완료하였으며 11월 20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예정대로 RCEP 협상 개시 선언이 이루어졌다.

RCEP 참여국들은 향후 2013~2015년까지 협상을 계속하여 2016년에 협정 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은 동아시아 무역자유화의 주요 수혜국인 바, 기존 FTA 추진현황, RCEP 참여국 간 FTA 추진 동향, 수준 및 범위, 우리 민감분야 등을 고려하여 향후 RCEP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면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경제 통합체가 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 제3절 기타 신흥국 등과의 FTA 추진

#### 1. 한·페루 FTA 발효

한·페루 FTA는 2008년 11월 양국 정상회담 시 한·페루 FTA 추진에 합의함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5차례의 공식협상, 2차례의 회기 간 회의, 3차례의 통상장관회담을 거쳐 1년 8개월 만에 타결되었다. 2010년 8월 30일 페루 리마에서 양국 통상 장관관 공식 타결 선언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11월 페루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가서명이 이루어졌고, 2011년 3월 정식서명되었다. 한·페루 FTA는 최종적으로 2011년 6월 국회 비준을 거쳐서 2011년 8월 1일 발효되었다.

한국과 페루는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양국 경제 전반에 걸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에 합의하였다. 우선 상품 분야에 있어서 양국은 수입액 기준으로 10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에 모두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우리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쌀, 소고기, 고추, 마늘 등 107개 품목을 양허 제외하고 여타 202개 농수산물에 대한 10년 이상 장기 관세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계절관세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였다.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는 한·미, 한·EU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하되, 전기·가스·방송·통신 등 기간산업에 대한 규제권한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페루는 전기·가스·발전 서비스 등을 양허하는 등 미국을 제외하고 페루가 체결한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였다.

투자 분야는 기존의 한·페루 투자보장 협정보다 투자자 보호수준을 강화하여 진입단계에 있는 투자자도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투자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고 일정 비율의 수출, 국내산 원재료 사용, 기술이전 등 투자자에 대한 이행요건 부과 및 고위 경영진에 대한 국적요건 등 제한 조치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우리 기업의 페루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한·미 FTA 수

#### 한·페루 FTA 상품양허 결과

양허단계	우리 양허안				페루 양허안			
	품목	비중(%)	수입액 (천 달러)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 (천 달러)	비중(%)
즉시 철폐	10,044	84.50	915,668	94.20	4,989	67.80	445,689	74.50
3년 내 철폐	223	1.90	407	0.00	58	0.80	288	0.00
5년 내 철폐	609	5.10	18,655	1.90	935	12.70	83,959	14.00
(5년 내 소계)	10,876	91.50	934,730	96.20	5,982	81.30	529,935	88.60
7년 내 철폐	170	1.40	12,464	1.30	40	0.50	2,187	0.40
10년 내 철폐	524	4.40	24,692	2.50	1,244	16.90	65,023	10.90
(10년 내 소계)	11,570	97.40	971,886	100.00	7,277	98.90	598,078	100.00
10년 초과	202	1.70	0	0.00	79	1.10	0	0.00
기타	2	0.00	0	0.00	-	-	-	-
양허제외	107	0.90	1	0.00	4	0.10	0	0.00
총합계	11,881	100.00	971,887	100.00	7,360	100.00	598,078	100.00

※ 자료: 기획재정부

준의 투자자-국가간 분쟁제도(Investor-State Dispute)를 도입하여 국제중재를 통한 우리 투자 및 투자자의 권리 보장을 확보하였다.

그 외에도 무역구제조치로서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과 이를 위한 역외가공 조항에도 합의하였다. 또한 경제협력 규정에서 10개 관심분야(중소기업, 어업·양식, 관광, 산림, 에너지·광물, 과학기술, 정보통신, 해양 운송, 문화, 농업 등)에 대한 협력 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양한 협력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011년 8월 한·페루 FTA의 발효 이후 2011년 말까지 5개월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페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4.2% 증가, 수입은 37.9% 증가하는 등 FTA를 통한 교역확대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페루는 GDP 규모는 작지만 최근 5년간 6%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이다. 또한 페루는 은, 아연, 주석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한·페루 FTA는 양국 교역 확대는 물론 페루와의 에너지·자원 협력 강화를 통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한·인도 CEPA 발효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약 12억 명), 1조 8,400억 달러(2011년, IMF)의 GDP로 세계 10위권의 거대한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등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이다. 특히 중산층이 1억 2,000만 명(인도 응용경제연구소 2007~2008 회계연도 기준 추정)에 달하여 세계 경제의 대규모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인도와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 구축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한·인도 양국 정부는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제통상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12차례에 걸친 공식 협상과 3차례의 회기 간 회의를 거쳐 2009년 8월 7일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정식 서명하였고, 2010년 1월 1일 한·인도 CEPA가 공식 발효되었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된 이래 양국 간 교역, 투자 등 경제교류가 대폭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인 2010년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은 43%, 수입은 37%가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수출 11%, 수입은 39%가 증가하여 총 교역액은 206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로써 인도는 우리의 9대 수출대상국, 18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직접투자는 1991년 26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에는 4억 4,100만 달러로 약 170배 증가하여 우리의 18번째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우리의 직접투자는 제조업 분야에 주로 집중되고 있는데 그 비중이 2009년 89.3%, 2010년 76.3%, 2011년에는 93.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직접투자 분야를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인도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2010년에는 인도 마힌드라사의 쌍용차 인수 등으로 3억 7,100만 달러가 유입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인도 수출입 추이

(단위: 억달러,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A)	46	55	66	90	80	114	127
수입(B)	21	36	46	66	41	57	79
교역실적(A+B)	67	92	112	156	122	171	206
증감율	22	37	22	39	-22	40	20

※ 자료: 기획재정부

한·인도 직접투자 추이

(금액: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인도(투자금액 기준)	91.1	99.3	294.0	188.9	241.4	199.2	441.0
인도→한국(신고금액 기준)	3.7	2.5	9.5	6.4	3.4	371.4	4.3

※ 자료: 기획재정부

협정이 발효된 이후 양국은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사안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2011년 1월 한·인도 CEPA 공동위원회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하였으며,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협정의 개선(upgrade)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011년 9월 CEPA 한·인도 국장급 공동위를 개최하여 교역자유화 확대 및 투자증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하고, 상품양허 개선 작업반 회의를 통하여 상호 관심 품목에 대한 입장을 교환,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여 나가고 있다.

인도의 경제규모, 양국 간 교역 및 투자의 확대, 상호 보완성(대인도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 휴대폰, 석유화학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나프타, 면사, 금속광물 등 기초 원자재) 등을 감안할 때 한·인도 CEPA는 앞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3. 한·터키 FTA 상품협정 발효 예정

한·터키 FTA는 2010년 3월 한·터키 통상장관회담에서 한·터키 FTA 협상 출범을 선언하면서 협상이 개시되었다. 양국은 2010년 4월과 7월, 2011년 3월, 2012년 3월 네 차례의 공식협상과 소규모 협상을 개최하였다. 한·터키 FTA는 한국 측의 공산품, 터키 측의 농산품에 대한 추가 양허개선 요구에 따라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었으나, 2012년 2월 6일 한·터키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터키 FTA의 조기 타결 기대를 표명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협상을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여타협정(서비스·투자 협정)으로 구성하는 데 합의하고, 제4차 공식협상을 통하여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을 우선 타결하였다.

2012년 3월 26일 양국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터키 정상회담에서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선언하였으며, 양국 통상장관간 가서명이 이루어졌다. 이후 2012년 8월 1일 터키 앙카라에서 양국 통상장관 간에 정식 서명되었다. 외교통상부는 8월 29일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한·터키 FTA 전체 상품 양허수준

양허단계	우리 양허안				터키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 (백만 달러)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 (백만 달러)	비중(%)
즉시	9,559	80.5	296.4	82.5	7,868	65	2,064	53.8
3년	200	1.7	14.4	4	350	2.9	338	8.8
5년	434	3.7	25.4	7.1	975	8.1	588	15.3
7년 비선형					4	0.0	169	4.4
7년	150	1.3	2.7	0.8	869	7.2	676	17.6
10년	609	5.1	18.8	5.2	801	6.6	1.7	0
(10년 내 소계)	10,952	92.2	357.8	99.6	10,867	89.8	3,837	100
관세감축	134	1.1	0.2	0.1	175	1.4	0	0
양허제외	795	6.7	1.2	0.3	1,060	8.8	0.2	0
총 합계	11,881	100.0	359	100	12,102	100.0	3,837	100

※ 자료: 기획재정부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정부는 터키 측 의회 비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터키 측과 협의를 통하여 한-터키 FTA가 빠른 시일 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터키 FT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품 분야에서 한·터키 양측은 수입액 기준으로 거의 모든 품목의 10년 내 관세 철폐에 합의하였다. 우리 측은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섬유 등 공산품에 대한 7년 이내 관세 철폐를 확보하였다. 터키 측은 농수산물 시장개방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우리 측 민감 품목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교역 품목 위주로 균형 있는 양허 수준에 합의하였다.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신선과일, 양념채소 등 우리 측 민감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하였다.

무역구제의 경우 터키가 세계 1위의 셰이프가드 조치 부가 국가임을 고려하여 양국 간 양자 셰이프가드, 반덤핑·상계 덤핑 관세조치의 발동을 위한 절차적·실질적 요건을 강화하여 기 체결된 FTA 중 최고의 무역구제 조치를 확보하였다.

원산지 증명에 경우 수출자가 스스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면 자율증명 방식에 합의하여 중소 수출업자의 FTA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관세 환급 허용 및 개성공단 생산품의 우리나라 원산지 인정에도 합의하였다.

한국과 터키는 전통적인 우방관계이나, 경제규모에 비하여 교역규모는 미흡한 편이다. 터키의 거대 내수시장(7,370만 명)과 유럽·아프리카·중동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한·터키 FTA는 양국 간 투자 및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관계를 크게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4. 한·콜롬비아 FTA 발효 예정

한·콜롬비아 FTA는 2008년 11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FTA 추진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후 2009년 12월 제1차 공식협상을 시작으로 2년 6개월 간 7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한 결과 2012년 6월 협상을 최종 타결하였다. 2012년 6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콜롬비아 FTA 타결 선언이 이루어졌으며, 8월 31일 가서명되었다.

한·콜롬비아 FT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사실상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 측은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10년 이내 관세철폐, 자동차부품, 타이어에 대한 5년 이내 관세철폐 등을 확보하였다.

농수산품의 경우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기 양허, 양허 제외, 농산물 셰이프가드, 관세율 할당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였다. 다만 콜롬비아 측의 강한 요청에 의하여 소고기 일부품목에 대한 19년 이내 관세 철폐와 탈·전지 분야 5개 품목에 대한 연간 100톤의 관세율 할당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서비스 분야는 한국과 콜롬비아 모두 미국, EU 등과 체결한 FTA와 대체로 유사한 수준의 개방에 합의하였다. 투자 분야는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송금 보장 등 규정을 포함하였으며, 한·미 FTA 수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를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원산지 규정의 경우 양측은 양국 교역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한 특혜 원산지 규정에 합의하였으며,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생산공정과 원자재의 해외조립 비율 등 산업 특성을 고려한 기준에 합의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생산물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 조항을 도입하였다.

양국의 상호보완적 산업구조와 콜롬비아의 높은 관세율을 고려할 때 한·콜롬비아 FTA를 통한 무역증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하였고, 올해 미·콜롬비아, EU·콜롬비아 FTA 발효를 앞두고 있어서 우리 기업의 콜롬비아 시장 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5대 산유국



이번 콜롬비아 방문에선 한·콜롬비아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콜롬비아는 우리와 인구도 비슷한 자원부국으로,

이번 FTA 협상 타결을 계기로 칠레, 페루와 함께 남미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93차 라디오·인터넷 연설(2012.7.9)



이자 세계 10위의 광물 잠재력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광물자원 확보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콜롬비아는 적극적인 FTA 추진과 우호적 투자 환경을 갖추고 있어 향후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콜롬비아 FTA 상품양허 결과

구분	한국 양허				콜롬비아측 양허			
	품목수	비중(%)	수입액 (천 달러)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천 달러)	비중(%)
즉시철폐	9,787	82.38	85,786	66.91	4,389	60.62	283,528	34.08
5년 내 철폐	10,725	90.27	126,891	98.96	5,969	82.44	461,058	55.42
10년 내 철폐	11,419	96.11	128,189	99.98	7,018	96.93	813,599	97.8
10년 초과 철폐 등	304	2.56	22	0.02	169	2.33	18,289	2.19
양허제외	153	1.29	6.3	0	47	0.65	0	0
TRQ	5	0.04	0	0	6	0.08	0	0
총합계	11,881	100.00	128,218	100	7,240	100.00	831,887	100.00

※ 자료: 기획재정부

## 5. 한·인도네시아 CEPA 추진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와 안정적 경제성장률, ASEAN 중 최대 경제규모를 가진 ASEAN 거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파트너 중 하나이다. 최근 한·인도네시아 양국 간 교역량 급증으로 인도네시아는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8대 교역국(수출 7위, 수입 7위) 이자 대ASEAN 제1대 교역국(수출 2위, 수입 1위)으로 부상하였다.

인도네시아와는 이미 체결된 한·ASEAN FTA가 있으나 자유화 수준이 낮고, 중·ASEAN FTA 및 일·인도네시아 EPA 등 주요 경쟁국과 인도네시아 간 FTA 체결로 자동차나 철강 등 우리 주요 품목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어 왔다. 또한 한·ASEAN FTA에서 우리의 주요 관심 품목들이 민감 또는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도 교역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도네시아 CEPA는 양국 모두에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는 한·ASEAN FTA 양허 제외 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모두 철폐할 경우 GDP 0.13%, 후생 15억 달러 증가가 예상되었으며, 인도네시아도 GDP 0.03% 증가, 후생 797만 달러 증가가 예상되었다.

인도네시아와의 CEPA 체결은 단순한 교역확대 차원뿐만 아니라 석탄, 구리, 원유 등 주요 자원의 안정적 공급기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석탄, 구리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동남아시아 국가 중 최대의 산유국이자 세계 제2위 LNG 수출 국가이다. 2011년 기준 우리의 인도네시아 수입 중 천연가스, 유연탄, 원유, 동광 등 원재료 수입비중이 7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국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인도네시아 CEPA 추진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였다. 2011년 2월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방한 시 이명박 대통령이 양자간 FTA 체결 필요성을 최초로 제안하였고, 인도네시아 측에서 이에 공감하면서 최초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직후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통상장관 회담에서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하였고 2011년 5월 공동연구 작업반 설치 후 총 3차례의 공동연구를 거쳐 2011년 10월 제3차 회의에서 공동연구를 종료하였다.

이후 2011년 11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시 공동연구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향후 협상 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2011년 11월 한·인도네시아 CEPA 공청회 개최 및 2012년 2월 FTA 민간자문회의 개최 등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2012년 3월 양국 정상회담 시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2012년 7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차 협상을 개시함으로써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였는데, 제1차 협상을 통하여 양국은 협상 절차 및 방법, 분과위 구성,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 6. 한·베트남 FTA 추진

베트남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차세대 신흥 유망시장으로서 우리나라의 주요 교

역·투자 파트너이다. 베트남은 5년간(2007~2011년) 5~8%의 높은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포스트(post)-BRICs로 부상하였으며, 우리나라 제15위 교역대상국, 8위 수출국이고 ASEAN 국가로서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다음의 제3위 교역국이기도 하다.

2006~2011년간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교역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 2011년 중 대베트남 교역은 약 186억 달러, 무역수지는 약 8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투자 측면에서도 베트남은 우리의 제6위 투자대상국이고 우리는 베트남의 제2위 투자국으로서 최근 우리 기업의 대베트남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 보호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반면 베트남은 후발 ASEAN 가입국(CLMV)으로서 2007년 6월 발효된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에서 타국 대비 느슨한 관세철폐 스케줄을 확보하고 있다. 일반품목은 2016년(일부는 2018년) 관세철폐, 민감·초민감 품목은 2021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관세감축, 관세할당 또는 양허제의 대상으로 올라와 있으며, 특히 자동차(기준세율 0~100%), 자동차 부품(0~50%), 철강(0~60%) 등 우리 측 주요 관심 품목들을 민감·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일·베트남 EPA(2009.10) 및 ASEAN·호주·뉴질랜드 FTA(2010.1)의 발효 등 경쟁국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주요 관심품목의 추가자유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일·베트남 EPA 체결로 2007년 1월 베트남의 WTO 가입 후 MFN 관세율(2007년 기준)을 상품양허의 기준세율로 사용함으로써 한·ASEAN FTA상의 MFN 관세율(2005년 기준)보다 시장접근성에 유리함을 가지고 있어 우리의 강력한 시장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인식 하에 한국은 베트남과 별도의 양자 FTA 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2009년 10월 한·베트남 정상회담 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하여 2009년 내 FTA 공동작업반 설치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 3월 한·베트남 통상장관회담 시 공동작업반 설치 및 운영지침(TOR)에 합의하였다. 그 후 2010년 6월~2011년 10월까지 총 6차례 공동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였고, 한·베트남 FTA가 양국 간 교역 및 GDP, 후생 증가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011년 11월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시 공동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FTA 협상 개시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2년 2월 FTA 민간자문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12년 8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 시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그 후 양국은 협상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기 위하여 협상 개시 1개월 후인 2012년 9월 제1차 협상을 개시하였다. 양국은 제1차 협상을 통하여 협상을 위한 기본지침에 최종적으로 합의한 상태이다.

## 7. 한·호주 FTA 추진

한·호주 FTA는 2009년 3월 개최된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함에 따라 2009년 5월~2010년 5월까지 총 5차례의 공식협상을 개최하였다. 이후에도 양측은 2011년 10월까지 수석대표회의 및 회기 간 협상을 통하여 주요 쟁점을 상당부분 해소하였다.

2012년 4월 G20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양자회담에서는 한·호주 FTA 협상을 고위급 채널과 실무급 채널로 나누어 논의하는 투트랙(two-track)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양측은 2012년 5월 한·호주 FTA 현황점검(stocktaking) 회의 및 7월 수석대표회의를 통하여 잔여 쟁점에 대한 상호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였다.

상품양허의 경우 우리 측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호주 측은 소고기·낙농품에 대하여 한·미 FTA 수준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비스·투자 분야에 있어서 우리 측은 협정문에 ISD 절차를 포함시킬 것과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리스트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나, 호주 측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우리 측은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축소, 시청각·엔터테인먼트 포괄유보 삭제 등에 대하여 호주 측은 전문직(법률, 세무, 회계)서비스, 통신, 교육 서비스 등에 대하여 한·미 FTA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한·호주 FTA는 수출확대는 물론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농업분야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8. 한·뉴질랜드 FTA 추진

뉴질랜드는 2006년 10월 25일 뉴질랜드 통상장관 방한 시 통상교섭본부장, 산자부장관 면담 등을 통하여 한국과의 FTA 추진을 강력 희망하면서 최소한 정부가 참여한 산관학 공동연구 실시를 요청하였다.

한국에서도 호주와의 FTA 협상 개시와 관련하여 뉴질랜드와도 FTA를 체결하는 것이 오세아니아 지역과의 안정적 교역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뉴질랜드와의 FTA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은 2006년 12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상품·서비스 교역 확대, 상호 투자 및 인적 교류 증진 방안의 일환으로 한·뉴질랜드 FTA 추진 가능성 검토를 위한 FTA 민간공동연구 출범에 합의하였다.

이후 2007~2008년에 걸쳐 민간 공동연구를 실시하였고 2008년 정부 간 라운드테이블 회의 및 두 차례의 예비협의를 가졌다. 국내적으로는 2009년 1월 공청회 개최 등 전문가 의견 청취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 3월 3일 개최된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2010년 5월까지 4차례의 협상을 개최하여 원산지, 서비스, 투자 및 기타규범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상품 분야를 포함한 양국 간 이익균형에 관한 의견이 해소되지 않아 추가 공식협상은 개최되지 않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한·뉴질랜드 정상회담(2010.7), 한·뉴질랜드 통상장관 회담(2011.2.12) 등 고위급 협의를 통하여 한·뉴질랜드 FTA 진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 9. 한·캐나다 FTA 추진

한·캐나다 FTA는 2005년 7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계기로 FTA 협상 개시에 합의한 이후 2008년 3월까지 총 13차례의 공식 협상을 통하여 협상타결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핵심 쟁점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캐나다 측이 우리나라의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중단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를 요구하면서 양측은 한·캐나다 FTA 협상을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다.

2003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우리나라는 캐나다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였다. 이후 미국과 캐나다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가'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7건의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면서 양국 간 협의가 지연되었고, 캐나다는 2009년 4월 9일 우리나라를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협정 및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위반으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였다. 한편 캐나다 측의 제안에 의하여 양측은 2010년 9~10월, 2011년 6월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2011년 6월 27일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최종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2년 1월 12일 '캐나다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고 2012년 3월 1일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하였다.

이후 캐나다 측은 한·미, 한·EU FTA 발효를 의식하여 한·캐나다 FTA 협상의 재개를 제안하였으며 2012년 6월 18일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캐나다 양국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한·캐나다 FTA 조속 타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였다. 이후 주요 쟁점 타결 방안에 대한 양국 간 협의를 지속하였다.

## 10. 한·말레이시아 FTA 추진 준비

말레이시아는 ASEAN 지역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도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주요 거점 교역국이다.

양국은 한·ASEAN FTA 체결 외에 양자 간 교역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별도의 양자 FTA 체결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양자 FTA 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2010년 12월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시 양국 간 교역규모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FTA 체결이 필요하다는 데 상호 공감하고 양국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011년 1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는 FTA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공동연구의 큰 틀에 합의하였으며 이후 4월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추진을 위한 사전 연구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2011년 5월 공동연구 진행을 위한 기본계획에 합의하고 2012년 8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양국은 FTA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양국공동연구의 긍정적 전망을 바탕으로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밟아나갈 계획이다.

## 삼중고를 넘어서며 얻은 신흥국과의 FTA

한·인도 CEPA는 BRICs 국가의 일원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인도 시장의 선점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2006년부터 시작된 협상은 인도 측의 느긋한 협상태도로 인하여 2008년이 될 때까지도 지지부진한 형편이었다. 당시 인도는 태국과 일부 낮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한 것 이외에는 이렇다 할 FTA가 없었고, EU, 일본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명박정부는 인도 시장 선점효과를 조기에 누리기 위하여 인도 측을 최대한 설득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함으로써 2008년 9월 협상 타결 선언을 할 수 있었다. 준비 과정을 거쳐 2010년 초부터 정식 발효를 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한·인도 CEPA 협상팀은 인도의 더운 날씨, 음식으로 인한 문제와 함께 협상 상대방인 인도 공무원의 심오한 정신세계를 이해하여야 하는 삼중고를 넘어 서야 하였다.

여름 휴가철이면 협상이 사실상 중단되는 선진국 FTA와는 달리 인도와의 협상은 7~8월에도 계속되었다. 이때 델리 현지의 날씨는 협상장 밖을 나가기 싫을 정도로 덥고 습도도 높았다. 협상장이었던 인도 상공부 건물은 사무실 별로 개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수석대표 간 협상 진행 중 과부하로 정전되어 무더위로 인하여 협상을 잠시 중단한 사례가 있을 정도였다.

협상 진행 중 점심식사는 주최 측이 제공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인도측은 상공부 건물 내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한 사무실에 뷔페식으로 차려주곤 하였다. 정성껏 제공한 음식이었고 대부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일주일 정도 되는 협상기간이 마무리 될 즈음에는 협상단 절반 정도가 배탈로 고생을 하였다는 점이었다. 델리 시내에서 사먹은 저녁식사로 인한 문제일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우리 측 숙소에 차려진 CP에 비치되어 있었던 상비약이

모두 동이 나는 현상이 매번 반복되었다.

또한 인도 측 협상 파트너들은 주고받기식 협상보다는 인도 측 자체 상황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다른 나라와의 기존 협상결과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을 유지하는 편이어서 설득을 통하여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려웠다. 만찬 리셉션장에서 옆에 앉은 협상 파트너가 “미스터 김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라는 철학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 와서 당황한 적이 있었다. 이처럼 심오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에는 두세 배의 노력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범정부적 노력으로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인도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한·인도 CEPA 발효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니, 당시 협상팀의 일원으로서 지금도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 김희정(통계청 통계정책국장/  
전 기획재정부 양자관세협력과장)

## 제5장

# FTA 효과 제고

## 제1절 FTA 활용지원

### 1. FTA 효과 극대화의 추진 필요성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2012년 8월 한·EU, 한·미 FTA 등 8건(45개국)의 FTA가 발효되었다. 이로 인하여 경제영토는 세계 경제규모의 57.3% 수준(2010년 GDP 기준)까지 확대되어 세계 3위로 올라섰으며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1/3 이상을 FTA 체결국과 교역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FTA의 지속적 추진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기업과 소비자가 FTA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2012년 4월 1일로 발효 8주년을 맞이한 한·칠레 FTA는 양국 간 교역 증대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고용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준비기간이 비교적 충분하였던 EU의 경우 기업들의 FTA 활용률을 보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SEAN이나 인도의 경우에는 낮은 개방수준, 상대방 국가의 낙후된 통관 절차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에 대한 낮은 인식 및 부족한 정보 등으로 인하여 활용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 발효된 FTA의 특혜관세 활용률 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인증수출자 지정 등

이행준비를 선제적으로 진행한 한·EU FTA의 경우 발효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출활용률이 81.0%로(2012.8.31 기준) 높은 수준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ASEAN, 한·인도의 경우에는 장기간 관세철폐, 복잡한 원산지기준 및 상대국 바이어의 관심부족 등으로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11년 수출활용률: 한·ASEAN 33.1%, 한·인도 35.8%).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FTA 활용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전문인력이 없어서'로 파악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FTA를 활용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복잡한 특혜관세 활용 방법 및 절차'를 들고 있다(경기, 대구, 부산, 울산 지역 FTA 활용 지원센터 수행 설문조사).

FTA가 발효되었더라도 수입 소비재의 독과점식 유통구조 등으로 인하여 관세인하의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소수의 유통업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문제점 등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한·칠레 FTA에 따라 칠레산 키위에는 관세철폐로 인하여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FTA 미체결국인 뉴질랜드산 키위에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자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업체가 대형마트에 칠레산 키위 판매금지 조건을 부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건 외에도 FTA로 인한 관세철폐 혜택을 막는 수입 소비재 유통구조 상의 문제점이 언론·연구결과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2. FTA 활용지원 정책의 추진 경과

이러한 배경 하에서 피해산업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뿐만 아니라 기 발효된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명박정부는 3차례(2010.7, 2011.12, 2012.3)에 걸쳐 FTA 활용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FTA활용 경제활력 제고'를 국정 5년차 13대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첫째 대책은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2010.7.19, 제18차 FTA국내대책위원회)'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FTA 활용을 추진함과 아울러 제도적 기본 틀을 갖춘 것이다.

이 대책은 ASEAN과 인도의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비율이 당시 낮은 수준이었고, FTA를 이용한 기업들의 생산비용 감소와 수출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향상 효과가 미약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수립하였다.

### 대 ASEAN 수출 활용률이 낮은 원인

- ①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 관세 철폐로 관세인하 효과가 적음
- ② 상대국 수입업자의 FTA 체결여부 및 특혜관세 적용에 대한 낮은 인지도
- ③ 기업의 원산지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및 기관(세관·상의)을 통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수출기업의 과도한 서류제출 부담 발생
- ④ ASEAN 측의 투명성이 낮은 관세행정 관행 등

특히 한·ASEAN 수출 활용률이 낮은 원인은 통관부문에서의 관세혜택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발효가 임박한 한·EU FTA에 대한 기업들의 활용 준비도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2011년까지 FTA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2013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FTA활용을 제고하고자 제도개선, 정보제공확대, 기업의 FTA 활용역량 확충, 대외협력·홍보강화,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과제로 정하고 분야별 세부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신청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관·상공회의소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수출물품·수출국이 종전과 동일한 경우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수출신고필증 제출을 면제하였으며, 세관과 상공회의소 간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서 양식을 통일하였다. 아울러 한·EU FTA 발효에 대비하여 관세청의 지역 본부세관에 FTA 집행센터 및 원산지검증팀을 신설하여 사전에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이 FTA 상대국에 수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FTA 특혜관세, 비관세장벽(표준·인증·기술규제 등) 시장정보 등 FTA 관련 정보를 국가별·품목별로 통합, 연계한 통합무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2011년 EU에 대하여 시범구축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FTA 활용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컨설팅(FTA닥터)을 제공하기로 하고 관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지관리시스템 등 원산지 관련사항뿐만 아니라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시장진출 전략을 심도 있게 상담하기로 하였다.

상경계 학과들이 FTA 과목을 개설하도록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FTA 활용관련 실무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FTA 정보 및 상담 제공

을 위하여 지자체·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 설명회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FTA 상대국 바이어 대상 해외설명회와 FTA 활용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는 그동안 나타났던 FTA 활용지원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강하고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FTA를 활용한 무역 확대방안’(2011.12.22, 제10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을 수립하였다.

이 대책은 한·미/한·EU FTA의 본격적인 활용을 앞두고 FTA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임에도 중소기업은 FTA 활용관련 정보획득·이해능력과 적용·관리능력이 부족하고, 지원기관들은 일반적인 정보의 중복제공 및 FTA 활용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기업이 원하는 고도화·차별화된 지원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현장중심의 설명회, 전문 인력 양성, 통합무역정보시스템 확대, 컨설팅 확대,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보급 등 종전의 FTA활용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보강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업 중심형 민·관 합동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및 원산지 사후검증 전담팀 신설,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해외 마케팅 전략, 수출 전략품목 발굴·육성 및 FTA 환경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대책 등이 포함되어 FTA가 수출증대 및 내수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한·미 FTA 발효계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FTA 효과 극대화 방안(제10차 위기관리대책회의, 2012.3.21)’을 마련하였다. 이 방안은 한·미 FTA 효과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수출확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후생증대 등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에 의하여 수립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FTA 활용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컨설팅, 정보제공 등 기업들의 FTA 활용역량을 강화하여 수출을 확대하고, FTA 허브로서의 이점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며, 일반 국민이 FTA의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기업역량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를 위하여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및 지역 FTA 활용센터, 관세청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전국적인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컨설팅 제공을 확대하고 기관별로 다양한 컨설팅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산지관리사 육성 및 대학 강좌 확대 등을 통하여 FTA 활용의 인적기반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섬유·의류 FTA-PASS’를 개발, 보급하는 등 다양한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보급하도록 하는 한편 통합무역정보 시스템 확대구축 및 FTA 활용포털 차별 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 논의 내용

- **기업활용:** FTA 활용 컨설팅 이력관리시스템 구축방안, FTA 활용 전문인력 양성방안, FTA포털 개선방안, 원산지확인서 활성화 방안 등
- **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추진방안, 국내복귀(U턴) 기업 지원방안
- **산업경쟁력:** 농수산식품 수출증대 지원방안,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 등
- **소비자:** FTA 수입 소비자 가격정보제공 방안 등

이와 더불어 국내외 설명회 등을 통하여 FTA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마케팅 지원 강화 등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한·미 FTA 발효로 북미-유럽-아시아(ASEAN)을 잇는 FTA 네트워크가 구축됨에 따라 투자유치의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대규모 투자설명회(IR: Investor Relations)를 개최하는 한편 국내에 이미 진출한 기업의 증액 투자 유도 및 U턴기업 지원을 통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보완대책을 통하여 취약산업인 농식품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방안’(2012.1)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약산업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소비자 체감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소비자에 대하여 FTA 수입품목 가격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소비자 감시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FTA 주요 수입 품목별로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 대책에서 FTA 활용 정책결정, 정책 협의·조정을 위하여 13개 관계부처 실장급 및 7개 FTA유관기관 부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를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이다. 협의회는 종전의 ‘FTA 비준지원 실무추진단’과 기존의 기획재정부 무역협정지원단장 주재의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통합하여 개편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점추진과제 별(기업역량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 FTA 허브 이점을 활용한 투자유치 활성화, 보완대책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체감 효과 극대화)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종합대책에 따라 현재 FTA 효과 극대화 및 기업의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하여 기업 활용역량 강화, 투자유치 활성화, 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후생제고를 위한 다양한 FTA 활용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 3. 범정부적 종합지원체제의 구축

먼저 FTA 국내대책위원회,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민간과 지자체 및 FTA 활용 유관기관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2007년부터 시작된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비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2012년 12월 현재 28명)된 FTA 국내대책위원회를 통하여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제18차, 2010.7.19)',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19차, 2010.11.17)', 'FTA 환경 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2011.8.18)', 'FTA 효과 극대화 방안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2012.9.24)' 등을 논의함으로써 FTA 활용지원 정책 및 피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였다.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는 1차 협의회(2012년 4월 4일 개최)를 시작으로 현재 15차례(2012.9.20 기준)에 걸쳐 기업 활용지원, 투자유치,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후생증대 등을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하면서 정책역량 강화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실무협의를 강화하여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고 상호간 협력 범위를 확대하여 FTA 활용정책의 시너지 효과 제고에 노력하였다.

FTA 활용지원 전문기관으로서 민·관 합동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를 한국무역협회에 설치(2012.2.21)하여 중소기업이 FTA를 윈스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 FTA 활용센터(16개소), 전국 산업단지(937개소) 및 업종단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 **구성:** 정부부처, 지원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 지원기관: 한국무역협회, KT-NET, KOTRA,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전문가: 섬유, 자동차 등 업종별 전문 관세사
- **주요 사업:** 컨설팅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상담전문가 및 16개 지역활용
  - 센터 전문가 배치, 현장지원 컨설팅,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 설명회 등

####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 **운영기관:** 지역 상의(9곳), 무역협회(울산, 강원), 경기경제단체연합회(2곳), 전북통상진흥원, 충남경제진흥원,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기능:** 지자체 및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FTA 활용 관련 홍보 및 정보 제공,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전국적인 종합 지원체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지방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5개 광역 시·도에 16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1단계: 2011.1, 8개소, 2단계: 2011.9, 8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에서는 기관 간 정보공유와 네트워킹을 통하여 활용지원 사업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였다. 향후 지방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세사 등 전문가를 상주시켜 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과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제16차, 2012.10.10)'에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FTA 활용정책 및 추진현황을 논의하였다. 또한 시도경제협의회를 통하여 FTA 활용지원정책을 논의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간 FTA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4. 기업의 FTA 활용역량 강화

이명박정부는 기업 FTA 활용역량 강화를 통하여 수출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FTA 활용 컨설팅, FTA 대학 강좌, FTA 국내외 설명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FTA 애로요인인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 활용방법의 복잡성, 전문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고 FTA 활용지원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FTA 활용컨설팅을 효율화하기 위하여는 관세청은 인증수출자 및 FTA-PASS 활용 컨설팅에, 중소기업청은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에,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는 지역 밀착형 현장 컨설팅에 중점을 두는 등 컨설팅 수행기관 간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원분야를 차별화하였다. 이에 더하여 관세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원산지정보원,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등에서 수행되고 있는 FTA 활용컨설팅의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2012.7.6)하여 기관별 중복지원을 없애고, 소외 기업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다.

FTA 활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는 초보자도 쉽게 사용하도록 중소기업 맞춤형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인 '간편판정 FTA-PASS' 시스템을 개발(2012.6.1)하는 한편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과 원산지 관리시스템간의 상호연계를 지원하였다. 또한 원산지 관리시스템 상호 간 전자유통체계 구축 및 국가 간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제도 도입 등도 추진하였다.

복잡한 원산지 규정 및 활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전문인력은 기업들의 FTA 활용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FTA 체결 확대에 발맞추어 정부는 전문컨설턴트를 양성하고 대학 FTA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원산지 관리사 제도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다. 대기업 퇴직임원을 FTA 컨설턴트로 양성(2013년까지 200명)하기 위하여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FTA 대학강좌를 2011년 39개 강좌·23개 대학에서 2012년 41개 강좌·29개 대학으로 보강·확대하였다. 또한 FTA 활용 전문대학원을 광역권별 6개를 선정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원산지관리사 제도를 2013년 이후 국가공인자격으로 전환하고 시험횟수를 확대하는 등 원산지관리사 육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FTA확대 등으로 무역정보에 대한 기업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기업의 정보역량은 여전히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고품질 무역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1년부터 통합무역정보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여 2012년 1월부터 EU 27개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 10월에는 미국 무역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에는 중국·대만·홍콩, 2014년에는 일본으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업 활용역량 지원책 이외에도 FTA 포털을 전문분야별로 차별화, 고도화하는 한편 수출선도기업 육성 등 FTA 활용마케팅 강화, FTA 활용 성공사례 개발 및 전파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기업들이 FTA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5. FTA 허브 이점을 활용한 투자유치 활성화

한·미 FTA 발효로 북미-유럽-아시아(ASEAN)를 잇는 FTA 네트워크가 구축됨에 따라 투자유치의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어 미국·EU 등 FTA 체결국뿐만 아니라 대미·대EU 진출을 원하는 주변국까지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미국, EU, 일본 등에 대규모 IR(Investor Relation)을 전개하여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분을 조성하였다. 또한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여 입지 및 세제지원을 확대

하는 한편 KOTRA에 투자유치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중국·일본 등으로부터의 투자유치를 위하여도 노력하였다.

한편 FTA 발효 및 해외 현지 경영환경 악화 등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제, 입지, 인력, 수출금융 등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였다. 이른바 U턴 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하여 지원센터 및 현지 U턴 데스크 신설, 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U턴 기업 패키지 특별보증(신용보증기금, 3,000억 원) 신규 도입(2013년 이후)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하였다.

## 6. 보완대책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하여 농수산물식품업 및 제약산업 등 피해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도 진행하였다. 농식품 수출의 경우 한·미 FTA를 계기로 세계최대 규모인 미국 식품수입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추진하였다.

김(관세율 6% 즉시철폐) 등 관세상 이점 품목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추진하고 식재료로 활용 가능한 신규 제품을 개발하였다. 수출과 직결되는 단기 수출확대 통합마케팅을 전개하고 해외바이어 등을 초청하여 신규거래를 주선하는 한편 농식품 수출홍보대사 등을 활용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였다.

제약산업은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방안(2012.1)'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금융·세제·R&D 분야에서 집중 지원하도록 하였다. 전문 제약기업(Specialized Pharm) 및 글로벌 제네릭기업(Generic Pharm)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내보완대책의 효율적 관리도 필수적인 바, 국내보완대책 260개 이행과제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을 지속하고 주요 40개 과제에 대한 현장점검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보완대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 7. 소비자 체감효과 극대화

FTA에 따른 이익이 일부 유통업자 등에 귀속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수입품의 가격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자율적 감시를 지원하였고, 가격 변화요인을 지속적으로 분석·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품목	조사·발표기관	발표시기	조사 대상
유모차	소비자시민모임	2012.3.28	미국, 이탈리아 등 6개국산 16종
전기다리미	소비자원	2012.5.18	EU산 41종
프라이팬	주부클럽	2012.6.1	EU산 8종
위스키	녹색소비자연대	2012.6.8	EU산 74종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등 소형가전	소비자원	2012.8.13	전기면도기 54종, 칫솔 13종

※ 자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관세가 철폐 또는 상당폭 인하된 수입제품(한·미 FTA 관련 10개, 한·EU FTA 10개)을 대상으로 소비자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였고, 가격인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품목에 대하여는 원인 및 유통단계별 가격 등 심층정보를 스마트컨슈머(Smart Consumer) 및 각 소비자 단체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2년 6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럽계 전자제품회사가 한·EU FTA 발효에 따라 관세가 폐지된 이후에도 유럽산 소형가전제품의 가격하락을 막은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정부는 물가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하여 가격인하가 미미한 FTA관련 일부품목에 대하여는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 후생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제2절 협정이행 제고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우선 FTA를 체결한 당사국들이 협정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당사국 간의 협정이행은 FTA 체결로 인하여 발생한 국제법 상의 의무를 자국 법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협정이행은 우리의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의무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협정의무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협상과정 등을 포함한다.

FTA 협정의 핵심은 관세철폐 또는 인하를 통한 교역증대 효과에 있다. 그러나 FTA 협정에서는 관세양허에 관하여 매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을 포괄하고 있고, 관세율 인하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우리가 체결하는 FTA의 수가 많아질수록 협정이행 문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어 소위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가 나타나기 쉽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우리의 국내이행 법령을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정립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이 법령은 우리가 체결한 모든 FTA를 포괄하는 기본절차법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내용 면에서는 협정상의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 연도별·품목별 협정관세율표, 원산지증빙서류 및 원산지 조사절차, 협정관세의 적용 및 보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부과의 특례 등 FTA 협정에서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인도(2010.10 발효)·EU(2011.7 발효)·페루(2011.8 발효)·미국(2012.3 발효)과의 FTA 등 새롭게 체결된 협정 내용은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국내 이행체계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있다.

또한 관세분야 협정이행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기획재정부에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를 신설하고, 집행기능 강화를 위하여 관세청에 1국 3과를 신설하였다.

계약 상대국의 협정이행 상황에 대하여는 체결된 FTA의 효과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보다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우리가 체결한 FTA 및 점검 대상은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 상대국의 협정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는 대상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먼저 계약 상대국의 관세율 철폐·인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FTA 협정에서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1만여 개의 상품분류코드(HS)를 기준으로 관세율 인하 일정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8개 FTA, 45개 국가에 대하여 약 45만 개 품목의 관세율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WCO HS코드가 5년마다 개정되므로 상대국이 협상당시 관세철폐 대상으로 분류하였던 품목(일반품목)을 고율관세 부과대상 품목(민감품목)으로 자의적으로 재분류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계약 상대국이 협정상의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이명박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도입한 '자유

### 스파게티 볼 효과 (Spaghetti Bowl Effect)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 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당초 기대하였던 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을 말한다. 다수의 FTA가 체결, 발효되면 대상 지역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 서로 얽히고설켜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같은 현상이 마치 스파게티 접시 속 국수 가닥과 닮았다는 뜻에서 사용되었다.

대표적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이후 멕시코 소재 자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던 포드가 미국 세관이 요구한 원산지 증명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여 4,100만 달러의 벌금을 낸 사례가 있다.



FTA 효과로 값이 저렴하여지는 수입 품목의 시장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82차 라디오·인터넷 연설(2012.1.16)



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2년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협정관세의 적용 대상이 되는 원산지 물품의 통관절차와 관련된 상대국의 법령과 제도가 협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까지 타결된 FTA 전반에 대하여 상대국의 국내 입법상황에 대한 종합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FTA 이행과정에서 노출된 의제에 대하여는 각 FTA별로 정하고 있는 협력채널을 통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분야의 경우 ASEAN과 15차례의 이행협상을 통하여 원산지 발급기관 확정, 원산지증명서 서식 개정, 상호대응 세율, 민감품목의 일반품목 전환, FTA 활용을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EFTA(4회), 인도(4회), 칠레(13회), EU(6회), 싱가포르(2회), 미국(1회)과도 각각의 이행협상을 통하여 FTA 이행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였다.

FTA 체결협상은 일회성이지만 한번 체결된 FTA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리·점검이 필요하다. 정부는 FTA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FTA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 제3절 수입유통 구조 개선

FTA 국내 대책 중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FTA로 인한 수입 물품의 가격 인하 효과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아무리 FTA가 체결되고 관세 장벽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낮아지는 만큼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국내 소비자들은 그 효과를 누릴 수 없고 수입업자나 유통업자가 그 증가되는 후생을 독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 가격 모니터링 대상 품목

구분	품목
EU산(10개)	유모차, 다리미, 프라이팬, 와인, 승용차, 전동칫솔, 위스키, 유축기, 베이비로션, 애프터셰이브로션
미국산(10개)	오렌지, 오렌지주스, 포도주스, 아몬드, 체리, 호두, 레몬, 자몽, 와인, 승용차

※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미국, EU 등 주요 국가와 체결한 FTA가 주요 품목에 대한 국내 소비자 가격의 인하로 연결되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후생증대로 연결되도록 국내 수입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협력하여 가격동향 모니터링, 유통단계별·채널별 가격정보 제공,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등 각종 대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 수입제품 중 소비량이 많고 인지도가 높은 품목 20개(EU산 10개, 미국산 10개)를 선정하여 소비자 판매가격의 변화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가격 모니터링 결과 가격 하락이 없거나 미미하여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원과 협력하여 유통단계별·채널별 가격, 국내외 가격차 등 심층정보를 제공하여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유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모니터링 결과, 대상 품목인 FTA 관련 주요 소비재 20개 품목 중 총 14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8월 29일 기준으로 한·EU FTA 이전에 비하여 총 10개 품목 중 5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미 FTA 이전에 비하여 총 10개 품목 중 9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두, 유축기, 전동칫솔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소폭 상승하기도 하였는데, 그 원인은 작황부진, 제조 원가 상승, 국내 독과점 유통구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FTA 관련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가격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나갈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 소비자가격이 관세 철폐·인하분만큼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이 있는 경우 소비자단체, 소비자원과 협력하여 그 원인 등을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후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이나 정보 제공 과정에서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온라인 판매 방해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직권조사 등을 통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에 가장 효과적인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표준화된 전자결제창을 보급하여 소비자가 가격, 이용기간, 거래내용 등을 확인한 후 결제가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결제환경을 조성하였다. 전자상거래 거래 시 사업자가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구체화한 '상품정보제공고시'를 제정하여 원산지, A/S 책임자 등 구매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 제6장

# 앞으로의 과제

### 제1절 FTA 네트워크 허브 완성

세계 경제환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EU 등 선진 경제권의 회복이 지연되고 신흥 경제권도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교역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각 국가들은 신보호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통합 움직임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지속적인 세계의 저성장 기조 및 교역 감소, 국가들의 신보호주의는 위협적인 환경변화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글로벌 FTA 네트워크 허브 완성을 통한 해외진출의 기반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WTO DDA 협상을 통한 다자무역 자유화가 난항을 겪고 지역통합의 움직임이 강하여지는 상황에서는 FTA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나가야 한다.

#### 1. 현재 진행 중인 FTA 조속타결 추진

우리나라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통하여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 EU를 비롯하여 ASEAN, 칠레, EFTA 등 세계 경제의 약 60%와 FTA를 체결하여 경제영토가 세계 3위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터키, 콜롬비아와의 FTA가 타결되었고 중국,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과 FTA를 추진하였다.

그간 추진하여온 FTA 허브 구축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선 협상이 진행 중인 FTA 체결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과의 FTA라 할 수 있다.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3개 경제권인 미국, EU, 중국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되고 경제영토는 전 세계 GDP의 약 67%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로써 미국, EU 등의 중국 진출을 위한 투자확대, 중국의 미국, EU 진출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의 명실상부한 FTA 허브 국가로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강화되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정치적 효과도 기대된다.

중국과의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비관세 장벽 등 전 분야에 걸쳐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이 수출을 확대하고 보다 자유롭고 투명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한·중 FTA 체결시 농수산업, 경공업 등 우리 측 민간산업에 대하여는 국내 피해 최소화 전략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중·일 FTA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한국, 중국, 일본은 3국간 교역·투자의 상호의존성, 산업구조 간 상호보완성이 커 경제통합에 따른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고, 3국 간 FTA 체결 시 NAFTA, EU 등 거대 경제권에 비견할 수 있는 상당 규모의 역내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3국 간 산업발전 단계의 차이, 정치경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한·중·일 FTA 추진에 있어 중국과 일본을 중재하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중간자적 지위를 적극 활용하여 국익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5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한·중·일 FTA 연내 협상개시를 위한 준비 작업에 즉시 착수할 것에 합의하였다. 3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향후 협상방식 및 협상목표 등에 대한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하였고 국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중·일 FTA 추진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하였다. 2012년 11월에는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그 외에도 ASEAN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베트남 FTA, 한·인도네시아 CEP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세아니아 지역과의 안정적인 교역 확대를 위하여 한·호주 FTA, 한·뉴질랜드 FTA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 2. 성장 유망 지역으로의 FTA 지속 확대

향후 세계경제는 당분간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세계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왔던 미국, 유럽 등 선진 경제권의 어려움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신흥 경제권은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신흥 경제권 국가들과의 FTA 체결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정부는 신흥 경제권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하여 고위급 경제협력 협의체를 운영하여 신흥 개도국들과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왔다. 중국, 러시아, 인도, UAE, 쿠웨이트, 브라질, 이집트,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등 BRICs, 중동, 아프리카 주요국들과 정기적으로 경제장관회의 등을 개최하여 경제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였으며 우리 기업 및 인력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신흥 경제권과의 파트너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및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들 국가와의 FTA 체결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2012년 러시아의 WTO 가입을 계기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러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등 북방국가들과의 FTA를 추진하여야 한다. 러시아는 2012년 5월 '극동개발부'를 신설하여 극동지역 개발 및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천연자원, 우주과학 등에 강점이 있어 첨단기술, IT 등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와 보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의 잠재력이 큰 협력 파트너이다. 이에 따라 2009년 이후 논의의 진전이 없는 '한·러 경제동반자협정(BEPA)'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여 마무리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및 몽골과도 FTA 체결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하여야 한다.

### 한·러 경제동반자협정(BEPA)

- 2005년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이 채택한 '한·러 경제·통상협력을 위한 액션플랜(Action Plan)'에 포함된 '교역체제의 상호 추가적인 자유화 연구'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2007~2008년 동안 한·러 경제동반자협정(BEPA\*) 공동연구 진행

\* BEPA: 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공동연구를 통하여 상품양허, 원산지, 통관절차, 무역에 관한 기술규정(TBT), 무역구제 등 상품교역 분야 전반에 대한 양국의 제도와 정책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

### 3. 이미 체결한 FTA 내실화

#### (1) FTA 활용지원 강화

향후 FTA 추진뿐만 아니라 기업·소비자 등이 기 체결된 FTA를 활용하여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활용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이미 논의된 사항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맞춤형 컨설팅, 투자유치 활성화, FTA 소비재 가격동향 모니터링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FTA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 조세감면 확대, FTA 성공 사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의 후속조치들을 위한 실무작업도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 FTA 컨설팅 시장 육성, FTA 국내 보완대책을 통한 농어업 성공사례 발굴,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방안 등 기업·소비자의 FTA 활용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가 발굴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 해외 설명회, 업종별·지역별 활용 설명회 등을 통하여 FTA 관련 업무에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기업들의 FTA 수출입 활용률을 제고하고 국내투자 유치를 도모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FTA 체감도를 높여 FTA를 통한 수출 확대, 물가 안정, 일자리창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국내 보완대책의 지속 추진

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다. 한·미 FTA 비준에 따라 정부는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피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2012년 1월 기존 대책

#### FTA 경쟁력으로 농산품 지속적 수출 증가

- 한·ASEAN FTA 발효 이후 ASEAN으로의 농산물 수출은 매년 두 자리 수 증가율의 주목할 만한 성장 보임  
\* 연도별 증가율 (2008년) 14.2% → (2009년) 20.4% → (2010년) 50.7% → (2011년) 22.4%
-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으로의 농산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
- 한·EU FTA 발효 이후 1년간(2011.7~2012.6) EU로의 농산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

을 보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한·EU FTA 비준 시에도 2011년 11월 17일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국내 보완대책 덕분에 FTA 체결 상대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이 증가하는 등 국내 취약산업의 피해를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FTA에 따른 시장개방 효과가 향후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이러한 국내 보완대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취약산업에 대한 피해 보전과 함께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줌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경제체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절 동아시아 경제통합 전략적 대응

### 1.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동향

#### (1) 환태평양파트너십 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파트너십 협정은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4개국 간 체결한 'P4 FTA' 형태로 출범하였으며 상품협정이 2006년 11월 발효되었다. 그 내용은 상품, 서비스, SPS, TBT, 지재권, 정부조달, 경쟁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지역무역협정이며 양자 FTA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 체결을 지향하고 있다.

2010년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5개국이 추가로 참여하여 9개 회원국 간 TPP 협상이 추진 중이며 멕시코, 캐나다, 일본도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향후 TPP를 확대, 발전시켜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를 구축한다는 구상 하에 2009년 TPP에 공식 참여를 선언하고 2010년부터 협상에 참여하였다. 미국은 한·중·일 FTA, ASEAN+3 등 중국의 주도 하에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안보적인 전략 차원에서 TP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2)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관련하여 2000년대 들어 중국, 일본 등이 각각 제안 하여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중국은 ASEAN+3를 참가국으로 하는 EAFTA(East Asia Free Trade Area)를 제안하였으며, 일본은 ASEAN+3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하는

CEPE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가 부진하게 진행되던 중, 한·중·일 FTA 등이 진행되자 ASEAN은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서 주도권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여 2011년 11월 정상회담에서 RCEP 작업계획을 제시하였으며 2012년 8월 ASEAN-FTA 파트너 국가간 통상장관회의에서 RCEP 협상 지침을 확정하였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RCEP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 (3)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2000년대 초부터 APEC 차원의 FTA 체결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 5월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회의에서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창설을 제안하였다. 2006년 하노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장기적 과제인 FTAAP를 포함한 지역경제통합 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7년 시드니 APEC 정상회의에서 FTAAP 실현방안 및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골자로 하는 '지역경제통합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후 2007~2008년 동안 FTAAP 관련 기존 연구분석과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2010년 요코하마 APEC 정상회의에서는 지역경제통합 증진방안으로서의 FTAAP 추진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명시한 FTAAP 추진방안을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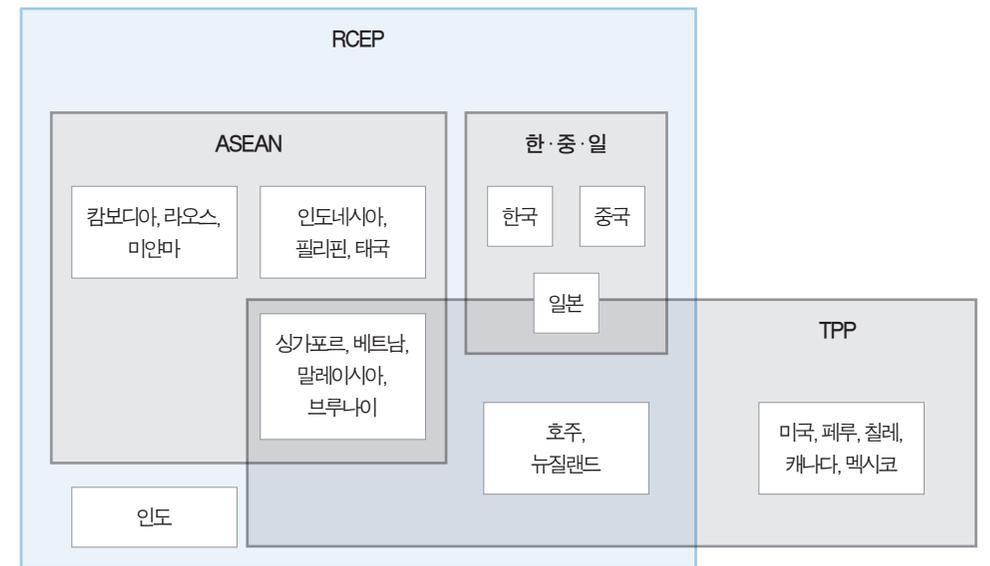
FTAAP 추진 관련, APEC 대다수 회원국들은 장기 목표 측면에서 검토하되 DDA 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적 성격이라는 입장이며, 미국 등 TPP 협상 참가국들은 TPP가 FTAAP로 발전될 수 있는 유력한 모델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 2.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동시다발적 지역통합 논의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TPP, RCEP, FTAAP는 협상 과정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산적하여 있으므로 쉽게 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에 참여하는 당사국이 많은 만큼 서로 다른 제도의 조화가 필요하며 조정하여야 할 이해관계도 더욱 복잡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경제통합 논의가 실현될 경우 그 영향력이 심대하므로 관련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우리의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아·태지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은 상당히 높으며, 그만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크

아·태 지역 경제통합 논의동향



※ 캐나다, 멕시코 TPP 참여 예정, 일본은 TPP 참여 불확실

다. 2011년 기준으로 RCEP 국가들의 명목 GDP는 19조 7,600만 달러에 달하여 전 세계 명목 GDP의 28.4%를 차지하였으며, TPP 국가들의 명목 GDP는 20조 7,300만 달러로 전 세계 GDP의 29.8%였다. 만약 일본이 TPP에 참여한다면 이 수치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ASEAN+6(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국가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47%에 달하여 RCEP 협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 한·중·일 3국 간의 입장 정리가 매우 중요하며, 한·중·일 FTA 등 여타 FTA와 모순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동안 축적된 FTA 협상과 ODA 경험을 통하여 아·태 생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신흥시장 진출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3절 WTO DDA 협상 대응

#### 1. WTO DDA 협상경과

GATT 제8차 라운드(다자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1986~1994) 결과 현 WTO 협정이 발효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농산물, 섬유,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함으로써 기존의 라운드와 차별화되었으나, 농업 분야의 고관세 감축 실패, 서비스 분야의 낮은 시장개방 등 취약점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농업·비농산물·서비스 등의 시장개방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출범하였다. DDA는 다음과 같이 총 9개의 협상의제를 포괄하였다.

합의된 협상 전체 패키지(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규범, 지적재산권,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전체를 모든 회원국이 수용하여야 한다는 일괄타결의 원칙으로 인하여 결국 DDA 협상은 출범 이후 10여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진행과 중단을 반복하였다.

농업·비농산물 자유화 세부원칙에 합의한 이후 각국이 이 원칙에 따라 농업, 비농산물 분야 상품 양허안을 내고, 서비스양허·규범·지재권·무역원활화 등 여타 분야 협상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첫 단계인 농업·비농산물 자유화 모델러티(Modality: 협상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부터 쉽지 않았다.

2007년 1월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농업·비농산물 자유화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집중적인 협상이 전개되었으나 비농산물 분야 별 자유화, 개도국특별세이프가드(SSM) 등 일부 핵심 이슈에 대한 절충점을 도출하지 못하였고 이후 DDA 협상은 장기간의 교착 상태에 빠졌다.

20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합의문에서 DDA 협상의 마무리를 위하여 포괄적인 협상을 시

#### DDA 협상의제

- 시장개방 관련 의제: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 규범 관련 의제
  - 기존 협정 개정: 규범(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
  - 신규 규범 제정: 무역원활화(2004년 7월 시작)
- 기타 의제: 환경, 지적재산권, 개발

작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WTO 사무국 주도로 2011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한 새로운 작업계획이 수립되었다. 1/4분기까지 새로운 의장 텍스트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계휴가 전 모델러티(Modality: 협상세부원칙)를 타결하며 하반기부터 양허표 작성 등 기술적 작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었다. 실제로 1월부터 4월까지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각 분야에서는 활발한 협상이 이루어졌으나 주요국 간 입장차가 지속되어 결국 수정된 의장 텍스트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4월 21일 의장 수정 텍스트 대신 9개 협상그룹 분야별 협상현황 보고서가 회람되었다.

이후 2011년 내 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인식 아래 2011년 12월로 예정된 제8차 WTO 각료회의 때까지 조기 타결이 가능한 '소규모 패키지(small package)'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대두하였다. 그러나 소규모 패키지에 최빈개도국(LDC) 관련 이슈만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도국 진영과 '이익의 균형'이 달성되도록 기타 이슈를 추가하자는 선진국 진영 간의 의견 대립으로 이 역시 결렬되었다.

제8차 WTO 각료회의(2011.12)에서 회원국들은 협상의 교착 상태에도 불구하고 DDA 협상 타결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공감대 하에 협상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안'을 모색하자는 정치적 지침에 합의하였다. 일괄타결에 앞서 잠정적 또는 확정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고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 진전시키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 DDA 협상 쟁점

협상 타결의 관건은 선진국(미, EU)이 농업분야에서 관세감축, 보조금 축소 등을 양보하는 대신, 개도국(중국, 인도, 브라질)이 제조업, 서비스분야에서 추가적인 자유화를 수용할지 여부

- **농업 분야:** 관세감축률은 잠정 합의하였으나, 중국 등 개도국은 SSM(개도국 특별긴급관세)\* 발동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반면, 美, EU 등 농산물 수출국은 요건 강화 주장
  - \* SSM(Special Safeguard Mechanism): 개도국에 한하여 허용되며, 농산물 수입증 또는 수입가격 급락 시 수입국이 추가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보호장치
- **비농산물 분야:** 농업협상과 마찬가지로 관세감축률은 잠정 합의하였으나, 분야별 추가적인 개방\*을 요구하는 선진국과 이를 거부하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이 대립
  - \* 분야별 자유화(Sectoral Liberalization): 잠정 합의한 관세감축률에 추가하여 자발적으로 특정 분야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협상으로, 전기·전자 등 14개 분야
- **서비스 분야:** 선진국은 개도국에 개방수준 확대를 요구하지만, 개도국은 인력이동 외의 서비스 시장개방에는 소극적

## 2. 향후 대응방향

2001년 WTO DDA 협상이 출범한 이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 세계 경제의 지형은 크게 변화하였다.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 개도국의 부상은 기존 선진국·개도국 간 역학 관계를 바꿀 정도로 과급력이 컸으며 이는 다자통상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표출되면서 DDA 협상에서 공동으로 지향하여야 할 방향 및 원칙에 대한 합의가 더욱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DA 협상을 통한 다자통상체제 확립은 범세계적 시장개방 확대, 통일된 무역규범 강화를 통하여 부의 창출에 기여한다. 게다가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다자통상협상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서 DDA 협상 타결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거대 경제권을 중심으로 글로벌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다자무역체제와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DDA 협상이 최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기는 하나, 논의를 진전시키려는 노력들은 계

속되고 있다. 2011년 12월 제8차 WTO 각료회의는 DD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하라는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무역원활화 협상, ITA 확대 협상 등 일부 분야에서 협상 진전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다자무역체제의 주요 수혜국으로서 이러한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역원활화 등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여 다자무역체제 강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DDA 협상 타결의 모멘텀이 찾아올 경우에 대비하여 FoS(Friends of the System), 아시아 개도국 그룹 등 우리나라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WTO 내 공조국가 그룹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다자협상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여 나가야 한다.

### DDA 협상 일지

- 2001.11 도하 각료회의에서 WTO 출범(1995) 이후 최초의 다자무역협상인 DDA(Doha Development Agenda) 개시
- 2003.9 칸쿤 각료회의(5차 각료회의): 농업 및 비농산물 협상 세부원칙에 합의하지 못하고 결렬
- 2005.12 홍콩각료회의(6차 각료회의): 세부원칙 합의에 실패하였으나, 각료선언문\*을 채택하여 그간의 진전 사항을 공식화
  - \* 수출보조금 철폐(2013년) 및 향후 협상 일정 등에 합의
- 2006.6 제네바 소규모 각료회의: 세부원칙 합의를 도모하였으나 성과없이 종료→협상 중단
- 2008.7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 잠정합의안\*이 도출되었으나, 회원국간 이견으로 타결에는 실패
  - \* '세부원칙 잠정합의안' 주요내용:농산물 관세감축(선진국: 50~70%, 개도국: 33.3~46.7%)비농산물 관세상한(선진국: 8%, 개도국: 20~25%의 상한) 등 포함
- 이후 2008.12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이 배포되는 등 일부 진전되었으나, 12월 소규모 각료회의 개최가 결렬
- 2010.11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정상 합의문\*을 채택하여 2011년 내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이 형성
  - \* 2011년이 협상 타결을 위한 좁지만 중요한 기회의 창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막바지 협상(end game)을 마무리할 필요
- 2011 협상타결을 목표로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 간 이견 때문에 타결 실패
- 2011.12 제8차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의 교착 상태를 인정하고, 협상 진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침 제시

## 제3편

# 무역 1조 달러의 선진 무역강국 도약

- 제1장 무역 1조 달러의 의미
- 제2장 무역 1조 달러 달성의 원동력
- 제3장 선진 무역강국을 향한 새로운 비전

## 제1장

# 무역 1조 달러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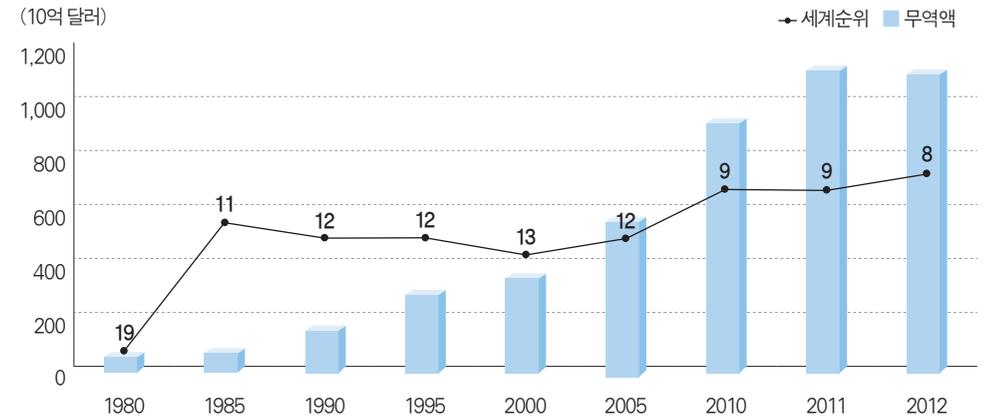
### 제1절 세계 9번째 무역대국 실현

2011년 12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번째 무역 1조 달러 달성의 신화를 썼다. 아울러 2012년에도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건국 60년 만에 그리고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 이후 50년 만에 수출은 1만 배, 무역은 2,000배가 증가하여 수출 5,000억 달러와 무역규모 1조 달러를 이루어 낸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이 줄어드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역 1조 달러 클럽 진입에 성공한 최초의 나라가 되었으며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이 주로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들이 달성한 위업을 세계 9번째로 달성하였다. 특히 수출과 수입이 비슷한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열린 무역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1970년 세계 33위, 1980년 세계 19위 수준에서 1990년대 들어와 12~13위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명박정부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꾸준히 도약하여 2010년 이후 세계 9위를 유지하였고 2012년에는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무역 8강에 최초로 진입하였으며, 수출 규모로만 보면 G-7의 일원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였다.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박정희정부에서 시작한 수출입국 전략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그 당시 대다수 개발도상국이 채택한 수입대체형 발전전략을 선택하지 않고 무역확대를 통한 대외

우리나라의 무역규모와 세계 순위



※자료: IMF(2012년은 잠정치)

지향형 발전전략을 선택하여 무역의 성장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며, 약소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지구촌 경제와 무역의 중심국가로 어엿하게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무역이 꾸준히 확대된 것은 순조로운 과정만을 거친 것은 아니다. 1조 달러에 이르기까지 두 차례의 오일쇼크와 IMF 외환위기, IT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등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러한 외부 충격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불안감을 가져다주기도 하였으나, 결국은 무역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내수 규모가 작고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무역이 갖는 특별한 의미라 하겠다.

1970년대에 겪은 두 차례의 오일쇼크는 대외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추구하여 온 이래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한 최초의 대외충격이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이를 해외건설 수주와 수출 확대의 기회로 삼아 슬기롭게 극복하여내었다. 특히 중동국가를 상대로 한 수출규모가 1973년에 5,00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81년에는 32억 달러로 8년 만에 무려 64배나 증가하면서 위기를 결국 기회로 바꾸어 나갔다. 1980년대에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이른바 3저 호황기에 힘입어 우리 무역도 순조로운 향해를 하였으나, 1998년 국가부도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다시 팽배하였다. 외환위기는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술개발과 경쟁력 있는 부문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 초의 IT버블 붕괴와 이에 수반된 세계경제 침체 시에도 우리나라의 IT기업은 오히려 이를 세계무대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았다. 과거와 같은 무분별한 사업영역의 확장보다는 안정된 재무구조를 유지하면서 기술혁신에 주력하고,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등 미래에 대비하였던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였다. 2009년 세계 교역은 2008년 대비 22.7% 급감하였고, 우리나라도 무역규모가 19.9% 감소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강화, 수출보조금 지급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어 WTO는 2008년 9월~2009년 2월까지 23개국에서 85건의 보호무역 조치가 취하여진 것으로 집계하였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계수요 감소와 보호무역주의로 인하여 신수출시장 개척은 물론 기존시장 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외화 차입여건 악화, 은행 여신관리 강화 등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심하여지고 있었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우리의 저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되었다. 수출기업들은 외국의 경쟁업체에 비하여 투자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였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역투자진흥회의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잇따라 주재하면

**무역관련 주요 대통령주재 회의**

회의	일시	주요 내용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2008.5.16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 등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2008.11.4	수출보험 확대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2009.4.16	수출금융 애로 해소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2009.11.30	선진 무역인프라 확충 전략
제7차 비상경제대책회의	2009.2.12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방안
제18차 비상경제대책회의	2009.5.21	대 중 교역확대방안
제5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2010.4.15	대 중 수출입동향 및 시사점
제6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2010.6.3	수출시장 다변화
제80차 비상경제대책회의	2011.2.10	2011년 수출입여건 및 대응과제
제97차 비상경제대책회의	2011.8.18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여건 점검
제108차 비상경제대책회의	2011.12.22	FTA 활용 방안
제11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2012.1.19	수출기업인 애로해결
제1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2012.2.3	무역 2조 달러 도약 전략
제124차 비상경제대책회의	2012.6.14	2012년 하반기 수출여건 및 대응과제
제129차 비상경제대책회의	2012.7.26	수출·제작금융 동향 및 대응방안
제134차 비상경제대책회의	2012.9.6	최근 대외경제 및 수출여건 점검
제136차 비상경제대책회의	2012.10.5	수출입동향 및 4분기 수출확대 지원과제

서 수출위기 타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첫째, 수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수출금융에 대하여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수출보험과 수출보조의 지원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무역보험의 경우 2008년 130조 원, 2009년 165조 원, 2010년 187조 원, 2011년 192조 원, 2012년 200조 원 등 사상 최대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다.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보증을 받을 수 있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수출보험·신용보증 취급 임직원에게는 한시적으로 면책하도록 하는 등 중소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글로벌 금융 및 재정위기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선진국 시장 위주에서 벗어나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 및 아세안,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였다. 특히 내수 중심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내수시장 진출을 겨냥한 유통·물류 네트워크 확충을 지원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였다.

셋째,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에서 다자·양자 간 공조를 강화하고 FTA를 확대하여 나갔다. 특히 G20 회의를 통하여 스탠드스틸(새로운 무역장벽 설치 자제) 원칙을 확립시키고 이를 2014년까지 연장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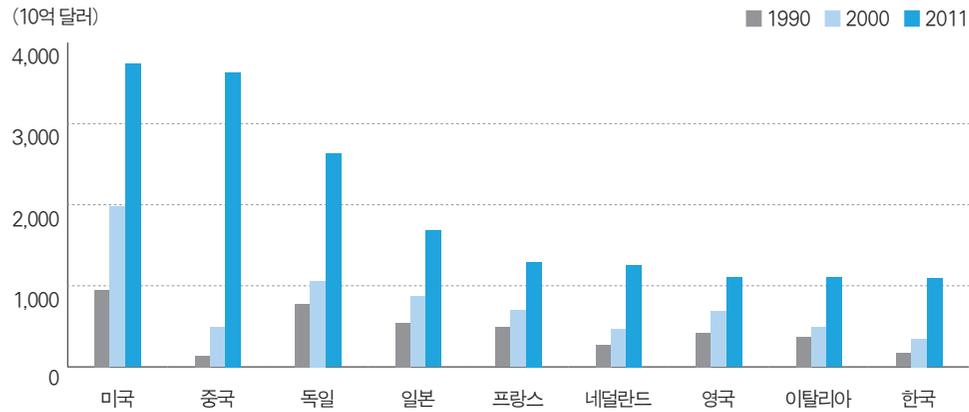
넷째, 중소·중견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수출 역량별·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나아가 산업 내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정보통신 등 현재 주력 제조업을 세계 제일의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여 왔다.

이는 우리나라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에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급감한 세계 무역이 2010년 들어와 회복기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무역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기업,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하는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기업가정신이 바로 1조 달러 달성의 주역이자 초석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내수시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일찍이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진출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은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무역 네트워크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하였음을 의미한다. IMF가 산출한 세계무역 네트워크 지수를 보면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11위에서 7위로 순위가 올라갔다.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에 치우친 국가, 일본을 모방한 국가라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무역규모 1조 달러 달성 과정에서 세계 속의 보편적 국가로 부상하였으며, 이제 세계무역의 선도적 위치로 올라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

1990~2011년의 세계 주요국의 무역규모 변화



※자료: IMF, W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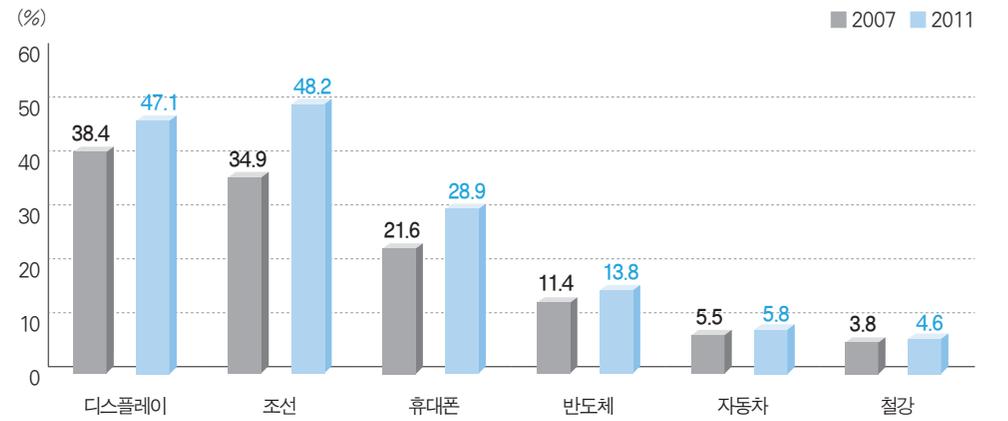
나라 무역의 비약적인 성장은 지난 20년간 세계의 무역 강국들과 비교하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1990년대 들어와 세계 무역체제에 편입된 중국을 예외로 하면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1990년 1,420억 달러에서 2011년에는 1조 796억 달러로 무려 7.6배 성장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중 일본과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2~3배 수준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세라 하겠다. 또한 1조 달러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단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규모 1,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성장하는 데 독일이 25년, 일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이 30년 정도 소요된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1988년에 무역규모 1,0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23년 만에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우리나라가 2011년에 실현한 무역 1조 달러는 그 규모 면에서 2010년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무역액 8,000억 달러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아시아 전체로도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이 2000년, 중남미 대륙은 2005년, 중동은 2007년에서야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무역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이룩한 성취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1980년 중동과 중남미 전체 무역규모의 15%, 19%에 불과하였던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2011년에는 중동과 중남미의 약 60%, 50%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무역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비중도 꾸준히 상승하였다. 1980년 세계 무역규모의 1.1%에 불과하던 우리나라의 비중은 1990년 2.0%로 증가하였고, 2000년 2.6%, 2010년 2.9%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주력 수출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도 2000년대 들어와 꾸준히 상승하였다. 조선의 경우 LNG선, 대형 컨테이너선, 해양플

랜트 등 고부가가치 선박이 세계시장을 석권하면서 세계 제1위 수출대국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으며, 반도체의 세계시장점유율도 10%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또 철강, 화학 등 소재산업과 기계의 꽃이라 불리는 자동차의 시장점유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품목별로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높은 수익성과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 기술개발 확대에 힘입은 결과로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디지털TV 등이 글로벌 톱 수준을 달성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 선진국 시장에서 일본제품에 밀려 매장의 뒷부분에 밀쳐있었던 전자제품이 이제는 매장의 중심에 배치된 것을 목격하는 것도 흔한 일이 되었다.

주력 수출산업의 세계시장점유율



※자료: 지식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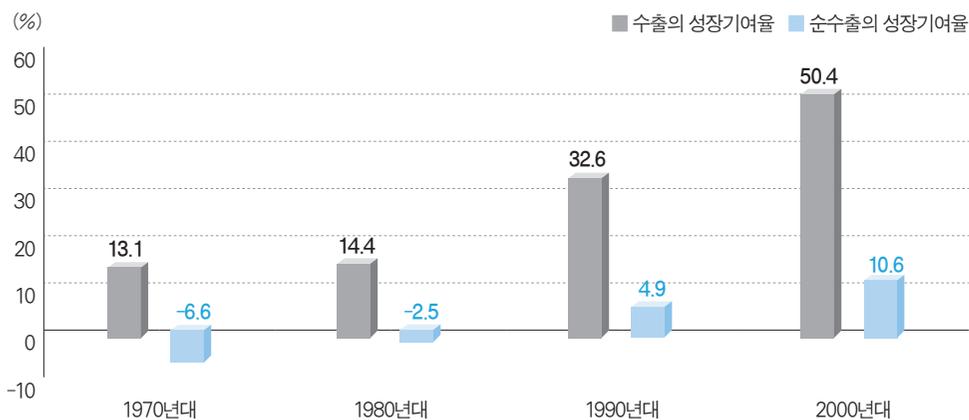
이와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수세적 방어나 소극적 개방에 그치지 않고 진취적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진출한 역사적인 발전과정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산업은 시장개방을 기술혁신,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등으로 재무장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였다.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의 피할 수 없는 경쟁에 직면하면서 기술혁신 등 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배가하는 데 더욱 주력하였던 덕분이다. 스크린 쿼터 조정 이후 우리나라 영화의 질적 수준은 더욱 높아졌으며 국내 유통업체들은 월마트, 까르푸 등 외국 유통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았다. 또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선 다변화 철폐 이후 국내 가전업체 및 자동차업체는 오히려 세계적인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 세계화의 추세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결국 세계화의 성과를 그 어떤 나라 못지않게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제2절 경제발전을 위한 디딤돌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 있어서 무역의 위상 및 역할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눈부시다. 수출주도 성장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제는 1980년 이후 30년간 연평균 6.8%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이는 중국을 제외하면 같은 기간 중 고도성장을 이룩한 개도국 중에서도 가장 나은 실적이다. 이 기간 중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2% 내외에 불과하였음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높은 성장률은 괄목할 만하다. 그 과정에서 GDP 대비 수출비중은 1980년 10% 수준에서 2010년에는 40%를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수출구조 면에서도 1970년 총수출의 12.8%에 불과하였던 중화학제품의 수출비중이 1980년 40%를 넘어선 후 2010년에는 90%를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수출구조의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 산업구조도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변화하였다.

최근 10년간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총성장분 가운데 50.4%에 이르러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우리 경제에서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10%대에 머물러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 오히려 수출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대외부문이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0년대 들어와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32.6%로 상승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50%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순수출의 성장기여율도 1990년대 이후부터 양(+)으로 돌아서, 2000년대에는 수출확대에 따라 수입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부문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 부문의 성장기여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수출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기도 하였다. 수출은 IMF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만들어 외환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수출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면서 해외에서 높게 평가한 교과서적인 위기 극복을 견인하였다.

수출의 증가는 관련 수출상품의 생산증가 뿐만 아니라 수출품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생산증가를 가져오는 등 이른바 관련 산업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를 발생시킨다. 수출증가가 국내 관련 산업 전체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의 생산유발효과라 한다. 대체로 수출 1단위의 증가는 국민경제 전체로 1.9~2.0배의 생산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1990년 이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민간소비 증가에 비하여 수출의 증가가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주로 제조업 제품이어서 전반적인 생산과급효과가 민간소비 부문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수출의 생산유발효과

구분	민간소비지출	민간투자	정부투자	수출	평균
1990	1.790	1.968	1.969	1.983	1.872
1995	1.687	1.933	1.979	1.836	1.781
2000	1.685	1.899	1.944	1.871	1.771
2003	1.576	1.684	1.959	1.890	1.682
2005	1.753	1.992	2.015	1.980	1.852
2009	1.773	2.058	2.113	1.996	1.881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호.

※주: 최종수요 1단위 증가가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임.

수출의 증가는 또한 관련 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고 생산을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수출증가가 국내 관련 산업 전체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의 취업유발효과라 한다. 수출이 10억 원 증가할 경우 국민경제 전체로는 1990년 65.4명의 취업이 이루어졌으나, 2000년 이후 취업유발효과가 급격히 감소하여 2009년에는 8.7명 증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출뿐만 아니라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도 마찬가지로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고용효과의 감소 외에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의 도입, 그리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고용이 둔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의 취업유발효과

(단위: 명/10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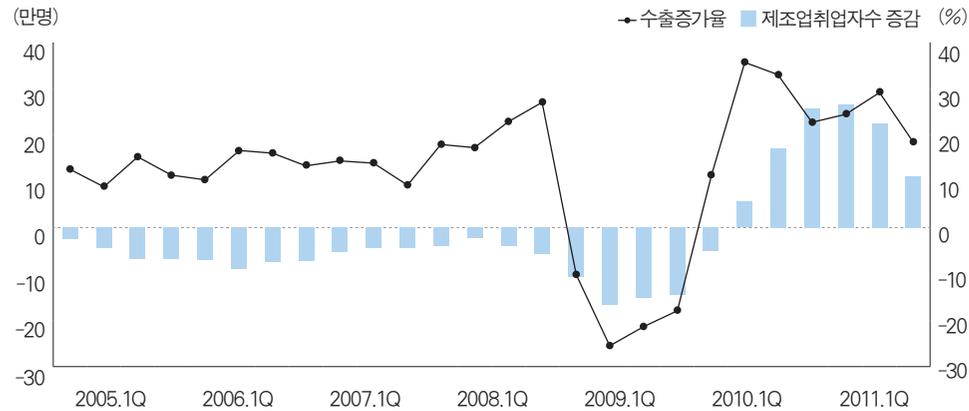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07	2008	2009
민간소비	85.0	43.6	26.0	19.6	18.5	17.3	15.6
민간투자	53.8	30.8	19.2	14.9	14.3	13.2	10.9
수출	65.4	31.0	15.7	10.8	9.6	8.3	8.7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각호.

※주: 최종수요 1단위 증가가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에 미치는 효과임.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본격적으로 회복된 2010년부터는 수출확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05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였던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는 2010년에 전년 동기에 비하여 76만 명 증가한 데 이어, 2011년 상반기에도 34만 명이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수출호조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은 세계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증가와 글로벌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리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고용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전통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확대가 이루어진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0년대 중반에 비하여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임금상승 등으로 중국의 투자여건이 다소 악화됨으로써 수출기업들이 국내 투자에 눈을 돌린 것도 고용 확대에 부분적으로는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단말 업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 추이(스마트폰)



※자료: 한국은행 및 한국무역협회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만 명) 및 증가율(%).

수출은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하여 생산성이 있는 부문으로 자원을 이동시키는 한편 선진기술의 습득이나 수출과정에서의 모방과 학습기회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즉, 지속적인 수출확대는 기존 수출품목의 생산성이 향상되거나 생산성이 높은 품목으로 수출구조가 전환하여야 가능하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수출확대는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산업별 구조를 살펴보면 1970년에는 주로 경공업제품의 수출이 70% 정도를 차지하였다. 1차산품의 비중도 17.5%나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와서는 중화학제품 위주로 구조가 바뀌었다. 경공업이 주로 노동집약적인 반면, 중화학공업은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함께 수출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기별 정부의 중점 육성 산업과 실제 발전한 산업

시기	정책기조	정부 중점육성산업	실제 발전한 산업
1960 이전	수입대체산업 육성	수입대체산업	3백산업(제분, 제당, 면방직)
1960	수출산업 육성	수출산업	의류, 가발, 합판, 신발
1970	중화학산업 육성	중화학공업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등
1980 후반	첨단기술산업 육성	첨단기술산업	IT산업, 주력산업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
2000 이후	미래성장동력, 녹색성장	미래 성장동력 산업	신산업 등장 (LCD, 무선통신기기, 전자부품 등)

※자료: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Ⅱ 편)', 2010

우리나라 경제발전단계별 기술의 역할

구분	1960	1970	1980 전반	1980 후반~2000
주요 산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중화학공업 및 일부 첨단산업	기존 중화학공업, 첨단기술
주요 인재	기능 및 숙련공	기술자	기술자	기술자, 과학자
외국 기술 이전	대상기술	기능	사양기술	성숙기술
	이전형태	기술원조, 기술도입	기술도입, 차관	기술도입, 외국인투자, 해외직접진출
	이전구조	일방적제공	수직적 분업	수직, 수평적 분업
연구개발특성	단순의존형	모방적 의존형	창조적 모방형	창조형

※자료: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Ⅱ 편)', 2010

각 시기별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과정과 기술의 역할을 살펴보면 1960년대에는 풍부한 기능 및 숙련공과 기술도입을 바탕으로 의류 등 경공업이 발전하고 주요 수출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시기별 5대 주력 수출산업의 변화를 보면 1960년대는 물론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까지도 의류, 신발 등 경공업 분야가 상위 수출산업에 포함되었다. 1970년대에는 기술자의 배양과 선진기술의 모방을 토대로 하여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이 본격적으로 발전되었다. 1980년대에는 선진기술의 모방에다 창조성이 가미되고 인적자본의 본격 배양을 토대로 하여 IT 등 첨단 기술산업이 본격 발전되는 한편 중화학공업이 더욱 발전되었다. 이를 토대로 하여 1990년대 이후에는 반도체 등 IT산업의 수출이 최상위에 위치하게 되었고, 중화학공업 분야도 대규모의 투자가 지속되면서 주력 수출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시대별로 요소부존도와 기술역량이 변화하고 그에 걸맞은 정부의 적절한 산업육성 노력과 민간의 기업가정신이 발휘되면서 산업구조와 함께 주력 수출산업도 크게 변화하였다.

### 제3절 새로운 시대를 향한 출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기까지 우리나라는 국내 시장규모의 한계를 절감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과 산업 육성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확대재교역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소규모 개방경제가 아니라 세계무역을 선도하는 위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960년대 수출입국을 주창할 당시와 달리 무역확대는 이제 절박한 선택도, 불가피한 선택도 아니라는 인식이 있다. 심지어 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로 무관심이나 저항의 대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개방화와 세계화의 진행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무역의 중요성을 도외시할 경우 자칫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그간 수출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여 왔으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내외 요인에 의하여 야기되는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이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는 점도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된 바가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한 현 시점에서도 우리 경제가 무역발전의 고삐를 늦출 수 없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의 확보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역입국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무역발전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역 1조 달러 달성까지 우리의 강점으로 여겨졌던 주력제조업 중

심의 소수품목, 가격경쟁력 위주, 대기업 위주 등과 같은 현재의 무역 패러다임이 앞으로 무역 2조 달러를 만들어 가는 데 계속 강점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는 지적이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단순한 무역확대 그 자체보다 의미 있는 성과가 수반된 무역, 특히 고용과 소득창출, 불균형의 해소, 내수와의 선순환 등 국민후생의 증진을 수반하는 무역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나아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의 구조조정과 세계 산업구조의 재편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종래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도 있다.

2011년 12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무역업계 종사자,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 1조 달러를 기념하는 제48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무역 2조 달러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 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우선 우리나라 초창기 산업 발전에 결정적 공로가 인정된 외국인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816명의 무

#### 한국무역이 기억한 과거의 숨은 주역들

이명박 대통령은 자원과 기술이 없는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기까지에는 많은 숨은 공로자가 있었으며 이들을 발굴하여 제48회 무역의 날에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시 최종경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지시하였다.

특히 기업인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은 조선, 철강 등 지금의 주력 수출산업이 무(無)에서 출발하여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는데 초창기 외국인 기술자의 도움이 매우 컸음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윌리엄 존 덩컨 등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면서 무역 1조 달러 위업을 달성하는데 크게 공헌한 외국인도 적극 찾아보자고 아이디어를 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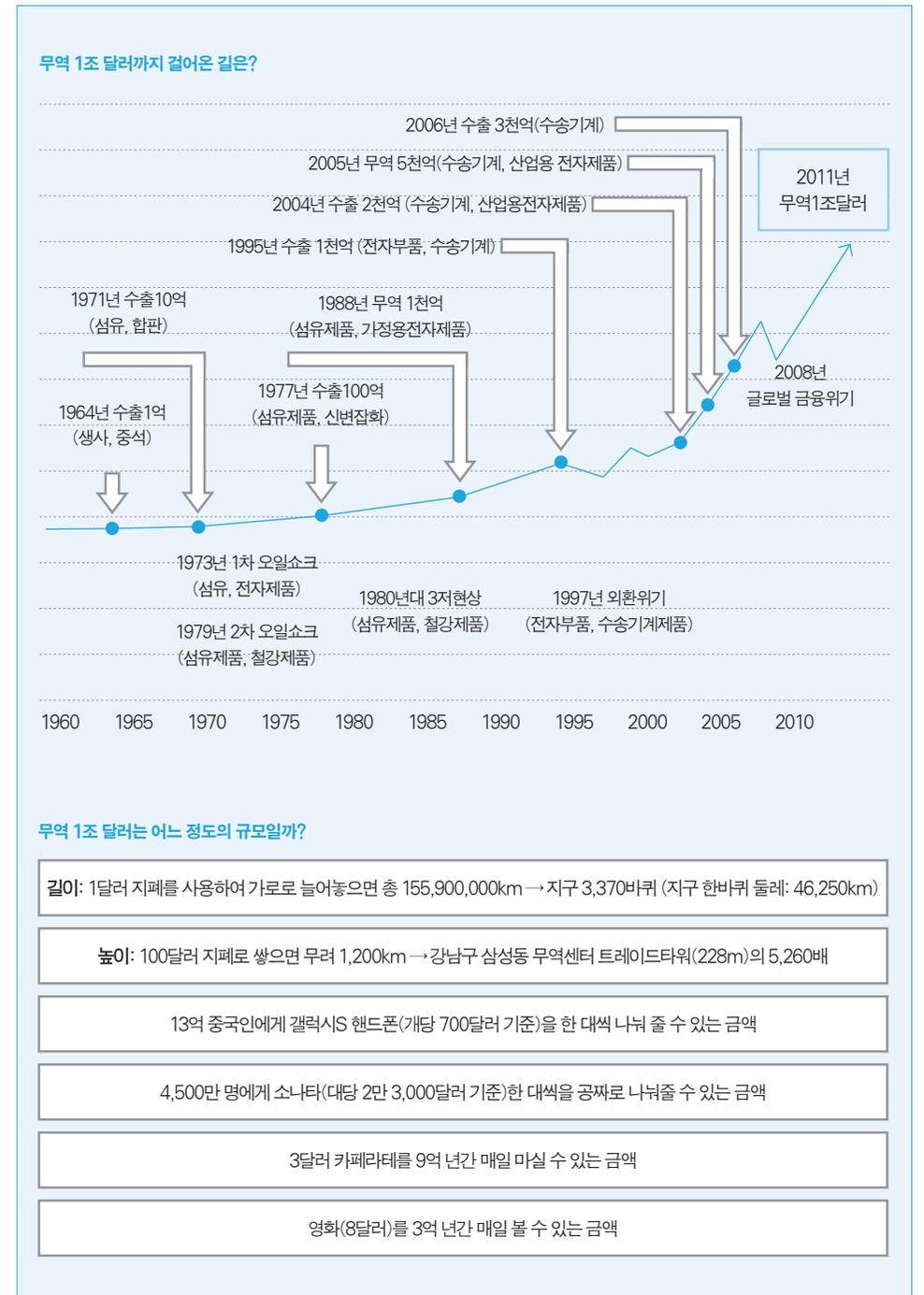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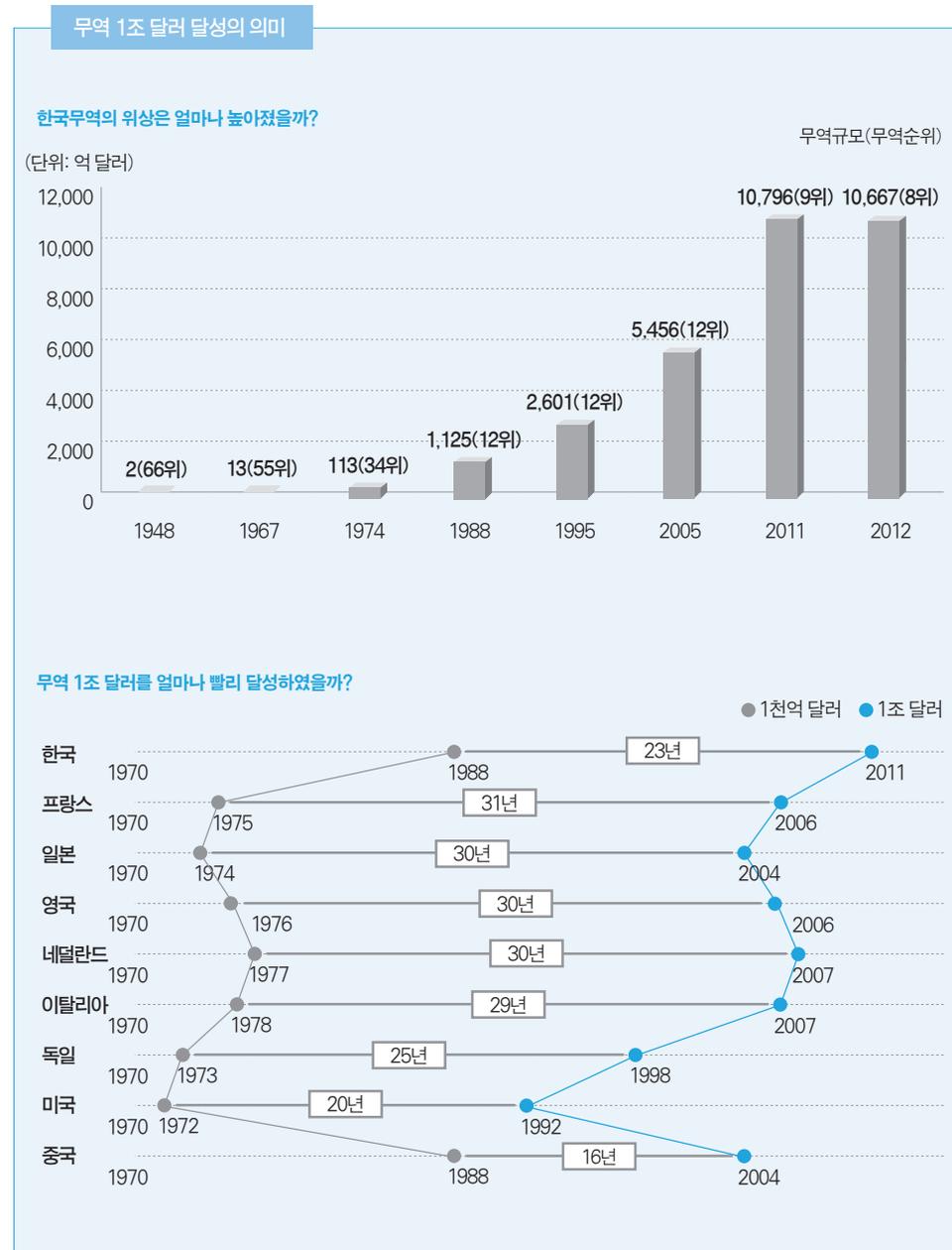
그러나 초창기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윌리엄 존 덩컨 등은 이미 작고하였고 그 후손도 찾을 길이 없어 현지 대사관을 통하여 수소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지 신문에 유족을 찾는다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 국내외 인사 31명에게 '무역 1조 달러를 일군 영웅'으로 특별공로상을 수여하게 되었다. 과거의 숨은 외국인 주역들에는 현대중공업에서 5년여간 기술지도를 총괄하며 초기 30여척의 배를 완성하는데 도움을 준 고 윌리엄 존 덩컨, 포스코 창업시절 제철소 건설기술을 전수한 고 아리가 도시히코, 현대자동차의 첫 독자모델인 포니의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 등이 포함되었다.

고 윌리엄 존 덩컨을 대신하여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아들 앤드루 던컨은 1970년대 아버지가 입었던 코트를 입고 행사장에 왔다. 앤드루 던컨은 "옛날 옷이라 무겁지만 한국에서 아버지가 일하실 때 입었던 옷"이라고 하였다. 이는 당시 현대에서 선물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는 "스코틀랜드는 당시 조선업이 사양산업이었다."면서 "한국은 아버지의 지식·경험을 높게 사 열심히 배우려 하겠다고 들었다"고 회고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였다. 지금도 스코틀랜드에서 페리를 운영하는 선박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집에 있던 시간보다 배를 위하여 해외로 떠나 있던 시간이 더 많았을 만큼 아버지 인생에서 선박은 전부였다"고 회상하였다. 아버지를 잊지 않은 한국에도 감사를 표시하였다. 그는 "아버지를 존경하여줘서 고맙다. 아버지가 직접 받으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여 아쉽다"고 말하였다.

역 유공자를 포상한 이후 축사를 통하여 '2020년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열자'고 비전을 선포하면서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하여는 강한 수출중소기업 육성, 문화·서비스 등 새로운 수출동력원 창출, 동남아 등 신흥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하여 '다함께 잘사는 열린 무역대국'을 만들어 가자고 말하였다.



## 남용 LG전자 부회장의 감사편지

2009년이 저물어가는 12월의 어느 겨울, 청와대에 LG 전자 남용 부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자필 편지가 도착하였다.

A4용지 두 장 분량에 해당하는 감사편지의 사연은 이랬다. 남 부회장은 2008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의 브라질 순방 때 동행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 주재의 기업 간담회에서 수출과 관련하여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된다.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의 여파로 미국, 유럽 등 해외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자국 바이어들에 대한 신용한도를 대폭 축소하거나 전액 회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LG전자를 비롯한 대다수 수출기업들이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존 바이어뿐만 아니라 신규 바이어 발굴 등 시장 확대를 통한 공격적인 매출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리스크 해소를 위하여 우리 기업들에 대한 수출보험 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수행한 참모들에게 수출보험의 현황 파악 및 지원확대를 지시하였다. 발 빠른 후속조

치로 LG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수출보험을 통하여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해소하고 수출확대 및 신규바이어 발굴에 더욱 더 전력을 다 할 수 있게 되었다.

남용 부회장은 이런 사연을 편지에 담으며 “기업활동을 위한 여건 개선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다.”고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부처에 감사를 표시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이 매우 전략적이고 신속히 이뤄졌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같은 정부의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신속한 대처와 무역보험을 통한 적시적소의 수출지원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빨리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2011년에는 무역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도 고객지향적인 무역보험 정책을 통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무역 1조 달러 기조유지 및 무역 2조 달러 달성이라는 역사를 이루어 내리라 다짐하여 본다.

- 최종경(전 지식경제부 장관)

## 제2장

# 무역 1조 달러 달성의 원동력

## 제1절 든든한 수출 버팀목, 핵심산업 고도화

### 1. 선박

우리 조선산업은 2009년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종사자의 5.4%인 13만 1,367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체제조업의 6.6%를 차지하고 있고, 부가가치 기준으로도 제조업에서 6.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출액은 2008년 431억 5,700만 달러에서 2011년 565억 8,800만 달러로 10.5%의 성장을 보이며 무역 1조 달러 달성의 선봉장 역할을 하였다. 사실 이명박정부 초기 세계 조선시장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해상물동량 감소와 해운운임 하락으로 세계 조선시장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전 세계 조선사의 2008년 선박 수주량은 전년에 비하여 40%이상 급감하였고 선박금융도 크게 감소하였다. 국제 조선해운시장 조사업체인 클락슨이 2008~2013년까지 6년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조선소의 건조능력을 밑돌 것으로 예상하는 등 국제시장에서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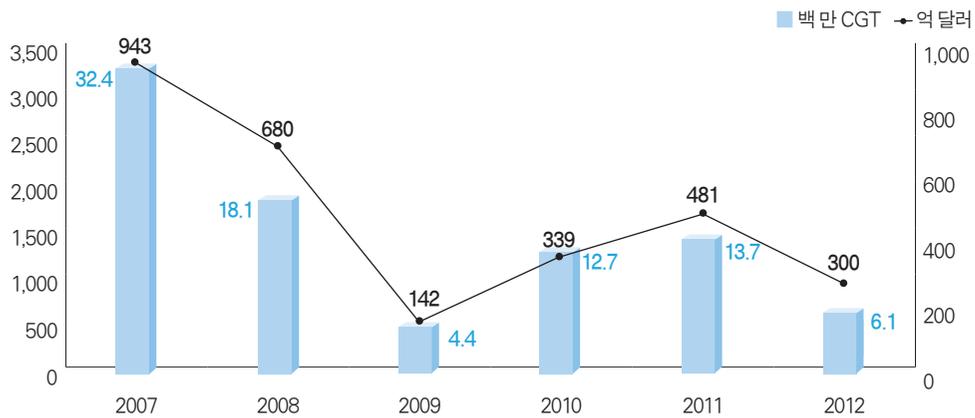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하여 총체적 대응태세에 들어갔다. 2008년 9월 금융감독원은 신설 중소 조선사를 중심으로 경영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 하여금 유

선가지수 추이



※자료: 영국 클락슨

국내 선박수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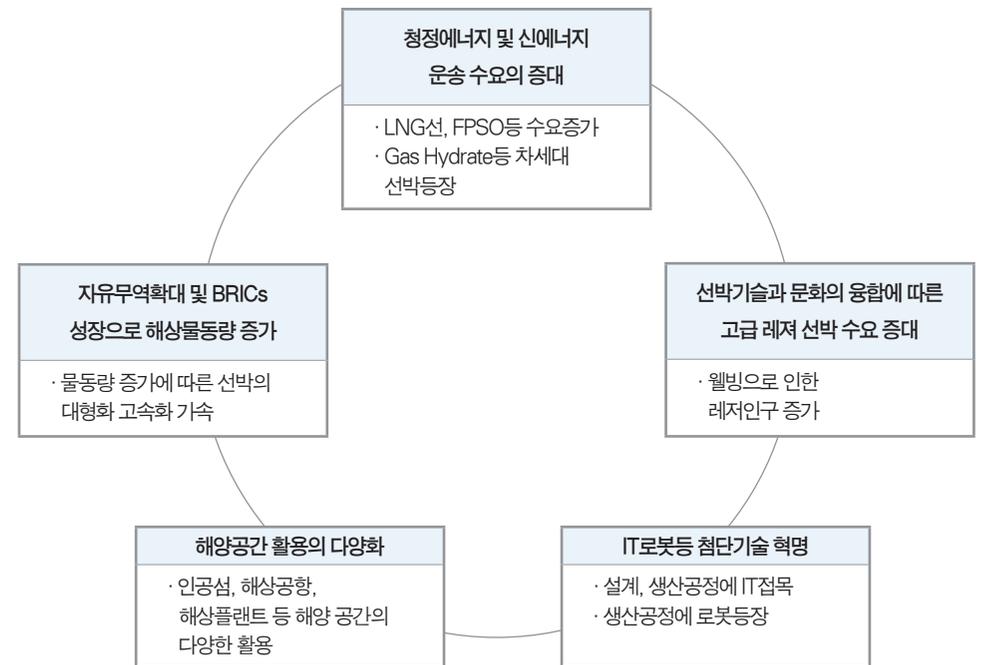
※자료: 영국 클락슨

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2009년 4월 30일 제1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는 위기 대응과 더불어 위기 이후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조선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미래 신에너지 수송수요 증가, IT, 로봇 등 첨단 기술 접목 강화 등 향후 조선해양산업의 메가트렌드를 반영한 2008년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조선산업의 시장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규제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민간자율

경영을 존중하고 신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보 및 숙련 고급인력의 확보 그리고 국제협력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여 나가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업들은 차세대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선박의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하였으며, 신기술 개발과 신제품 개발에 있어 기업의 자주적인 노력만으로 기술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하여는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산·학·연 공동개발을 통하여 미래 기술 제품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나가도록 정부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조선해양산업의 향후 메가트렌드



특히 덴마크 AP-몰러(moller)사가 발주한 1만 8,000TEU 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선주에게 선박금융을 지원하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2011년 수주에서 중국을 제치고 다시 세계 1위를 탈환하였으며, 수주선박의 내용 면에서도 고부가가치 선의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등 산업의 구조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하여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첫째, 향후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하여 온 연비규제가 2013년부터 시행될

에 따라 이에 대비하였다. 선박연비 향상이 해운업계의 주요한 관심사라는 점에서 연비 높은 그린십 제조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정부는 그린십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예산을 2007년 108억 원에서 2012년 276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였다. 또한 그린십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대응력을 키우기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5월 덴마크에 이어 9월 해운강국인 노르웨이와 그린십 개발관련 MOU를 체결하였다.

둘째, 미래 유망한 해양플랜트 시장 진출을 준비하기 위하여 세계 최고의 조선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조선산업에 이어 해양플랜트산업 강국에 도전하기로 하였다. 2012년 5월 9일 부산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2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를 통하여 해양플랜트 수주액을 2011년 257억 달러에서 2020년까지 800억 달러로 3배 이상 늘리고 엔지니어링, 기자재 등의 국내 수행비율도 2020년까지 60%(2011년 40%→2020년 60%)로 높이기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엔지니어링, 기자재에 이은 전주기 수주 실현으로 국내 수행비율을 2020년까지 현재 40%에서 60%로 높이고 심해저 시장으로까지 진출을 확대하면 수주금액도 800억 달러에 다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해양플랜트 산업규모의 성장으로 약 10만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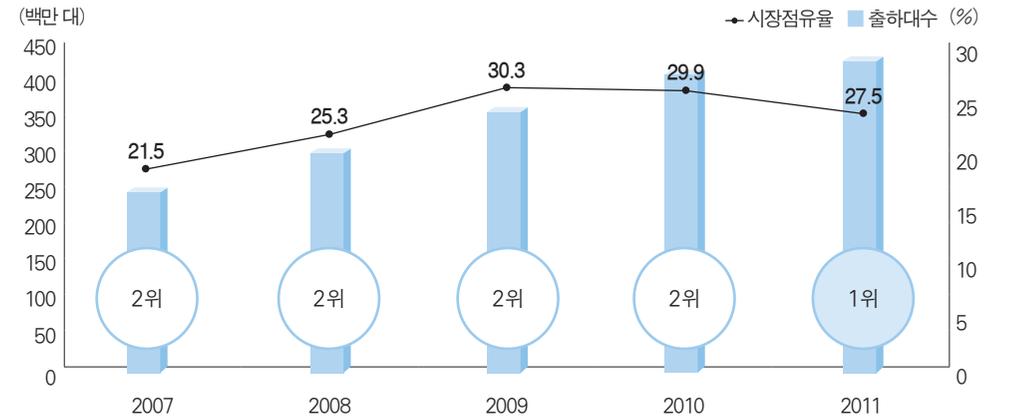
## 2. 무선통신 기기

무선통신산업은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태블릿PC, 전자책 단말기(e-book reader)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이동통신, 무선랜 포함), 단말·부품, 관련 서비스 산업을 총칭한다. 모바일 기술이 융복합의 핵심기술로 부상함에 따라 무선통신산업은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응용 서비스 및 융복합 서비스 산업을 포함하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무선통신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첨단산업으로서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CDMA, 와이브로(WiBro) 등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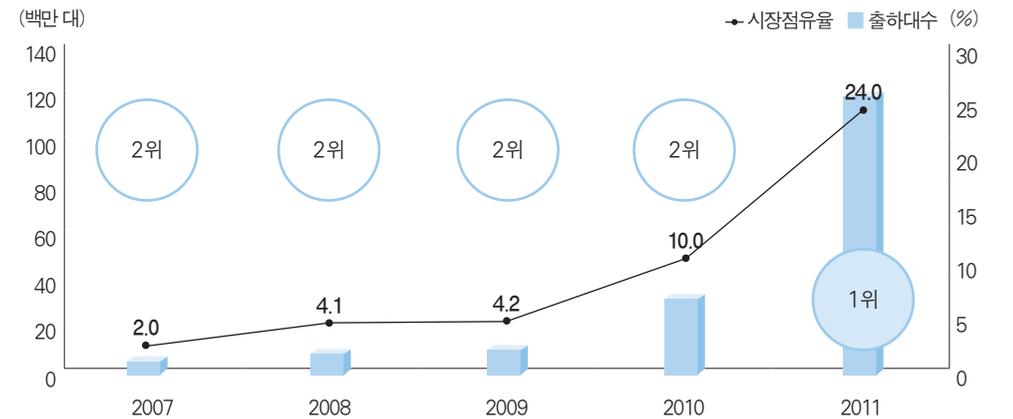
이중 휴대폰 산업(스마트폰 포함)은 하드웨어 경쟁력을 활용한 신속한 시장 대응으로 2011년 노키아와 애플을 제치고 세계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섰다. 또한 국내 업체들은 애플·구글이 선도하고 있는 SW 중심의 모바일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2011년 휴대폰(스마트폰 및 부품포함) 수출규모가 251억 달러에 달하는 등 무선통신 산업은 전체 IT수출의 16%를 차지하는 국가 중추산업으로 도약하였다.

국내 단말 업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 추이(휴대폰 전체)



※자료: SA, 2012.02

국내 단말 업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 추이(스마트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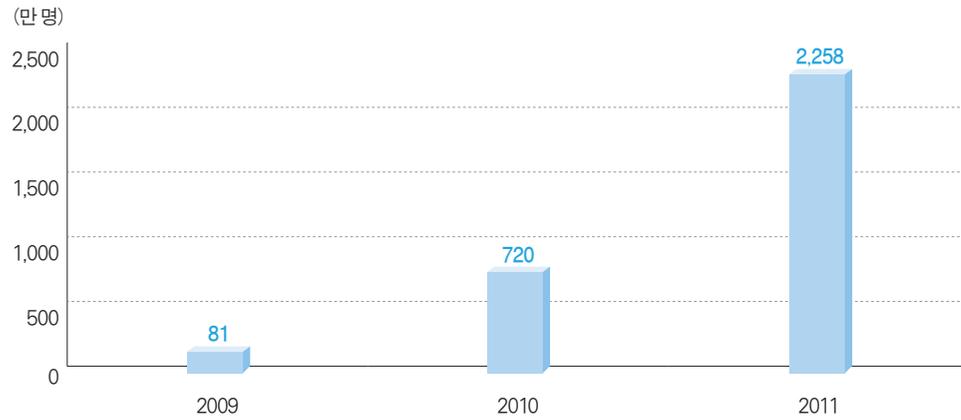


※자료: SA, 201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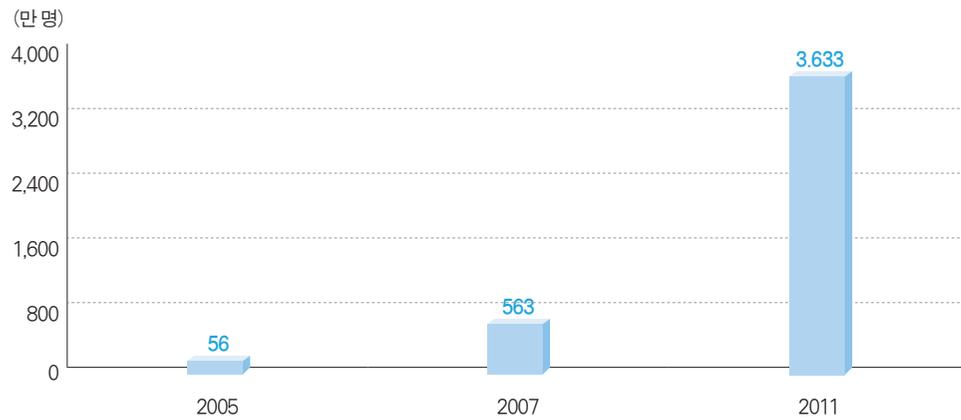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임베디드 SW 등 다양한 후방산업과 방송·통신 서비스, 콘텐츠 등의 전방산업에 연계되는 핵심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LTE, 와이브로(WiBro) 등 초고속 무선망이 확산됨에 따라 무선통신 산업의 핵심인 이동통신 서비스의 가입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역시 LTE/와이브로(WiBro) 서비스가 전국 82개 시 지역(인구 커버리지 기준으로 세계최고 수준)에 모두 구축되었다. 또한 2011년 말까지 19만 1,000개의 와이파이(WiFi) 핫스팟 지역이 설치되었고, 지속적인 와이파이 지역 확대를 통하여 스마트폰 가입자 및 무선 인터넷 가입자의 규모가 급속히 확

### 스마트폰 가입자



### 무선인터넷 가입자



대되는 추세이다.

그간 정부는 무선통신산업 육성 및 수출확대를 위하여 ‘차세대 모바일 주도권 확보 전략’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왔으며,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등 각종 R&D 사업으로 국제표준을 주도하는 선제적인 R&D를 추진하여 무선통신산업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여 왔다. 특히 2010년에는 글로벌 모바일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모바일 필드 테스트 베드의 구축 및 운영, 이동통신 시험 인증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하여 무선장비 및 무선기기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왔다.

이명박정부 산업융합원천사업의 주요 실적으로는 LTE-Advanced 4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핵심 원천기술 개발과 이를 구현한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의 세계 최초 옥외 시연(2011.1),

국내 중소기업의 소형기지국 개발에 밑거름이 될 LTE-Advanced 기반 펌토셀 시험시제품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차세대 무선랜 무선전송 원천기술 개발을 통하여 IEEE802.11ac 국제표준(Draft Version)에 우리나라가 확보한 기술을 다수 반영함으로써 차세대 무선랜 표준 IPR 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단말 및 부품 분야에서는 3GPP LTE 표준규격(2009.12)을 만족하는 단말 기저대역 모뎀 기술과 칩셋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업체에 이전함으로써 국내 단말 및 응용 시스템 개발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무선이동통신 분야의 후발 주자였으나 이제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1.1년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관점의 기술 경쟁력에서도 세계 4위 수준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애플·에릭슨 등 선진 기업과의 무한 경쟁과 화웨이·ZTE 등 후발 기업의 추격을 받고 있어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한 선제적인 기술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무한경쟁 속에서도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모바일 최강국으로 이끌기 위한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것이다. B4G(Beyond 4G) 등 미래 원천기술 확보, 국제표준화를 통한 기술주도권 확보, 단말 및 부품의 고도화 기술 개발, 신산업 창출을 위한 융합 기술개발 등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전세계 기술 선도자(First Mover)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 3. 일반기계

일반기계산업은 자동차, 플랜트 등 전방산업의 엔진일 뿐 아니라 베어링, 기어, 펌프 등 기계·설비의 핵심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 종류가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다른 산업과 차별화된 특징이 있으며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제조업에 생산설비를 공급하는 자본재산업으로서 모든 산업의 핵심 기간산업이다. 따라서 일반기계산업은 모든 제조업의 모태산업(Mother Industry), 엔진산업(Engine Industry), 핵심사업(Key Industry)으로 불린다.

일반기계산업의 생산액은 2011년 현재 102조 원으로 추정되어 1999년 이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 오고 있으며, 2007년 대비 50%이상 증가 하였다. 일반기계산업의 전방산업인 자동차, 선박, LCD 등 주력산업의 호조가 기계류 수요량을 늘리면서 생산량 증가를 이끌었다.

일반기계 사업체 수는 2009년 약 7,900개사로 국내 24개 제조업에서 2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사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서 산업구조는 99% 이상이 영세한 양태를 띠고 있다. 종사자 수는 약 25만 4,000명으로 국내 제조업 중에 2위를 기록하였다.

2011년 수출은 대중국 수출호조세 유지, 중동의 플랜트 호황 등에 힘입어 459억 달러를 기록하

일반기계류 수요 및 공급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sup>o</sup>	2011 <sup>p</sup>
수요	내수(조 원)	65.5	69.7	84.2	94.6	99.1
	수출(억 달러)	308.0	373.0	269.0	361.0	458.0
공급	생산(조 원)	67.9	79.0	72.7	92.3	102.5
	수입(억 달러)	239.0	260.0	241.0	286.0	317.0

※ 자료: 내수, 생산은 KSIIC기준이며, 2010년, 2011년 실적은 추정치  
수출, 수입은 지식경제부 분류 기준(MTI)임

시기별 일반기계산업 성장추이

연도	사업체수 (개사)	종사자수 (천 명)	생산액 (십억 원)	내수 (십억 원)	수출 (억 달러)	수입 (억 달러)	수지 (억 달러)
1970	1,040	27	22	114	0.1	3.1	-3.0
2000	6,238	209	32,849	37,211	84.3	122.9	-38.6
2005	8,019	245	56,163	51,696	221.6	178.0	43.6
2007	8,513	261	67,899	61,526	307.6	239.1	68.6
2008	8,018	262	79,025	66,577	373.0	259.8	113.2
2009	7,852	254	72,709	69,709	268.5	241.0	27.6
2010	-	-	92,282	84,240	361.0	285.9	75.1
2011	-	-	102,530	94,647	459.3	316.5	142.7
2011/1970(배)*	8	9	4,104	757	5,741	103.0	

※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 주: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2009년/1970년 비교(배)

일반기계 지역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대 세계	308	(-28.6)	373	(-21.2)	269	(-28.0)	361	(34.5)	458	(26.9)
중국	87	(-28.8)	107	(-22.5)	70	(-34.7)	108	(55.0)	126	(16.9)
미국	38	(-6.9)	42	(-9.3)	34	(-19.2)	42	(25.4)	58	(36.9)
일본	21	(-3.7)	26	(-37.9)	19	(-27.1)	23	(18.8)	28	(24.5)
EU	52	(-53.3)	58	(-9.5)	28	(-50.8)	36	(26.3)	50	(38.0)
중동	26	(58.0)	37	(40.1)	33	(-9.7)	32	(-2.5)	48	(48.4)
아세안	23	(-27.9)	29	(-28.9)	27	(-8.1)	35	(29.2)	41	(18.0)

※ 주: MTI 기준,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전 산업 대비 일반기계산업 수출 및 무역수지 동향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4~ 07	2008	2009	2010	2011	2008~ 11
전 산업	2,538	2,844	3,255	3,715	12,352	4,220	3,635	4,664	5,552	18,071
수출 일반기계	168	222	239	308	936	373	269	361	458	1,461
(비중)	(6.6)	(7.8)	(7.3)	(8.3)	(7.6)	(8.8)	(7.4)	(7.7)	(8.3)	(8.1)
전 산업	294	232	161	146	833	-133	404	412	308	992
무역수지 일반기계	6	44	36	69	155	113	28	75	142	357
(비중)	(2.2)	(18.8)	(22.4)	(46.8)	(18.6)	-	(6.8)	(18.2)	(45.9)	(36)

※ 자료: 한국무역협회

2010 국가별 일반기계산업 위상

(단위: 10억 달러, %, 순위)

구분	교역			수출			수입		
	금액	비중	순위	금액	비중	순위	금액	비중	순위
전 세계	2,424	100.0		1,228	100.0		1,196	100.0	
미국	289	11.9	1	143	11.7	2	146	12.2	1
독일	276	11.4	2	189	15.4	1	87	7.3	3
중국	241	9.9	3	120	9.8	4	121	10.1	2
일본	167	6.9	4	135	11.0	3	33	2.8	9
이탈리아	115	4.7	5	84	6.8	5	31	2.6	10
프랑스	104	4.3	6	54	4.4	6	50	4.2	4
영국	97	4.0	7	51	4.2	7	46	3.8	5
한국	77	3.2	8	37	3.0	9	40	3.3	7
캐나다	70	2.9	9	25	2.1	11	44	3.7	6
네덜란드	62	2.6	10	38	3.1	8	24	2.0	13
멕시코	57	2.4	11	24	1.9	14	34	2.8	8
싱가포르	57	2.4	12	26	2.2	10	31	2.6	11
벨기에	48	2.0	13	25	2.0	12	24	2.0	15
오스트리아	41	1.7	14	24	2.0	13	16	1.3	24
스페인	38	1.6	15	16	1.3	17	22	1.8	16

※ 자료: UN Comtrade

였는데 2007년의 308억 달러 대비 48.9% 증가하였다. 무역수지는 14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전 산업 흑자의 약 46%를 차지하였고, 2007년 69억 달러 흑자에 비하여 108% 증가하였다.

2010년 세계 일반기계 교역(수출+수입)에서 우리나라는 3.2%의 비중을 차지하여 세계 8위의 교역규모를 기록하였다. 수출시장에서는 2010년 전 세계 수출액 약 1조 2,300억 달러의 3.0%를 차지하여 세계 9위의 수출국가로 성장하였다.

최근 일반기계산업의 기록적인 수출 신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시작한 다양하고 강력한 산업 육성 정책이 뒷받침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태양광·풍력·수소연료 전지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 강화 및 수출산업화를 중점 지원하였다. 2011년 말 폐지 예정이었던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1년까지 10년 연장하여 첨단 부품·소재 기술을 수행하는 기업에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였으며 그 결과 안정적인 부품·소재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 2011년 2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또한 전통 제조업의 토대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을 견인하는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서는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저평가되고 있는 뿌리산업에 대하여 경쟁력 강화전략을 추진하였다. 나아가 UAE 원전수주, 해양플랜트 등 플랜트 수출확대 및 경쟁력 제고 정책은 유럽의 재정위기로 확산된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일반기계산업의 수출이 타 산업에 비하여 높은 성장을 구가하는 데 직접적인 효과를 제공하였다.

#### 4. 석유화학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사우디, 일본에 이어 세계 5위의 석유화학(에틸렌) 생산국으로서 세계시장 점유율은 5.2%를 기록하고 있으며 우수한 조업기술, 고객요구에 맞는 제품 공급 및 기술 서비스, 높은 에너지 효율성 등으로 세계 최대 수입시장인 중국에서 1990년대 이후 줄곧 1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2011년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생산액은 80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6.5%를 차지하였으며 철강,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정제에 이어 제조업 5위를 기록하였다. 수출액은 456억 달러로 조선, 석유정제, 반도체, 일반기계에 이어 5번째를 기록하였고, 무역수지 흑자도 291억 달러로 자동차, 조선에 이어 국내 3번째로 많은 규모를 기록하였다.

석유화학산업이 대내외 위상과 수출경쟁력으로 우리 경제가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기초원료를 석유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특성으로 인하여 국제고유

####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전체	석유화학		전체	석유화학		전체	석유화학
	(A)	(B)	(B/A)	(A)	(B)	(B/A)		
2000	1,723	97	5.6	1,604	45	2.8	118	49
2008	4,220	321	7.6	4,353	123	2.8	△133	198
2009	3,635	275	7.6	3,231	95	2.9	404	180
2010	4,664	357	7.7	4,253	133	3.1	412	224
2011	5,552	456	8.2	5,244	165	3.1	308	291

※ 자료: 무역협회

가 지속, 석유자원 고갈, 에너지·온실가스 규제강화 등이 지속적 산업성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들어 중동 산유국의 석유화학산업 진출,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확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자급화율 증대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석유화학산업의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확보와 저가원료·시장 확보를 위한 생산거점 확대, 2차 전지, 태양광, 바이오, 탄소소재 등 미래 신성장동력 마련 등의 전략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6월 정부와 업계는 석유화학산업의 생산효율성 제고, 핵심 화학소재 개발, 미래 성장동력 발굴, 기업의 글로벌화 등 제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석유화학단지 내 통합배관망 확대를 위하여 정부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하여 WPM 화학소재 개발, 미래선도 그래핀 신소재, 자용차용 화학소재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 해외 기초원료 확보 및 해외시장선점을 위하여 정상회의 등 자원외교를 강화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내 석유화학기업이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에 저가 천연가스 기반의 석유화학 생산기지를 마련하였으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화학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였다.

## 5. 철강제품

철강산업은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과거 2%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0년 이후 비중이 확대되어 2011년 3.4%로 상승하였다. 총 수출 비중도 2007년 5.9에서 2011년 6.7%로 비중이 상승하였다. 고용은 철강업계의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제조업 고용비중도 3%대를 기록하고 있다.

### 철강산업의 산업상 위치

(단위: %)

구분	2000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GDP	철강/전산업	1.9	2.5	2.3	2.7	2.4	3	3.4
	철강/제조업	6.7	9.1	8.4	9.7	8.5	9.2	10.9
철강 수출/총 수출	4.1	5.1	5.9	6.8	6.1	6	6.7	
종업원 수/제조업	2.7	2.8	2.9	3.2	3.2	-	-	

※ 자료: 한국은행, 한국철강협회

### 세계 속의 한국 철강산업의 위치

(단위: 백만 톤, %)

	생산(조강기준)					철강재 소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2008	2009	2010	2011
세계 (A)	1,347.00	1,341.20	1,235.90	1,430.50	1,517.70	1,220.20	1,220.20	1,140.90	1,306.50	1,380.30
한국 (B)	51.5	53.6	48.6	58.9	68.5	55.2	58.6	45.4	52.4	56.4
B/A	3.8	4	3.9	4.1	4.5	4.5	4.8	4	4	4.1

※ 자료: worldsteel, 한국철강협회

### 철강재 수출입

(단위: 백만 달러, %)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19,253(18.7)	25,218(31.0)	18,189(-27.9)	25,020(37.6)	32,302(29.1)
수입	19,993(37.0)	31,284(56.5)	16,835 (46.2)	21,112(25.4)	23,963(13.5)
무역수지	-740	-6,065	1,353	3,908	8,338

※ 자료: 한국철강협회

※ 주: ( )는 전년비 증감률

세계 철강산업 중 한국의 위치는 2006년 이후 세계 6위의 철강생산국으로 지속적으로 생산 비중이 증가하여 왔다. 현대제철의 고로 및 동부제철의 전기로 생산 본격화 등에 따라 2011년 4.5%로 2007년에 비하여 0.7%포인트 상승하였다.

국내 철강설비 증설과 신흥국의 수요증가에 따라 철강재 수출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입은 그동안 공급부족 품목이었던 열연강판, 후판의 국내 설비능력 증가에 따라 증가세가 둔화되어 무역수지는 2009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다.

철강산업은 타산업의 생산과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철강사들은 고도 제조기술력을 기반으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원천기술 및 개량 응용기술을 근간으로 신강종, 신제품 공급을 통한 신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철강업계의 R&D 투자비중이 2008년 이후 1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도 철강사들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있다.

### R&D 투자비중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R&D 투자비중	8.8	10.3	15.2	10.5	9.5

※ 자료: 한국철강협회(철강협회 회원사 기준)

## 6. 반도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3위의 반도체 생산국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1년 13.7%이며, 그 중 메모리반도체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51.8%로 1992년 이후 줄곧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는 정부의 육성정책에 따라 AP, 디스플레이 구동칩, 이미지센서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이 2008년 2.5%에서 2012년 5.4%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9.2%(285억 6,000만 달러)로 인텔(Intel)에 이어 세계 2위이며, SK하이닉스는 3.0%(92억 9,000만 달러)로 8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총수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온 반도체산업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및 메모리 가격 하락 등으로 잠시 주춤하기도 하였으나, 민관이 힘을 모아 과감한 R&D 및 설비투자를 단행하여 빠른 시일 내 위기를 극복한 결과 2010년에는 단일품목 최초로 수출 500억 달러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세계 최강이 되기 위하여 극복하여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 메모리 위주의 불균형 발전,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취약, 만성적 반도체 설계인력 부족, 팹리스-파운드리-수요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 취약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이룩하기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2010년 9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스템반도체 및 장비산업 육성전략'을 수립, 발표하였다.

특히 후속조치로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약점으로 지적된 '선순환적 공생발전 생태계 미흡'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실리콘밸리, 대만의 신주과학단지 등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판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였고, 한국형 반도체 생태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다(2012.7.11.). 산학연 협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반도체 지원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 SoC연구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W-SoC 융합센터' 등이 2012년 6

세계 반도체산업에서 국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반도체 전체	275,147	260,921	231,767	307,979	311,980
한국 (비중)	31,202 (11.30%)	25,447 (9.80%)	27,028 (11.70%)	43,701 (14.20%)	42,840 (13.70%)
메모리	57,893	45,767	44,193	67,408	58,674
한국 (비중)	25,403 (43.90%)	19,504 (42.60%)	20,330 (46.00%)	33,598 (49.80%)	30,404 (51.80%)
시스템반도체	217,254	215,154	187,574	240,571	253,306
한국 (비중)	4,450 (2.5%)	4,469 (2.6%)	4,349 (2.9%)	6,197 (3.3%)	8,410 (4.3%)

※ 자료: 반도체협회, iSuppli

반도체 매출 상위 기업 (2011)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업체명	2011 매출	영업이익	순위	업체명	2011 매출	영업이익
1	인텔 (미)	48,721	17,477	6	퀄컴(미)	10,198	4,972
2	삼성 (한)	28,563	5,668	7	STMicro(EU)	9,735	46
3	TI (미)	13,967	2,992	8	하이닉스(한)	9,293	298
4	도시바 (일)	12,729	2,082	9	마이크론 (미)	7,365	283
5	르네사스 (일)	10,648	-291	10	브로드컴 (미)	7,160	952

※ 자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반도체 수출 비중 추이 (단위: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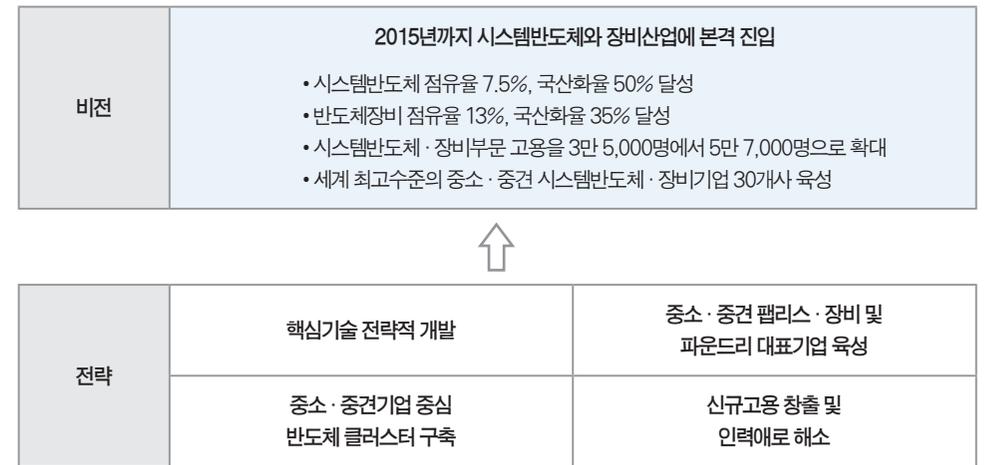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총 수출	3,715	4,220	3,635	5,674	5,578
반도체수출	390	328	310	507	501
반도체비중	10.5	7.8	8.5	10.8	9.0

※ 자료: 반도체협회, iSuppli

월 판교로 이주하여 명실상부한 산학연 클러스터의 기틀을 갖추었다.

이 외에도 중소 반도체 장비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10년부터 '반도체장비·성능평가사업'을 통하여 삼성, SK하이닉스 등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 수요 대기업의 중소 장비기업에 대한 성능평가, 기술지도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대·중소기업

시스템반도체 및 장비산업 육성 전략(2010.9)



※ 자료: 지식경제부

판교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 관련 기업(60여 개 팹리스기업, 50여 개의 장비기업, 삼성 반도체사업부, SK하이닉스 등), 우수 공과대학(성균관대, 경북대 등), 반도체 지원기관(전품연 SoC센터, ETRI SW-SoC융합센터) 등이 밀집한 반도체 산학연 클러스터

이 동반성장하는 기반을 다졌다. 이 사업을 시작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136건의 성능평가를 통하여 약 1조 원의 수입대체효과가 발생하였다.

## 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 (1) 자동차 산업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자동차산업 발전이 가속화되어 자동차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가 크게 상승하였다. 2009년도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10.2%인 25만 69명이 자동차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제조업에서 자동차산업 관련 업체수가 5.2%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액 기준으로는 제조업의 10.1%를 차지하고 있고, 부가가치 비중도 제조업에서 9.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출액은 2007년 497억 2,000만 달러에서 2010년 543억 7,400만 달러로 9.4%의 성장을 보이며 큰 발전을 이루면서 무역 1조 달러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2009년도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전 세계 경제는 물론 자동차산업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거의 모든 국가들의 자동차 생산 및 내수가 급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2009.3.26)를 주재하면서 노후차 교체시 세금 감면 등 자동차 내수판매 활성화 지원 확대,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영여건과 경쟁력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였다. 불과 2년 후 자동차산업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2011년도에 세계 생산순위 5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기록 면에서도 460만 대로서 사상최대의 생산량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는 2007년도에 비하여 14% 증가한 수치로 경제위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 선진국과 비

#### 자동차산업 국민경제 기여 현황

구분	제조업	자동차산업	비중(%)
업체 수(개)	57,996	3,019	5.21
종업원 수(명)	2,452,880	250,069	10.19
생산액(십억 원)	1,121,973	113,028	10.07
출하액(십억 원)	1,122,987	113,284	10.09
부가가치(십억 원)	374,501	35,223	9.41
수출액(백만 달러)	466,384	54,374	11.66

※ 자료: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2009년 기준, 수출액은 2010년 기준)

교하면 매우 경이적인 회복세라고 할 수 있다.

현지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업계의 해외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2010년 12월에는 연산 20만대 규모의 러시아 공장이 완공되었고 2012년 7월에는 연산 40만 대의 세 번째 중국공장이 완공되어 한국차의 생산능력이 연간 143만 대에 이르렀다. 또한 2012년 9월 브라질 공장이 완공되어 우리 업체의 중남미 시장 진출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총 해외생산 실적을 보면 2007년 116만 대에서 2011년 314만 대로 170.3% 급증하면서 우리 자동차기업의 해외진출이 본격화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산차가 현재의 품질 경쟁력과 이미지를 확보한 것은 정부의 산관학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핵심기술역량 강화 정책 및 일관성 있는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기아차는 2012년 1월 JD 파워(Power) 사가 발표한 재구매율 조사에서 현대차 62%, 기아차 59%로 각각 1위와 4위를 차지하여 품질 경쟁력을 입증하였다.

####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생산현황

(단위: 대, %)

순위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대비 증감률(%)
1	중국	8,882,455	9,345,101	13,790,994	18,264,761	18,418,876	107.4
2	미국	10,780,729	8,717,541	5,709,431	7,743,093	8,646,340	△19.8
3	일본	11,596,327	11,575,644	7,934,057	9,628,920	8,398,705	△27.6
4	독일	6,213,460	6,045,730	5,209,857	6,905,985	6,311,318	1.6
5	한국	4,086,308	3,826,682	3,512,926	4,271,741	4,657,094	14.0
6	인도	2,253,729	2,314,640	2,642,502	2,813,930	3,940,094	74.8
7	브라질	2,977,150	3,215,976	3,185,243	3,553,803	3,406,150	14.4
8	멕시코	2,096,543	2,167,944	1,561,052	2,229,381	2,681,386	27.9
9	스페인	2,889,703	2,541,644	2,164,475	2,345,104	2,353,682	△18.5
10	프랑스	3,015,854	2,567,560	2,043,241	2,068,189	2,277,775	△24.5

※ 한국의 연도별 세계 생산 순위) 2007년 이후 5위 지속 유지

※ 자료: 각국 자동차협회

#### 자동차 해외생산 현황

(단위: 대,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대수	1,161,958	1,457,268	1,901,721	2,604,762	3,140,683
증감률	15.0	25.4	30.5	36.9	20.5

※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미국 자동차 전문 평가기관 켈리 블루 북(Kelly Blue Book) 사가 발표한 '2012 총 보유비용 평가(2012 Total Cost of Ownership Award)'에서 기아차가 일반브랜드 부문 1위를 차지하였고 기아차 '쏘울'과 현대차 '쏘나타', '싼타페'도 각각 차급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산차는 신뢰성이 확보된 품질, 뛰어난 연비 및 가격 경쟁력 등으로 타 브랜드에 비하여 보유비용이 저렴하여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차급별 평가에서도 기아차 쏘울은 준중형(COMPACT CAR) 부문 1위를, 현대차 쏘나타와 싼타페는 각각 중형차급(MIDSIZE CAR)과 CUV(CROSSOVER) 차급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평가사례들은 수출시장 현지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제공하는 뛰어난 상품성과 가치를 입증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였다.

이명박정부는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을 통하여 자동차 수출증대와 연관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세계 최초로 미국·EU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됨으로써 경쟁상대국인 일본에 비하여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둬온 물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였다.

**자동차 수출 현황**

(단위: 대, 백만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대수	2,847,138	2,683,965	2,148,862	2,772,107	3,151,708
증감률	7.5	-5.7	-19.9	29.0	13.7
금액	37,284	35,032	25,411	35,411	45,312
증감률	13.3	-6.0	-27.5	39.4	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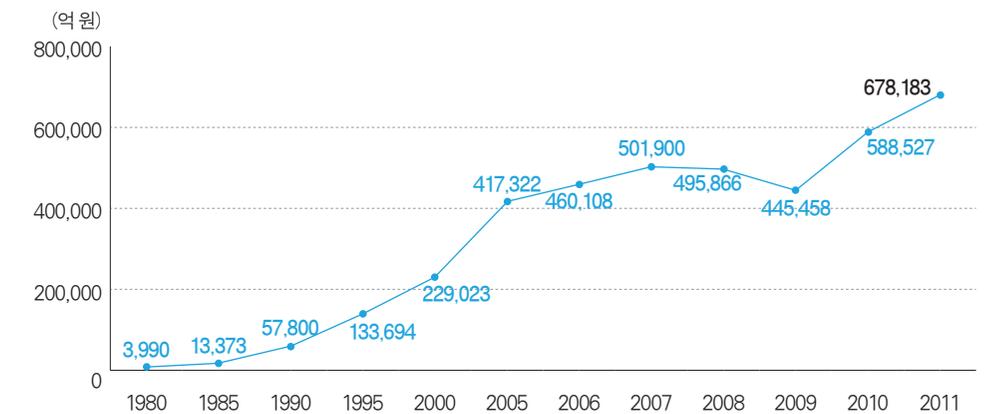
※ 자료: 대수는 KAMA 통계, 금액은 MTI 741 기준

**(2) 자동차부품산업**

최근 10여 년간 한국 자동차부품은 기술·품질·가격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세계 선진 자동차국가들 수준에 근접하는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때맞춰 최근 세계 주요 완성차업체들이 생산원가 절감을 위하여 품질과 가격이 좋은 부품이면 계열화를 따지지 않고 구매하는 이른 바 글로벌 소싱(Global Sourcing)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 부품업체들에게 호기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이명박정부의 공격적인 수출촉진 정책에 따라 미국, EU, 인도, 칠레, 싱가포르,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ASEAN, 페루, 터키, 콜롬비아 등 주요 수출대상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자동차 부품의 비약적인 수출 증가에 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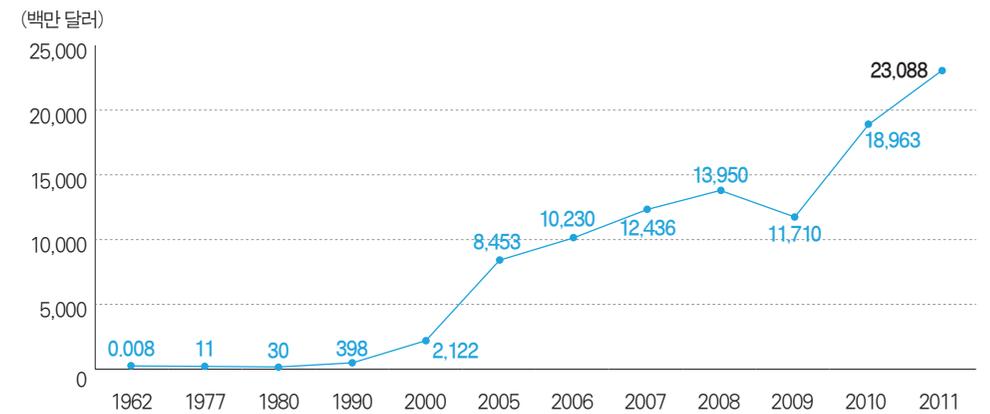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 처녀 수출은 자동차 수출보다 빠른 1962년에 피스톤 링, 피스톤핀 등 2개 품목 7,545달러어치를 수출하면서 시작되어 1977년 연 1,000만 달러 수출 시대에 진입하였고, 1985년 드디어 연 1억 달러 수출 고지에 도달하였다. 이후 1998년 IMF 외환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여 2006년 최초로 100억 달러 수출을 돌파하였고, 한·EU FTA 효과가 가시화된 2011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23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자동차부품의 수출증가는 북미, 일본, 유럽의 경쟁업체들보다 기술·품질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FTA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면에서 상대적인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 자동차부품 매출액 추이**



※ 자료: 자동차산업편람

**연도별 자동차부품 수출 현황**



※ 자료: 한국무역협회

## 8. 석유제품

원유와 석유제품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의 16.2%에 해당하여 단일 품목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원유 및 석유제품의 무역현황(2011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구분	전체	원유 및 석유제품			비중(%)
		원유	석유제품	합계	
수출	555,214	-	51,600	51,600	9.3
수입	524,413	100,806	22,883	123,689	23.6
합계	1,079,627	100,806	74,483	175,289	16.2

※ 자료: 지식경제부

원유와 석유제품의 무역규모가 큰 것은 원료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수출하는 우리나라의 산업특성에 기인한다. 2011년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급현황을 보면 원유와 석유화학산업의 원료인 나프타를 약 11억 3,000만 배럴 수입, 정제하여 약 37%인 4억 1,000만 배럴을 석유제품으로 수출하고 약 63%인 7억 배럴을 국내에서 소비하였는데, 국내소비의 약 51%인 3억 6,000만 배럴은 석유화학산업의 원료로 이용되는 나프타였다. 이 같은 소비특성으로 우리나라의 석유소비 규모는 세계 제9위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원유 및 석유제품의 무역현황(2011 기준)

(단위: 천 배럴)

구분	수입		수출 및 국내소비	
	원유	석유제품	수출	국내소비
합계	927,045	207,012	411,472	702,440
나프타		188,506	35,386	355,191
경유		951	159,180	134,157
휘발유			53,519	69,574
항공유			81,240	28,446
기타		17,555	82,147	115,072

※ 자료: 지식경제부

2008 이후의 석유정제시설 증설 현황

(단위: 천 B/D)

구분	정제시설	분해시설	개질	탈황
2008	-	115	39	110
2009	30	-	20	93
2010	10	60	-	-
2011	89	52	66	164
증설합계	129	227	125	367
2011 말 설비용량	3,039	672	395	1,770

※ 자료: 지식경제부

우리나라의 석유정제산업은 그동안 정제시설의 양적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여 왔다. 그 결과 규모의 경제면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질적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2008년 이후의 석유정제 시설 증설현황을 보면 정제 시설의 증설량이 전체 시설의 4.2%에 불과한 반면, 분해시설은 33.8%, 개질시설은 31.6%, 탈황시설은 20.7%에 이르고 있어 석유정제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9.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산업은 최근 5년 연속 국가 수출 5위 안에 포함된 최대 핵심 수출 산업으로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총 수출의 6%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국내 디스플레이 생산의 9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전형적인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성장하여 왔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및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 과잉에 따른 패널 단가 하락 등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은 국내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정부의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세계 최대 디스플레이 생산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디스플레이산업은 모든 정보기기의 표시를 담당하는 필수 디바이스이며, 그 응용 범위는 TV, 노트북, 모바일폰, 자동차, 게임기, 산업기기 등 매우 다양하다. 지금까지의 디스플레이산업은 LCD(Liquid Crystal Display, 액정디스플레이) 주도 하에 성장하여 왔으며, LCD는 디스플레이산업 수출의 90% 내외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곧 LCD의 성장이 디스플레이산업의 성장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LCD와 비교하여 색상, 시야각, 전력효

올에서 다양한 장점을 보유한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유기발광다이오드)가 LCD를 대체할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 OLED 수출액도 더불어 증가하였다. 2008년 2억 5,000만 달러이던 OLED 수출액은 2011년 17억 8,000만 달러로 연평균 163%의 수출 증가를 기록하였다.

디스플레이산업은 2002년 일본을 앞지른 후 지금까지 세계시장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국내 유일의 산업이다.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40.2%에서 2011년 47.1%로 글로벌 경쟁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1위 자리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안 디스플레이산업은 수조 원의 설비투자 및 신규 고용 창출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다.

디스플레이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쟁국보다 한발 앞선 선제적인 투자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6조 원 이상의 설비투자가 이루어졌다. 특히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조기 시장 선점을 위하여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영업적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OLED 설비투자를 꾸준히 증가시켜 2008년 3,000억 원에서 2011년 5조 4,000억 원으로 투자규모만 무려 17배가 늘어났다. OLED의 경우 설비투자 비중 중 장비 구입비가 70% 이상으로 후방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경쟁국과의 차별화 전략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R&D 투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부품소재·장비)을 진행하여 왔다. 투자확대와 더불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실업률 해소와 고용 확대에도 기여하였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 따르면 디스플레이산업은 매년 1만 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2011년에는 약 12만 명이 디스플레이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디스플레이산업이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한 데는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이 크게 작용하였다. 디스플레이산업은 부품소재·장비를 구매하여 디스플레이를 제작하고 이를 TV, 모니터, 핸드폰 등 세트업체에 납품하는 전형적인 시스템 산업으로 전후방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국가 경제발전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

디스플레이산업은 기술발전에 따라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장 빠른 산업이며 우리나라는 경쟁국보다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스플레이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변화시켜 왔다. 정체된 LCD 시장의 경우 고화질 및 초슬림 베젤 등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LCD 시장을 개척하였으며, 3DTV시장은 편광방식(FPR)과 셔터클래스 방식(SG)의 기술 모두 우리나라가 주도하면서 2010년은 3DTV 대중화의 원년이 되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플렉서블, 투명, 터치, 전자종이 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스

플레이산업도 LCD에서 모든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한 OLED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미 OLED 시장은 높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더불어 2012년 2월에는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로 선정되어 국가 차원에서 기술유출 차단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OLED는 디스플레이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광고 등 타산업과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건축, 교육, 유통, 패션 등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 확대가 진행될 전망이다.

## 10. 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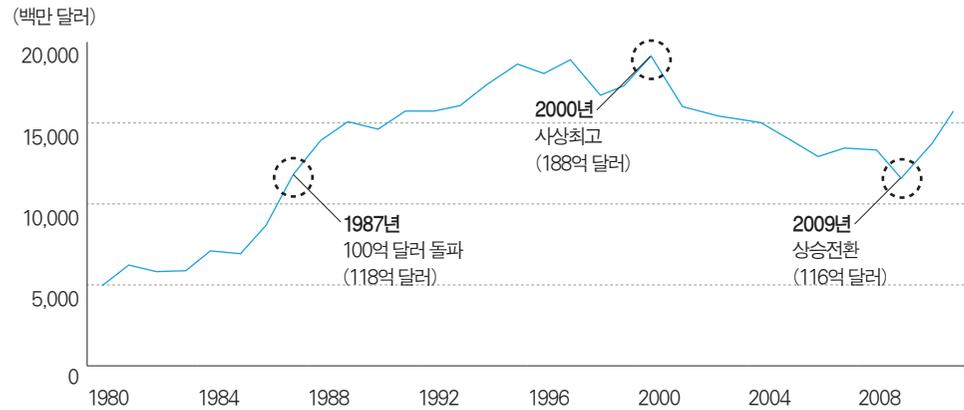
섬유산업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후반부터 면방직 공장 출현을 계기로 근대공업의 형태를 갖추어 100여 년의 역사 동안 국내 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특히 섬유산업은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되면서 1960~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이자 외화획득산업으로서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IT산업의 발전의 토대가 되었으며,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의 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오랜 기간 역할을 담당하였다. 1987년 국내 단일산업 최초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1987~2002년까지는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국내 경제에 지속적으로 자양분을 공급하여 왔다.

섬유산업은 1980년대 후반부터 임금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 선진국 대비 낮은 기술수준,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당경쟁, 후발국의 추격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다자간섬유협정(MFA)을 통한 섬유쿼터가 2005년부터 완전히 철폐되어 섬유산업이 완전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큰 압력으로 다가왔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은 섬유산업이 글로벌 경쟁시대에 접어든 이후 구조변화와 재도약 압력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던 시점이었다. 실제로 섬유산업 수출은 2000년에 사상 최고치인 188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이듬해인 2001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08~2009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섬유업계의 재도약을 위하여 기존 의류용 섬유 분야를 넘어 하이테크 섬유 분야의 발전을 장려하는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 2009년에는 산·학·연 합동으로 철보다 강한 슈퍼섬유, 나노기술을 접목한 고기능 나노섬유,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섬유, 녹색성장 대응을 위한 친환경섬유 등 신섬유 4개 부분을 집중 육성하는 '신섬유 기술로드맵'을 마련하였다. 이 로드맵에서 2020년까지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연도별 섬유 수출 현황



※자료: 한국무역협회

를 15% 이내로 좁히고 수출을 60% 이상 추가로 확대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아라미드, 초고분자량 PE 섬유 등 국내 첨단 섬유소재를 융합하여 성형·가공과 제품화 등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부터는 메디컬, 수송기기 분야 등 특수 분야에 대한 섬유소재 적용 확대를 위하여 R&D와 연구기반 구축을 동시에 지원하는 패키지형 사업인 첨단메디컬신소재개발사업과 탄소밸리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완제품까지의 공정이 긴 섬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원사-사가공-제작-염색-봉제 등) 간 공동 컨소시엄 형태의 기술개발 방식을 도입한 섬유 스트림 간 협력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2007년부터 추진된 섬유 스트림 간 협력기술개발사업은 2008년도에 예산을 200% 이상 대폭 증액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액을 통하여 섬유산업 기술개발의 주력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력 증진과 함께 한류 등 문화적 요소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감성과 문화 요소가 녹아 있고 숙련인력의 고용여력이 큰 패션산업을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에는 ‘숙련집약형패션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브랜드 육성, 고급 생산기반 형성 등 패션산업의 고도화와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패션과 문화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K-pop 공연과 패션쇼가 융합된 패션콘서트 등을 추진하여 패션한류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다른 나라와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도 섬유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었다.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의 첫 일본 순방 시에는 염색기술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하여 한일 양국 간 고기능성 섬유분야에 있어 염색기술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0년 6월 파나마 순방 시에는 우리나라 의류제조 기업 진출이 활발한 SICA(중미통합체제)와의 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1년 11월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을 통하여 섬유·피혁산업 육성 관련 협력 논의가 시작되면서 섬유산업의 협력 관계가 아프리카 대륙으로까지 확대되었다. 2011년 7월과 2012년 3월에는 세계 1, 2위 섬유류 수입시장인 EU 및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서 섬유산업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였다. 2012년 상반기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전체 섬유수출은 감소하였지만 EU와 미국에 대한 섬유수출은 각각 7.2%, 7.5%로 크게 증가하였다. 섬유산업에 있어 FTA의 효과를 보다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내 기업의 원산지 충족을 지원하는 ‘섬유생산자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또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내에 FTA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섬유 중소기업 컨설팅 등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2년 6월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관세사회 간에 ‘섬유패션기업 FTA 활용지원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FTA 활용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해외시장을 직접적으로 공략하기 위하여 매년 대한민국 국제섬유교역전(Preview in SEOUL, Preview in CHINA) 등 국내외 섬유 전문전시회를 개최하여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제고하였다.

특히 한류 문화와 연계한 시장개척 활동을 통하여 한국 섬유상품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파하여 장기적 수출시장의 증대 가능성을 높여왔다. 적극적인 수출증진 활동과 구조혁신 노력을 통하여 섬유산업 수출은 2009년 116억 달러를 저점으로 2010년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에는 섬유산업 수출이 159억 달러를 달성하여 2001년 161억 달러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160억 달러에 근접하였다. 2011년 11월 섬유업계는 제25회 ‘섬유의 날’을 맞아 ‘2020년 세계 4위의 섬유강국’이라는 비전을 발표하였다. 2010년 수출액 기준 세계 8위에서 2020년 세계 4위로 도약하기 위하여 중저가 위주의 섬유산업을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고부가가치화하는 노력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11. 가전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이후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주요 내구재 가전시장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다. 2008~2009년 우리나라의 가전 수출 또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위기를 겪었으나 가전 산업에 대한 IT융합, 스마트화 등 고부가가치화 전략에 힘입어 2010~2011년 가전 수출이 증가하여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게 되었다.

정부의 융합 가전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전략은 가전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 2010~2011년 전체 수출흑자를 견인하였다. '홈네트워크 및 정보가전산업', '3D산업' 및 'LED 조명산업' 등 가전 관련 유망분야를 발굴, 육성하고 세부사업을 추진한 데 따른 성과였다.

우리나라 TV 산업은 시장의 개화와 함께 성장한 이래로 2009년 LED TV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등 2012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기술력과 우수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세계 TV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TV 보급률이 상승하여 포화상태에 이르는 등 시장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세계 TV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TV 패러다임에 대비하고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전략을 마련하였다. 3D 영상시대 도래가 전망됨에 따라 세계 진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3D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2010.4.8) 한 이후 2011년 세계 3D TV시장은 약 35억 달러로 추정(전년대비 약 670% 성장), 우리나라는 46.4%의 시장점유율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이어 스마트TV 경쟁력 제고와 국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TV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2011.4.6)하는 등 차세대 TV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2012년 2분기 사상 최대 세계 TV 시장점유율을 기록, TV 시장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 미래 TV

주요 품목별 시장성장률(출하량 기준) (단위: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냉장고	4.1	5.4	6.5	6.9	3.6
세탁기	5.7	-2.4	3.9	15.8	7.4
에어컨	8.6	-5.0	-1.0	26.9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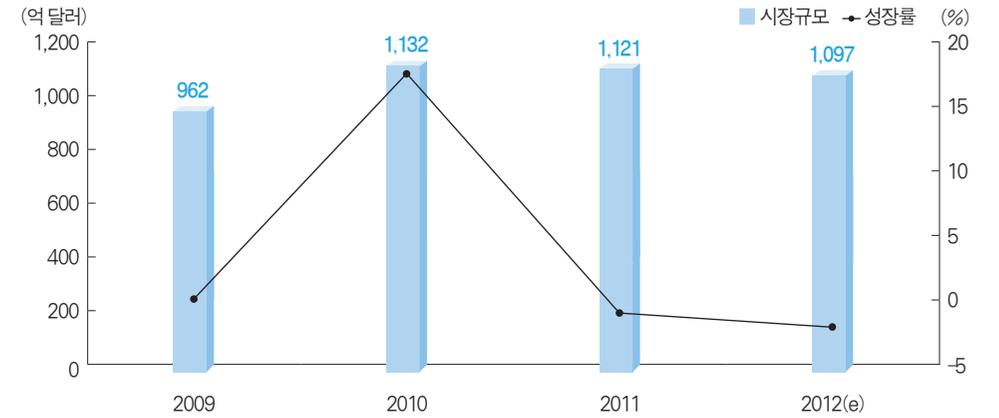
※ 자료: NIPA, Fuji Chimera(2012)

가전산업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가전	수출	134.3	129.0	100.6	128.2	133.3
	(증가율)	(-7.7)	(-4.0)	(-22.0)	(27.4)	(4.0)
	수입	45.5	48.5	38.9	43.0	44.9
	(증가율)	(4.1)	(6.6)	(-19.7)	(10.6)	(4.4)
수지	88.9	80.5	61.7	85.1	88.4	
	(증가율)	(-12.7)	(-9.4)	(-23.4)	(38.1)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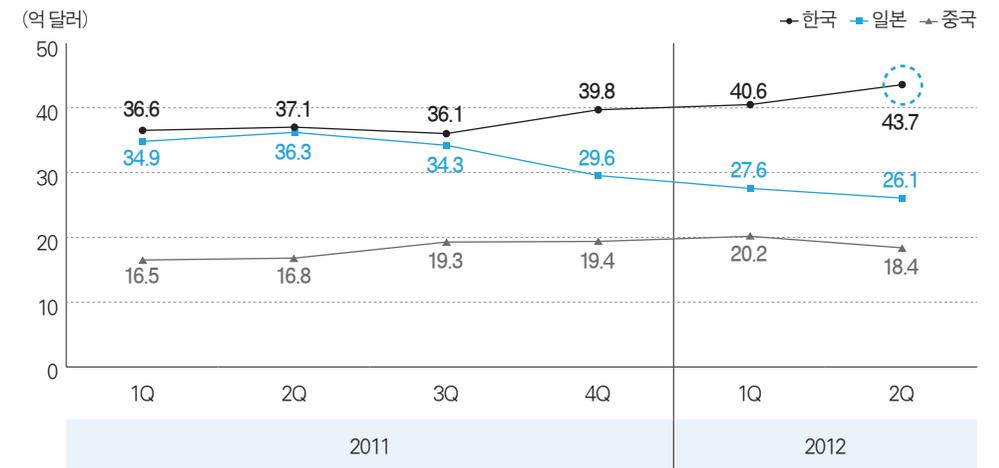
※ 자료: NIPA, Fuji Chimera(2012)

세계 평판 TV 시장규모 및 성장률



※ 자료: DisplaySearch(2012.6, 2012.8)

한·중·일 의 평판 TV 시장점유율 추이



※ 자료: DisplaySearch(2012.6, 2012.8)

산업 성장의 중심이 될 스마트TV 및 3D TV 등 프리미엄 TV 시장에서의 선두 유지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프리미엄 TV와의 디자인 및 성능 차별화, 가격경쟁력 확보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TV 수출 성장 지속의 선결 과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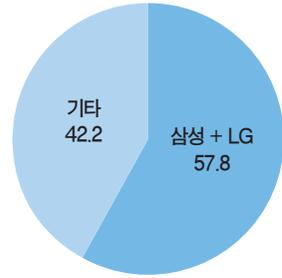
국내 업체의 냉장고 및 세탁기는 스마트화, 초절전화 등 차별화를 통하여 글로벌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 이에 대한 경쟁업체의 견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정부와 민간의 공조를 통하여 적극 대응함으로써 수출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가전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국가별 3D TV 시장점유율(매출액 기준) (단위: %)

구분	3D TV 시장점유율		
	2010	2011	2012.2분기
1위 한국	40.90	46.10	46.50
2위 일본	52.20	30.10	24.60
3위 중국	1.60	19.30	21.90
4위 유럽	4.00	3.20	5.50
5위 미국	1.30	1.00	0.60

※ 자료: DisplaySearch(2012.8), 기사 참조

스마트 TV 북미 시장 점유율 (단위: %)



LED 산업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2011		2012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e)	
		금액	증가율		금액
LED	1,955	1,996	27.70%	2,395	20.1%
조명기기	393	427	54.40%	512	30.3%

※ 자료: 지식경제부(한국광산업진흥회, 2012.12)

또한 융합·조명 신시장 선도를 통한 'LED 산업 제2도약 전략' 등을 추진(2010.3.18), LED 분야에서 2012년까지 총 3조 원 규모로 투자를 확대하여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LED 조명의 수출활성화 지원을 강화하였다. 2012년 상반기 LED 산업 수출증가율은 27.7%로 호조세이다. 친환경적인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LED TV, 조명 등 절전형 가전의 표준화 작업 및 수출 활성화 지원도 확대하였다.

## 12. 컴퓨터

컴퓨터 산업의 중심은 태블릿 PC 등 모바일 PC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명박정부 들어 모바일 PC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태블릿 PC, 울트라북 등 제품 다변화 전략을 통하여 산업 역량을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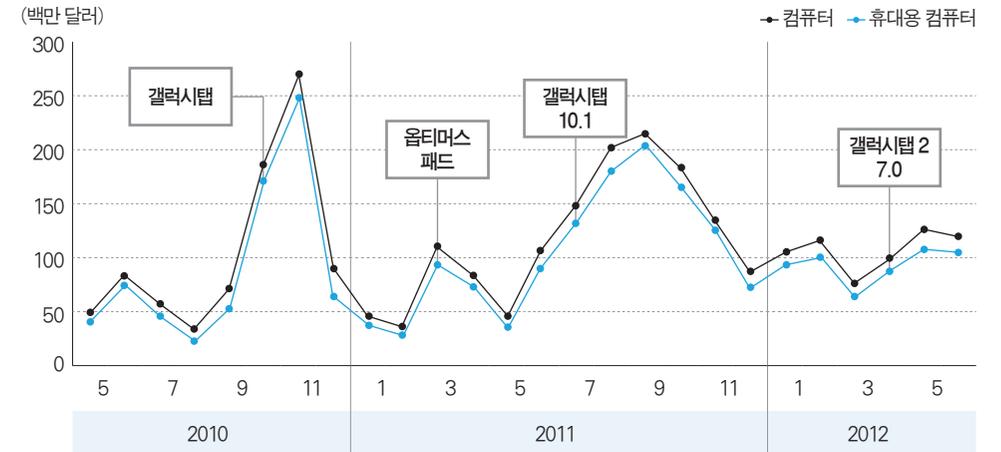
2010년 태블릿 PC 시장 개화와 함께 수출 확대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2011년 태블릿 PC 수출은 전년대비 195.5%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고, 수출 금액 18억 9,000만 달러로 IT 수

PC 및 태블릿PC 시장성장률(출하량 기준) (단위: %)

품목	2008	2009	2010	2011
PC	10.7	7.4	14.1	1.9
데스크탑 PC	-4.0	-4.3	6.8	1.2
모바일 PC	32.0	19.8	20.3	2.5
태블릿 PC	-	-	-	240.8

※ 자료: NIPA, Gartner

우리나라 태블릿 PC 출시 현황 및 컴퓨터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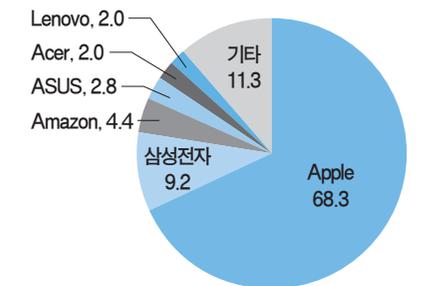
※ 자료: NIPA

태블릿 PC 시장점유율(출하량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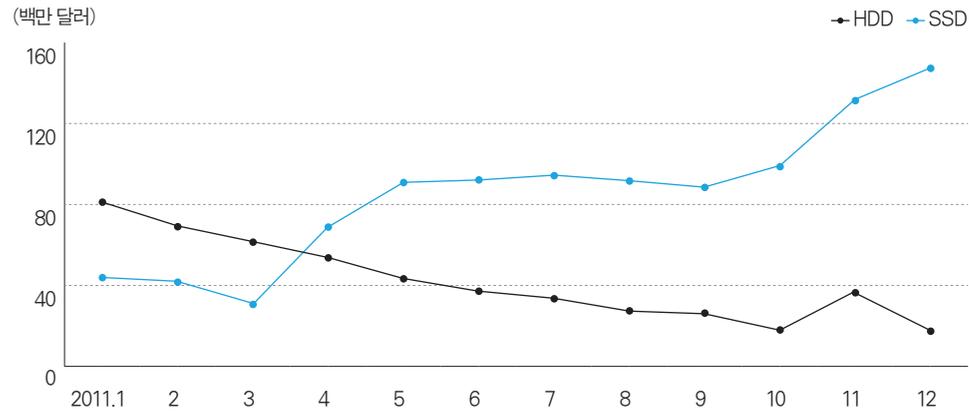
구분	2010	2011
1위 미국	79.6	74.1
2위 한국	8.1	8.7
3위 대만	-	6.9
5위 캐나다	-	1.3

※ 자료: SA(2012.3.8)

2012년 2분기 업체별 태블릿PC 시장 점유현황 (단위: %)



### 2011년 HDD, SSD 수출 추이



출 10위 품목으로 등극하였다. 이와 함께 세계 태블릿 PC 시장점유율 세계 2위를 달성하며 모바일 PC 시장에서 위상을 강화하였다.

보조기억장치 수출 주력 품목 또한 HDD에서 고용량, 고효율의 SSD로 전환되었다. 2008년 약 18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한 HDD는 2011년 생산 및 수출이 5억 달러로 급감하였다. 반면, 프리미엄 휴대용 PC의 차세대 저장장치로 부상하고 있는 SSD 수출은 2008년 1,200만 달러에서 2011년 10억 달러로, 2011년 한 해 동안 전년대비 1,262% 상승을 기록하며 수직 성장하였다.

### 13. 농식품

농식품 수출은 FTA 등 시장개방의 피해산업이 아닌 기회산업이다. 농수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생산력 제고로 인한 국내 과잉공급 문제를 완화하여 국내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농식품과 품질경쟁을 통하여 생산자 기술·경영혁신을 도모하는 등 우리 농림수산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식품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농식품 수출은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2007~2011년까지 4년 만에 두 배 증가한 77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과거 20~30억 달러 수준에서 오랫동안 주춤하던 수출은 2007년 40억 달러 돌파 이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11년에는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외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력품목의 호조세와 적극적 마케팅 활동을 통한 한국산 경쟁력 제고로 전년대비 약 18

억 달러가 증가하였다. 수출증가율 또한 30.8%에 달하여 사상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부류별로는 가공식품이 수출 확대를 주도(44억 달러, 수출비중 57%)하는 가운데 신선농산물은 사상 최초로 10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수산물 수출도 200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로 최초로 23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농식품 수출 품목의 전반적 호조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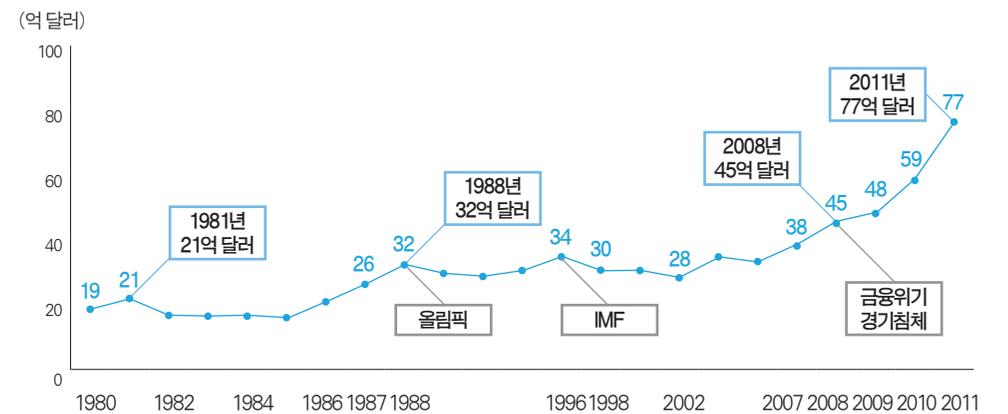
1억 달러 이상 수출 품목도 2007년 라면, 오징어, 설탕, 참치, 껌, 커피 등 6개에 불과하였으나, 4년 동안 인삼, 김, 음료, 김치, 제3맥주, 소주가 추가되어 12개로 늘었다.

시장별로는 일본 중심의 수출에서 탈피하여 지속적인 수출시장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1억 달러 이상 수출국이 2007년 8개 국가에서 2011년에는 11개로 늘었으며, 특히 중국과 아세안으로는 최근 4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30%를 상회할 정도로 농식품 수출이 급증하였다. 중국·아세안에는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품질 농식품 시장 위주로 수출되는 것도 고무적인 사항이다.

FTA 체결에 따른 농식품 수출 증가도 주목할 만하다. EU발 경제위기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8% 증가한 38억 6,0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한국의 농식품 수출 중 한국과 FTA를 체결한 지역 또는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9.7%로서 ASEAN(15.0%), 미국(8.3%), EU(5.6%)가 대표적이다. FTA 체결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은 FTA 발효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농식품 수출에 있어 FTA가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ASEAN 수출은 2007년 FTA 발효 후 매년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대미국 수출

###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 변화 추이



※자료: 농수산물식품부

우리나라의 주요 농식품 수출대상국

구분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대만	아세안	EU
2011 수출액 (백만 달러)	2,373.70	1,189.40	600	242.7	305.5	261.2	1,032.30	360.9
국가별 비중(%)	(30.9)	(15.5)	(7.8)	(3.2)	(4)	(3.4)	(13.4)	(4.7)
전년대비 증가율(%)	26.1	51.1	15.7	3	25.3	23.6	43.4	8.5
4년 평균 증가율(%)	18.2	30.2	10.1	△6.1	21	27.6	31.8	13.7

※ 1억 달러 이상 수출국: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UAE, 대만, 태국(2007년 8개)+베트남,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 자료: 농수산식품부

도 한·미 FTA 발효 후 2012년 상반기까지 전년 동기대비 8.6%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대 EU 수출은 한·EU FTA 발효 후 2012년 상반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14.1%가 증가하였다.

현재 한국 농식품 수출은 일본, 미국 등 기존 시장에서 신규시장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 수출 주력시장은 한국과 식문화가 유사하고 근거리에 있는 일본, 중국(동부연안), 미국(교포중심 시장) 등 3개국이 전체 수출액의 53%(2011)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시장에서 한국 업체 간 과당경쟁 발생, 저가수출로 인한 품질저하, 현지업체와의 가격경쟁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농식품 수출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하여 중국·미국의 현지시장 진출, 러시아·EU·중동 등 적극적 신규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이명박정부는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타품목 육성을 위하여 수출전략품목 29개를 선정하여 물류비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등 전략품목 집중육성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08년 농림수산물부 출범 이후 기존의 신선농산물 위주의 수출지원정책에서 벗어나 가공식품으로까지 패러다임을 확장하였다. 가공식품은 신선농산물에 비하여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 농식품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식품 수출의 상위 품목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물류비 및 해외박람회 참가 등의 지원 대상에 식품업체들도 포함시켰다.

14. 문화콘텐츠

2008년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화콘텐츠가 21세기 국가 성장동력인 동시에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세계 5대 콘텐츠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콘텐츠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2009년에는 콘텐츠산업을 ‘대한민국 17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였고,

2011년에는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출범시킴으로써 범국가적인 콘텐츠산업 지원체계의 정비와 콘텐츠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콘텐츠산업의 수출 규모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07년의 19억 달러에서 2011년 43억 달러로 두 배 이상(126%) 확대되었다. 수출 증가율 역시 최근 7년간(2005~2011년) 연평균 21.6%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수출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였다. 특히 수출이 수입을 앞선 2008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 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콘텐츠산업은 ‘대한민국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기여한 것을 뛰어넘어 앞으로 ‘2조 달러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인 ‘선진 일류국가’ 달성을 위하여 콘텐츠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세계 시장점유율 5% 달성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의 실현을 위하여 국산 콘텐츠와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가 우선적으로 요구되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해외합작·공동제작 사례의 증가로 기획·창작, 투자·배급,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시장 진출 수요는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하여졌으며, 기업의 글로벌화에 따른 단계별 지원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러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는 2008년 11월 장르별 지원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수출 지원기능을 일원화하여 해외 진출에 필요한 종합지원을 수행하는 ‘글로벌콘텐츠센터’를 구축하였다. ‘글로벌콘텐츠센터’는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해외홍보 및 현지화 지원, 법률 및 금융상담 등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시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상시 제공함으로써 국산 콘텐츠 글로벌화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지원은 수출확대의 성과로 나타나 2008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23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특히 콘텐츠 수출액이 수입액을 앞질러 최초로 무역 흑자가 실현되기도 하였다. 수출 10억 달러를 넘어선 게임은 전체 수출액의 47%를 차지하며 콘텐츠산업 수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2009년에도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어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콘텐츠 강국’이라는 비전을 수립하였다.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시장 개척을 위한 고부가가치 콘텐츠 개발 지원,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통합적인 해외 진출 지원시스템 운영, 국산 콘텐츠의 글로벌시장 주도권 강화, 해외 공동제작 및 투자 활성화, 영세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의 과제가 추진되었다.

또한 이명박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된 콘텐츠 진흥체계의 통합정책에 따라 2009년 5월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분산되어 있던 콘텐츠 수출 지원체계의 통합이 이뤄졌다. 통합 지원체계 하에서 ‘글로벌콘텐츠센터’는 해외진출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총 168

건의 마케팅 및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콘텐츠 마켓 참가로 이어져 약 3,000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9년 달성한 수출액은 26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일본이 6억 6,000만 달러(2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중국(23.8%), 동남아(18.9%)순으로,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0년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 콘텐츠산업의 성과가 해외에 널리 알려지고, 한류의 제도약을 통한 대한민국 이미지의 개선으로 콘텐츠산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한 해였다. 2010년에도 콘텐츠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되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콘텐츠 강국'이라는 비전과 수출액 3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2010년 2월 발표된 '글로벌콘텐츠 해외진출 확대전략'에서는 '글로벌 킬러콘텐츠' 30개 육성, 미국·EU·중국·일본 등 주요 전략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세계 콘텐츠산업 본류로의 진출', 양방향·관계중심의 '신한류 문화의 정착 및 확산'을 3대 추진전략으로 하여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에 따라 통합 출범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사무소는 2010년 총 1,108건의 현지 마케팅 상담을 지원하였으며, '서울캐릭터·라이선싱페어'는 약 1,700만 달러의 계약 성과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29%의 성장을 달성하였다. 또한 'G-스타(Star) 2010'은 22개국 316개사가 참가, 총 8억 8,000만 달러의 수출 상담실적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2010년 집계된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31억 8,000만 달러로 이는 당초 목표액인 30억 달러를 다시 한 번 초과하는 성과였다.

2011년은 '콘텐츠산업의 국가 어젠다화'의 원년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출 목표 38억 달러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콘텐츠 해외진출과 한류확산을 제시하였다. 2011년 11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가 출범하고,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콘텐츠 산업은 범정부적인 국정 어젠다로 거듭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에서는 2008년 제시한 콘텐츠산업 해외진출의 중장기 발전 목표가 수정되어 2012년 수출 45억 달러, 2013년 52억 달러, 2015년 75억 달러가 제시되었다.

2011년은 K-POP이 주도한 한류가 수출성적으로 나타난 한 해였다. 유튜브와 같은 SNS, 온라인 미디어 환경의 진전은 한류의 전파 시간과 물리적·문화적 거리를 단축시켜 한류콘텐츠의 소비지역을 아시아를 넘어 중남미, 유럽, 중동 등으로까지 확대시켰다. 실제로 2010년 유튜브의 K-POP 동영상 조회수는 229개 국가에서 8억 회를 기록하였고, 2011년에는 국내 3대 음악기획사(SM, YG, JYP)의 K-POP 동영상 조회 수가 한국의 수교국보다 많은 235개국에서

23억 회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전 세계 약 31억 명이 K-POP을 통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연상한 것으로 추정하여 볼 수 있는데, 이를 런던올림픽의 전 세계 시청인구 40억 명과 비교하면 막대한 국가 브랜드 제고 효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범정부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업계의 노력으로 2011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당초 목표치인 38억 달러를 넘어 약 43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한류 확산에 힘입어 국가 브랜드 순위도 전년 대비 3단계 상승하여 15위를 기록하였다.

2012년은 대한민국 무역 2조 달러 달성의 역사를 쓰는 첫해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포스트 1조 달러 달성 전략으로서 '문화콘텐츠 수출 확대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4월에는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글로벌화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견인하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첫째, 콘텐츠산업 수출이 최근 7년간 20%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있다. 동시기 전체 산업의 수출 연평균 성장률 11.8%와 비교할 때 콘텐츠산업의 수출산업으로서의 입지는 탄탄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유는 한류의 확산이다.

한류 확산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문화수출국으로 급부상하였다. 국제사회에서 문화수출국으로서의 위상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문화콘텐츠 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는 콘텐츠 또는 한류가 연관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한류콘텐츠는 제조업, 서비스업, 관광산업 등 연관산업의 성장과 수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류스타와의 공동 마케팅 성공 사례로는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막걸리, 맥주, 식초 음료 등이 있으며 화장품, 의류,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의 수출 역시 한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한류의 주요 소비지역인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에서는 최근 3~4년간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7배의 수출 증가를 보였다.

문화콘텐츠 전체 수출입액 총괄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전체 수출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액	1,373.20	1,944.60	2,337.60	2,604.20	3,189.10	4,302.0
전 산업 대비 비중(%)	0.4	0.5	0.6	0.7	0.7	0.7
수입액	3,278.30	3,351.80	1,987.00	1,769.50	1,697.20	1,847.8
전 산업 대비 비중(%)	1.1	0.9	0.5	0.5	0.4	0.3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제2절 수출의 허리, 중소·중견기업 육성

### 1.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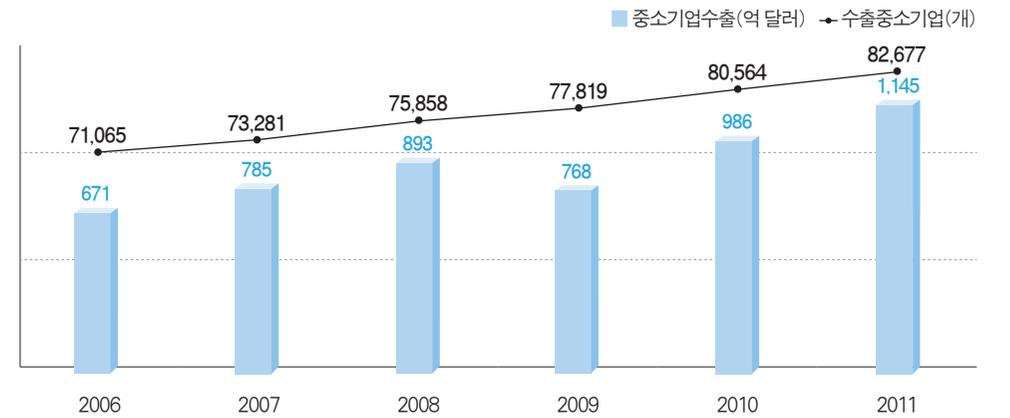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액은 2006년 671억 달러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11년에는 1,000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수출 기업 수는 5년 사이 1만 개 이상 증가하여 8만 개를 넘어서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20.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액(관세청 통관자료 기준) 기준으로서 상당수 중소기업이 수출 대기업에 납품을 통하여 수출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중소기업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우리나라가 세계 9번째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는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별·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및 질적 고도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존 100만 달러 미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으로 개편하여 수출역량별 맞춤형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수출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 내수 및 수출 100만 달러 미만 초보기업, 수출 100~500만 달러의 수출 유망기업, 수출 500만~5,000만 달러의 수출 강소기업 등 수출역량에 따라 개별기업에 필요한 마케팅 활동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중장기 패키지 지원을 통하여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나아가 5,000만 달러 이상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 운영하였다.

우선 수출 500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 중,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매년 1,000여 개 규모)하여 수출규모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하여 무역보험공사,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23개 수출유관기관의 해외 마케팅, 수출금융 등의 프로그램을 우대 지원하였다. 이를 통하여 2006년 1,188개에 머무르던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 수가 2011년 최초로 2,000개를 돌파하는 등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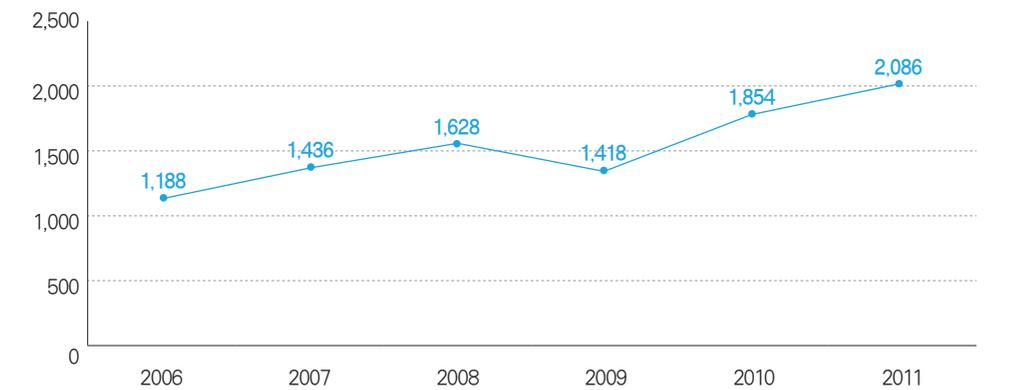
이들 기업이 다시 수출 5,000만 달러 이상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중견기업 및 대기업, 글로벌 기업으로까지 성장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5,000만 달러 이상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2010년부터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대상 기업은 수출 500만 달러

연도별 수출중소기업 수 및 수출액



※자료: 중소기업청

연도별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 수



※자료: 중소기업청

이상 중소기업 중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 CEO의 경영의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하고, 선정 기업에 대하여 R&D, 수출금융, 해외마케팅 등 기존 지원정책을 연계·우대 지원하였다.

2010년 선정기업 81개사를 1년간 지원한 결과, 기업 당 수출 증가율은 53.2%에 이르렀고, 그 중 4개사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11개사는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효과도 나타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또한 기존 수출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내수기업이 언제든지 수출 기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내외 수출지원 인프라도 든든히 하였다. 중소기업은 자금·인력·정보력 등 모든

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중소기업의 수출관련 애로를 현장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 KOTRA,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의 수출관련 전문가를 한곳에 모아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는 전국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설치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청 직원, 민간 수출전문위원, KOTRA 등 수출 유관기관에서 파견한 전문가 등 총 65명으로 구성되어 중소기업의 현장의 수출애로상담,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관리, 수출금융지원, 신용보증 및 수출보험과 보증 등 매년 6,000건 이상의 각종 수출관련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첫 수출을 시작하는 내수기업이나 수출초보기업의 경우 수출을 전담하는 인력 부족으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고도 막상 바이어와의 협상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수출중소기업의 가장 근본적 애로 사항인 통·번역을 지원하는 ‘수출중소기업 외국어(통·번역)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외국어(통·번역)지원센터는 100여 명의 무역실무와 언어구사력 등 소정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바이어 상담, 수출계약서 작성 등에 있어 필요한 외국어(통·번역)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 개소 이후 2011년까지 9,023개사에 5만 848건의 외국어(통역 및 번역)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최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유형이 복잡·다양하여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인력 활용 필요성에 따라 수출 유관기관이 보유한 전문인력과 대사관 등을 통하여 발굴한 해외현지 전문인력 등으로 중소기업 수출도우미(www.esnet.go.kr)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출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수출전문가 풀에서는 326명(국내 300, 국외 26)이 활동하고 있다. 수출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수출 애로상담 및 현장지원을 요청한 현장에 투입되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를 적기에 해결하여 준다. 특히 한·EU,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원산지 증명 등 FTA 활용극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는 FTA 원산지 전문가를 수출전문가 풀에 추가하여 FTA원산지 증명 관련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해외 현지를 누비는 해외현지 마케팅은 필수적인 과정이나 기업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현지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였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이 마케팅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을 지원하였는데, 해외전시회 등은 구매력 있는 바이어를

효과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며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표적 수출촉진 지원 정책의 하나이다. 1998년부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 대만,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에서도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해외전시회와 시장개척단은 중소기업의 업종별 단체가 주관이 되어 미국·EU 등 FTA체결국가 및 BRICs 국가와 중동·아프리카·동남아 등 틈새시장에 주로 파견되어 수출시장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초 지원을 시작한 1998~2010년까지 총 1만 8,828개사를 지원하여 65억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해외전시회 115회, 시장개척단 22회 등 총 137회 2,672개사를 파견하여 11억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2008년부터는 중소기업 수출품목별 기술·가격경쟁력 진단을 통하여 발굴한 수출유망품목 생산업체 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 해외현지 마케팅 전문기업 및 민간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수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기존의 단기간에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는 시장개척단과는 달리 타깃시장에 대한 사전 시장조사 및 홍보 등 사전준비, 전시회 참여 또는 현지바이어 상담 등 파견활동, 해외바이어 초청 추가상담 등의 사후관리의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사업추진 기간도 10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총 72개 컨소시엄을 결성, 지원하였으며, 수출성과도 약 2억 2,500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중소기업수출지원 정책들로 자리매김 하였다. 앞으로도 타깃시장별 수출 컨소시엄을 도입하는 등 사업고도화를 지속 추진하여 중소기업 수출촉진의 주요 정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트렌드는 다양화되고, 신제품 출시 경쟁이 치열하여지면서 제품의 수명주기가 단축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을 위한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마케팅이 필수적이며, 미디어 등의 발달로 현지 바이어는 신속한 제품공급·A/S 등의 요구도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현지 정보·인력·자금 부족 등으로 직접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영세한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현지 전문 회사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비즈니스가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를 위

수출중소기업 통번역 지원현황

(단위: 건, 개사)

구분	2007(6~12)	2008	2009	2010	2011	계
지원건수	2,882	7,816	12,464	15,434	12,252	50,848
지원업체수	704	1,338	2,256	2,500	2,225	9,023

※ 자료: 중소기업청

하여 정부는 대외정보 수집 및 중소기업의 현지 활동과 관련한 제도적인 애로요인 해소 등을 위하여 KOTRA의 해외현지 무역관을 확대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다양하여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수요를 1:1로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 역량을 활용하는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명박정부는 해외현지의 민간 마케팅·컨설팅 회사를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해소 및 요구사항을 지원하였다.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을 통하여 2001~2011년까지 총 2,503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그동안 수출 35억 2,300만 달러, 투자유치 2,160만 달러, 현지법인 설립 269건, 기술협력 계약체결 348만 달러 등 수출 형태별로 다양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외에도, 자체적인 해외마케팅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현지 직접 진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위하여 수출 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현지 조기 정착을 지원하였다. 수출 인큐베이터는 해외에 지사나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설립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여 현지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제공 및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회계·법률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98년 미국 시카고센터를 기점으로 2003년에 미국(워싱턴, LA), 독일(프랑크푸르트), 중국(베이징, 광저우), 일본(도쿄), 2004년에 베트남(호치민), 브라질(상파울로) 2006년에 뉴욕,

중소기업 무역촉진단 파견 현황 (단위: 개)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해외진사회	114회(1,709)	120회(1,643)	136회(2,367)	105회(2,202)	115회(2,277)
시장개척단	20회(256)	14회(458)	30회(815)	19회(443)	22회(396)
수출컨소시엄	-	15회(204)	20회(290)	23회(283)	14회(164)
계	134회(1,965)	149회(2,305)	186회(3,472)	147회(2,928)	151회(2,836)

※ 자료: 중소기업청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성과 (단위: 백만 달러, 건)

구분	2001~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수출실적	1,499	335	411	354	372	552	3,523
현지법인(지사)설립	148	44	19	19	14	25	269
투자유치	15.5	1.2	1.1	0.6	1.5	1.7	21.6
기술협력 계약체결	202	40	47	21	18	20	348

※ 자료: 중소기업청

상하이, 싱가포르, 모스크바, 두바이, 뉴델리, 2007년 청두, 2008년 멕시코시티에 수출 인큐베이터를 개설하여 현재 11개국 17개 수출 인큐베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결과 수출 인큐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경우보다 연간 1억 3,000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규 입주기업들 또한 기존 입주업체들로부터 경험과 마케팅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입주업체 간 상호 정보교류의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점과 더불어, 한국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간에 입주하여 수출상담 등의 추진 시 해외 바이어에게 공신력을 제공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당면과제 해소 및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지원정책 이외에도 글로벌 시장환경 및 마케팅 트렌드의 변화를 신속하게 지원정책에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세계무역은 전자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하였으며 현재도 그 비중이 확대되

수출인큐베이터 지원 성과 (단위: 개, 천 달러)

국가	지역	개소	수출실적				
			2007	2008	2009	2010	2011
미국	뉴욕	2006.2	24,536	27,775	15,354	12,504	25,501
	시카고	1998.9	13,399	11,228	14,835	38,048	39,483
	워싱턴	2004.3	3,596	4,450	14,620	14,789	7,104
	LA	2003.11	42,631	82,837	22,372	21,205	59,205
브라질	상파울루	2004.11	8,379	28,653	2,366	3,085	47,373
독일	프랑크푸르트	2000.4	50,025	27,830	27,236	54,202	57,844
일본	도쿄	2004.3	27,078	38,153	19,205	18,525	20,771
중국	베이징	2002.8	20,101	15,602	12,136	30,031	36,019
	상하이	2006.5	28,365	22,775	75,503	28,219	34,184
	광저우	2003.11	8,079	3,974	4,677	18,159	50,335
	청두	2007.12	-	29,307	8,005	16,750	16,481
베트남	호치민	2004.12	5,675	3,885	3,099	1,616	7,261
싱가포르	싱가포르	2006.8	10,741	12,775	4,664	7,639	22,696
러시아	모스크바	2006.9	17,740	13,833	3,014	2,522	2,641
UAE	두바이	2006.1	25,396	28,600	31,415	22,089	11,370
인도	뉴델리	2006.11	11,561	25,664	22,600	31,939	23,280
멕시코	멕시코시티	2008.3	-	3,040	10,637	10,582	9,647
11개국	17개소		297,302	380,381	291,738	331,904	471,195

※ 자료: 중소기업청

롯데마트 베이징지역과 상하이지역 상품판매전 개요

구분	베이징지역	상하이지역
판매기간	3.2~3.15	7.6~7.19
판매점포	3개	5개
업체수/품목수(개)	50/114	46/104
운영수량(개)	55,961	61,702

※ 자료: 중소기업청

고 있다.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은 거래선 발굴방법으로 1위가 글로벌 B2B 사이트 활용, 2위가 기존 거래선 활용, 3위가 인터넷 검색, 4위가 전시회 참가 등으로 조사되는 등 온라인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IT 선진국(인터넷 보급률 1위)이자 수출 강국(세계 7위)인 우리나라의 온라인 수출은 세계 20위권 후반에 불과하고 세계적 글로벌 B2B사이트 국가별 등록률도 전체 회원 수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중소기업청 주도 하에 정부합동으로 2010년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우선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글로벌 B2B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세계 1위의 B2B 사이트를 운영하는 알리바바닷컴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1년 3월에는 인도의 대표적 B2B 사이트인 인디아마트에 한국관을 개설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중국, 인도 등 거대시장을 손쉽게 공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 온라인 시장 개척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2012년부터는 이베이(ebay) 등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B2C)과 TV홈쇼핑 지원을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에 추가하는 한편 해외 전시회와 시장 개척단 참가 이전에 온라인을 통하여 바이어를 발굴, 사전 수출상담 후 파견하는 등 온·오프라인 연계지원 강화 등으로 지원성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또한 기계, 전기, IT 등 B2B 제조업 중심의 수출구조에서 탈피하여 소비재 B2C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해외 대형 유통망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실시하였다. 우선 해외에 진출한 우리 대형 유통회사의 현지 역량을 우선 활용하였는데, 2012년 상하이기에 각각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 베이징점 및 상하이점에서 한국 중소기업 상품전을 개최하였다.

종전까지는 중국시장에 진출한 한국의 대형 유통망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미국, 유럽 등에 위치한 글로벌 대형 유통망 진출을 추진하여 FTA 발효효과를 십분 활용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 2.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1960년대 이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거대기업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당면문제를 돌파하기 위하여 고부가가치 부품·장비·소재를 공급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이러한 목표 하에 이명박정부 들어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였다.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하며, 해당 정의를 2011년부터 산업발전법에 반영하였다.

### (1) 중소기업이 대규모 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우리 경제

2011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결과, 우리나라는 183개 국가 중 8위로 2010년(16위)보다 8단계 상승하여 최초로 10위권 내에 진입하였고, 세계 일류상품 405개를 보유한 세계 9번째 무역 1조 달러 달성국가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경제의 성장은 대기업 의존도가 높고, 중소·중견기업의 상대적 부진으로 산업의 허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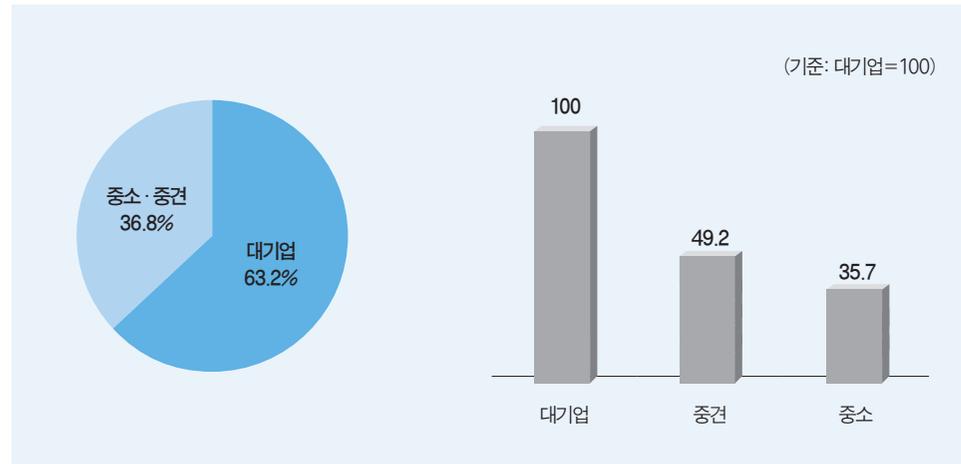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이후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속 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나, 1980년대 이후로는 새로운 대규모 기업집단이 출현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경제의 성장과 활력 측면에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의 주력산업인 조립·장치부문에 서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장비 부문에서 상대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내 중견기업은 선진국 외에 중국 등 후발국 기업과 비교하여도 성장이 부진하다. 2009년 8월 포춘지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100대 고속성장기업에 한국기업은 전무한 데 반하여 중국기업은 5개가 포함되었다.

세계적으로 1980년대 이후 IT혁명 등에 의하여 거대 기업이 계속 출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 민영화 기업(2개)과 외국계 기업(3개)만이 신규로 대규모 기업 집단(200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8개 기준)에 진입하였다. 반면, 기존 대규모 기업 집단들은 양적·질적 팽창을 지속하고 있다.

### (2) 중견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 개척의 핵심 주체

우리나라 중견기업은 1,291개(2010년 기준)로 국내 기업의 0.0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비중 및 생산성 격차(2010)



※자료: 지식경제부

대규모 기업집단의 창업년도(공기업 제외)

창업년도	1960 이전	1961~1970	1971~1980	1981~1990	1991 이후
기업집단 수	27	6	1	2	4

※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수(개): (2002) 728 → (2005) 1,002 → (2008) 1,069 → (2010.2) 1,164  
 ※ 30대 기업집단 총자산 대비 GDP비율(%): (1986) 56.5 → (1992) 67.6 → (2000) 72.6 → (2008) 88.9  
 ※ 자료: 산업연구원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고용인원 수

(단위: 명)

구분	2007	2010	증가분
대기업*	1,099,321	1,179,988	80,667
중견기업**	673,065	801,787	128,722

※ \* 2007년의 경우 62개 집단 1,176개사, 2010년의 경우 53개 집단 1,264개 기준  
 ※ \*\* 2010년 말 현재 중견기업(1,291개) 기준  
 ※ 자료: 지식경제부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액 연평균 증가율

(단위: %)

구분	2007	2010	연평균 증가율
총수출	3,714.90	4,663.80	7.88
중견기업	412.00	592.00	12.84

※ 자료: 지식경제부

경제에서 매출 350조 원(11.9%), 수출 592억 달러(12.7%), 고용 80만 2,000명(8%)으로 국내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

중견기업은 높은 성장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규모의 시장을 개척하는 향후 무역 2조 달러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기업집단이다. 국내 대기업이 2007~2010년까지 지난 4년간 8만 개(2만 7,000개/년)의 일자리를 창출한데 반하여 중견기업의 경우 12만 8,000개(4만 3,000개/년)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중견기업들은 대기업이 참여하기엔 시장규모가 작은 새로운 분야에서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창출하고 성장시키는 핵심 주체이다. 국내 중견기업 중 495개(38%수준)가 17대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대기업 진출이 어려운 틈새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여 성장하고 있다. 수출 증가율 측면에서 볼 때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지난 4년간 우리나라 총 수출은 연 평균 7.88% 증가한 데 반하여 중견기업 1,291개사의 총 수출은 연 평균 12.84%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기업과 관련한 모든 제도·정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이분법적 구조에 따라 입안, 추진되어 정부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문제가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시에 하도급, 규제 완화 등 중소기업 보호정책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중소기업 범위 내에서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3) '세계적 중견기업 육성방안' 추진

그간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중견기업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안을 업계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 정부 부처 간 의견조율 등을 거쳐 2010년 3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5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하였다. 해당 대책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도입, 중소기업 졸업촉진과 졸업기업 부담완화,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글로벌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월드클래스(World-Class) 300' 프로젝트 추진 등 5대 핵심전략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분법적 기업구조 패러다임에서 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향후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에 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중견기업 정의 및 지원근거를 명시하였다.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이 아닌 기업으로 중견기업을 정의하되, 법에는 포괄적 지원근거만 두고 정책별로 해당 법령에 별도의 추진 근거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중소기업 졸업 시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

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졸업기업 부담완화 방안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 지원제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부담완화 방식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 이후 별도의 부담완화기간(5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다. 조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1년부터 부담완화기간(5년) 동안 최저한세율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R&D세액공제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기업상속 지원대상도 중소기업에서 매출 1,500억 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되 고용증대 요건을 추가하였다.

셋째,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의 경우 중소기업 졸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증축소, 가산보증료 부과 등의 비용부담 완화 장치를 마련하였다. 부담완화 기간(5년) 동안에는 기존 보증을 원칙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가산보증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견기업 지원을 위하여 정책금융공사의 중견기업 특별 온렌딩(On-lending) 제도와 특별시설자금 제도를 활용하여 장기 설비투자, R&D 투자자금 등을 지원하고, 중견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여 중견기업이 발행하는 주식 또는 회사채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넷째, 독일식 기술혁신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간 다양한 지역 기술혁신 거점을 구축하였지만, 공급자 중심의 칸막이식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현장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1980년대 이후 독일이 지방대학과 연계된 '지역기술혁신센터'를 설립하고 기술혁신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현장에서 시작하여 현장에서 종료되는' 현장밀착형 기술혁신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기로 하였다. 기업이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근거리에서 애로기술지도, R&D전략 수립, 협력파트너 발굴, 성장 컨설팅 등 전문화된 서비스를 지원할 '기업주치의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개별 센터는 1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또는 산·학·연·관 주체가 보유한 자원을 연결하여 문제해결 시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1:1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반월·시화, 광주, 구미, 창원 등 4개 산업단지에서 435개 기업의 경영전략, 금융, 인사, 생산, 마케팅, 기술사업화, R&D 등 필수 분야 애로사항 573건 해결을 지원하였다.

다섯째, 2020년까지 히든챔피언 수준의 월드클래스(World-Class) 기업 300개를 육성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지가 강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글로벌 시장 진출 과정에서 지원수요가 큰 R&D, 전문인력, 자금,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2011년 30개, 2012년 37개 등 총 67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기업에 총 13개 지원기관의 17개 시책을 맞춤형으로 제

공하고 있다. 2011년 월드클래스(World Class) 선정 기업 30개 사의 2011년(12월말 기준) 총 상시 근로자 수는 1만 3,885명으로 선정 전년도인 2010년에 비하여 1,163명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9.1% 증가한 수치로 1년간 개별 기업 당 평균 38.8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다. 또한 30개사의 2011년 총매출은 6조 9,591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조 4,378억 원 증가하여 26% 매출액 성장을 달성하였고, 총 수출액은 4조 1,532억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조 3,653억 원 증가(전년대비 49% 순증)하여 평균 수출비중이 59.7%로 상승하였다.

이명박정부는 해당 정책을 통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자발적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동시에, 300개 수준의 세계적인 전문 중견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갈 주력선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 월드클래스(World Class) 기업의 개념

- 월드클래스(World Class) 300 기업이란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지속적 혁신을 통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기업을 의미
- ① (양적 규모) 매출액 1,000억~2,000억 원 수준에서 겪는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비교적 안정적 성장규모에 진입하는 규모
- ② (질적 특성) 혁신성, 독립성, 성장성
  - (혁신성) 누적적 혁신을 통하여 성장동력과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
  - (독립성) 특정 대기업에 계열화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장
  - (성장성) 세계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예시: 세계시장 1~3위)

#### (4) 대통령이 직접 중견기업 정책 추진성과 점검

2012년 2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견기업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중견기업정책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점검하였다.

2008~2010년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총 380개사(제조업 131개)로 자동차(20개), 전자·통신기기(14개), 기타기계(15개), 출판영상정보서비스(34개) 및 도소매업(35개)에서 주로 증가하였다. 해당 380개 기업은 일자리를 3만 5,000개 창출하였으며, 매출액은 16조 원, 수출은 23억 달러가 증가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벤처기업에서 출발하여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으로 성장한 벤처 1,000억 기업은 2011년 기준 총 315개사로 전년대비 30.2% 대폭 증가하였다. 이들 기업은 평균적으로 매출 2,070

억 원, 고용 356명, 영업이익 157억 원(평균 영업이익률 7.6%) 등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380개 중소기업 성장기업의 주요 실적

구분	2007	2010	증감	연평균 증가율(%)
고용(명)	73,821	109,320	35,499	14
매출(조 원)	25.6	41.9	16.3	17.9
수출(억 달러)	26.7	50.3	23.6	23.5

※ 자료: 지식경제부

해당 점검회의를 통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중견기업의 수출 기여도, 일자리 창출 등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중견기업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만들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지시하였다.

(5) 중견기업 3,000개 시대를 향하여

지식경제부는 2012년 5월 중견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 추진을 위하여 중견기업 정책관(국)을 신설하였다. 이후 8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130차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까지 중견기업 3,000개 이상을 육성하기 위한 '중견기업 3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확정하였다. 이 대책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진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시켰다.

첫째, 장수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상속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현재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의 기업에 대하여만 적용되던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를 2013년부터 2,000억 원 이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이 가업승계 공제를 활용할 경우, 고용유지 조건에 따라 상속 전후 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되며, 추가적 고용이 창출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둘째, 중견기업도 하도급 거래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동반성장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간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대금지급 기일, 결제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보호받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으나 향후 성과를 보아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위한 연구 인력개발 세액공제 구간을 8%로 신설

한다. 지난 2011년부터 중소기업 졸업 이후 5년 간의 연구 개발 세액공제 부담완화 기간을 신설하였으나, 2010년 말 이전 졸업기업은 3~6%의 대기업 공제율을 적용 받아 중소기업이 적용받는 25%의 공제율과는 지원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었다. 이번 공제구간 신설에 따라 기존 대기업 공제율을 적용받던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의 R&D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넷째, 중견기업에 대하여 1조 원 규모의 추가적인 자금용자를 지원하였다.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하는 다수의 정책금융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중견기업은 초기 자금난에 노출될 수 있었다.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을 중심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하여 중견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하였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별 정부지원사업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는 기업성장이력차트를 구축하고, 기업 성장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성장통 해소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기술개발, 인재확보, 경영혁신, 글로벌화 등 전방위적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첫째, 중견기업 기술력 강화를 위하여 R&D 투자를 확대한다. 지식경제부 소관 R&D 사업 중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2010년 1.6%에서 2015년 6%까지 대폭 확대하고, 중견기업이 주관 가능한 R&D 과제도 지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출연 연구소의 중견기업 대상 기술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소 및 개인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한편 기술평가와 연계한 금리 우대 등 기술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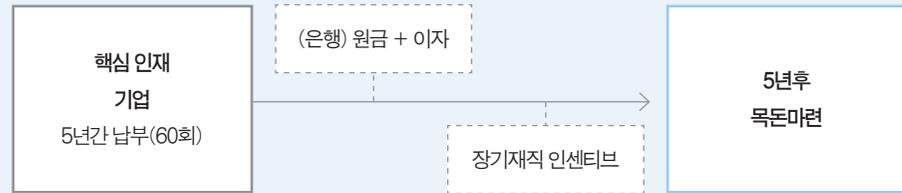
둘째, 중견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에 해당하는 인재확보도 적극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개발 인력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한 '장기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개발 인력과 기업이 5년 이상 근로를 조건으로 동일 금액을 적립하는 금융상품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구개발 인력을 '차세대 리딩 엔지니어'로 지정하고 추가적인 장기재직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중견기업의 인식 개선을 위한 '중견기업 알리미' 사업을 추진하고, 외부 인재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중견기업 기술지원 멘토단'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셋째, 중견기업 규모에 맞는 시스템에 의한 경영체제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중견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글로벌 경영혁신 지수를 개발, 보급하고 민간 주도의 경영진단 컨설팅, CEO 교육 등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채권발행, 주식상장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금융캠프를 개최하고 연기금 등의 중견기업 회사채 투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넷째, 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한 FTA 수혜업종의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장기재직자 지원 프로그램 적용예시

• 재직자 및 기업이 각각 매월 50만 원씩 적립할 경우 5년 이후에 약 7,000만 원 수준의 목돈 마련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중견기업정책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2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견기업인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여 고용·수출에서 우리 산업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기업인들을 격려하고 그간의 중견기업 육성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하였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이 두드러져 2008~2010년간 총 380개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고 벤처 1,000억 기업도 2007년 102개 대비 3배로 증가한 315개 수준에 이르렀으며, 2011년에는 사상 최대인 84개사가 벤처 1,000억 기업에 진입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견기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며 중견기업을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어 중견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을 지시하였다.



중견기업들이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킬 때

무역 2조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중견기업은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희망임

중견기업이 금융도 얘기하고 인력지원도 얘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향후 보고내용을 마련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오늘날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애국이며, 기업을 통하여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높이 평가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함

이명박 대통령, 중견기업인 오찬 간담회(2012.2.15)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중견기업 전담조직인 중견기업정책관을 신설하고 업계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중견기업 육성정책 수립을 추진하였고 이후 대통령 주재로 2012년 8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30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중견기업을 3,000개 이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견기업 3,000+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지원하는 'FTA 프론티어' 사업을 추진하고 방산 분야의 절충교역 연계사업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수출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견기업은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에 위치하며 대기업의 협력사로서 중소기업의 원사업자로서 동반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군이다. 지금까지 기업 정책은 대부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에 따라 추진되어 중견기업이 수행할 산업의 허리 역할에 대한 조명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중견기업 3,000+프로젝트'를 비롯한 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책추진을 통하여 미래 국가경제의 주역으로 중견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 제3절 해외시장, 전략적 개척

#### 1. 전략적 산업자원 협력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 무역을 주도한 소비재 수출의 확대와 함께 플랜트, 자원개발, 원전 수출 등 시스템재 수출 시장을 개척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먹을거리를 확보하였다. 지식경제부는 2011년 6월 산업자원 협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 국(局)을 확대 개편하여 실(室, 1급)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조직 신설 이후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도네시아와 콜롬비아와의 산업·에너지자원·인프라 등의 분야에 포괄적 맞춤형 산업자원협력을 통하여 협력기반을 구축하였고 미얀마, 남아공, 가나, 인도네시아 등과 고위급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정부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중앙아시아, 남미 지역과 자원개발-플랜트 복합형으로 시스템 수출 및 자원개발 계약 성사를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물꼬를 여는 역할을 하였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4강 및 EU 뿐만 아니라 중남미, 동북아, 동남아, 중동·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위주로 국가 간 정상회담을 통한 산업과 자원분야의 협력과 성과가 더욱 커졌다.

##### (1) 미국

미국은 중국과 함께 우리의 2대 시장이며, 중국 등을 통한 우회수출, 기술협력, 투자효과를 고려하였을 때는 명실상부한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이자 최대 전략시장이다. 2011년 기준

## 첫 출항한 중견기업호(號),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으로

그간 우리나라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두 종류의 기업만 존재하고 있었다. 중소기업은 보호의 대상, 대기업은 자립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순간 무한경쟁에 내몰렸다. 그러다보니 중소기업들은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지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허리가 취약한 호리병형 구조로 고착화되었다. 이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극복과 동반성장 달성, 그리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해결사로 등장한 것이 바로 중견기업이다.

그러나 중견기업 정책 추진이 처음부터 수월하지는 않았다. 한정된 정부 재원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나눌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소기업계의 시선은 곧지 않았고, 중견기업의 개념을 법제화하는데 10여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렇지만 지경부는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의 미래이자, 꿈과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중견기업 정책을 시작할 수 있었다.

특히 중견기업 전담기구로 2012년 5월에 지식경제부에 신설된 중견기업정책국은 대통령 의지의 결과였다. 같은 해 2월 중견기업 대표 80여 명을 초대하여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경부장관에게 "중견기업 전담기구가 필요하지 않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홍석우 장관은 "지식경제부 내에 중견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하려고 계획 중이다."라고 답하였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과 단위 기구로 여기 계신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겠냐?"고 반문하였다. 이는 결국 최초로 중견기업 정책수립과 집행을 전담하는 중견기업정책국이 신설되는 단초가 되었다.

이외에도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추진, 2차리에 걸친 중견기업 육성 종합전략 마련 등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중견기업 정책은 점차 속도를 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처음에 생소하였던 중견기업은 'Hidden Champion'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국민들과 업계에 그 중요성이 널리 알려졌다. 일자리 창출과 수출동력 확보를 위하여 중견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성공적으로 중견기업 호가 출항하였지만, 이는 첫 걸음에 불과하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으로,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정책과의 접근과는 다르게 유형화와 세분화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중견기업은 이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성장과 혁신 유인 부여를 통하여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이는 결코 지식경제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 아래 범 부처와 중소·중견기업 업계, 민간 전문가 모두가 소통과 진지한 고민을 통하여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향후 우리 중견기업이 'Hidden Champion'을 넘어 'Well-Known Champion'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여나갈 성장엔진이 되기를 기대한다.

- 정재훈(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제3위의 교역국이고(중국-일본-미국 순), 무역 제품은 첨단제품을 중심으로 한 '산업 내 교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1위 투자대상국이며, 미국의 대한(對韓)투자 역시 단일국가로는 전 세계 기준 1위, 전체 외국인투자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미국과의 협력을 위하여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산업협력위원회 설치, 클린에너지 분야 협력 등 양국 간 협력범위를 다양화하여 양국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한·미 FTA 발효(2012.3.15)를 통하여 한·미 동맹은 기존의 군사·안보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한·미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킨 것으로, 양국은 다원적인 전략동맹으로 그 관계가 격상되었다. 한·미 FTA를 통하여 관세 철폐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시장접근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수출 증대 및 안정적 교역기반을 확충, 제도 선진화와 투자환경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개선, FDI 확대와 기술협력을 촉진,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기업 인지도 상승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미 FTA는 발효 후 수개월이 지난 현재, 유럽 재정위기 등 어려운 대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출 및 투자 확대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외국인의 한국 투자유치 행사를 개최, 기초연설을 통하여 직접 세일즈 외교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주요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신정부의 투자환경 개선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 투자유치 성과도 거양하였다. 또한 당시 논의되던 한·미 FTA가 양국의 기술협력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기술협력 수요 발굴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한 '한·미 산업협력채널'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이외에 가스하이드레이트, 차세대 통신기술개발 등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 성과를 거양하였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등 산업·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고 투자유치에 합의하여 △스마트그리드, △친환경 미래자동차, △섬유·전자 등 주요 업종별 산업협력 증진을 위한 정부부처·해당기관 간 협력 MOU 등을 체결하였다. 또한 대통령 미국 방문을 계기로 지식경제부와 미국 상무부 간 한·미 산업협력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2010년 7월 '제1차 한·미 산업협력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세 개의 분과위원회(무역·투자/전략물자/산업기술 및 표준)로 구성된 동 협력위를 통하여 양국은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및 인체통신 등 분야별 표준화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 강화에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1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시 양국 정상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 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양국 정부가 녹색성장의 성공적인 시장모델을 제시

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지식 경제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클린에너지분야의 미래기술 개발과 이를 통한 시장 선점 및 고용창출 촉진 협력을 위하여 '한·미 클린에너지 공동연구 개발사업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는 양국 공동의 녹색성장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하여 미국 내 여러 주정부와도 스마트그리드, 바이오헬스 분야 등에 대한 협력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범위가 다양화되었다.

## (2) 중국

중국은 거대한 시장규모, 지리적 근접성 및 문화적 유사성, 저렴한 생산비용,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우리의 중요한 교역 및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교역 측면에 있어서 양국 정부는 2009년 10월 '한중경제통상비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역규모 2,000억 달러 조기 달성 및 2015년 교역규모 3,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아래 2011년 말 약 2,20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무역흑자규모도 약 479억 달러에 달하였다.

2008년 5월과 8월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하여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켜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내실화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2년 1월 정상회담을 통하여 2015년 교역규모 3,000억 달러 달성을 위하여 공동노력하고 한·중 FTA의 조속한 체결을 통한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자는 데 인식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등 에너지 분야의 호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신홍산업 간의 표준, 상호인증, 공동연구 등 분야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대중 투자에 비하여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으로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런 양국 정상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특히 동부연안에 집중된 교역구조를 동북 및 중서부로 확대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 중부 및 동북지역 국가급 투자무역박람회에 참가단을 파견하였으며, 중국 서부대개발 민관합동 조사단(2008~2009년)과 중서부 지역 투자환경 조사단(2010~2011년) 사업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사업기회를 찾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2011년부터는 협력분야를 서비스·에너지·물류 등으로 확대하여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우리기업의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 2011년에는 '한중 교역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조달 분야 상담회를 통하여 중국 프로젝트 시장의 진출을 추진하는 한편 중부 내륙(창샤 등) 지역 한국상품 판촉전을 통하여 내륙시장을 노크하였다. 2012년

에는 교역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서비스 교역대회 시에 한국관을 개설하는 등 중국 서비스시장과 ESCO·녹색산업의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였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2만 2,000여 개가 넘어(신고기준) 중국은 이미 우리기업의 제2의 내수시장이 되었으나, 중소 제조업 위주의 가공기업은 중국경제의 성장과 임금 등의 생산요소 가격 상승, 가공무역을 제한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한국기업의 무단철수 문제가 불거짐으로써 중국진출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 대응과 사회적 책임활동(CSR)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하여지고 있다.

2008년 '중국 진출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한계기업의 청산지원대책'을 발표하고 2009년 현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5대 거점 지역(베이징, 칭다오, 상하이, 광저우, 다이렌)에 투자기업 지원의 허브역할을 하는 투자기업지원센터를 KOTRA 산하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축적과 지재권보호 지원을 위한 IP 차이나 데스크(China Desk)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우리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기존 1회 개최하여오던 재중기업 경영지원 교류회를 2010년부터 연 2회 개최하여 지역별 한국 상회와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도 지원함으로써 중국 내 우리기업의 입지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끝으로 양국정상의 관심과 노력으로 한중 FTA를 개시하여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중 FTA를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한 차원 도약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며, 일부 민감한 분야 등에 신중함과 배려를 통하여 양국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3) 일본

한·일 양국은 1965년 수교한 이래 전반적으로 꾸준한 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시현하여 왔다. 일본은 한국의 제3대 교역국이자 제2위 투자국이다. 수교 이래 지속적인 대일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2011년 한·일 교역량(1,080억 달러)이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대를 돌파하였고 대일 무역적자(286억 달러)도 1998년 외환위기(85억 달러 감소) 이후 가장 큰 폭(75억 달러)으로 감소하였다. 대일무역적자 감소는 3·11 대지진(일본 석유정제 시설과 자동차 부품공장 가동중단)과 연관성이 높으나,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온 무역적자 해소노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IT 혁신제품(스마트폰), 한류상품(막걸리, 식초음료, K-POP) 등을 중심으로 일본 내수시장 진출이 확대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와 일본 제조업체의 조달 정책 변화가 맞물려 대일 소재부품 수입비중도 축소되었다(2009년 25.3%→2011년 23.5%).

최근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사업 현황

연도	주요 사업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합동 대중국 물류투자조사단 파견</li> <li>• 광산업분야 협력사절단, 내수시장개척지원 권역별 순회상담회</li> </ul>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 무역투자 정보망 개설(2009~)</li> <li>• 중국 프랜차이즈시장 진출지원, 동북아·중부 투자무역박람회</li> </ul>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광동성 무역투자포럼 개설, 중소벤처기업 내수시장 진출</li> <li>• 중국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li> </ul>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달 및 공공 프로젝트 플라자, 대형 유통기업 초청 상담회,</li> <li>• 중서부 투자환경조사단 파견 등</li> </ul>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동성 녹색시장 진출 로드쇼, 동북지역 신경협방안 마련</li> <li>• 중서부 투자환경조사단 파견, 한중 수교 20주년 산업협력 포럼</li> </ul>

또한 우리나라 전체 FDI의 12.4%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은 2011년 3·11 대지진 등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약 10% 증가한 22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2년에는 전년대비 98.4%증가한 45억 달러를 기록하여 양적으로 크게 확대하는 추세를 이어나가는 동시에 질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여주었다. 일본의 경영환경 악화 및 한국의 거대 경제권과의 FTA 등 환경개선의 영향으로 소재·부품업체의 한국진출이 늘어났으며, 일본의 내수시장 축소와 함께 한국의 소비시장 확대로 인하여 서비스업(소매유통 및 음식업) 분야의 투자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계기에 방한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양국 셔틀외교 복원에 합의하고, 2개월 뒤인 4월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 간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본격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하여 일본에 부품·소재 산업분야 등의 실질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등 양국 간 상호 협력강화를 추진하였다.

대통령 방일로 조성된 일본 기업의 대한투자 모멘텀을 활용하여 국내 4개 지역(구미, 포항, 익산, 부산진해 FEZ)에 부품소재 전용공단을 조성하고 입지, 세제, 현금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대한 일본 부품소재 기업들의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며, 입주율도 지속 상승 중이다. 이로써 일본의 앞선 부품소재 중소기업들은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국내 대기업과 비즈니스 관계를 강화하였고, 한국은 부품소재 분야의 기술개발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한·일 양국 정상 합의에 의하여 2009년부터 매년 양국 부품소재 분야 교류 확대를 위

한·일 연도별 무역현황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금액	217	240	265	264	283	218	282	397
	증가율	25.6	10.7	10.4	△0.6	7.1	△22.9	29.4	40.8
수입	금액	461	484	519	563	610	494	643	683
	증가율	27.1	4.9	7.3	8.3	8.4	△18.9	30.1	6.3
무역수지	△244	△244	△254	△299	△327	△276	△361	△286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일 연도별 투자현황

(단위: 억 달러, 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누계	
대한 투자	금액	5.4	22.6	18.8	21.1	9.9	14.2	19.3	20.8	22.9	282.6
	건수	502	557	612	584	469	460	370	422	500	11,714
대일 투자	금액	0.5	3.2	2.2	2.9	8	6.4	4.2	3.4	2.6	42.2
	건수	113	195	265	390	461	376	347	371	263	3,941

※자료: 지식경제부, 수출입은행(신고기준, 누계는 1962~2011, 1968~2011)

한 '부품소재 조달공급 전시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일 산업기술 페어, 지역 간 교류회의(큐슈, 호쿠리쿠) 등을 통하여 양국 간 부품소재 분야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은 꾸준한 셔틀외교를 통하여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 등 양국이 동시에 겪고 있는 경제·사회 문제를 극복하고 신재생에너지, 실버산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R&D(RFID 등)와 국제 표준화(스마트그리드 등)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IT, 에너지, 조선, 철강 등 여러 분야의 실무협력 채널을 가동하여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11년 5월 일본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하여 양국 기업의 제3국 인프라 및 에너지시장 공동 진출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플랜트, 인프라 등 프로젝트 시장에서 양국이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여 세계시장을 함께 개척하여 나갈 수 있도록 양국은 해외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협력 및 정보교류를 위한 한·중·일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회의, LNG 등 가스과장회의 등 협의채널을 통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나누고 있다.

(4) 러시아

이명박 대통령의 4차례(2008.9, 2010.9, 2011.11, 2012.9) 러시아 방문과 8회에 걸친 한·러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국과 러시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2008년 9월 양국 정상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함에 합의하고 활발한 교류를 추진한 결과 교역규모는 2007년 150억 달러에서 2011년 40% 증가한 212억 달러로 양국 교역량이 최초로 200억 달러를 넘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교역량은 93억 6,000만 달러(2011년)로 한국이 1위를 차지하여 러시아의 중요한 교역국으로 부상하였다.

2010년 11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러시아 경제현대화 5대 분야(에너지 효율화, 원자력, 의료기술, 정보기술, 우주기술)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 이에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2011.10)에서 한국 연세의료원과 러시아 사할린 주는 디지털진단센터 수출 MOU를 체결하여 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였고, 러시아의 국립광학연구소, IOFFE 물리연구소 등과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서울에 ‘러시아 사이언스 서울(Russia Science Seoul)’을 설립(2011.1)하여 러시아의 기초기술과 우리의 응용기술을 결합한 첨단제품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러 글로벌 공동펀드를 조성(2012.2)하여 양국 나노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2008년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남·북·러 가스관을 통한 러시아 PNG 도입 사업 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2011년 9월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스프롬은 PNG 도입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고 상업협상 중이며, 2012년 9월 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남·북·러 가스관 사업 추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러시아 전력망 현대화 사업, 전력망 연계에서의 협력도 강화하였다. 러시아가 추진하는 ‘전력산업 발전 전략 2030’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하여 현대중공업은 블라디보스토크에 고압차단기 공장을

건설(2011년 8월 착공, 2012년 가동), 러시아 전력망 현대화 사업 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0년 현대자동차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제조공장 건설을 시작으로 11개 자동차부품 업체가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쌍용자동차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자동차조립회사 솔러스에 2017년까지 약 16만여 대를 반제품방식으로 수출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동차 분야에서 협력이 두드러졌다. 또한 2011년 6월 한국의 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러시아 스콜코보 재단과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여 러시아 스콜코보 혁신센터 입주 및 공동 기술개발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있다.

(5) 유럽

2011년 7월 1일 한국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인 EU와 FTA를 발효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거대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교역과 투자 활성화, 대형 프로젝트 협력 등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였다. EU 각국 역시 한·EU FTA를 계기로 새로이 창출된 비즈니스 기회를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한국은 유망 투자유치국을 대상으로 매년 활발한 국가 투자유치 IR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최대의 대한 투자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정기적으로 한·독 투자유치 로드쇼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1년 뮌헨, 베를린 등에서 2회, 2012년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등에서 2회의 IR를 개최하였다. 이 외에도 양국이 각각 강점을 가지고 있는 보완적인 산업분야를 발굴하기 위하여 2012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화학산업 투자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술이 뛰어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네덜란드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유럽 국가들과의 꾸준한 관계 구축을 이어온 결과, 2012년 상반기에는 유독 많은 유럽 경제사절단의 방한이 이어졌다. 이탈리아는 통상 1년에 1~2개국에만 파견하는 무역사절단을 2012년 한국에만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3월 마리오 몬티 총리가 대규모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하였다. 이 외에도 북유럽 국가들의 관심이 커 스웨덴 국왕, 노르웨이 왕세자, 덴마크 왕세자 등이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하여 의미 있는 산업자원 협력을 추진하였다.

2009년 7월과 2011년 5월, 2012년 9월 3차례에 걸친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 방문은 양자 간 높은 협력성과를 도출하는 기회가 되었다. 2009년 폴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국빈 방문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폴란드 투자청 및 폴란드 산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폴란드 수출보험공사와 협력 MOU를 맺는 등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초를 닦았다. 이 외에도

한·러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억달러, 전년 동기대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	금액	38.6	51.8	80.9	97.5	41.9	77.6	103.1
	증가율	65.2	34	56.2	20.5	△57.0	85	32.8
수입	금액	39.4	45.7	69.8	83.4	57.9	99	108.5
	증가율	7.2	16.2	52.6	19.5	△30.6	71	9.6
무역수지		△0.7	6.1	11.1	14.1	△16.0	△21.4	△5.5

※자료: 한국무역협회

스웨덴에서 양국의 핵심 경제인들과 CEO포럼을 개최하는 등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1년에는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 북·서유럽 국가와 기술정책, 투자유치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하였다. 특히 덴마크 방문 시 양국은 녹색성장동맹이라는 새로운 가치동맹을 수립하여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협력 체계로서 산·학·연이 함께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수립, 공동 연구개발(R&D), 산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장기적 공동발전 체계를 구축하였다. 프랑스 방문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프랑스의 국립혁신청(OSEO) 간에 협력 MOU를 체결하여 양자 간 공동 연구협력뿐만 아니라 EU가 공모하는 다자연구 프로젝트에 한국과 프랑스 연구주체들이 협력을 수행하여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한·프랑스 산업경제 장관 회담에서 프랑스 측은 한국 측에 전략광물 분야의 공조를 제안하여 양자 간 정책 협력 및 국제 공조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12년 그린란드(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와는 자원개발 및 조선 산업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협력을 추진하였다. 특히 그린란드 자치정부 산업자원부와 지식경제부가 그린란드 자원에 관한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그린란드와 협력 채널을 개설하는 등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향후 그린란드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노르웨이 정부와는 양국의 최대 교역 분야인 조선산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친환경 조선(그린십) 개발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하여 양국이 가진 강점을 활용한 미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 (6) 중남미

중남미 지역은 주기적으로 금융 및 외채위기가 발생하여 과거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꾸준한 개혁·개방정책 추진으로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최근에는 아시아와 더불어 세계경제의 성장축으로 부상하였다. 석유, 광물 등 자원이 풍부하고 산업, 인프라 등 발전가능성이 높은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을 위하여 정부는 대통령 방문 및 FTA 체결, 산업·자원 협력채널 가동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1월 브라질, 페루 등 남미 2개국을 방문하여 와이브로 기술, 담수화 사업, 정유시설 현대화 사업, 에탄올 석유화학 공장 건설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 자원 에너지 분야의 MOU를 체결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2010년 6월에는 파나마, 멕시코를 방문하고 중미 8개국 연합체인 중미통합체제(SICA)와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한국 기업의 중미진출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기간 중 멕시코에서는 '한국 ICT Road Show'를 개최하여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하여 한국 에너지관리공단과 멕시코 전기절약공사(FIDE) 간 '에너지효율 향상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하여 2020년까지 'BAU 대비 30달러'라는 동일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양국이 녹색성장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6월 멕시코(G20 정상회의), 브라질(Rio+20), 칠레, 콜롬비아를 방문하여 다자간 협력 및 녹색경제와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양자 간 경제협력을 추진하였다. 중남미 국가들과의 에너지·자원협력을 위하여 칠레에서는 지식경제부와 칠레 에너지부 간 '그린에너지 기술 공동연구 공동합의문'을 채택하였고, 지식경제부와 칠레 광업부 간 '한·칠레 광해방지 협력 공동합의문'을 채택하였다. 광물자원이 많은 칠레는 광산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우리의 광해방지 사업에 대하여 매우 큰 관심을 표명하여 공동합의문 서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풍력, 태양광, 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여 우리의 그린에너지 기술과 칠레의 자원을 결합한 공동연구도 향후 과제 진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관에서도 '광물자원 협력 MOU', '에너지효율 협력 MOU' 등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에너지·자원협력과 함께, 녹색 에너지와 광해방지 분야로 협력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산업·자원협력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양자 간 정책 및 개발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관련 인사와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사업에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10년 9월에는 브라질, 콜롬비아와 2차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 간 무역, 투자, 기술, 표준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관심의제를 논의하였다. 자원 분야에서도 2009년 페루,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칠레와 2010년 베네수엘라와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자원 협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11년에는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와 자원협력위를 개최하여 석유, 가스 및 전략광물 개발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콜롬비아와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한·콜롬비아 기업인 협의체를 구성, 양국의 민간기업간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2012년에는 베네수엘라와 자원협력위를 개최, 플랜트 및 인프라 부문에서 4개의 MOU를 체결하여 111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고, 브라질과 산업협력위를 개최하여 투자, 녹색경제, ICT, 기술혁신 분야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2년 6월 대통령 순방 계기 개최된 칠레와의 자원협력위를 통하여 우리의 광물자원 정책 및 광해방지 사업을 소개하고 칠레의 리튬개발정책과 에너지정책을 공유하였다.

중남미 시장은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전망이 밝은 지

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우리에게서는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지역이고, 석유·가스·광물 등 자원이 풍부하며 산업 분야에서도 개발의 여지가 많으므로 앞으로의 경제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향후 적극적으로 협력분야를 발굴하고, 산업·자원협력위 등 정부채널과 민간경협위 등 민간채널을 활발히 가동하여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모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다.

### (7) 동북아

동북아 지역국가는 중국, 일본, 몽골, 대만, 홍콩 등이다. 이 중 중국과 일본은 앞서 설명하였고 대만, 홍콩 등은 산업자원 협력이 미미하므로 이명박 대통령이 순방한 몽골에 대하여만 기술한다.

동북아 내륙에 위치한 몽골은 고려시대의 대몽항쟁과 알타이 계통이라는 유사성 등 역사적으로 우리와 관련이 많다. 근래 들어 몽골은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1990년 수교가 그 결정적 계기였다. 이후 한·몽 관계는 긴밀하여져 몽골에게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는 다른 제3의 이웃국가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몽골은 석탄, 동, 폴리브덴 등 80종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2011년 경제성장률은 17%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더욱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자원부국으로서 닥치게 될 한계와 문제에 대비하여야 하는 과제 역시 안고 있어 한·몽의 협력은 자원부국과 기술강국이라는 상호보완성 외에도 전략적으로 확대될 분야가 많은 상황이다.

이명박정부 들어 한국과 몽골과의 협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간의 협력이 단순히 몽골의 부존자원에 대한 관심이었다면 2011년 8월 한·몽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식경제부와 몽골 자원에너지부는 자원에너지 포괄적 협력 MOU를 체결하여 협력분야를 광물자원 개발에서 발전소·신재생·기후변화·친환경 석탄 등 에너지 분야로 확대하였다. 앞서 2011년 3월에도 지식경제부와 몽골 자원에너지부는 청정석탄 에너지 기술협력 MOU를 맺었으며, 광해방지 분야에서도 제도건설 및 시범사업을 하는 등 몽골의 친환경적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양국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가능케 하고 있다. 물론 11차까지 이어온 한·몽 자원협력위원회를 통하여 협력의 분위기 또한 고양되고 있다.

하지만 몽골과의 산업자원 협력에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우선 양국 협력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예상되던 타반톨고이 유연탄 광산 사업이 몽골의 정치적 일정과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기업들 간의 사업구조 협상 등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점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몽골이 추진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같이 고민하고 발전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산업자원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몽골은 2012년 6월 총선을 마치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여 앞으로 협력의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몽 양국이 다양한 협력의 도전과제들을 넘어 몽골 경제발전과 한국기업 진출이라는 상호 윈윈(win-win)의 결과를 얻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 (8) 중동·아프리카

중동은 원유, 가스 등의 풍부한 자원과 오일머니로 대표되는 막대한 자금력, 대규모 SOC개발 수요, 포스트오일(Post-Oil) 시대에 대비한 산업 다각화의 욕구 등 경제협력의 요건을 고루 갖춘 세계 유일의 지역이다. 2012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의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순방은 대중동 협력 모멘텀 강화에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당시는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움직임으로 우리 국민의 유가 걱정이 커지고 있던 시점이었던 만큼 순방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에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순방기간 중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도입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에서 연이은 정상외교를 통하여 “어떠한 위기가 와도 한국에게 필요한 원유를 공급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우리나라의 제1위 원유공급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석유 대통령’이란 별명을 가진 알 나이미 석유광물부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어떤 요청과 초과수요도 충족시키겠다.”고 적극적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한·사우디아라비아 비즈니스 포럼’을 통하여 양국의 원자력·신재생 분야 협력 강화와 건설·플랜트 산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카타르는 순방 계획 초기에는 순방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소식을 접한 하마드 국왕이 대통령의 방문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일정상 카타르 방문이 쉽지 않다는 우리 측의 설명에도 하마드 국왕은 “그렇다면 내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직접 가겠다.”는 적극적 의사를 표명하여 부득불 일정을 조정하여 카타르 방문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명박 대통령 일행을 환영하는 국왕 주최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하마드 국왕은 “이렇게 즐거운 국민 행사는 처음”이라는 말을 몇 번씩 반복하였고, 한 카타르 측 인사가 “소식가로 알려준 국왕께서 저렇게 많이 드시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할 정도로 즐거운 만찬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양국의 경제협력 논의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카타르의 자본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여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하마드 국왕은 “그 사업이 무엇이든 함께 추진하자.”고 화답하였다. 또한 양국은 더 나아가 ‘고위급 전

략협의회'의 설치를 통하여 전통적 에너지 분야 협력을 넘어 과학연구, 군사안보, 스포츠, 녹색 성장 등 두 나라 사이에 필요한 모든 협력 방안을 논의하지는 데도 합의하며 양국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2009년 원전 수주를 계기로 한층 더 가까워진 UAE 방문 역시 “인접국 카타르를 방문하니 잠시라도 들러 달라.”는 왕세자의 요청에 따라 순방일정을 쪼개 만나질 동안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짧은 방문일정 동안 거둬들인 성과는 대단하였다. 정상회담을 통하여 3개 아부다비 유전 개발 본계약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한 달 후인 3월 5일 본계약이 체결되면서 한국이 유전개발의 프리미어리크라 할 수 있는 UAE에 본격 진출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순방 후 이명박 대통령은 “아프리카가 미래시장이라면 중동은 오늘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라고 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막대한 규모의 플랜트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는 자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100여 개의 종합병원과 50만 호의 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카타르 또한 월드컵 경기장을 비롯하여 700억 달러 이상의 SOC와 플랜트 건설 계획으로 분주하다. UAE는 원전 건설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나라다. 중동은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녹색산업 분야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기조로 삼아온 우리나라와 훌륭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동순방을 계기로 중동과의 협력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며 ‘제2의 중동붐’이 불고 있다. 중동지역의 국가들은 한국을 최적의 경제협력 파트너로 꼽으며, 전방위적인 협력을 바라고 있다. 단기간 내 산업화와 사회발전을 이룬 우리의 사례를 좋은 본보기로 평가하고 있고, 지난 1970~1980년대 중동붐 당시 우리 근로자들이 보여준 근면성실한 모습이 아직까지도 중동 현지인들에게 큰 신뢰와 감동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중동순방으로 중동과의 협력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며 ‘제2의 중동붐’이 불고 있다. 이를 우리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프리카 지역은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을 하자.”라는 모토를 내걸고, 개발도상국의 개발의제를 주제로 내 놓았다. 과거의 선진국이 도와주던 사회개발에만 치중한 방식이 아닌,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국의 개발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뜻을 담은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발표하였다. 당시 G20 회원국은 아니나 우리나라에서 초청하여 참석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멜레스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서울 개발컨센서스’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G20 정

상회의 초청 발언에서 ‘서울 컨센서스는 아프리카 컨센서스’라고 선언하며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듬해인 2011년을 한국 정부는 ‘대아프리카 협력강화의 원년’으로 선언하였으며, 7월에는 대통령이 직접 열흘 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3개국을 순방하고,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대학 연설을 통하여 향후 5년간 대아프리카 ODA 및 투자를 3배 이상 확대하고 한국개발경험공유사업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경험 방향을 제시하였다. 11월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개최하며 세계 최초로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의 성장을 실현한 성공신화(Success Story)의 주인공이자, 수원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적극적이고 실현가능한 세계 개발원조 정책 수립의 선두자로서 자리매김하였다.

### (9) 동남아(ASEAN)

ASEAN은 인구 6억 명, GDP 1조 8,000억 달러 규모(2010년 기준)의 거대 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며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신아시아구상’을 발표하고 아시아 각국과 맞춤형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ASEAN과의 경제교류를 확대, 강화하였다.

인도네시아와는 2010년 12월 발리 정상회담 개최 시 한국이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2011~2025)’의 주 파트너로서 참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하였다. 양국은 ‘한·인도네시아 경협위원회’를 설치(2011.5)하여 무역·투자, 산업협력, 에너지·자원, 건설·인프라, 환경협력, 농림·수산, 방산·국방, 정책·개발금융 등 8대 분야의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 추진하고 있다. 2012년 2월 양국 간 ‘마스터플랜 협력’을 전담할 상설 양자협력조직인 ‘한·인도네시아 경협사무국’을 자카르타에 설치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T50 고등훈련기 16대(4억 달러), 1,400톤급 잠수함 3척(10억 8,000만 달러) 등을 수주하고, 60억 달러 규모의 포스코 일관제철소 투자사업 등 한국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동남아의 마지막 미개척지이자 유망 투자처인 미얀마를 선점하기 위한 협력도 적극 추진하였다. 미얀마는 2011년 신정부 출범으로 59년간의 군정이 종식됨에 따라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서방 주요국도 미얀마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도 지난 2012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하였다. 이는 29년 만에 이루어진 한국 대통령의 방문이자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 첫 국빈방문으로서 이를 계기로 양국이 경제협력을 본격화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 외에도 베트남, 태국 등과의 정상외교 등을 통하여 ASEAN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ASEAN의 경제교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2007년 718억 달러였던 한·ASEAN 간 교역규모는 2011년에는 이보다 약 74% 증가한 1,250억 달러로서 수출 719억 달러, 수입 53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ASEAN은 우리나라의 2대 교역 파트너로서 한국 기업의 글로벌 생산거점이자 전략시장으로 부상하였다.

## 2. 해외 마케팅 지원

### (1) 글로벌 경제위기를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의 기회로 전환

경제위기 때마다 수출은 한국 경제의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수출 마케팅은 수출 감소세를 반전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시 개최한 대규모 종합수출상담회는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하였으며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이 급락하였던 2001~2002년에도 역시 대규모 수출상담회 'Korea Export Plaza'를 개최하여 경제위기 극복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종합수출상담회는 이후에도 경제위기 때마다 등장하여 수출 붐을 조성하였다.

2008년 리먼 사태로 본격화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세계시장의 수요가 위축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도 적신호가 울렸다. 세계시장 위축으로 인한 수출 감소는 비단 우리경제만이 직면한 문제가 아니었으나,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위협요인이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세계시장 위축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역으로 활용하여 우리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기회요인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수출 마케팅 정책을 추진하였다.

대통령 이하 수출비상 총력지원체제 하에서 해외 대형 바이어 유치를 통한 수출확대를 위하여 2009년 1월 14일 COEX에서 대규모 수출상담회인 'BUY KOREA 2009' 행사를 개최하였다. 72개국 1,200여 명의 해외 바이어들과 대기업 100여 곳을 포함하여 총 3,000여 국내 업체가 참가한 이 행사는 빈 부스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을 이루었다. 이틀간 열린 이 행사에는 영국공항국(BAA)을 비롯하여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GM과 포드, 미국의 최대 사무용품 유통업체인 오피스맥스 등 매출액 1억 달러 이상의 해외 바이어가 180명 이상 참가하였다. 정부가 펼쳐 놓은 수출 마케팅의 장에서 국내 참가업체들은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각오로 해외 바이어들에게 한국상품의 우수성을 적극 알렸다.

자동차부품을 비롯하여 기계·플랜트, 의류·섬유, 생활소비재, IT전자, 환경·신재생, 문

화·서비스, 정부조달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별 상담도 이루어져 좀처럼 보기 드문 대규모 종합수출상담회로 관심을 끌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총 6,000여 건의 상담에 8억 8,000만 달러의 계약 성과를 거두어 수출 붐을 조성하였다. 'BUY KOREA' 행사는 같은 해 9월 KINTEX에서 다시 개최되어 수출상담의 열기를 이어갔다. 이 행사에는 독일의 BMW, 스페인의 텔레포시카, 캐나다의 섹텍 등 190여 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가하였으며 온라인 상담도 이루어지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국내에서의 수출 마케팅 활동과 병행하여 해외 바이어를 찾아나가는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였다. 해외진출 공동상담회인 'Trade KOREA'는 이른바 '역(逆) 샌드위치(중국과는 품질력이 우수한 상태에서 가격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일본과는 품질이 크게 뒤지지 않으면서 가격 조건이 월등히 우수하여 한국상품의 수출경쟁력이 급반전된 상황)' 환경을 적극 이용한다는 취지 아래 추진하여 자동차부품, 소재산업, IT, 기계·플랜트, 문화·서비스, 의료·그린사업 등이 해외진출의 문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에 앞장 선 'BUY KOREA'는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개최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남북한 긴장고조로 인한 국가위험도가 수출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무역 1조 달러 이후를 대비하는 글로벌 무역강국의 위상을 대외에 표명한다는 취지 아래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아울러 KOTRA의 'BUY KOREA' 웹사이트를 24시간 풀가동하면서 '온라인 해외판로 개척 사업'을 추진하였다.

### (2)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총력지원체제 구축

#### ① 지사화사업

이명박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꾸준히 확대하여 왔다.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KOTRA 해외 무역관을 활용한 '지사화사업'을 꼽을 수 있다. 지사화사업은 해외무역관이 수출기업의 해외지사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장조사 및 수출거래선 발굴에서부터 거래성사에 이르기까지 해외 판로 개척활동을 1:1로 밀착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높이는 사업이다. 2006년 이 사업에는 1,60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하였으며, 무역관 직원 1인당 배정된 중소기업 수는 9.5개사 수준이었다. 이러한 수치가 2009년 이후에는 2,000여 개 중소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는 등 양적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직원 1인당 배정 중소기업도 7개사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질적으로도 개선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글로벌 기업화가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사화사업 참여 기업으로 중점 유치하고 있다.

### 지사화사업 성공 사례: 삼광유리공업

2010년의 지사화사업 대표사례는 삼광유리공업이 호주의 대형 백화점인 D사에 자사제품을 수출한 것이다. 삼광유리공업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내열 강화유리 밀폐용기인 '글라스락'을 생산하여 전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하는 중견기업이다. 이 회사는 시드니 무역관과 2008년부터 지사화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성과가 미미하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이렉스'나 호주의 '데코' 제품으로 인하여 현지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니 무역관과 삼광유리공업은 지사화사업을 연장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바이어들과 접촉하였다. 그 결과, 호주 대형 백화점인 D사의 1차 벤더인 S사를 접촉하여 기존의 제품과 차별화된 성능과 100% 친환경 밀폐용기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첫 수주에 성공하였다. 이 회사는 2011년 이후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 ② 해외 공동물류센터

해외에서 바이어를 찾는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물류이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수출품목은 소량인 경우가 다수이며 이로 인하여 물류비용 상승, 바이어에 대한 배송이 완료되기까지의 장시간 소요 등으로 수출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정부의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중 공동물류센터는 물류비용 절감, 소량 다품종 납품 지원, 적시 납품 지원 등에 큰 효과를 거두면서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 유통원가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들어 KOTRA 공동물류센터를 대폭 확충하였으며, 2008년 런던에 이어 2009년에 상하이, 텐진(상하이), 안트워프(브뤼셀), 도쿄, 싱가포르, 멜버른, 부에노스아이레스 등지에 공동물류센터를 추가로 개설하여 2009년 기준 12개국에 총 20개의 공동물류센터를 구축, 운영하였다. 참여업체 또한 2009년에 308개로 늘어났으며, 입고 실적도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공동물류센터의 지속적 확충과 함께 현지 시장의 특성에 맞도록 센터의 운영을 차별화하였다. EU 지역은 보세창고 운영과 통관 및 운송·재고관리 등 전문적 물류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국은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여 칭다오 물류센터를 신선 식품류 중심으로 당일통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미국은 납품 스케줄링 지원 및 현지 A/S 프로바이더 아웃소싱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었고, 시카고 물류센터는 온라인 유통망과 연계하였으며, LA 물류센터는 현지 A/S 아웃소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였다. 이처럼 운영을 차별화한 결과,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고객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 2009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7.7%가 납기일 단축, 물류비 감소 등의 수출업무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공동물류센터는 우리의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흐르는 수출 대동맥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발전시킨 복합·토털 물류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물류센터의 확대 및 실적 제고에 힘쓰고 있다.

### 공동물류센터 활용 사례

- 고급 도자기의 본산 영국, 한국 도자기에 눈뜨다!  
2010년에는 한국 도자기가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하여 영국의 유명 백화점에 진출하였다. 한국 도자기는 2009년 12월 런던 공동물류센터에 가입하고 2010년 4월 해롯백화점 입점에 성공하였으며 예상보다 높은 매출에 고무되어 지사화사업에도 가입하여 본격적인 추가 바이어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 수명주기 짧은 태블릿 마켓, 적시공급으로 뚫는다.  
2011년에는 암스테르담 무역관의 지원 아래 한택옥산이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하여 태블릿 PC 시장에 진출하였다. 한택옥산은 현지 바이어와의 미팅에서 공동물류센터와 공동A/S센터를 활용하여 제품의 품질은 물론 적시 공급 및 A/S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유럽시장에 진출하였다.

### ③ 무역사절단, 수출상담회 및 해외전시회

2008년 4월 해외 마케팅 지원창구 일원화 조치에 따라 KOTRA의 국내무역관이 폐쇄되었지만 종전에 국내무역관에서 수행하여오던 고유 업무인 무역사절단 및 수출상담회는 지방의 중소기업이 해외 바이어를 발굴하고 접촉하는 일차적인 수단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무역사절단 참가 중소기업 모집 등은 지자체와 각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 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으며, KOTRA는 해외 바이어 발굴 및 해외 현지에서의 무역사절단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외수출 마케팅 활동의 효율화를 추진하였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환경 속에서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무역사절단 파견 확대'와 '지방 수출상담회의 내실화'를 중점과제로 삼아 추진하였다. 해외 마케팅 단일창구인 KOTRA를 통한 무역사절단 총 파견 횟수는 2008년 193회에서 2009년 이후 매년 210회를 상회하였으며, 이중 지방 중소기업을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은 평균 150회 이상에 달하였다.

시장별로는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기회가 많은 신흥시장 중심으로 파견이 확대되었으며,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참가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참가업체의 만족도를 높였다. 무엇보다 2011년부터 스마트 CRM을 구축하여 무역사절단의 파견 일정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매뉴얼도 표준화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성과 중심의 지방 수출상담회 개최를 위하여 빅바이어 위주로 초청하고 지자체와 상담회 수립 단계부터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였다. 또한 2012년 하반기 수출부진 타개를 위하여 10월 이후 추가 재원 80억 원(예비비 50억 원, 기존사업 구조조정 30억 원)을 활용하여 국내·외 29개 마케팅 사업을 추가 지원하여 단기간 수출을 극대화하였다. 국내에서는 글로벌 바이어 및 대형 발주처 300개사가 참여하는 'Global Business Plaza'를 서울 및 4대 지방권역(창원, 광주, 대전, 원

주)에서 개최하고, 한상, 화상, 아세안 유통망 등 해외바이어를 11월까지 6회 초청하는 한편 해외에서는 주력·신흥·전략시장별 특성화된 해외마케팅을 추진하여 중국에서는 내륙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한국상품전을 3회 개최하고, 일본 부품소재 아웃소싱 시장개척단 파견을 2회 실시하였으며, 나아가 한·미, 한·EU FTA 수혜품목의 시장 확대를 위하여 자동차부품전(미국, 독일), 섬유패션전(뉴욕) 등을 지원하였다.

중소기업이 해외 바이어를 만나고 수출 마케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해외전시회 참가는 가장 유효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KOTRA에서 주관하는 매년 약 100회의 해외 전시회에 직접 참가하는 중소기업은 연간 2,000여 개사에 달한다.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해외전시회의 한국관에 참가하여 시장개척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 ④ 엑스포

사라고사 엑스포(2008.6.14~9.14)는 ‘물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104개국과 국제기구 및 세계 NGO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스페인에서 개최되었다. 140만m<sup>2</sup> 규모의 사라고사 엑스포는 ‘물’에 관한 쟁점들을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콘셉트로 표현하였다. 1,800m<sup>2</sup> 규모의 한국관은 한국의 자연, 문화, 기술을 전시한 전시관, 국내 기술을 이용한 첨단 영상관, 문화상품의 전시 및 판매장인 문화코너 등으로 구성하였다. 전시관은 물을 대하는 마음을 소재로 하여 ‘환영의 장’, ‘아쿠아 극장’, ‘투영하는 물’ 등으로 구성하여 다양성과 일관성을 동시에 보여 주어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사라고사 엑스포의 총 관람객은 565만 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13%에 해당하는 71만 명이 한국관을 방문하여 현지 언론에 인기관으로 소개되었다.

상하이 엑스포(2010.5.1~10.31)는 159년 엑스포의 역사에서 최대 및 최고의 기록을 다수 양산한 엑스포였다. 엑스포장 전체 면적부터 여의도의 2/3에 달하는 5.28km<sup>2</sup>로 역대 최대였으며 190개국, 56개 국제기구, 18개 기업관, 16개 도시관이 참가하여 역시 최대 규모의 기록을 경신하였다. 관람객은 7,308만 명에 달하여 종전의 기록을 갈아치웠고, 이 중에서 외국인이 전체 관람객의 5.8%인 423만 명이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생활’을 주제로 내건 상하이 엑스포에 세계 각국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대규모로 참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조화로운 도시, 다채로운 삶’을 주제로 6,160m<sup>2</sup> 규모의 한국관을 건립하였다. 개막식에는 최대 경제 파트너인 중국과의 우호증진의 의미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였다.

한국관은 한글의 자모를 이용한 독특한 외관부터 눈길을 끌었으며,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 스타들이 대거 참가하는 등 국가의 역량을 결집한 자리로 꾸며졌다. 이처럼 다방

면에 걸쳐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한국관은 당초 목표인 600만 명을 초과하여 725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4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입장할 수 있는 최고 인기관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한국관은 BIE의 국가관 평가에서 건축부문 은상을 수상하였으며, 관람객들이 가장 기념사진을 찍고 싶은 장소로 불릴 정도로 행사 기간 내내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특히 한국관은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수출증대 및 관광유입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3) 산업별 해외 마케팅 노력

2011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수출 마케팅도 다각화된 접근하여 산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수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여 추진하였다.

##### ① 부품소재산업

2008년부터 부품수출의 대형화를 추진하였다. 무역사절단 파견을 통하여 해외의 주요 완성차 및 글로벌 벤더를 대상으로 단독상담회를 개최하는 ‘코리아 오토파트 플라자(Korea Autoparts Plaza)’는 금융위기로 북미 OEM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유럽 등으로 A/S부품 등 대체시장 개척에 나섰다. 이에 따라 2008년에는 코리아 오토파트 플라자(Korea Autoparts Plaza)가 미국(3회), 유럽(3회), 캐나다(1회), 중국(1회) 등지에서 총 8회 개최되었다. 이로써 종전에 북미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부품 공급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지역과 중국과 러시아 등 이머징 마켓으로 확대되었다.

자동차부품의 글로벌 아웃소싱은 그동안 난공불락으로 남아 있던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를 상대로 2009년 9월 전시상담회를 개최하면서 한 걸음 더 내디뎠다. 시장개척을 위하여 KOTRA 나고야 무역관은 2007년부터 도요타를 상대로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지만, 도요타 측에서는 기존의 협력업체들이 동요한다는 이유로 참가를 거절하였고 이후에도 번번이 거절당하였다. 도요타는 부품납품 관련 거래선을 자국 내의 1차 벤더들로 한정하고 있었고, 끊임 없는 ‘가이젠(개선)’을 통한 품질개선을 강조하는 등 선정 요건이 매우 까다로웠다. 이런 환경에도 KOTRA는 2009년 1월 국내 62개 업체가 보유한 92개의 신기술·신공정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단한 노력 끝에 같은 해 5월 도요타 측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40개의 최종 참가업체를 확정하였다. 이 행사에는 도요타 및 협력업체 등 총 2,200여 명이 참가하였고, 특히 도요타의 최고경영진도 참석하여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 행사를 통하여 전장부품 및 시스템, 구조 및 단조, 사출성형, 소재 등의 분야에 걸쳐 총 39

### 글로벌 바이어, 한국 자동차부품에 눈뜨다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아웃소싱의 붐을 타깃으로 하여 추진된 부품수출의 글로벌화는 이처럼 사업의 대형화와 글로벌 바이어 유치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다. 이들 행사에 매년 참가하는 주요 바이어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다. 글로벌 기업들의 원가절감을 위한 아웃소싱 추세를 이용한 부품수출 촉진사업은 바이어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GM의 총괄구매담당은 “GM이 선정한 세계 우수 부품기업 97곳 중에 한국 기업이 17곳이나 되며, 한국은 기술의 빠른 변화에 맞게 제품 생산도 빠르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포드(Ford)의 자동차부품 바이어들도 “그동안 포드(Ford)는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을 통하여 한국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였지만 품질이 좋고 가격도 저렴하여 2008년부터 직접 구매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계약체결 및 견적의뢰 등의 구체적인 성과도 적잖았다. 도요타와의 협력사업은 2011년에 재개되어 국내업체 34개사와 바이어 2,400명이 참가하여 약 1억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사업을 정리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밖에도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침체를 타파하기 위하여 개최된 대규모 수출상담회인 ‘바이코리아(Buy Korea)’를 통하여서도 자동차부품의 글로벌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여 나갔다. 2010년부터는 자동차부품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한 차원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글로벌 완성차 및 벤더와의 협력사업 강화와 그린카(Green Car) 해외 마케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동차부품의 전략 마케팅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마케팅 체계 아래 글로벌 완성차 및 벤더의 직접 공략을 위하여 코리아 오토 파트 플라자(Korea Autoparts Plaza)를 글로벌 기업과의 직수출 통로개척을 지원하는 단독 전시상담회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부품소재 분야의 상담회는 신기술 부품의 해외 마케팅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 ② 기간제조산업

2000년대 중반 이후 기계·플랜트 분야는 글로벌 중전기 분야 EPC 업체와 송배전기 납품업체 간의 통합 발주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급증하였다. 이처럼 플랜트 업체와 기자재 업체들 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 진출의 필요성이 증가하자 2008년 7월에는 플랜트산업 협회와 한국전기산업진흥회 간의 해외 동반진출을 위한 MOU가 체결되었다. 이런 환경 속에 KOTRA를 통하여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는 수출시장 선도전략을 수립, 추진하였다. 이 전략의 골격은 중전기기와 플랜트 산업을 융합하여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플랜트 업체와 기자재 업체들 간의 공동 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전의

내수 중심의 전시회를 국제전시회로 육성,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2008년 5월에 ‘글로벌 파워테크(Global PowerTech)’를 개최하였다. 중전기기와 플랜트 산업을 융합한 최초의 전시회인 이 행사는 KOTRA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와 협력하여 전시회와 연계한 수출상담회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글로벌 전력 및 원자력 업체가 다수 참가하였다. 인도의 이사르(Essar) 그룹, 코스타리카의 ICE사, 일본의 관서전력 및 중부전력, 인도네시아의 전력공사(PLN), 사우디의 국영전력공사(SEC) 등 글로벌 바이어들을 대거 유치하였으며, 기자재 구매 예상 물량은 3,000여 개 품목, 20억 달러에 달하였다.

아울러 한전 등 주요 발전회사를 비롯하여 국내외 20개국 250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전력 IT 콘퍼런스, 태양광 발전설비 기술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동시에 개최되어 국제행사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사업성과도 커 D중공업은 이스라엘 전력공사와 5억 달러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글로벌 파워테크(Global PowerTech)’은 2년차인 2009년에 더욱 성대히 개최되었다. 각국의 전력회사를 비롯하여 정부 발주처, 글로벌 바이어 등 전 세계 20개국의 110개사에서 참가하여 730여 건의 수출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불가리아 전력 기업인 NEC와의 대규모 수출상담이 이루어져 원전 수출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글로벌 파워테크(Global PowerTech)’를 통하여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전략지역 별로 수출 로드쇼(Power Plaza)를 개최하였다. 중동, EFTA 지역, 아시아, 중남미 등지에서 개최된 수출 로드쇼의 성과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2010년에는 전력산업, 조선·항공우주산업, 금형·기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에 집중하였다. 전력산업은 국내 전력 수요의 둔화로 내수시장이 한계에 봉착함(2010년 1.4% 성장)에 따라 전력산업의 수출화가 선결과제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전력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 로드쇼(Global Electric Power-Plaza)’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중동, 인도, 아프리카, 미국 등지를 순회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개최하였다. 이 밖에도 국내 최초의 스마트그리드 해외 마케팅 사업으로 ‘EU·한국 스마트그리드 파트너링 포럼(EU·Korea SmartGrid Partnering Forum)’을 개최하였다. 2010년 6월 핀란드(헬싱키), 스페인(마드리드), 영국(런던)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국내 업체 17개사가 참가하여 214건의 수출상담과 4,300만 달러의 계약실적을 거두었다. 조선·해양 기자재는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으로 내수에 의존한 성장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수출을 통한 새로운 활로 모색이 요구되었다.

이에 2010년 ‘네덜란드 조선기자재 수출 상담회’와 ‘국제 조선해양 산업전’과 연계한 ‘글로벌 마린테크(Global MarineTech)’를 창원에서 개최하였다. ‘글로벌 마린테크(Global MarineTech)’에는 바이어 71개사와 국내업체 128개사가 참가하여 481건에 2억 4,8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미래형 전략산업인 항공·우주부품의 해외마케팅을 위하여 2010년에 ‘한·미·일 에어로테크(Korea·USA·Japan AeroTech)’, ‘한일 항공우주 파트너링 플라자’ 등의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다. 2011년에는 대·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진출을 위한 상생 마케팅에 집중하는 한편 전략분야의 신흥시장 선점을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미래전략형 사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였다. 먼저 대·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진출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상생 마케팅을 지원하였다. KOTRA를 중심으로 하여 한전 및 발전 6개사와 유관기관이 함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한 이 사업은 중소기업체와 대기업의 역할 분담에 의한 성과 공유 및 시너지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 ③ 생활소비재산업

섬유·패션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FTA를 활용한 선진국 시장 공략과 동시에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한류지역 및 신흥국 시장 개척을 추진하였다. 우선 FTA에 대응하여 한국-EU-미국을 잇는 3각 섬유수출 벨트를 구축, 프리미엄급 전문전시회 참가 및 단독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선진 글로벌 기업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확대하여 나갔다. 이의 일환으로 북미에서는 패션의 중심지인 뉴욕의 프리미엄 전시회에 한국관으로 참가하고 단독전시회를 개최하였다. EU에서는 유럽 최대의 프리미엄 전시회인 ‘밀라노 유니카(Unica)’의 개최 시기에 맞추어 ‘밀라노 한국섬유전’을 처음 개최하였다. 또한 한국에서는 국내 최대 섬유전시회인 ‘프리뷰 인 서울(Preview In Seoul)’의 국제화를 위한 바이어 유치를 지원하였다. 정부는 한류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한류 패션 로드쇼와 섬유 무역사절단 파견도 추진하고 있다. 한류 패션 로드쇼는 중국 내수시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2011년 타이베이·홍콩(7.4~8), 청두·광저우(10.24~28), 시안·항저우(11.21~26)에서 개최하였다. 섬유 무역사절단 파견도 2010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중남미(보고타, 5.16~26), CIS(모스크바·바쿠, 6.27~7.2), 아시아(다카·양곤, 9.17~25), 동유럽(소피아·자그레브, 11.21~25), 중동·아프리카(알제리·테헤란, 12.11~15) 등 유럽과 미주 지역을 제외한 권역으로 파견하였다.

식품을 포함한 생활소비재 전반에 대한 해외 마케팅 지원활동은 2000년대 후반 들어 더 체계화되었다. 무엇보다 아시아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한류 마케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에 중국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인 ‘알리바바’ 공약을 통한 중국 내수시장의 진출을 추진하였다. KOTRA를 통하여 2009년 8월 알리바바 내 온라인 한국관을 개설하여 5개월간 시범 운영하면서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화장품 등 한국의 브랜드 제품을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성공적인 시범 운영을 마친 후 2010년 1월 KOTRA-알리바

바 간 MOU를 체결하고 한국관의 규모와 상품 수를 대폭 늘렸다. 생활소비재의 수출 지원은 2010년 글로벌 유통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추진되면서 보다 활성화되었다. KOTRA는 ‘1무역관-1유통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한국 상품의 수출창구로 활용하고 브랜드 가치 제고와 한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소비재 수출의 양적 확대는 물론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한다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2011년 기준, 글로벌 소매유통업체를 개별 초청하여 총 7회의 상담회를 갖고 현지 유통기업 37개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대규모 종합수출상담회(Buy Korea)와 국내 최대 소비재 전시회(G-Fair) 등 대형사업과 연계하여 소비재 유통 글로벌 전문 바이어의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④ IT산업

IT산업에 대한 해외 마케팅 지원은 2008년 4월 정부의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창구 일원화’ 조치에 따라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에서 운영하던 ‘해외IT지원센터’를 7월에 KOTRA로 이관하면서 해외 IT마케팅 지원창구를 일원화하였다. 국내의 대형 IT전시회와 연계하여 사업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꾀하는 한편 해외 주요 권역별로 IT 유통망에 대한 타깃 마케팅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IT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여 나갔다. 이의 일환으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8년 10월 한국전자대전(KES)과 연계한 수출상담회를 대규모로 개최하였다. 기존의 한국전자전, 국제반도체대전, 국제정보디스플레이전을 통합하여 처음 개최된 이 행사는 아시아의 주요 IT·전자 전문전의 일정과 연계하여 치러져 해외 바이어 유치의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우리나라 최초의 글로벌 모바일 국제 콘퍼런스 및 이동통신 전문 전시상담회인 ‘글로벌 모바일 비전(Global Mobile Vision)’을 개최하고 이후 매년 정례화하였다. 이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이동통신 사업자를 비롯하여 네트워크 장비업체, 단말기 제조업체, 솔루션 공급업체 등을 망라하여 25개국의 103개 해외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콘퍼런스에는 국내 450여 개사가 참가하여 총 513건의 상담과 4억 6,500만 달러의 상담성적을 남겼다. 2009년에는 첨단 IT분야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수출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먼저 수출직결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 4대 IT 수출시장의 전문 유통업체를 집중 공략한다는 취지로 주요 지역을 순회하면서 ‘코리아 프리미엄 테크 플라자(Korea Premium Tech Plaza)’를 개최하였다. 기존의 ‘코리아 테크 프리뷰(Korea Tech Preview)’를 확대한 이 행사는 5월 EU, 7월 캐나다, 9월 중국, 11월 미국에서 각각 개최되어 현지의 주요 바이어들과 상담이 이루어졌다. IT 수출 마케팅 사업과 병행하여 KOTRA를 통하여 기능별 및 지역별로

수출 애로사항에 대하여 긴급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외에서는 IT 수출 3대 핵심지역인 미국, 중국, 일본에 '해외 IT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기타 주요 IT 지역에는 현지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IT 인력거점센터'를 개설함으로써 현지 마케팅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09년 IT 융합산업을 선도적으로 개척하기 위하여 같은 해 10월 최초로 'IT 융합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IT산업의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둔화(1997~2001년 22.5%에서 2002~2006년 9.2%로 저하)되고 있는 상황을 맞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타 산업의 IT 수요를 확대하는 한편, 보다 전략적인 IT융합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추진되었다. IT융합 전시회는 자동차, 조선, 의료, 전력, 건설 등 국내의 전통적인 제조 산업에 IT를 접목한 첨단 IT 융합기술과 상용화 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국내업체 175개사와 24개국 137개사의 바이어가 참가한 가운데 920여 건의 수출상담이 이루어졌으며, 국내 기업 및 학계의 400여 명이 콘퍼런스에 참가하여 IT융합에 관한 최신의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2010년에는 IT 수출상담회, 해외 IT전문전시회 참가, IT 무역사절단 파견 등의 사업을 내실화하여 성과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브랜드 파워와 홍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IT 온라인 마케팅 지원도 강화하고, IT 투자지원 및 IT 정보조사도 강화하는 등 지원 인프라를 다졌다. 특히 2010년에는 모바일 분야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은 '글로벌 모바일 비전(Global Mobile Vision)'을 향후 아시아권을 대표하는 국제 모바일 전시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 아래 'G20' 공식 후원행사를 개최하였다. 2011년에 들어서도 IT 수출기반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먼저 토털마케팅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IT 전략품목의 해외시장 조사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중소 IT 기업인의 해외진출 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하여 유망 IT기업의 CEO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IT CEO상'을 제정,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모바일 비전(Global Mobile Vision)'은 2008년 첫 회 이래 수출상담회 형태로 줄곧 호텔에서 개최하여왔으나, 2011년에는 KINTEX에서 개최함으로써 전시회 형태의 사업으로 확대, 발전하면서 국제적인 모바일 전문전시회의 위상을 다져나가고 있다.

#### (4) 미래전략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

##### ①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의 수출지원은 2008년에 15개 해외거점 무역관을 지정하고 타깃 분야를 선정하는데 이어, 2009년부터 수출동력화에 주력하면서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당시 한류는 세계 전역

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대중문화 중심에서 벗어나 한식 및 한의술 등 신규영역으로 확산되는 한편 시장 또한 중화권의 침투가 심화되는 동시에 중동 및 남미 지역으로 확대되어 지역별로 보다 전략적인 수출 마케팅이 요구되었다. 이에 KOTRA에 2009년 8월 미래산업 분야를 전담하는 전략사업본부를 신설하고 한류 마케팅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먼저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콘텐츠 전시상담회인 'KMCM(Korea Media & Contents Market)'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국내 업체들이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소니엔터테인먼트, THQ, 빅포인트 등 30개국 180개사의 해외 바이어를 유치하여 적잖은 상담계약 실적을 올렸다. 이를 발판으로 12월에 세계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심지인 할리우드 공략을 위하여 현지에서 KMCM을 개최하였다. 2010년 3월에는 KOTRA와 유럽애니메이션필름협회(CARTOON) 공동으로 '카툰 커넥션 2010(Cartoon Connection 2010)'을 제주도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행사는 유럽 40여 개 애니메이션 제작사 및 방송국과 국내 53개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참여하여 한국 애니메이션의 국제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고, 45억 달러 규모의 EU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2011년 5월에는 한·EU 카툰커넥션(Cartoon Connection)이 송도에서 개최되어 3억 7,800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올렸다. 이어 2012년 3월에는 부산에서 제3회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3년 동안 더 개최하기로 EU 측과 계약을 맺어 연례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한류의 열기를 확산하는 행사가 동남아에 이어 유럽에서 연이어 개최되었다. 2010년 10월 22~24일 '한류스타 라이선싱 상품박람회(Korea Entertainment Expo 2010)'를 태국 방콕에서 개최하였다. 국내 기업 45개사와 태국 및 아시아 12개국의 바이어 300개사가 참가하여 열린 이 행사는 한류스타 부가상품과 관련한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미용, 패션 등 문화상품에 대한 상담의 장이 되었다. 이어 2011년에는 K-POP이 세계 전역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자 12월에 한류서비스 종합전인 'KB&E EXPO(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를 파리에서 성대히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한류스타의 부가 및 관련 품목을 소재로 개최된 유럽 최초의 행사로, 문화를 경제 수출로 연결시킨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식경제부, KOTRA,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주관하였다. 이 밖에도 한류 패션의 세계화를 위하여 일본 및 중국 로드쇼를 활발히 개최하고 프랜차이즈와 한식의 결합, 의료서비스와 한의학의 결합을 추진하는 등 한류를 수출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 ② 의료, 바이오, 그린사업

의료·바이오산업에 대한 수출지원은 2007년 미국에서 '코리아 바이오-비즈 데이(Korea Bio-Biz Day)'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인도, 베트남 등에서 로드쇼를 잇달아 열고, 2008년부

터 ‘글로벌 바이오 테크 포럼(Global Bio Tech Forum)’을 개최하여 글로벌 제약회사의 공약을 전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글로벌 바이오 테크 포럼(Global Bio Tech Forum)은 14개의 글로벌 제약사를 포함한 127개의 해외기업과 67개 국내기업이 참가하여 상호 기술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가 되었다. 2009년에는 코리아 바이오-비즈 데이(Korea Bio-Biz Day)와 글로벌 바이오 테크 포럼(Global Bio Tech Forum)의 연계가 강화된 가운데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계약 체결 등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 8월에는 의약·바이오 및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기술협력을 증진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신흥시장 개척을 위하여 ‘글로벌 바이오 & 메디컬 포럼(Global Bio & Medical Forum)’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국내 376개사 및 글로벌 기업 71개사 및 해외 33개국에서 바이어가 참가하여 41억 달러에 이르는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특히 유망 바이어를 선별하여 유치하고, 사전에 협력수요에 대한 매칭을 통하여 성과를 내실화함으로써 이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마케팅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그린산업의 수출을 위하여 ‘미래의 그린오션’인 신생 그린에너지 시장공략을 위하여 환경에너지와 관련한 대형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그린마케팅 공략기반을 조성한 데 이어 독일, 북미, 중국 등지에서 ‘그린테크 로드쇼’를 개최하였다.

특히 같은 해 9월에는 녹색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세계적인 풍력발전 기업인 베스타스(Vestas) 본사에서 ‘윈드-파워 파트 플라자(Wind-Power Parts Plaza)’를 개최하여 2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파트너링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유망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국내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지원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2008년에 해외의 주요 프로젝트와 네트워킹을 실시하고, 2009년에 중국 환경 로드쇼 및 신흥 환경시장 무역사절단 파견 등 유망지역을 대상으로 타깃 마케팅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KOTRA를 통하여 1,000만 달러 규모 이상의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및 그린산업 프로젝트의 발굴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0년 ‘그린 프로젝트 플라자(Green Project Plaza)’를 개최하고, 세계 최대 녹색시장인 중국 내륙지역에 7곳의 무역관을 확충하였다.

### ③ 정부조달

세계 정부조달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정부조달 유력 벤더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KOTRA와 세계은행간 민간연락관(PSLO: Private Sector Liaison Officer) 협약을 체결하여 세계은행을 통한 전 세계 개발 프로젝트의 참여를 추진하였다. 해외 정부조달사업은 2009년 들어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기에 들어섰다. 미국 및 UN 주력시장 진출 마케팅사업의 고도화, 영국·중국 등 유망전략시장 신규진출 확대, 해외 조달지원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다. 먼저 미국 및 UN 주력시장 진출 마케팅사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2009년 11월 ‘북미 프라이머리 정부조달 플라자’를 개최하였다. 북미 프라이머리 정부조달 플라자는 COEX에서 개최되어 신재생에너지, 그린·IT, 교통인프라, 통신보안 분야 등 북미 프라이머리 52개사가 참가하였다. 이 행사는 록히드마틴, 스칸스카 등 1억 달러 이상 글로벌 프라이머리 16개사를 유치하여 국내 벤더와 복합 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협력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성공사례도 창출되어 로템은 2009년 6월 BAA 탑승교의 납품(2,700만 달러) 성공을 계기로 공항기자재 해외 공공조달 진출 선도 모델을 구축하였다. 로템은 BAA를 통하여 히드로 공항 탑승교를 납품한 이후 독일 및 모로코 공항 등으로 진출을 확대하였다. 또한 해외 조달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KOTRA에 2009년 5월 UN 조달지원센터(뉴욕 무역관 내)와 미국 정부조달지원센터(워싱턴 무역관 내)를 각각 개소하였다. 국내 기업의 UN 및 미국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따라 지원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설립된 조달지원센터는 벤더 등록대행 및 지원, 입찰정보 제공, 컨설팅 등의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연계 조달사업을 개최하여 센터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국내 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전략거점이 되었다. 2010년에는 미국 및 국제기구 진출지원 확대를 위한 주력 시장의 마케팅사업 브랜드화, 유망 전략시장 진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가능 테마형 조달사업의 개발 확대, 미래 전략시장에 대한 인프라의 구축을 핵심과제로 추진하였다. ‘미국 정부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전개하여 2010년에 총 15개사 중에서 9개사가 220만 달러의 계약실적을 올렸다.

그리고 미국 정부조달 IT전문전시회(FOSE)와 세계 최대 육군전시회인 미국 방산박람회(AUSA)에 한국관으로 참가하였다. 2011년에는 공공조달 지원 플랫폼 구축, 전략 조달시장 개발 및 확대, 해외 공공조달 지원시스템 강화를 중점과제로 삼아 추진하였다. 먼저 UN 및 MDB(다자개발은행) 조달시장의 진출 지원을 위하여 국내 기업 100개사(2012년 200개사, 2013년 300개사로 확대)를 선정하여 벤더 등록에서부터 정보입수-입찰참여-응찰-낙찰에 이르는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하였다. 또한 KOTRA를 통하여 2011년 70개사를 UN 신규 벤더로 등록하였고, 총 2,000건의 정보 입수 및 입찰참여 지원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KOTRA는 국제기구와의 설명회 및 상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조달시장 진출의 저변을 확대하여 나갔다.

### (5) 포스트(Post) 무역 1조 달러 시대 마케팅 전략

2011년 12월 5일 역사적인 무역 1조 달러 달성 이후에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향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 무역 2조 달러에 걸맞은 마케팅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출마케팅 대표기관인 KOTRA의 체제도 다시 정비하였다. KOTRA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이명박 대통

령을 모시고 2012년 6월 14일 서울 연곡동 본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역할 비전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국내외 비즈니스 주체가 상호 협력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여 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하여 수출지원 체계를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효율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투자진출 지원 등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녹색, 의료 등 새로운 분야의 해외 시장개척을 통한 수출품목 다변화, 중동·아프리카·CIS 등 새로운 신시장 개척 등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하여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하여 우리가 실천하여야 할 새로운 과제를 무역 1조 달러 달성 기념식(2011.12.12)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우선, 대기업과 함께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보다 많이 세계로 진출하여야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열 수 있으므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KOTRA가 앞장서길 당부하였다. 나아가 우리 젊은이들도 더 넓은 세계로 나가 마음껏 재능을 펼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KOTRA의 청년인턴 사업이 좋은 사례라고 하였다. 또한 세계 경제성장을 이끄는 축이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로 옮겨가고 있고, 거기에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리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KOTRA가 앞장서서 미개척 신흥시장으로 무역관을 옮기고 해외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에 대하여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격려하면서 조속한 실천을 당부하였다.

### 3. FTA 활용 지원

이명박정부의 적극적인 FTA체결로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세계 경제의 중요한 주체인 EU와 미국, 두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세계적인 FTA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2007년 한·미 FTA가 서명된 이후 2012년 3월 15일 발효될 때까지 FTA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가 점차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고 한국이 동아시아 FTA 허브국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이유는 FTA 활용에서 오는 경제적 혜택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경제적 거리 단축을 통하여 우리 상품의 체결국 시장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FTA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선진화, 기업의 역량강화, 투자 확대 등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국민의 인식이 합의의 근거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 한·EU FTA 발효 이전까지만 하여도 칠레를 제외한

ASEAN, 인도, EFTA 등 기존 FTA 체결국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저조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어려운 원산지 기준과 까다로운 증명서 발급절차, 미흡한 정부 지원정책은 기업의 자발적인 FTA활용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나아가 FTA 관세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 등 FTA의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자금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FTA에 대한 인식부족, FTA 활용 역량 부족 등으로 FTA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을 수밖에 없었고,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기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칠레와 FTA를 최초로 체결한 이후 다양한 기관을 중심으로 기업지원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원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원스톱 지원형태가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기업의 FTA활용에 대한 관심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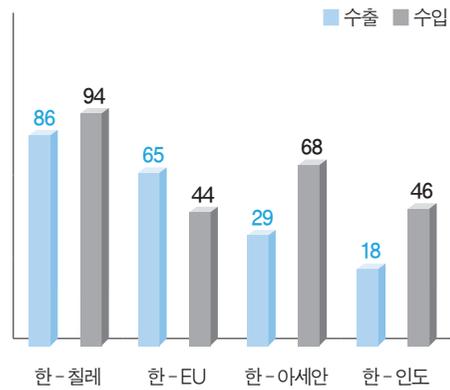
이명박 대통령은 FTA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디딤돌’이라는 인식 하에 FTA 활용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고, 대통령 주재의 제108차 비상경제대책회의(2011.12.22)에서 ‘FTA를 통한 무역확대방안’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업에 FTA 활용과 관련한 지원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FTA무역종합지원센터’의 개소였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으로 산재하여 있는 FTA활용 지원 유관부처와 무역협회, KOTRA, 산업단지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들의 유사·중복 지원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 FTA활용지원정책의 집행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였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FTA활용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무역 유관기관들의 기업 지원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 FTA관련 최초의 민·관 합동조직으로 2012년 2월 21일 무역협회에 설치되었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기업에 대한 전문컨설팅, 지역FTA지원센터와의 연계, 관계부처의 컨설팅 내용과 이력을 총괄적으로 입력·관리하는 컨설팅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 FTA 활용에 대한 대표적인 상담창구이자 지원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컨설팅 측면에서 FTA활용지원 업종·지역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존의 지원방식에서 탈피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기업 협력업체를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방식으로 지원하여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인터넷 상담 및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FTA 활용지원의 단일창구로서 무역업계의 접근성을 제공하고 지방기업 대상 설명회, FTA활용 관련 통합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원스톱 FTA 활용지원에도 기여하였다.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센터를 방문하여 FTA 활용 기업지원의 컨트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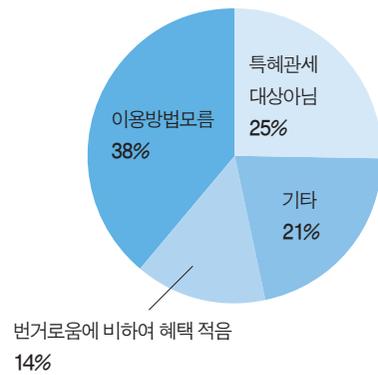
FTA수출입 활용률 현황(2011.12) 및 기업의 FTA 미활용 이유

FTA 수출입 활용률 현황



※자료: 관세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2010, KI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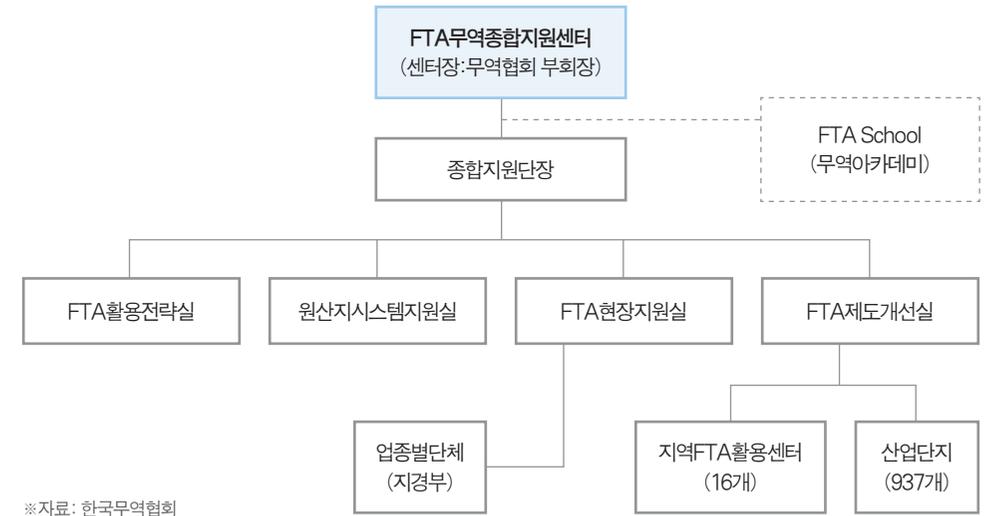


타워이자 기업지원의 최접점으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관계자를 격려하기도 하였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들이 FTA활용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인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하였다. 지식경제부는 KOTRA를 중심으로 미국, EU와의 FTA로 수혜가 예상되는 품목인 섬유, 자동차부품, 중장비, 생활소비재 등의 전시회와 수출 상담회를 집중 개최하여 FTA를 통한 수출확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하였다. 2012년 6월에는 한·미 FTA 수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40개의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FTA무역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과 KOTRA를 통한 마케팅을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FTA 관세인하의 수혜자인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FTA 활용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였다. 국내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고 싶어도 해외 바이어가 FTA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원활한 FTA 활용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FTA 해외 홍보효과가 큰 마케팅 사업 및 유망전시회 등에 투자가·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FTA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한국과의 FTA에 대한 현지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FTA 활용은 수출기업을 넘어 기업의 투자결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FTA로 인한 관세혜택은 기업의 상품생산과 경영전략에 핵심적인 사항으로 작용한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EU 양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투자대상국으로서 한국의 매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조직도



※자료: 한국무역협회

력을 한층 더 배가시킨다. 따라서 지식경제부는 이를 활용하여 미국, EU 등 FTA체결 상대국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가로부터의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 유치를 위하여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이후 보다 공세적인 IR 활동을 추진하여왔다. FTA를 활용한 투자유치 노력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2012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는 신고기준으로 162.6억 달러를 기록하여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 도착금액도 2011년 대비 57.8% 증가한 103.8억 달러로서 1999년 이후 최대를 기록하였다. 또한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하였던 기업이 FTA의 활용에 대한 이점을 적극 활용하고자 국내로 복귀하는 'U턴 현상'이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분복귀 등 다양한 유형의 U턴 지원, 법인·소득세, 관세 등 감면혜택 부여, 산단 입주 우선권 부여, 외국인력에 대한 비자발급 제한 완화 등 다양한 계획을 담은 지원방안을 제공하였다.

FTA 활용 확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2012년 상반기 EU 재정위기의 지속, 중국 경제둔화 등 대외적인 악재로 대EU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12.1%나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TA 혜택품목은 16.3% 증가하였다. 대미 수출 또한 전체는 5.5% 증가에 그쳤으나 혜택품목은 10.7%나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기록하였다. FTA가 경기침체에 대한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여내고 있고, 새로운 시장진출 기회,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 제4절 무역 인프라, 세계일류로

### 1. 무역금융

#### (1) 무역보험, 무역 1조 달러 시대의 수출 견인

무역보험은 우리 기업들의 대외거래 시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손실을 담보하기 위하여 1968년부터 도입, 운영 중인 신용보험(보증)제도로써 WTO 체제 하에서 인정되는 정부의 간접 수출진흥 정책수단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62개국 73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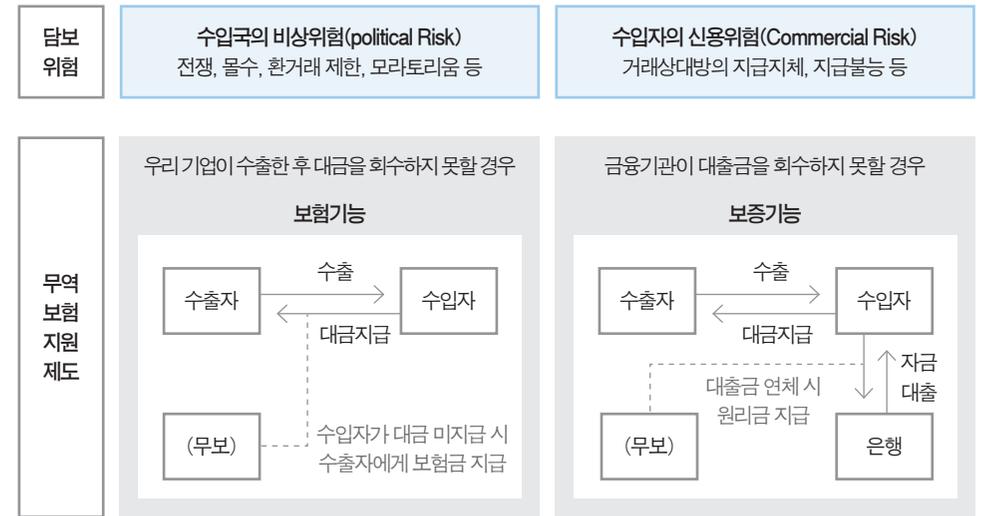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2008년 130조 원, 2009년 165조 원, 2010년 187조 원, 2011년 192조 원 등 사상 최대의 무역보험 지원을 통하여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견인하였다.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보험 활용률은 2007년 17.5%에서 2011년 22.4%로 증가하였으며, 우리 수출의 약 1/4에 해당하는 수출품목이 무역보험의 지원을 받고 있다. 2012년 6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1년 무역보험 192조 원 지원으로 수출 약 50조 원, 부가가치 33조 원을 유발시키고 고용도 47만 명이나 유지(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4/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유럽연합(-1.2%), 미국(-0.2%), 일본(-4.6%), 영국(-1.8%) 등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접어들면서 세계교역과 소비도 급감하였다. 금융위기가 빠르게 실물경제위기로 전이된 것이다.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자 세계적인 기업들은 앞다투어 긴축경영에 들어갔다. 위기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심각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였다. ECA들도 위험요소가 높다고 판단한 시장에서는 철수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세계 무역시장이 한순간에 심하게 위축되었다. 모두 긴축 운영에 돌입한 2009년, 꾸준히 시장 경쟁력을 쌓아온 국내 기업들로부터 무역보험 지원한도를 증액하여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였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한 지금이 시장 확대의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정부와 무역보험공사는 IMF 외환위기로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리 수출기업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한 바 있는 무역보험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09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은 내수 및 수출 동반침체에 따른 국가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

#### 무역보험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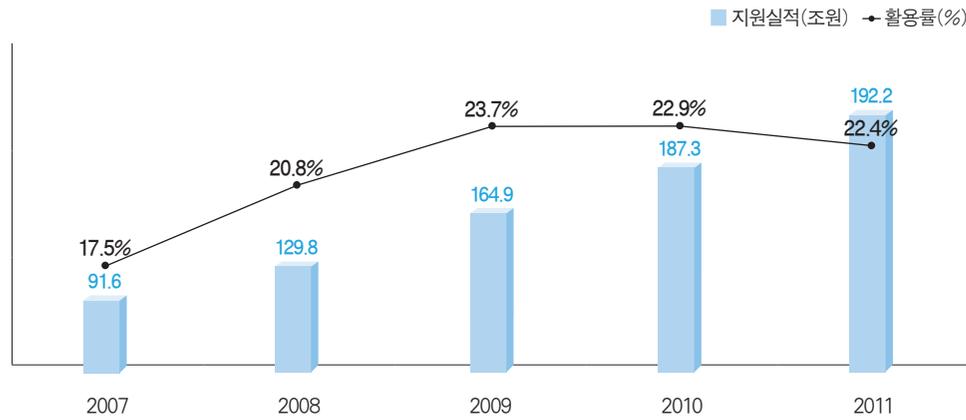
※자료: 지식경제부

하여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하였다. 청와대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지식경제부도 제1차관 주재로 실물경제종합지원단을 구성하고,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총력수출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업지원 현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 총력수출 지원방안을 수립, 이행하였다. 한국무역보험공사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정책에 적극적으로 부흥하기 위하여 '수출보험 비상경영계획'을 수립하고, 비상경영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총력지원 체제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수출기업 지원에 힘을 실어주고자 무역보험 기금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을 2008년 250억 원에서 2009년 5,1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무역보험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과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 간접지원을 2008년 58조 원에서 2009년 74조 원까지 늘렸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한 각종 무역보험 제도를 개선하였다. 2009년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자금으로 72억 원을 신규 지원하였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출용 원자재를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 납품대금 현금결제 보증을 시행하였다.

또한 주력 수출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갔다.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기 위축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추진하던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

무역보험



※자료: 지식경제부

공사는 플랜트·조선 등에 대한 중장기성 무역보험 지원을 2007년 8조 2,000억 원에서 2009년 13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반도체·무선통신 등 IT산업부문에 대한 단기성 무역보험 지원은 2007년 65조 2,000억 원에서 2009년 144조 4,000억 원으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은 2007년 1조 2,000억 원에서 2009년 6조 원으로 확대하였다.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기업들은 중동,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에 이르기까지 지구촌 전역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여 나갔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대한민국 기업들의 선전은 있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짧은 시간 동안 보여준 시장점유율 확대는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단기간에 높아진 배경에는 기업이 이룩한 눈부신 기술발전과 함께 세계적인 기업들이 사업을 축소, 철수하던 상황 하에서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수출지원 드라이브 정책을 펼친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있었다.

국제무역은 수출과 수입이 밀접하게 연계되고 무역과 투자가 융합하면서 국가간 상호 지속 가능한 거래관계로 발전하여 나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수입을 통하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수출을 가속화할 수 있었고, 원자재 확보를 위하여는 다시 해외투자 거래를 발생시켜야 하였다. 즉 수입 없는 수출은 장기적으로는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등 해외 거래에 대한 인식을 기존의 수출 위주에서 종합적인 무역의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도 기존의 수출지원 일변도에서 무역과 투자지원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었다. 2010년 7월 7일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새롭게 출범하였고 수출과 상호 연계되는 원자재 수입까지 지원하는 수입보험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수입

무역보험 유형별 지원실적

(단위: 억 원)

연도	단기성	중장기성	신용보증	환변동 등	계	정부출연금
2007	652,593	82,298	11,590	169,793	916,275	250
2008	947,120	190,004	15,625	145,268	1,298,017	250
2009	1,443,997	131,841	59,637	14,128	1,649,603	5,100

※ 자료: 지식경제부

이 불가피한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경제성장과 수출에 꼭 필요한 기계 등 필수 시설재의 안정적 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의 침체는 2011년 유럽 재정위기의 심화로 장기화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의 기존 수출 주력시장인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경제를 대체할 잠재력이 큰 신시장 개척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6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열린 'KOTRA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는 신흥시장 개척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도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아프리카, 아세안, 중앙아시아, 인도 등을 전략적 특수시장으로 정하여 집중 공략하여 나갔다. 이를 위하여 이들 시장에 대한 지원목표를 2011년 23조 원에서 2012년 6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수입기업의 재무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 사정에 밝은 금융기관 등과 MOU를 체결하고, 국가·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략적 특수시장에 대한 권역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였다. 신흥시장의 잠재력은 인정하되 현실적, 중장기적 접근 차원에서 신흥국가들을 생산거점형, 자원인프라 개발형, 소비시장형으로 전략화하여 특화된 무역보험 지원을 추진하였다. 또한 현장 중심의 심사를 강화하고, 현장위주의 기동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2011년 말에는 이동식 지사인 Mobile K-Office도 가동하였다. Mobile K-Office는 아프리카 수입자 대부분은 기업 회계정보 불투명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신용조사로는 정확한 영업 및 재무상태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수입자 신용도를 현지분석 후 즉석에서 한도심사 및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산업의 허리역할을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군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을 강화하였다.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기술혁신력, 성장잠재력 등을 갖춘 300개의 월드클래스(World-Class) 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무역보험 아카데미를 활용한 맞춤형 컨

프로젝트명	국가	지원금액	참여기업
Sonangol석유개발	앙골라	12.3	대우조선 등
MongDung2발전	베트남	10.7	두산중공업
Angamos발전	칠레	10.3	포스코건설
Surgil 가스전개발	우즈베크	10.0	호남석유화학 등
Jubail정유설비	사우디	9.1	삼성ENG 등
Jurong석유화학	싱가포르	8.9	SK건설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

설당 실시, 업체별 전담 RM을 지정한 밀착형 지원 등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는 수출 10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용절차를 간소화한 중소기업 전용 패키지 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해소 등을 위하여 수출신용 보증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KB국민은행과 무역보험이 2010~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 연간 수출실적 1억 달러 이상의 Trade Champion 121개사를 공동 육성하기로 하였다. 선발된 우량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 선도기업으로 성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11년 10월 26일에는 IBK기업은행과 우량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특별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특별출연금 1,000억 원을 제공받고, 최대 1조 4,000억 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금융의 활성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였다. 우리나라가 무역규모를 늘리기 위하여 대형 플랜트 사업을 추진하여야만 하였고, 이들 사업은 최근 프로젝트 대형화, 선금융 후발주 증가, 발주처의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조달 의무전가 등으로 인하여 금융조달이 프로젝트 수주의 관건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장기성 지원목표를 2011년 14조 원에서 2012년 2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제2의 중동붐 조성에 앞장섰다. 또한 글로벌 금융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자금조달 등에도 힘써 나갔다. 대규모 프로젝트는 투자자금 조달이 관건이므로 안정적 자금조달을 위하여 정책금융기관 간 협조용자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이슬람금융, 국부펀드 등으로 금융조달창구를 다양화하는 등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0년 4월 사우디 국영정유회사 아람코와 프랑스 석유회사 토탈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정유설비 건설 프로젝트에 10억 달러의 금융을 지원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최대 정유설비 프로젝트였다. 2010년 8월에

는 베트남 시멘트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에도 중장기 수출금융을 지원하였다. 2011년 6월 포스코파워, 두산중공업이 참여하는 베트남 최대 민자 발전사업 몽중 화력발전 프로젝트에 10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금융을 지원하였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차입금 미상환 위험을 보증하고, 10개 글로벌 상업은행이 장기 차입금을 분담 지원함에 따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Trade Finance로부터 2011년 Deal of the Year로 선정되었다.

해외자원 확보경쟁이 치열하여지면서 각국 무역보험기관의 보증을 활용한 정책금융 및 민간자금 유치 형태의 자금조달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무역보험은 국내 정책금융기관, 해외 글로벌 상업은행 등과 연계하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 촉진을 위하여 신속한 자금지원을 하는 한편 해외 자원개발 사업 붐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나갔다. 특히 기업의 다양한 금융 수요에 맞추어 테일러 메이드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해외 자원개발 금융센터로서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주요 지원실적으로는 2010년 10월 한전 호주 현지법인의 호주 바이롱 유연탄 광산 M&A 프로젝트 보증제공이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한전은 2016년부터 30년간 발전소 연료용 유연탄을 연간 750만톤 규모로 채굴할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 유연탄 자주개발률이 7%까지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1년 9월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서 추진 중인 체푸 유전광구 M&A 프로젝트에도 정책금융공사와 함께 패키지 금융을 지원하였다. 민간기업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나서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책금융기관들이 보증과 대출을 패키지 금융으로 제공하는 역할분담으로 해외자원을 확보한 의미 있는 성과였다.

최근 글로벌 조선산업의 장기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에너지 수요증가에 따른 심해저·극한지역의 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드릴십, 반잠수 시추선, FPSO 등 해양 플랜트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수주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부가 해양플랜트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2)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견인

2012년 현재, 세계경제는 여전히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위기로부터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장벽을 더 높이 쌓고 있다. 이러한 대외환경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7월 26일 및 10월 5일 잇달아 비상



현재 국내 경제가 비상상황임을 감안하여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은 비상경영체제를 계속 유지하여 수출확대에 힘쓸 것과  
 정책금융기관 간의 실무협의회를 통한 국내 수출업체에 원활한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 정책금융기관들은 단 1만 달러라도 성실성의껏 지원한다는 마음자세로  
 수출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 비상경제대책회의(2012.7)



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수출촉진 대책을 강구하였다. 우선 수출입은행의 조선사 제작  
 금융을 당초 1조 9,000억 원에서 3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2012년 무역보험 지원한도를  
 19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확대하였다. 8월에서 10월까지 무역보험 집중지원기간을 설정하  
 여 58조 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고 저신용 중소·중견기업 및 회생가능한 구조조정 기업까지  
 한시적으로 무역보험을 특별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수  
 출·시설자금 보증도 12조 8,000억 원에서 15조 8,000억 원으로 공급을 확대하였다. 또한 시중  
 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이 조선사 제작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  
 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절차를 개정하여 국제기구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을 활성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나아가 지식경제부장관 주재 하의 수출에로타개 비상대  
 책반을 운영하여 현장에서의 수출기업 애로사항을 발굴, 이를 조기에 해소하도록 하였다. 단  
 기간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국내 수출상담회 및 해외전시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비비 50억 원 등 80억 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수출 마케팅 지원에 집중 투입하였  
 다. 그 결과 2012년에 글로벌 경기둔화로 세계 교역이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사상 처음으로 세계 무역 8강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2. 국내 전시회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4월 경기도 일산 KINTEX는 해외에서 온 2,500명 이상  
 의 바이어들로 붐볐다. 한국의 기간산업인 공작기계 분야의 국내 대표전시회인 '2008 서울국  
 제공작기계전'을 참관하기 위하여 몰려든 사람들이었다. 전시기간 동안 총 7만 6,000여 명이  
 전시회를 관람하였고, 세계 10대 메이커를 모두 포함하여 총 433개사가 전시회에 참가하여 3

### 국내전시산업 주요 지표

- 전시장면적: (2008) 17만 8000m<sup>2</sup>→(2011) 24만 3000m<sup>2</sup>, 36.5%
  - 전시회수: (2008) 409건→(2011) 552건, 34.9%
  - 참관객수: (2008) 637만 명→(2011) 1,316만 명, 95.5%
  - 참가업체: (2008) 3만 8,546개사→(2011) 6만 7,446개사, 74.9%
  - 해외참관객: (2008) 15만 명→(2011) 24만 명, 60%
  - 해외참가업체: (2008) 9,920개사→(2011) 12,995개사, 30.9%
  - 전시회를 통한 수출계약액: (2008) 31억 달러→(2011) 85억 달러, 174.2%
- (※자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2008~2011 국내 전시산업통계)

만 1,850건 9억 4,000만 달러의 상담 및 계약성고가 발생하였다. 전시회의 효과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를 기준으로 국내 전시산업의 발전상을 살펴보면 실로 놀랍다. 한국  
 전시산업진흥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동 기간 전시장 면적은 17만 8,000m<sup>2</sup>에서 24만 3000m<sup>2</sup>  
 로 36.5% 늘어났고, 전시회수는 409건에서 552건으로 34.9% 늘어났다. 전시산업의 하드웨어  
 인 전시장의 확장과 소프트웨어인 전시회의 증가는 참관객수 95.5%, 참가업체 74.9%, 전시회  
 를 통한 수출계약액 174.2% 증가라는 놀라운 실적으로 연결되어 한국이 무역 1조 달러를 달  
 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전시산업은 대표적인 무역 인프라로서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관광 등 연관산  
 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산업이다. 전시산  
 업의 이러한 경제적 효과에 주목한 이명박정부는 '전시산업 경쟁력 제고'를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전시산업 인프라 구축,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규칙안 제정,  
 Global Top 전시회 육성, 전시산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정책과제로 추진하였다.

전시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전시회와 전시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도화하는  
 한편 전시산업의 구조를 선진화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시  
 산업발전법'을 제정, 시행하였다. 2008년 9월 22일 동법이 시행되면서 전시산업은 또다른 전기  
 를 맞았다. 전시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분류하고 동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법이 제  
 정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시발전 기본계획(5년)'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기  
 본계획에는 전시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Vision)과 행동계획(Action Plan)  
 이 담겨있다.

2008년과 2011년 국내전시 지원사업 실적 비교

구분		2008	2011	비고
지원전시회(건)		43	50	7건↑
국내전시 지원예산(억 원)		45	52.85	7.85억 원↑
지원성과	참가업체(개사)	총 10,827	15,600	4,773개사↑
	참관객(명)	총 1,030,973	2,213,105	1,182,132명↑
	수출(억 달러)	계약액 25	49	24억 달러↑

※자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우선 정부는 전시장 등 전시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전시회의 국제화·대형화·전문화 및 전시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한국을 2012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의 전시산업 강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으로 전시 인프라 확장 및 선진화, 전시회의 전문화·대형화·국제화, 전시사업자의 경쟁력 제고, 전시산업 기반구축 강화, 전시업계 애로 해소 및 지원제도 내실화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른 주요 성과로는 2008년 DCC(대전컨벤션센터)와 송도컨벤시아(Songdo Convensia) 신축, 2011년 KINTEX(일산 킨텍스) 증축(5만 4,000m<sup>2</sup>→10만 8,000m<sup>2</sup>), EXCO(대구 엑스코) 증축(1만 1,000m<sup>2</sup>→2만 2,000m<sup>2</sup>), 2012년 BEXCO(부산 벅스코) 증축(2만 6,000m<sup>2</sup>→4만 6,000m<sup>2</sup>) 등 전시 인프라의 확장을 들 수 있다.

2010년까지 한국은 대규모 전시·회의시설(10만m<sup>2</sup> 이상)이 전무하고, 교역규모 대비 전시장 면적비율은 2.6%에 불과하였다. 전시면적 10만m<sup>2</sup> 이상 대형 전시장 수가 독일 9개, 미국 6개, 중국 3개였음을 감안하면 인프라의 부족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2011년 KINTEX 제2전시장의 개장과 함께 해소되었다. 특히 KINTEX의 전시면적 10만m<sup>2</sup> 확보는 한국의 전시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서게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KINTEX 제2전시장 개장 후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인 공작기계, 일반기계, 수송기계 등 대형 자본재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경쟁할 수 있는 '서울국제공작기계전', '한국산업대전', '서울모터쇼' 등의 전시회가 매년 3,000명 이상의 해외바이어를 불러 모으고 있다. 머지않은 시점에 한국도 20만 명 이상의 국내외 바이어가 찾는 CES(국제소비자전자제품박람회)와 같은 전시회를 개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회는 WTO체제 하에서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해외 마케팅 수단으로 독일, 중국 등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들은 전시산업을 주요 수출촉진 수단 및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식하여 정

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유망전시회 개최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수출마케팅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비즈니스와 교류의 장소로서 해외 바이어가 찾아오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시회 육성을 목표로 매년 50건 내외의 전시회를 지원하고 있다. 동 지원사업을 통하여 국내 전시회의 수준향상과 국내 전시회에 참가한 중소기업의 수출실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부품소재 분야의 대일무역 역조현상이 극심하였던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연초 일본 방문 이후 정부는 전시회를 통한 한·일 간 무역상당 거래 활성화를 모색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전시회를 직접 참관함으로써 한국의 중소기업과 일본 기업들에게 '전시회를 통한 수출마케팅 기회 확대'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는 전시회의 효과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2010년 6월 23일 청와대 세종실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의 안건으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전시·회의산업 발전방안이 논의되었다.

독일은 전시산업이 GDP의 약 1%(250억 유로, 40조 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25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라스베가스는 CES(국제소비자전자제품박람회)의 개최로 '도박의 도시'에서 '전시회의 도시'로의 이미지 변신을 통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스위스 시골마을 다보스는 세계경제포럼 개최로 대표적인 국제회의 도시로 탈바꿈하였다. 이렇게 볼 때 한국에서도 전시·회의산업은 융합을 통하여 교역확대, 내수진작, 일자리 창출 및 관광수지 개선 등의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를 위하여 글로벌 수준의 전시·국제회의 육성 및 지원, 국내산업 및 관광 인프라와 연계 등 전시·회의산업 지원체계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12월의 전시산업 발전 기본계획에서 전시산업 기반구축 강화를 위한 주요 사항의 하나로 논의된 전시전문 인력양성 방안에서 지적한 전시 전문학과 및 커리큘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소양을 지닌 인재육성을 위하여 2012년 인력양성센터를 설립하였다. 전시 선진국인 독일과 같이 산·학·연이 연계된 교육 시스템으로 석·박사 과정, 전시 최고위과정, 전시 전문가과정, 전시 입문과정 등이 있으며 기타 현장의 니즈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전시업 종사자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 국내 전시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토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 전시산업이 세계를 리드하여가는 희망찬 미래를 꿈꾸게 하고 있다.

### 3. 전자무역

세계적인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전자무역을 발전시키기에 매우 유리하며, 실제로 대기업의 경우 자체 ERP시스템과의 결합 등을 통하여 전자무역을 정착시켜 가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전자무역은 부족한 수출전문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자무역이란 무역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즉 국제거래에 수반되는 정보수집, 협상, 계약체결, 통관, 운송, 보험, 결제 등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에 걸쳐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이 대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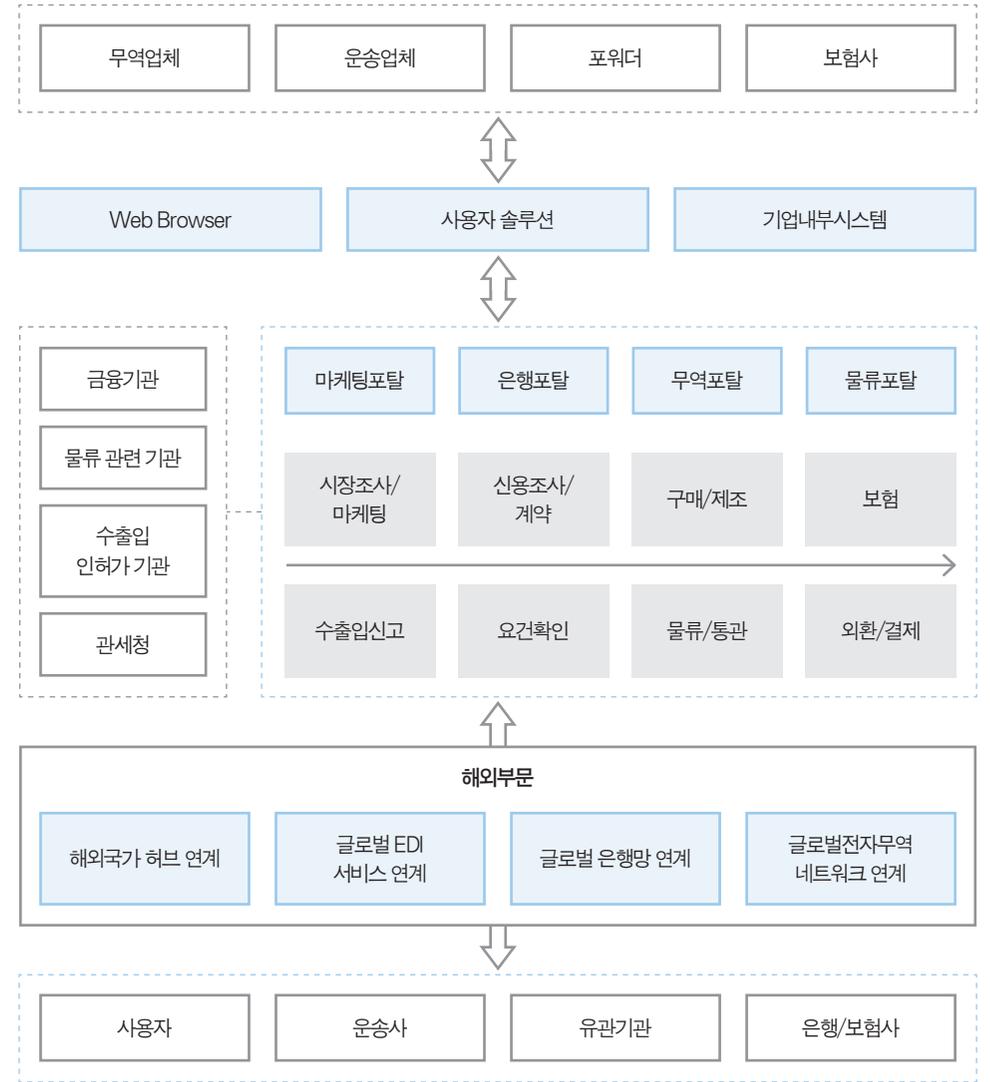
전자무역은 각종 거래과정에서 일일이 사람이 직접 처리하던 것을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처리함으로써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관련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무역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생산성 향상 및 부대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2009년 기준 연간 약 6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거래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다. 전자무역을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으로까지 확산할 경우 무역업계의 시간 및 비용 등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무역자동화촉진법을 제정하고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설립하면서 우리나라의 전자무역 추진이 본격화되었는데, 도입기(1990~2000)와 성장기(2001~2007)를 거쳐 2008년 이후 새로운 도약기(2008~현재)를 맞이하고 있다.

도입기(1990~2000) 단계에서는 폐쇄형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으로 수출입 통관(1994~1996), 관세 환급(1997) 등 기본적인 수출입 절차의 전자화를 시행하였다. 성장기(2001~2007) 단계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개방형 전자무역 추진을 위한 제도를 정비(전자무역촉진법 제정, 2005)하고, 전자무역 포털인 국가전자무역기반시설(uTH: uTradeHub, 2008)을 구축하였다. 도약기(2008~현재) 단계에서는 전자무역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차세대 전자무역 서비스구축 BPR/ISP'를 수립(2009)하고, e-Nego(전자 수출환어음 매입, 2010~2011), 구매확인서 통합정보서비스(2012) 등 단위업무가 결합된 프로세스 중심의 전자무역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전자무역 성과를 해외로 확산하기 위한 전자무역 시스템 수출을 추진하여 2008년 7월 KOICA 및 ADB가 예산(약 57억 원)을 지원하는 몽골관세행정현대화 사업을 수주(2010년 완료)하였다. 또한 세계 최고의 전자무역 시스템인 차세대전자무역시스템 uTH의 개통식을 거행하였다. 9월에는 전자무역 기반사업자가 법무부로부터 전자선하증권(e-B/L) 등록기관으로

전자무역 개념도



※자료: 지식경제부

지정받음으로써 e-Nego를 위한 주요 첨부서류의 전자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1월에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구매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추가 지정, 위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은행창구 발급을 전자무역 발급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전자무역확산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9년에는 uTH와 조달청 나라장터를 연계함으로써 나라장터 이용 고객이 uTH에서 편리

하게 전자무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33차 PAA(범아시아전자무역연합)에서 PAA의 포털 운영기관으로 한국의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을 선정하였으며, 차세대 전자무역 1단계사업을 추진하여 대기업의 e-Nego 시범 연계사업을 중심으로, e-L/C 통합 한도관리 시스템 구축, e-L/C ASP 서비스 고도화, 수출입 부대비용 결제 시스템 구축, 항공화물 운송장 유통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다.

2010년에는 차세대 전자무역 2단계 사업(글로벌 물류·무역정보망 구축)으로 전자선하증권(e-B/L) 시스템, 중소·중견기업 e-Nego 서비스 확대, 전자 무역문서 서식관리 시스템 구축, e-Nego 시범 서비스 확산, 대한상의 전자무역 관련 원산지증명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하였다. 글로벌 전자무역 활성화 차원에서 한·대만 전자 원산지증명 서비스 상용화를 이룩하였으며, 제4차 한·중 전자무역 민관협력회의 및 제5차 한·대만 전자무역 민관협력회의 개최를 통하여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하였다.

2011년에는 차세대 전자무역 3차 사업인 구매확인서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정부, 무역협회, 전자무역 기반사업자 공동으로 무역업체의 FTA업무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FTA Korea'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012년에는 구매확인서의 전면 전자화(2011.7)에 이어 내국 신용장의 전면 전자화를 위하여 한국은행 취급세칙을 개정하여 내국 신용장 개설은 2013년 2월부터, 내국신용장 결제는 2014년 2월부터 전면 전자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차세대 전자무역 4차 사업으로 구매확인서와 내국 신용장을 아우르는 로컬거래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4. 무역인력 양성

무역 전문인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무역인력 수급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첫째, 무역인력의 최대 공급원인 대학들의 무역학과 통폐합과 민간 교육기관들의 비수익 사업기피 등으로 공급능력이 정체상태에 있다. 둘째,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및 무역거래 전자화 등으로 무역인력의 전문화에 대한 필요성은 점증하고 있으나, 무역인력의 최대 공급기반인 대학은 이론중심 교육으로 산업현장의 요구(needs)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무역인력 양성을 위한 민간 전문 교육기관이 충분치 않고 단기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기교육을 받아야 하는 무역 전문인력 양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마케팅, 통상, 서비스무역, 운송·물류, 전자무역 전문가 양성을 통한 선진무역 인프라 구축 및 신흥시장 개척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글로벌무역전문가양

성사업(GTEP: Glob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을 추진 중이다. GTEP사업은 전국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내에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 사업단을 구성하여 무역실무 및 현장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24개 대학을 선정하여 무역기본교육, 정규·특별·특성화 등 무역심화교육, 국내외 전시회 등 수출현장 실습활동 및 국내외 인턴십을 수행한다. 총 24개 대학교 중 지방 소재 대학교가 18개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 소재 대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방의 중소 무역업체에 대한 무역인력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된 4기까지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총 3,175명의 대학생이 참여하여 2,145명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글로벌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해외인턴십은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중국 등에 2개월간 파견하여 무역업체 및 무역 유관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인턴십의 경우 국내 무역현장에서 무역실무를 직접 체득함으로써 향후 세계 각국의 청년 무역인력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출실적이 전무하거나 극히 미미한 지방소재 기업에 파견된 인턴십 수료생들이 해당 기업에 대한 수출관련 업무지원을 통하여 수출기업으로 유도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현재까지 해외전시회 참가 등 무역실습을 통하여 1,111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다.

동 사업을 수료한 대학생들의 취업률은 약 60%로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세계일류상품 기업, 외국인투자 기업 등 지경부가 주최하는 우수 무역기업의 취업박람회로 수료자를 소개하는 등 취업확대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취업률 제고를 촉진하는 등 글로벌 무역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GTEP사업 주요 추진실적(2012.6 기준)

기수	기간	참여인원	수료인원	참여대학	해외인턴(2개월)	수출실적(만 달러)
1	2007.7~2008.12	805	493	19	-	163
2	2008.7~2009.12	629	372	17	150	244
3	2009.7~2010.12	888	618	25	150	333
4	2010.7~2011.12	853	662	24	167	371
(1-4)소계		3,175	2,145		467	1,111
5	2011.7~2012.12	817	진행중	24	진행중	진행중
6	2012.7~2013.9	757	진행중	24	진행중	진행중
총계		4,749				

※자료: 지식경제부

### 제3장

## 선진 무역강국을 향한 새로운 비전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글로벌 환경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일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한 네덜란드(2007), 영국(2006), 이탈리아(2007)는 그 다음해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등으로 모두 1조 달러 이하로 주저앉은 사례를 거울삼아, 최근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등으로 세계 교역이 급격히 축소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역 1조 달러를 지키고 더 큰 무역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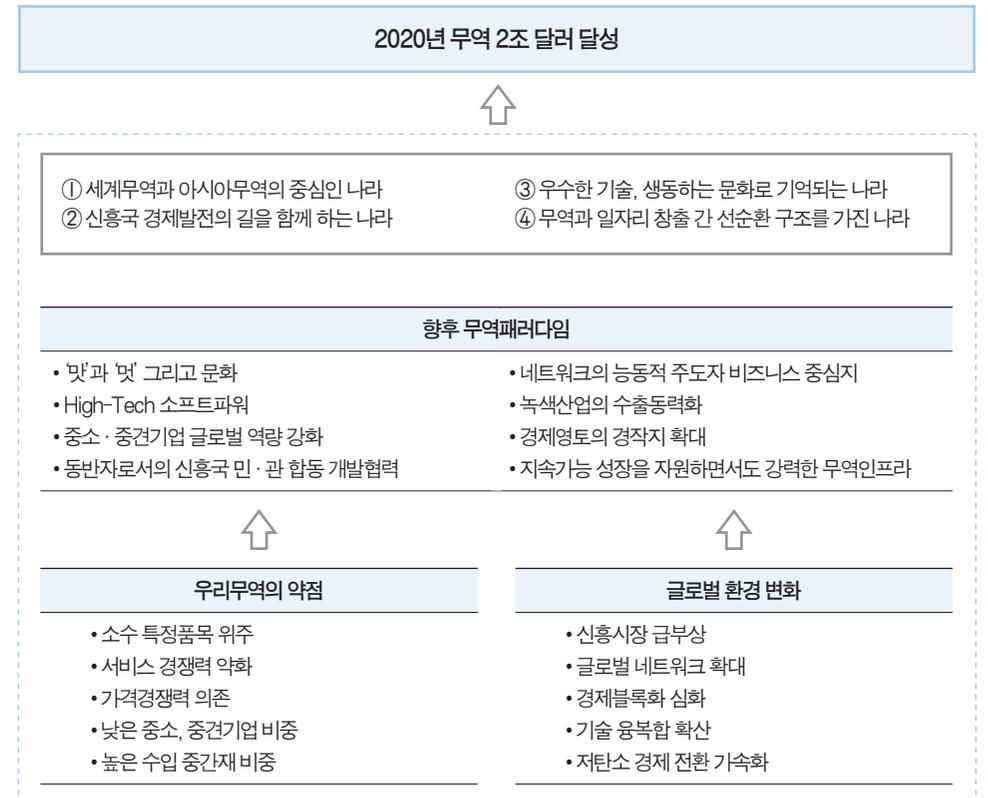
2011년 12월 5일 역사적인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개최된 제48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하여 ‘열린 무역대국’과 ‘2020년 무역규모 2조 달러 진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계속 ‘열린 무역대국’의 길을 갈 것이며 이는 세계가 지향하고 있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공동 번영의 길임을 천명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어떤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한 경험을 살려 무역 1조 달러를 넘어 2020년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열어야 하고, 열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농업, 서비스업 등으로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대기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며, 지속적인 FTA 확대를 통하여 해외시장을 더 넓혀 나가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2012년 2월 3일 이명박 대통령은 제1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역 2조 달러의

새로운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발표하였다.

우선 2020년까지 무역 2조 달러라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통하였던 과거의 패러다임 중 미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포스트 1조 달러 시대에 맞지 않는 패러다임으로는 무역 2조 달러에 다가서기 어렵고 설사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그 어느 때 보다도 민관이 합심하여 그 간 지적되어 온 우리 무역의 약점을 극복하고 무역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새롭게 디자인하여야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는 수출상품 측면에서는 수출품목의 다양화, 중소·중견기업 상품의 글로벌화, 중간재 수출의 확대, 주력품목의 입지 강화 등이 필요하고, 시장·인프라 측면에서는 해외시장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무역 인프라 또한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하여 세계 무역과 아시아 무역의 중심에 서는 나라, 신흥국 경제발전의 길을 함께 하는 나라, 우수한 기술과 생동하는 문화로 기억되는 나라, 무역과 일자리 창출간 선순환 구조를 가진 나라 등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



이와 같은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을 보다 구체화한 무역 2조 달러 도약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주력수출산업 외에 새로운 미래 수출산업을 창출하는 것이다. 바이오헬스, 나노융합, 그린에너지 등의 산업에서 R&D와 전략적 해외시장 개척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여 나가야 한다. 특히 원전 분야는 신규 원전 수주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SW산업은 처음부터 기업의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춰 개방형, 네트워크형 해외진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농식품은 수출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스타품목을 육성하고, 문화콘텐츠는 킬러콘텐츠 발굴,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하여 한류와 전통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미래 수출산업 창출

구분	수출액(억 달러)	수출액(억 달러)	추진과제
	2010 실적	2020비전	
농식품	59	300	• 수출 전략품목 중심의 선택과 집중 → 스타품목 육성
문화콘텐츠	32.3	223.5	• 킬러콘텐츠 발굴과 해외진출 지원, 금융·정책지원체계 확립 → 한류확산
바이오헬스	38	425	• IT융합병원 등 개도국 겨냥 마케팅 • 글로벌 선도 고품질 상품개발
로봇	2	70	• 해외 로봇시장 개척지원 • 글로벌 기술력 확보
나노융합	-	1,000	• 글로벌 스타기업과 제품 육성 • 신시장 창출을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디자인	0.4	2	• 중국, 동남아 등 신흥국 수출 모색 • 해외 디자인 거점 지속 확대
항공	10	100	• 해외 선진업체와 공동개발 • 해외 파트너와 공동 마케팅
SW	13	50	• 처음부터 기업의 글로벌화에 초점 • 개방형, 네트워크형 해외진출 지원
그린에너지	110	2,020	• (원전) 신규 원전 등 수주 전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강화 • (신재생) 실증시험장 고도화, 인력양성 강화, 보급 확대를 기업 육성 • (스마트그리드) 대 개도국 단품수출 → 대선진국 패키지화 수출

※자료: 지식경제부



우리는 어떤 위기에든 굴하지 않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역 1조 달러를 넘어 2020년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열어가고, 또 열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대기업 중심의 몇 개 품목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무역 선진국처럼,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무역 1조 달러 달성기념 축사(2011.12.12)



둘째,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체 브랜드를 수출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내수기업을 2020년까지 수많은 수출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수출 500만 달러를 목표로 하는 수출 선도기업과 수출 5,000만 달러를 목표로 하는 수출 강소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IT 등 분야별로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존의 일반적 마케팅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과 맞춤형 마케팅 서비스 제공을 본격 지원하여야 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FTA 체결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체 브랜드 마케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나가야 한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의 글로벌 역량을 배양하여야 한다. 소재 분야는 2020년까지 소재 R&D 비중을 크게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여 나가야 한다. 부품 분야는 SW 융합형 부품과 신뢰성이 체화된 명품 부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기계, 조선,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미래 성장동력형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2012년 SW 융합형 부품개발 사업에 기술개발 단계별로 신뢰성 검증 프로세스를 개발, 적용하여 2013년부터 전분야로 확대하여야 한다. 아울러 글로벌 연계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해외 비즈니스 모델 발굴, M&A, 투자유치 확대 등을 추진하여 나가야 한다.

넷째, 미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출산업 육성 못지않게 현재의 주력 수출산업을 고도화하여야 한다. 조선 분야는 에너지절감형 그린선박 개발을 통하여 제품과 기술을 차별화하여 나가고, 자동차 분야는 친환경차 초기시장을 창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등의 국산화, 모바일용 SW와 서비스 경쟁력 확보 등을 끊임없이 추진하여 나가는 한편 석유화학, 섬유패션 등의 분야는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하여 나가야 한다.

다섯째, 해외시장을 전략적으로 경영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략적 동반자인 신흥국과의

주력수출산업 고도화

구분	수출액(억 달러)	수출액(억 달러)	추진과제
	2010 실적	2020비전	
조선	491	1,300	• 에너지절감형 그린선박 개발 • 심해자원 개발용 해양플랜트 개발
자동차 및 부품	544	1,148	• (단기) 친환경차 초기시장 창출 • (장기)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기계	372	1,290	• 국산장비 활용 등 장비산업화 • 서비스 융합을 통한 수출 활성화 • 플랜트 기자재 국산화를 제고
반도체	507	1,223	• 시스템반도체와 반도체장비 국산화 • 시스템반도체 설계인재 양성
디스플레이	326	500	•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 •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를 제고
휴대폰	276	600	• SW와 서비스 경쟁력 조기 확보 • HW 경쟁력 지속 강화
석유화학	357	800	• 전략적 핵심 화학소재 개발 • 고부가 산업구조 전환
철강	289	500	• 제품의 차별·고급·녹색화 • 판매전략 고도화
섬유패션	126	230	• 산업재편(가격기반 → 가치기반) • 브랜드력, 산업용섬유 기반 강화

※자료: 지식경제부

UAE원전 수주와 같은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베트남·콜롬비아·UAE 등과 정부 간 포괄적 산업협력을 강화하여 민간부문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발전소·석유화학·플랜트 등 프로젝트 수주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ODA(EDCF, KOICA) 활용을 확대하여 나가야 한다. 또한 서남아, 중남미 등 성장여력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FTA 체결을 추진하고, 세계의 생산거점이자 거대 소비시장으로 변환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우리기업의 현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한·중 FTA체결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FTA 네트워크 대동맥을 구축하여야 한다. 아울러, FTA의 외연 확장을 통한 경제영토 확대를 위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국, 동북아국 등과 FTA 체결을 확대하여 글로벌 FTA 네트워크 대동맥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미 체결한 FTA의 내실화와 활용을 통하여 FTA의 혜택이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One-Click 시스템인 통합 무역정보 시스템과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급, 기업의 FTA 활용도를 제고하고 자

유화 수준이 낮은 기체결 FTA에 대한 양허개선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과의 양자 FTA도 적극 확대하여 나가야 한다.

“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성장해왔고,  
수많은 위기를 이겨낸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번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시장에 적극 진출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49회 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2012.12.5)

마지막으로 무역확대를 뒷받침할 무역 인프라와 제도를 선진화시켜 나가야 한다. 국내 기업의 활발한 수출기업화를 촉진하는 마중물로서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의 인프라와 기금 지원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또한 새로운 무역 트렌드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해외인턴사업 등을 통하여 해외경험이 풍부한 청년들을 무역인력으로 양성하고,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을 개편하여 지방대 학생의 참여를 확대하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 동북아 전시·무역 산업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CES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브랜드 전시회를 육성하고 KINTEX를 세계적 수준의 전시산업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모든 무역절차가 국내에서 해외까지 실시간 처리되는 One-Stop Smart 전자무역 서비스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무역조사 시스템의 개선과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을 통하여 선진화된 무역구제제도 운용과 무역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에게 튼튼한 무역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추진전략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무역규모 2조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품목 측면에서 보면 12대 주력품목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줄어들고 그린에너지, 농·식품, 콘텐츠 등 미래 수출산업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다. 무역주체 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40% 수준(2010년 34.6%)으로 확대되고, 시장측면에서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비중 또한 80%(2010년 68.9%) 가까이 늘어나며 FTA 활용률은 평균

6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우리는 경제개발 50년 만에 전 세계를 향한 온 국민과 기업 도전의 결실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다. 2012년에는 글로벌 경기둔화로 세계교역이 다시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사상 처음으로 세계무역 8강에 진입하여 세계 경제와 무역중심국으로서의 국가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2007년 무역규모는 세계 11위였으나 위기를 기회로 삼는 불굴의 노력을 통하여 2009년 10위, 2010년 9위로 캐나다, 벨기에를 차례로 추월하면서 한 단계씩 올라갔으며 2012년에는 드디어 이탈리아를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무역 8강에 진입하였다. 불과 10여 년 만에 13위에서 8위로 빠르게 성장한 것이다. 2012년 세계무역 8강은 우리나라의 진가를 세계에 다시 한 번 각인시킬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전 세계 무역규모 순위

(단위: 억 달러)

순위	2002	2003	2007	2009	2011	2012 (1~9)	2012(1~9) 무역규모	전년대비 증감
1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29,027	4.40%
2	독일	독일	독일	중국	중국	중국	28,425	6.20%
3	일본	일본	중국	독일	독일	독일	19,302	△6.3%
4	프랑스	중국	일본	일본	일본	일본	12,772	3.00%
5	영국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9,274	△6.0%
6	중국	영국	영국	네덜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	9,237	△3.2%
7	이탈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영국	영국	8,574	△1.7%
8	캐나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한국	7,979	△1.3%
9	네덜란드	캐나다	벨기에	벨기에	한국	이탈리아	7,371	△10.3%
10	벨기에	벨기에	캐나다	한국	홍콩	홍콩	6,942	2.40%
11	홍콩	홍콩	한국	홍콩	벨기에	캐나다	6,867	1.90%
12	멕시코	한국	홍콩	캐나다	캐나다	벨기에	6,587	△8.2%
13	한국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	러시아	러시아	6,308	3.30%
14	스페인	멕시코	러시아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5,911	1.50%
15	대만	태국	싱가포르	러시아	인도	인도	5,800	0.90%

※자료: WTO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기준으로 최초로 변경되어 개최된 제49회 무역의 날(2012.12.5)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하여 세계 8대 무역대국 달성의 의미를 평가하였다. “20여 년 전 2020년 장기국가발전전략을 세울 때 이탈리아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도달하여야 할 꿈의 목표였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에는 2014년까지 무역 8강 이탈리아를 넘어설 목표를 세웠고 2년 앞서 마침내 우리는 그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가운데 오늘의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무역입국의 뜻을 세운 지 반세기 만에 황무지에서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을 일군 것은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여도 좋은 위대한 성취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경축하였다.

2020년까지 무역 2조 달러라는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면 우리나라는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을 추월하여 세계 무역 5강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20년 무역 2조 달러 목표’를 위하여 동남아와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글로벌 강소기업의 육성, 원전·문화서비스 등 새로운 수출산업 육성 등이 필요함을 다시 강조하시면서 “우리 국민이 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도 없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여 나가며 밝은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갑시다”라고 세계 무역 5강으로의 새로운 꿈을 제시하였다.

## 제4편

#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 제1장 해외자원개발 필요성 및 주요 정책
- 제2장 해외자원개발, 우리의 자원영토 확장
- 제3장 UAE원전 수출의 쾌거

## 제1장

# 해외자원개발 필요성 및 주요 정책

### 제1절 해외자원 개발 필요성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자원은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 내연기관의 연료뿐만 아니라 가정과 제철소, 화력 발전소 등의 에너지원(源), 석유화학·반도체 등 각종 산업의 기초 원료로 사용되어 현대산업의 혈액으로 비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경제발전 속도와 궤를 같이하여 왔으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진입하여 있는 현재 에너지소비도 세계 9위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에너지 수입국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96%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자원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 됨에 따라 자원이 국민 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전형적인 해외 의존형 에너지·자원 수급 구조로 인하여 세계 에너지·자원 정세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정부는 자원민족주의 확산, 자원 시장 불안정성 증가 등 날로 악화되는 대내외 환경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에너지·자원 수급 불안 확대 가격 상승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인 해법으로 '해외자원 개발'에 주목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해외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광물자원의 이용 분야

<p><b>화력발전</b></p> <p>국내 석탄 화력 발전설비비중 (30.6%)</p> <p>높은 국내 석탄화력 발전 비중으로 인하여 유연탄 확보와 안정적 공급이 매우 중요</p>	<p><b>철강산업</b></p> <p>원가 중 원료비비중 (70%)</p> <p>철광석 및 유연탄 등 원료 가격 상승으로 원가 중 원료비비중이 과거 40~50%에서 70%까지 상승하여 수익성이 악화</p>	<p><b>전자산업</b></p> <p>10년 기준 희토류 평균 수요 (9톤/일)</p> <p>LED, 반도체 등 각종 첨단 산업 및 녹색 기술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는 필수자원으로 수요가 지속 증가할 전망</p>
<p><b>원자력발전</b></p> <p>국내 원자력 발전설비비중 (24.8%)</p> <p>온실가스 배출규제로 인한 원자력 발전의 비중 증가에 따라 우라늄 확보에 대한 중요성 강화</p>	<p><b>전기차산업</b></p> <p>전기차 핵심부품인 리튬이온배터리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에너지 집적도가 높아 시장 주도 전망</p>	<p><b>전선산업</b></p> <p>노후화된 전력선 교체 수요 발생 및 해저 케이블 특수선 제작 수요 증가로 구리선 수요 증가</p>

※ 자료: 지식경제부

해외자원 개발을 통하여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게 되면, 국지적 요인에 따라 자원공급이 제한될 경우 직·간접적 국내 도입을 통하여 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자원수급의 불균형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해외자원 개발 투자수익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수지 악화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해외자원 개발은 비축에 비하여 건설, 유지비가 적게 소요되어서 경제적 안보 도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비상시를 대비하여 외환을 보유하는 것처럼, 자원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상적 지출로 소모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이라는 자산으로 비축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국가적인 위기상황 발생 시에 대비할 수 있는 든든한 자산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그뿐 아니라 자원개발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되는 산업으로 그 자체로 고용, 투자, 수익 창출효과가 막대하며 석유화학, 철강, 제련, 자동차, 조선, IT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수입되는 석유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경유, 휘발유 등 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되기도 하며 플라스틱, 섬유 등 석유화학 산업의 원료로 활용되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철광석도 제련 등 가공 공정을 거쳐, 자동차, 건설, 조선 등 거의 모든 산업의 핵심 원료로 활용되어, 막대한 고

용, 투자, 수출 효과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자원개발의 중요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역사와 경험이 일천하며, 이미 저비용 고수익의 유망 광구를 해외 메이저들이 선점한 상황에서 후발주자로서 자원개발에 진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이다. 자원개발은 고위험, 대규모 투자 재원 소요,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상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사업이며,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우리기업들의 자원개발 진출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에너지·자원 문제는 국가 간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핵심변수가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자원의 안정적 확보 문제를 최상위 의제(agenda)로 설정하였다.

정부는 1970년대 석유과동 이후 자원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자원부국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이에 따라 짧은 역사와 일천한 경험, 미흡한 역량,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미안마 가스전 및 동해 가스전 발견 등의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자원개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35년 해외자원 개발 역사에서 질적·양적 측면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 제2절 해외 자원시장 동향

최근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급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금융시장과 자원시장이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당분간 자원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조짐은 없을 전망이다.

### ① 석유·가스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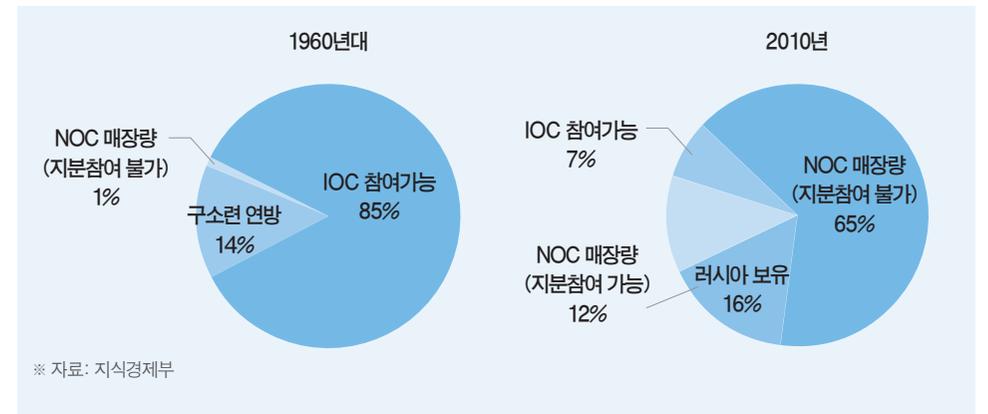
세계적으로 석유가스 개발 사업 환경은 과거에 비하여 악화되고 있다. 개발이 용이한 육상 및 얕은 바다(淺海) 등 지역과 국제석유회사에 자원개발시장을 개방하는 산유국에 존재하는 개발이 편하고 값싼 석유(easy and cheap oil)의 소진으로 극지·오지로까지 사업이 확대되는 극한석유(extreme oil) 시대가 도래하였다.

중동의 자원보유국들은 1970년대부터 자국 자원개발 이익에 대한 정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0년대 들어 남미, 중앙아시아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아프리카 신

홍자원 부국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자원에 대한 통제강화 현상은 개도국뿐 아니라 일부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중국 국영 CNOOC사가 미국 석유기업인 Unocal을 인수하려 하자 국가안보의 이유를 들어 이를 저지하였고, 호주는 2011년부터 자원개발에 대한 특별세율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자원보유국 자원 통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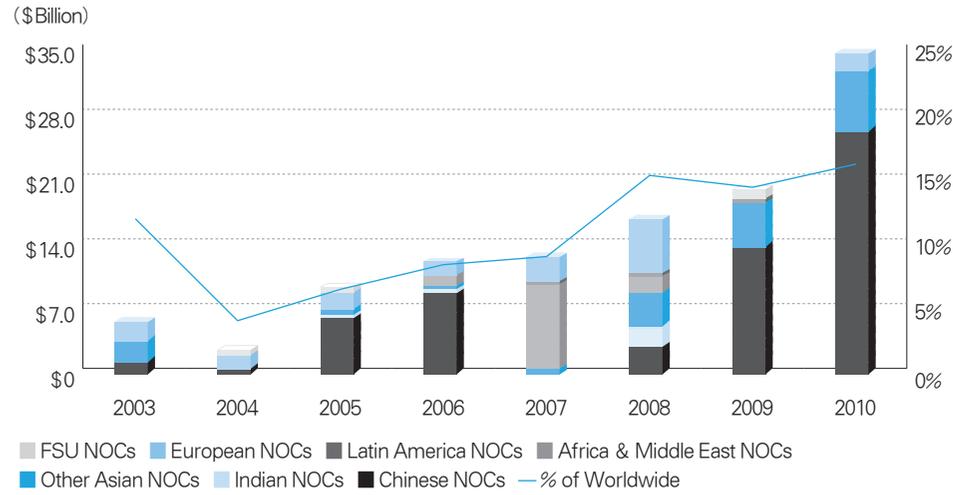


자원개발에 대한 통제 강화로 자원개발 접근성이 감소하고 대형 소비국 자원개발기업 간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되자 국제 자원개발 기업들은 오일샌드, 셰일가스 등 비전통 석유가스 개발을 비롯하여 심해, 극지, 밀림지역 등 오지로 자원개발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2000년대 이후 메이저 석유회사가 심해지역 석유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독립계석유회사뿐 아니라 국영석유회사도 심해석유 개발에 투자하였다.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 Petronas는 자국 영해 심해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기술을 축적하였으며, 브라질 국영석유회사 Petrobras 또한 그동안의 심해기술 축적을 바탕으로 2007년 암염층 하부구조에서 석유를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자원개발의 방식도 탐사를 통하여 석유를 발견하고 개발, 생산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M&A를 통하여 기술력과 자원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다. 해외 자산 M&A에서 중국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구가하였고, 자원확보를 위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세계시장의 자원가격을 높였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프론티어 지역에서의 자원개발 착수 및 자원확보 경쟁 확대로 석유개발 비용도 상

### NOC의 해외 자산거래 추이



Note: Excludes transactions between NOC parent and subsidiaries, and excludes transactions within home country  
 ※ 자료: IHS Herold, Global Upstream M+A Review,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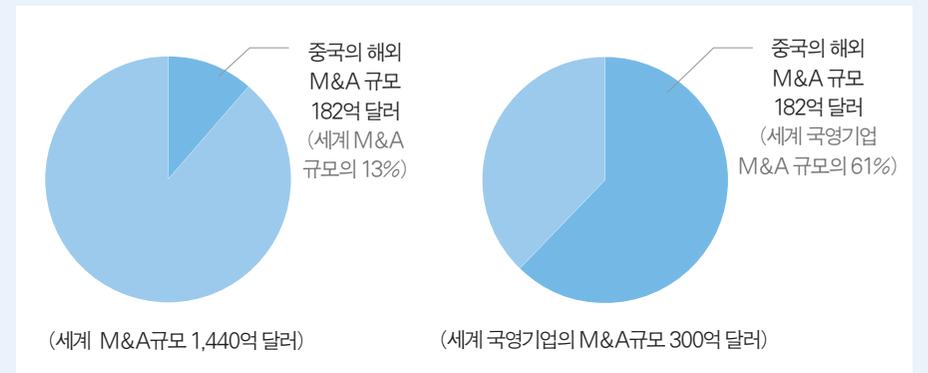
승하였다. 석유 컨설팅사인 IHS에 의하면 석유개발 비용은 인건비, 자재비, 각종 석유개발 장비 입차료 등의 상승으로 2000년에 비하여 2배 이상 상승하였다. 세계 석유회사들의 석유 개발 투자는 2011년 약 5,000억 달러 이상으로 파악되며, 10년 전에 비하여 3~4배 이상 증가하였다. 자원개발 비용의 상승은 자원공급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져 자원확보를 위한 신속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 세계 각국의 자원확보 노력

#### • 중국, 자원이 있는 곳은 어디든 간다

중국은 2011년 기준 세계 500대 기업에 포함된 4개의 국영기업을 통하여 적극적인 자원개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국영 석유기업(National Oil Company, NOC)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가격이 저렴해진 해외 광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석유 및 가스광구 지분 매입에 약 476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M&A분야에서도 2002년 이후 세계 43개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였으며, 2009년 중국 기업의 해외기업 M&A 규모는 182억 달러로 세계 M&A규모(1,440억 달러)의 13%, 세계 국영기업 M&A규모(300억 달러)의 61%를 차지하였다.

#### 중국 국영 석유기업의 M&A 현황(2009)



※ 자료: 지식경제부

#### • 일본,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인다

일본은 2030년 자주개발 목표를 40% 이상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자원 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과 민간기업 합병으로 탄생한 Inpex를 일일 생산규모 70만 배럴의 지역 메이저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집중 지원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ODA(대외원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을 투자금의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하고, 자원에너지종합보험을 통하여 리스크를 보전하는 등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였다.

#### • 국영기업이 주도하는 자원개발로 경제부흥을 꿈꾸다

인도와 말레이시아는 산유국으로서 자국 석유개발을 통하여 축적한 경험, 기술,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외 자원개발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다. 인도는 인접국인 중국과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고, ONGC등 국영기업의 해외 자산 인수를 위하여 2010년부터 10년간 300억 달러를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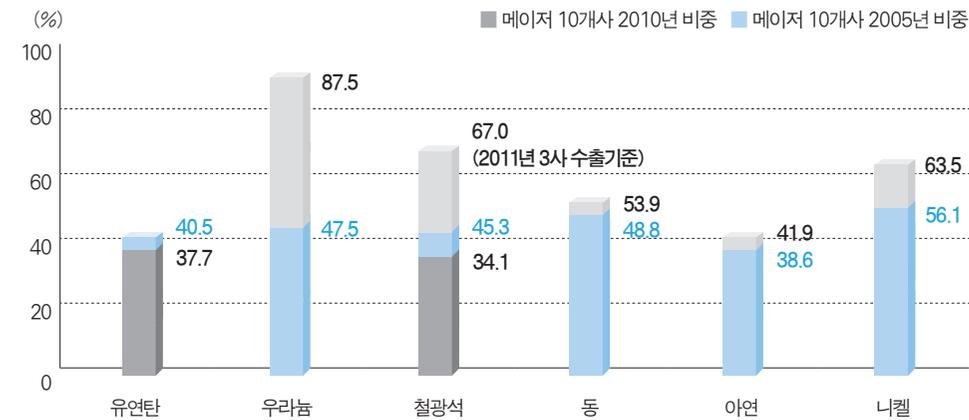
말레이시아는 외국 석유기업들의 국내 유전 개발 참여를 유도하여 경영 효율성제고, 기술확보 등 내적성장을 꾸준히 이뤄가고 있다. 특히 국영 석유사 Petronas는 짧은 자원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Shell과 같은 글로벌 메이저 회사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성장(2010년 기준 일일 생산량 180만 배럴)하여 말레이시아 자원개발의 주축이 되고 있다.

## ② 광물 시장 동향

광물 자원 가격은 지난 10년간 가파르게 상승하여 왔으며, 가격 변동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유연탄의 경우 국내 수입 단가는 2000년 톤당 35달러 수준에서 2011년 137달러로 약 300% 증가하였으며, 철은 톤당 24달러 수준에서 176달러로 600% 이상 급등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수입단가가 동은 440%, 아연은 140%, 니켈은 270% 가량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광물 수요 증가, 채굴 단가가 낮고 품질이 좋은 유망 광산의 고갈 등으로 인하여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광물의 공급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투기자본의 이동 가속화 등도 광물 가격 불안정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의 요인으로 주요 광물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고, 신흥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될 경우 광물 가격이 급등하고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안정적 광물 수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

세계 각국들은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자원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포춘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글로벌 100대 기업 중 자원관련 기업이 24개로 2005년보다 60% 증가하는 등 자원 기업들의 글로벌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 등 신흥지역을 대상으로 정상급 자원외교, 대규모 개발원조 및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국영기업 중심 자원개발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 종합상사들의 자원기업 M&A를 적극 지원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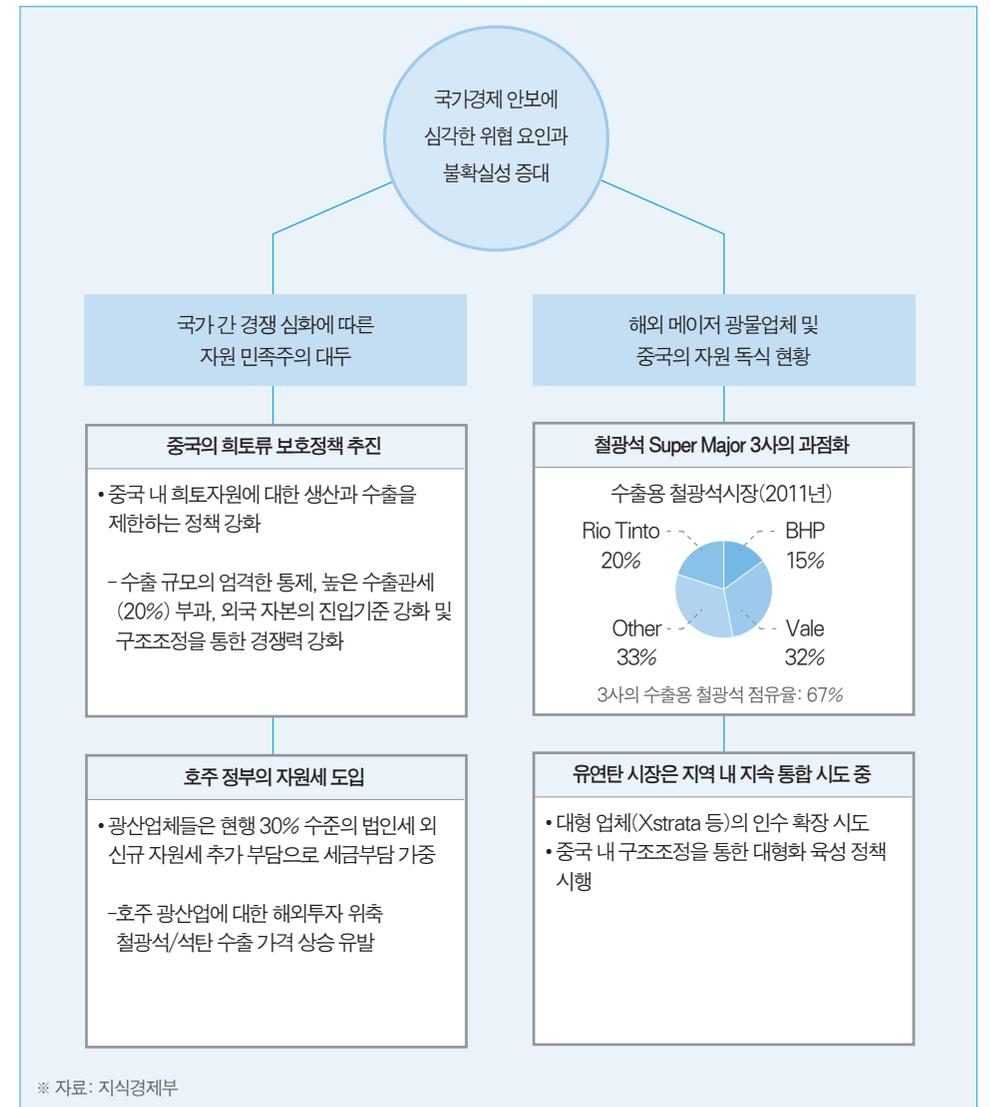
광업 메이저 시장점유율



※ 자료: 지식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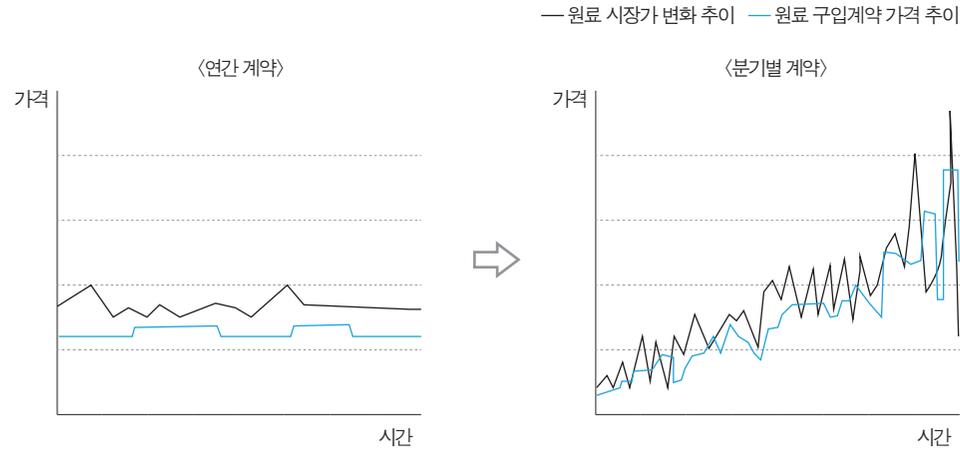
고 있으며 개발원조, 정책금융, 무역보험 등 경제협력과 자원개발을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자원개발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히 자원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세계는 전략적 자원 확보 경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광업 메이저들의 독과점화도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세계 광물 시장은 점차 공급자 우위시장(Seller's Market)으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이다. 글로벌 10대 광업 메이저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유연탄의 경우 2005년 37.7%에서 2010년 40.5%로 증가하였으며, 우라늄은 47.5%에서 87.5%, 철은 34.1%에서 45.3%로 증가하는 등 광업 메이저들의 시장 지배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하여 수요자 교섭력은 축소되고 있으며, 광물 가격결정 체계가 단기화 되고(연→분기, 분기→월), 가격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어 우리나라와 같은 광물 수입국들의 입지는 계속 좁아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원료 가격체계



※ 자료: 지식경제부

최근 자원부국들은 국내 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및 국유화, 자원 세금 및 로열티 인상, 생산·수출 쿼터 부과 등을 통하여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여 나가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12년 철광석, 주석, 몰리브덴 등에 대한 자원세를 2~10배 인상하였다. 특히 2005년 이후 희토류 수출 쿼터를 축소하고, 생산 총량을 제한하는 등의 자원 통제 정책을 강화하고 자원을 무기화하여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분쟁 시 유리한 입지를 확보였으며, 최근 미국, EU, 일본이 이러한 중국의 희토류 정책에 대하여 WTO에 제소하여 국제적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2008년 신흥업법을 제정하여 자국 광물의 국내 가공을 의무화하여 광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광물 가격의 상승, 수급 불안정성 심화, 자원민족주의 확산, 자원확보 경쟁 격화 등의 글로벌 환경 변화는 제조업이 주요 산업기반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향후 심각한 자원안보 위기 상황을 초래할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주요 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원개발 확대 노력이 절실함을 말하여주고 있다.

### 제3절 해외자원개발정책

#### 1.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이명박정부는 해외자원 개발을 범정부 차원의 의제(agenda)로 설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출범 초기인 2008년 6월부터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과감히 수립, 추진하여 단기간 내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였으며, 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2010.12)하여 중장기 해외 자원 개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탐사광구와 투자 비용이 높은 생산광구 인수·M&A의 균형적 투자를 통하여 자주개발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미개척지역(중동, 아프리카 등)에 대한 정상급 자원의외교를 전개하여 해외자원 확보를 뒷받침하였다.

정부는 200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6,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2008~2011년간 해외자원 개발에 약 5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이는 2003~2007년간 예산규모 2조 5,000억 원의 2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2012년에도 1조 1,000억 원의 해외자원개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여 해외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 2.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로 추진력 강화

##### (1) 한국석유공사

글로벌 자원개발 시장에서는 규모의 경쟁력이 필수적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앙골라 광구입찰에 생산규모가 미흡하여 참가를 포기하였으며,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대규모 자본력을 갖춘 중국 등의 광업 메이저에 밀려 호주 로즈베리 아연 개발 사업, 캐나다 블룸레이크 철 개발 사업 등의 유망 광산 인수에 실패한 바 있다. 자원개발은 고위험·고수익 사업으로 규모는 경쟁력과 직결되며, 사업참여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는 자원개발 전문 공기업들의 대형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2008년 6월 '한국석유공사 대형화방안'을 수립하고 추경 6,000억 원을 포함하여 2008~2011년간 3조 3,000억 원을 추가 출자하였다.

그 결과 한국석유공사는 일일 생산량이 2007년 5만 배럴 수준에서 2011년 말 기준 22만 배럴까지 상승하여 세계 70위권에 진입하였으며, 전략지역 별 기업 인수를 통하여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충하면서 자원확보의 영역을 세계로 확대하게 되었다.

### 한국석유공사 대형화 기본방안

- 최소한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기업인수 등을 추진하여 생산규모를 30만 B/D\* 수준으로 확대
  - \* E&P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최소 규모(에너지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 1단계 대형화에 이어 2단계 독자성장 역량강화, 3단계 글로벌 석유기업으로의 도약 등 단계별 성장전략 추구
- 적정 수준의 경쟁력 확보 후, 민간자본 유치 및 시장감시 기능강화를 위하여 석유개발(E&P)부문 분리 및 기업공개(IPO) 실시
  - ※ 중장기적으로 자생력을 갖춘 시점에서 민영화 추진

2011년 말 기준 한국석유공사는 2007년 대비 일일 생산규모는 4배, 매장량은 2.5배 증가하여 글로벌 자원개발 시장에서 인지도가 크게 제고되었다. 규모가 작고 진출영역이 한정된 지역 기업에서 중형기업으로 도약하게 되었으며, 전 세계 자원개발 M&A 기록 상위에 랭크됨으로써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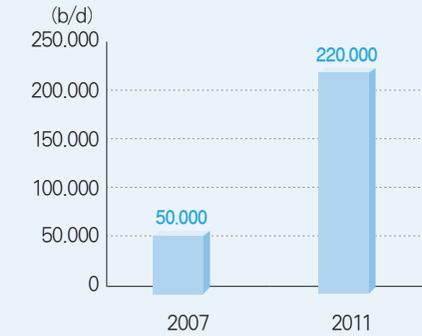
#### (2) 한국광물자원공사

광물 분야에서는 글로벌 광업 메이저를 육성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명칭을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하고, 기능도 기존의 국내 광업 진흥뿐 아니라 해외자원개발투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 아울러 법정 자본금을 6,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고, 2008~2011년간 5,500억 원을 추가 출자하였다. 그 결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산규모는 2007년 9,000억 원에서 2011년 말 3조 3,000억 원으로 증가하여 글로벌 90위권 수준의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였다.

2010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민간의 광물개발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속적으로 해외자원 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2011년에는 전체 투자액 12억 8,000만 달러의 56%에 해당하는 7억 1,0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광물 개발 누적 투자액은 2007년 말 2억 6,000만 달러 수준에서 2011년 말 17억 7,000만 달러로 6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누적 투자액 점유율도 2007년 9%에서 2011년에는 18%로 증가하는 등 해외 광물자원개발 개척자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 석유공사 현황(2011)

생산규모



매장량



총자산



매출/영업이익



※ 자료: 지식경제부

### 3. M&A를 통한 지역별 거점 확보와 역량 강화

#### (1) 석유·가스 분야

M&A는 단기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규모와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현지 개발 경험이 많고 제도에도 익숙한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이를 거점으로 인근지역에 보다 효율적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전략적인 M&A를 통하여 세계 전역으로 자원생산 거점을 확장하였다.

한국석유공사는 2008년 1월 미국 Ankor사 인수를 시작으로 총 6개의 해외 전문기업을 인수하였다. 이로써 북미, 남미,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걸쳐 지역별 거점을 마

한국석유공사 인수기업

인수기업	계약시점	인수 당시 생산(천 b/d)
미국 Ankor사	2008.3	12
페루 Savia Peru사	2009.2	7
캐나다 Harvest사	2009.12	48
카작 Sumbe사	2009.12	1
영국 Dana사	2010.10	48
카자흐스탄 Altius사	2011.3	8

※ 한국석유공사 지분기준

한국석유공사 지역별 자원 확보 체계 구축

Europe/Africa	Asia	America
매장량 271.6백만 bbl(21%)	매장량 304.8백만 bbl(24%)	매장량 703.3백만 bbl(55%)
생산량 68.9천 b/d(31%)	생산량 53.8천 b/d(25%)	생산량 96.5천 b/d(46%)
-	-	-
11개국 154 프로젝트	9개국 29 프로젝트	5개국 32 프로젝트

※ 자료: 지식경제부

M&A를 통한 한국석유공사 자원개발부문 인력 확보

구분	Ankor	Savia	KC LLP	Harvest	Dana	Altius
개발 부문						
지질·지구물리	9	32	11	37	36	10
석유공학	17	65	78	56	54	20
기타(건설, 화공 등)	73	77	133	222	120	327
경영관리	29	70	38	199	101	56
하류 부문	-	-	-	498	-	-
총계	128	244	260	1,012	311	413

※ 자료: 지식경제부

련하였으며, 약 2,000여 명에 이르는 자원개발 인력을 확보하였다. M&A 이후 효과적인 합병 후통합(PMI)을 실시하여 기술인력 대부분이 잔류하게 되어 향후 기술력 확보와 안정적인 성

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M&A후 인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 네트워크 및 정보력을 인근 우량 자산을 인수하는 데 활용하여 성장의 지역거점으로 특특히 활용하였다.

(2) 광물분야

최근 중국의 자원개발 공기업들을 비롯한 세계 광업 메이저들은 M&A를 통하여 자원시장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M&A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지만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일 뿐 아니라 대상 기업이 보유한 자원개발 경험과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자원개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광물 가격이 하락하고,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유망 기업, 자산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상황은 M&A를 통하여 헐값에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그간 자주개발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동과 우라늄을 확보하고, 자원개발 경험과 역량이 미흡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동·우라늄 개발·생산 사업을 중심으로 경영권 확보가 가능한 중소 규모 자원개발 전문 기업 M&A를 추진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교적 유망한 광업 기업 및 유망 사업이 기업가치 하락 및 유동성 악화로 M&A 시장에 다수 출현하였으며, 이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우량 기업 및 자산을 인수하여 자원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및 핵심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었다.

2011년 4월,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캐나다 중견 동 생산기업인 캡스톤(Capstone)사와 공동으로 칠레 동 탐사사업권을 보유한 FWM사(캐나다)를 인수하였으며, FWM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캡스톤사의 지분 인수도 병행하였다.

FWM사 인수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최초로 광업 기업 M&A를 실현한 사례로 세계 최대의 동 생산국이나 글로벌 메이저 기업(Codelco사)이 선점하고 있어 진입장벽이 높은 칠레 자원개발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FWM사 인수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동광 자주개발률을 3.6%p 향상시켜 2011년 10.2%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이를 발판으로 우리나라가 이미 진출한 멕시코 볼레오 사업, 미국 로즈몬트 사업,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사업, 페루 마르코나 사업과 더불어 미주 지역을 관통하는 동벨트를 구축하였다. 한편 FWM사 M&A 사례는 2011년 캐나다 광업부분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2012년 3월 한국자원공사-캡스톤사는 '캐나다 Mining Industry Award'를 공동 수상하기도 하였다.

#### 4. 국내외 민간 자원개발 진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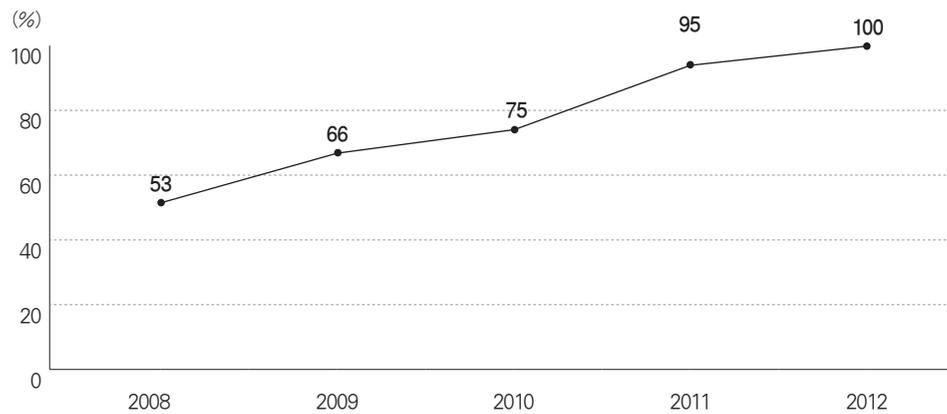
정부는 자원개발 전문 공기업들에 대한 예산 지원 외에도 민간 자원개발 기업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역사와 경험이 일천하고 민간 역량이 미흡한 우리나라의 현실상 공기업 중심의 해외자원 개발 진출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민간투자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수적이며 정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하였다.

##### (1) 성공불 용자

성공불 용자는 사업 리스크가 큰 해외자원개발 조사·탐사 사업에 용자금 지원하여 실패할 경우에 용자 원리금을 감면하고, 성공할 경우에는 특별 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성공불 용자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성공불 용자 심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우선,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008년 9월 고시를 개정하여 2009년 1월부터 해외자원 개발 용자심의회 운영을 해외 자원개발협회에 맡겼으며, 용자업무 대행기관(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소속된 임원의 심의위원 위촉을 배제하였다. 이는 용자 취급기관(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이 선수이자 심판으로 참여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외부 비판을 수용한 것이었다. 심의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석유개발사업 용자 민간기업 지원비율(%)



※ 자료: 지식경제부

평가표의 평가항목이 상이하여 정확한 평가가 어렵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평가표의 평가항목 일치시켰다(2009.7 고시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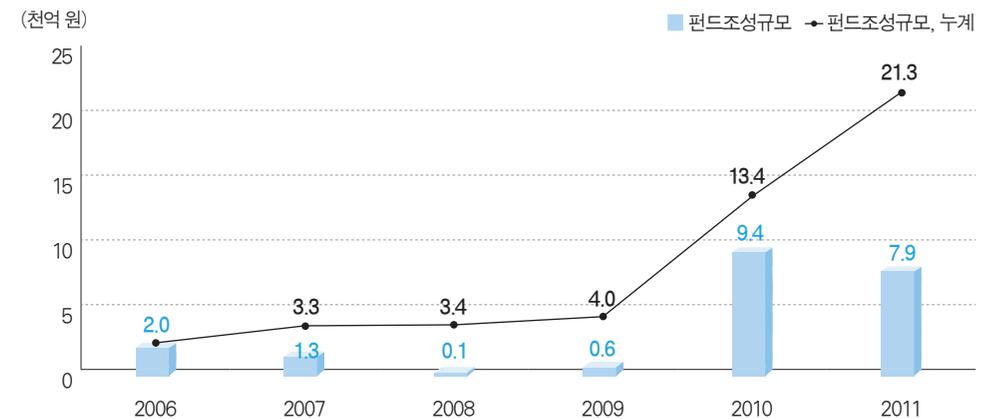
2008년 이후 성공불 용자 운영에 있어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해외사업 민간기업 지원비율의 점진적 상승이라 할 것이다. 특히 2012년부터는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였다. 이는 한국석유공사에 4조 원이 넘는 정부출자가 지원되어 상대적으로 성공불 용자금 지원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최근 금융위기 등으로 투자여력이 예전보다 못한 민간기업의 투자 활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 할 것이다.

##### (2) 해외자원개발 펀드 규모 확대와 정책금융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장기간 동안 높은 투자비용이 수반됨에 따라 자원공기업 또는 민간 자원기업의 재무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민간자금의 풍부한 유동성을 해외자원 개발분야로 유입시키고자 여러가지 정책금융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해외자원 개발 펀드는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유전개발 등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를 의미한다. 정부는 해외자원 개발 펀드에 대한 해외자원 개발 사업 투자위험보증사업,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하여 금융투자의 저변 확대를 측면 지원하였으며, 해외자원개발 펀드 규모는 2007년 이전 2개 3,300억 원 규모에서 2012년 초 9개 2조 4,900억 원 규모로 7배 이상 확대되었다.

해외자원개발 펀드 조성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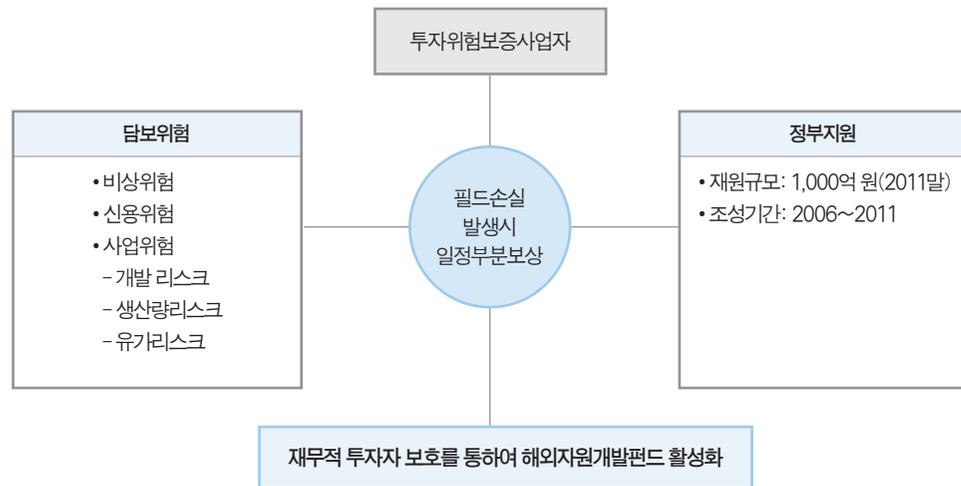
※ 자료: 지식경제부

해외자원 개발펀드의 투자위험을 일부 보증하여 주는 투자위험보증사업은 2006년 12월 지경부 고시를 통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투자위험보증기관으로 지정하면서 2007년부터 업무가 시작되었다. 도입 첫해인 2007년 한국석유공사가 참여한 우리나라 공모형 자원펀드 1호인 베트남15-1 펀드를 지원하였으며, 이듬해인 2008년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참여한 공모형 펀드인 암바토비 니켈펀드를 지원하였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경기침체 및 유가하락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자원분야에 대한 펀드투자가 침체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세계 경기의 완만한 상승기조 및 유가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성에 대한 기대 등으로 2011년에는 4건, 약 6,804억 원의 지원실적을 기록하는 등 운영 실적이 개선되었다. IFRS 도입 이후 차입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자원개발 전문기업에서도 투자위험보증사업을 활용하여 재무적 투자자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투자형태에 대한 문의가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이 탐사·개발·생산 단계에 필요한 금융 지원을 위하여 대출지원 제도 및 보증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전쟁·송금·수용 등 피투자국의 비상위험을 담보하는 해외투자보험과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EPC 계약 수주 외에도 우리 기업의 지분참여, O&M, Offtake 계약 등을 통한 외화획득 가능 해외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사

**투자위험보증사업 구조**



※ 자료: 지식경제부

업금융보험을 운영 중이다. 2012년에는 우리 기업이 사업주, Offtaker, EPC 계약자 등으로 참여하는 중앙아시아 최초의 자원 PF 프로젝트인 수르길 프로젝트를 해외사업금융보험을 통하여 지원한 바 있다. 수출입 은행은 2008년 이후 2012년 8월까지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통하여 7조 7,162억 원, 보증을 통하여 1조 6,803억 원을 지원하였다.

**(3) 해외자원개발 세제지원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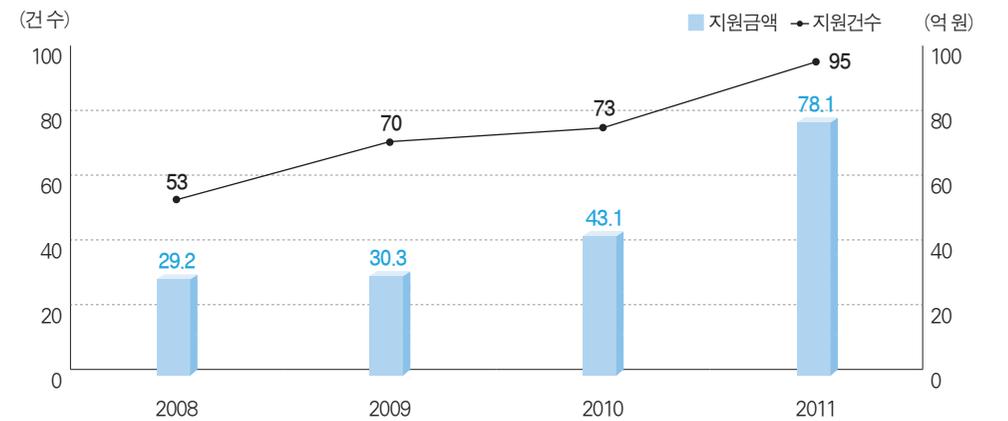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특법 제22조), 해외자원개발설비 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91조의 6)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4의 15)등의 세제지원을 통하여 자원개발기업을 지원하였다.

**(4) 조사지원사업**

해외광물자원 개발은 석유·가스 개발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사업자 중 중소기업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해외자원개발 일반용자 사업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민간 기업의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 등을 지원하여 주는 해외자원 개발 조사 지원 사업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은 1978년 콜롬비아 가르손 우라늄광에 대한 광산 조사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확대되었다. 최근 광물가격의 상승,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 부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지원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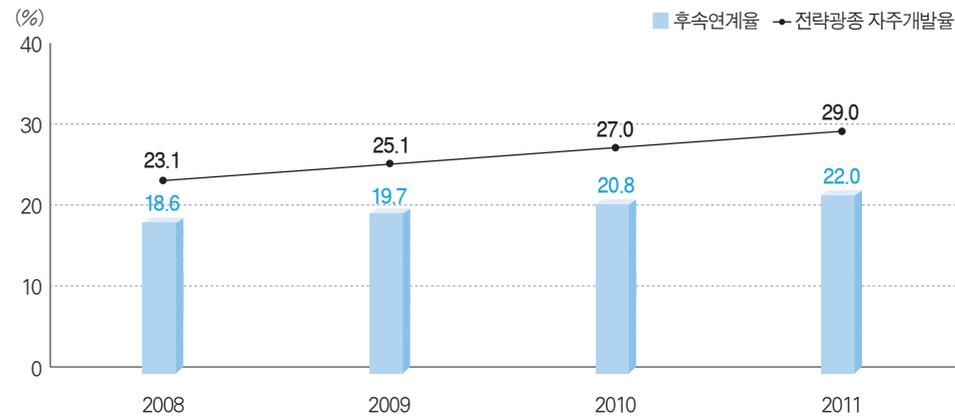


※ 자료: 지식경제부

각 등 외부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진출 확대 및 민간업체의 지원확대 요구 등 내부 환경 변화에 따라 2008년 29억 원이었던 지원규모를 2011년에는 78억 원으로 167%까지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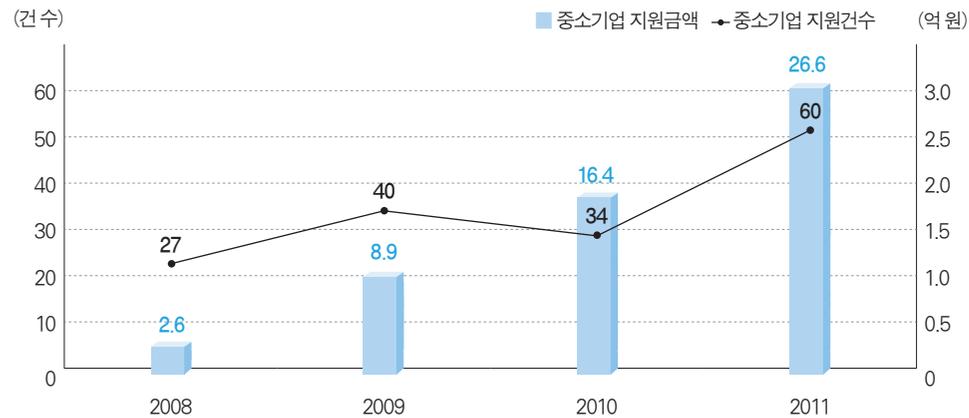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의 외형적인 규모 확대는 물론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차 단계 후속연계율을 2008년 23.1%에서 2011년 29.0%로 상승시켜 국내 기업의 성공적인 자원개발 진출을 지원하였다. 2012년부터는 시험시추 지원량 확대, 국내 조사용역업체 지원 활성화 노력 등을 통하여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성과



※ 자료: 지식경제부

####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중소기업 지원실적



※ 자료: 지식경제부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술력 및 자금조달 능력이 열세인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중소기업 신청 사업에 대한 선정가점 부여(0.5점), 보조비율 확대(2010년 5%→2011년 10%) 등 우대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자원 개발사업 진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해외자원 개발 조사사업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최근 4년간(2008~2011년) 지원 건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0.5%, 지원 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117.1%를 기록하였다.



저는 취임 초부터 자원의외교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개발에 늦게 뛰어 들었습니다만 현재 활발한 외교 교섭을 통해서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에너지 인프라를 반드시 구축해 내겠습니다.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20%까지 끌어올리고 저탄소사회를 향한 에너지 고효율 체계의 기반을 닦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제18대 국회 개원 연설(2008.7.11)



## 5. 인력, 기술, 자본 등 자원개발 인프라 강화

### (1) 인력양성

IMF 외환위기 이후 대학의 자원개발 관련 인력양성 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자원개발 소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어 자원개발특성화 대학사업을 도입하였다.

2008년 11월 전국 10개 대학(서울대, 한양대, 강원대, 동아대, 부경대, 전남대, 조선대, 해양대, 세종대, 인하대)의 에너지자원공학과를 자원개발특성화대학으로 선정하고, 2009년부터 5년간 대학별로 장학금, 연구보조금, 현장견학실습비, 인턴십비용, 교수인력확충비, 교육인프라 구축비 등으로 30~50억 원을 지원하였다. 연간 재원은 국고 약 35억 원과 공기업 출연금 약 75억 원(한국석유공사 30억 원, 한국가스공사 30억 원, 한국광물자원공사 15억 원)으로 충당하였다.

자원개발특성화대학은 에너지자원공학 교육과정을 10개의 기본과정(응용지질지구화학,

자원지질학, 지구물리탐사, 자원개발공학, 석유공학, 자원처리공학, 자원개발안전환경, 시추공학, 자원경제경영학, 미래에너지자원개발공학)으로 재편성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꾸준히 교수 확충과 교육시설 인프라를 강화하여 가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기업의 수요에 적극 대응한 인력양성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형·현장 중심형 교육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특히 2011년부터는 해외인턴십 사업을 추진하여 연간 150여 명의 학생들을 해외 자원개발 현장에 파견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연수를 실시하였다.

그간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시행에 따라 과거 붕괴되었던 대학의 자원개발 인력양성 기반이 복원되고 있으며, 우수 신입생 확보 등으로 학생의 질적 수준도 향상되어 가고 있다. 연간 학부생 약 250명, 대학원생 약 100명의 전문인력이 배출되어 해외자원개발기업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2012년 2월부터는 자원개발특성화대학 지원 범위를 기존의 에너지자원공학 분야에서 지질조사·탐사를 담당하는 지질학 분야로 확대하여 3개 대학(연세대, 고려대, 강원대)을 추가 선정하고, 기존 특성화대학과 같이 2013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자원개발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직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과정으로 자원개발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1단계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석유가스·광물·자산운용 등 3대 분야로 구분하여 연평균 165명 수준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5년간 총 826명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자원개발 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기업의 반응이 좋아 2012년부터 연간 7억 원을 투입하여 2단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나가고 있다.

## (2) 기술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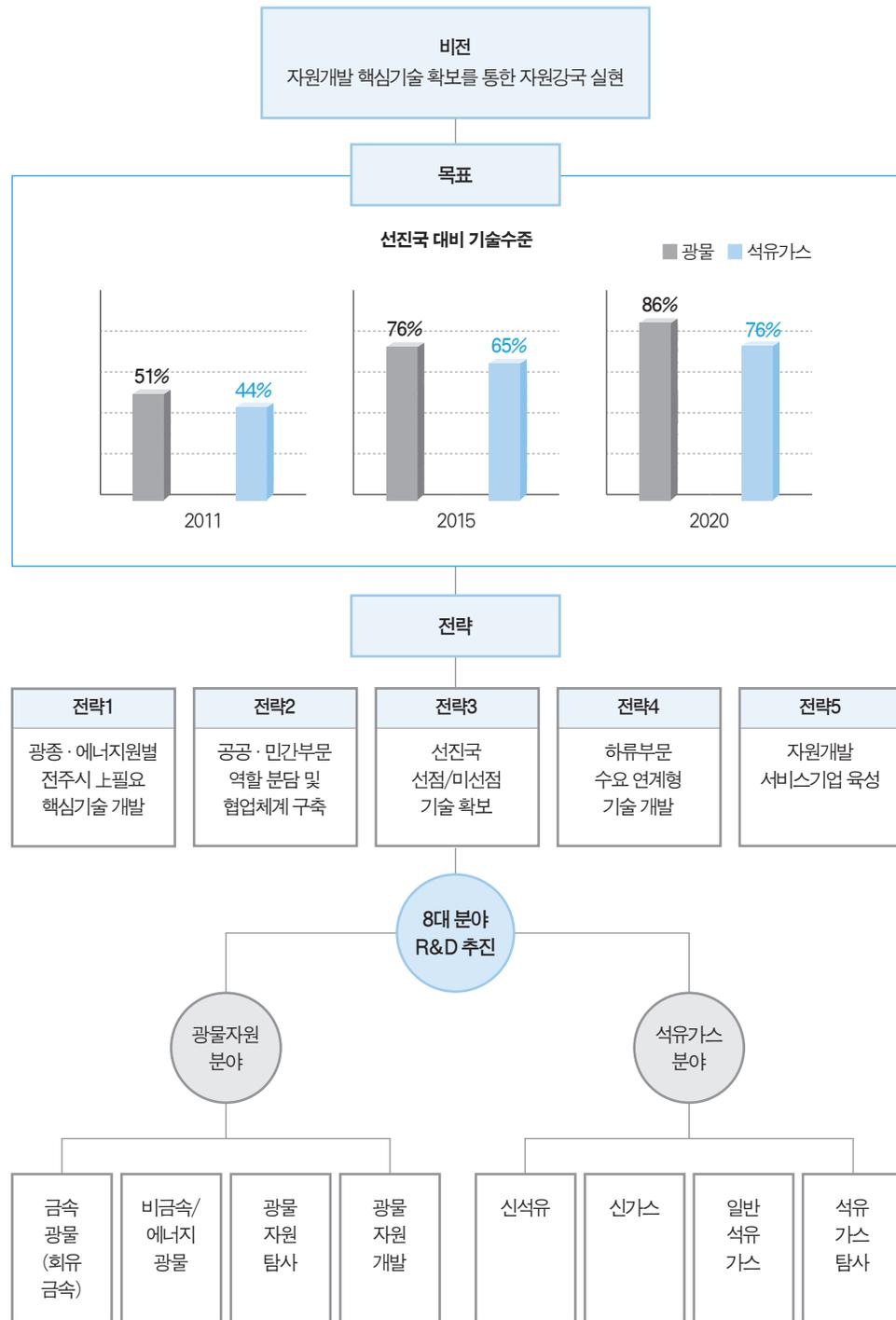
오랜 석유개발 역사를 갖고 있는 메이저 석유개발 기업의 탐사 성공률은 20~30%, 독립계 기업은 15~20%수준이며, 우리 기업들은 아직 이보다 낮은 10~15%수준이다. 정부는 탐사 성공률 제고와 국내 자원개발 기술력 강화, 인력양성, 기술 노하우습득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R&D 지원의 투자규모를 2007년 139억 원에서 2012년 304억 원으로 2배 확대하여 지원 중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기업들은 짧은 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하여 온 탓에 축적된 경험이 부족하고 선진기업에 비하여 인력과 기술력도 부족하다. 특히 최근 들어 심해 시추기술 개발 연구가 보다 활발하여지고 수압파쇄 기술과 수평정 시추 기술 등 비전통 자원의 생산량 증대 기술이 북미를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기술환경 변화에도 적응할 필요가 생겼다.

정부는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자원 소비 증가로 인한 심해·오지·저품위광 개발 필요

성 증대, △그간 생산이 지연되었던 비전통 자원 개발의 현실화, △희유금속 확보의 중요성 부각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시 신자원개발 핵심기술 로드맵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1년 12월 '자원개발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로드맵 마련에는 2011년 2월부터 약 10개월간 총 70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특히 민간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참여 전문가 40%를 산업계 인사로 구성하고 설명회,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자원개발 기술수준을 현 47% 수준에서 2020년에 80% 이상으로 높이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 활용도 및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8대 분야, 26개 전략품목, 84개 핵심기술을 선정하였다.



※ 자료: 지식경제부

## 제2장

# 해외자원개발, 우리의 자원영토 확장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 이후 1981년 마두라 유전 획득을 시작으로 과거 정부는 자원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명박정부 또한 그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자원개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첫째, 정권초기인 2008년 6월부터 한국석유공사 대형화 전략 등 공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과감히 수립, 추진하여 단기간 내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둘째,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탐사 광구에서 생산광구 인수·M&A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주개발을 제고를 도모하였다. 셋째, 중동·아프리카 등 미개척지역에 대한 정상급 자원 외교를 추진하였다. 이로써 35년 해외자원개발 역사에서 질적·양적 측면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였다.

## 제1절 자주개발물의 획기적 제고

자주개발물이란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개발, 생산하여 확보한 물량이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이는 자원시장 교란 등 비정상적인 위기 발생시에 대비하여 자국이 통제 가능한 자원확보량을 의미하는 안보적 측면과, 에너지 위기로 인한 국민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보여주는 경제적 측면에서 자원개발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 1. 석유·가스

이명박정부 들어 자주개발률이 크게 상승하였다. 석유·가스의 경우 2008년 5.7%에서 2011년 13.7%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50년 이상의 해외자원 개발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의 자주개발률이 2004년 이후 22~24% 수준에서 정체된 것과 비교할 때 획기적인 성과로 볼 수 있다.

공기업, 민간기업 모두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8년 이후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한 생산광구 인수 및 M&A를 통하여 자주개발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지난 4년간 자주개발 물량이 일일 약 34만 배럴로 이전에 확보된 물량에 비하여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자주개발률도 사상 최초로 두 자리수를 기록하였다.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자주개발률	3.1%	3.9%	4.1%	3.2%	4.2%	5.7%	9%	10.8%	13.7%

※ 자료: 지식경제부

자주개발물량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석유·가스 총계	8.1	10.7	11.5	9.5	12.5	17.2	26	34.2	46.5
(단위: 만 배럴/일)									
공기업 (비중)	3.1	4.6	5.2	4.6	5.7	5.8	13.7	20.1	25.2
(비중)	38.3%	43.0%	45.2%	48.4%	45.6%	33.7%	52.7%	58.8%	54.2%
민간 (비중)	5	6.1	6.3	4.9	6.8	11.4	12.3	14.1	21.3
(비중)	61.7%	57.0%	54.8%	51.6%	54.4%	66.3%	47.3%	41.2%	45.8%

※ 자료: 지식경제부



정부는 올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20%까지 올리고자 합니다. 이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일쇼크 같은 에너지 위기에 충격을 훨씬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확고한 에너지안보를 이룩하기 위하여 오는 2020년에는 35%까지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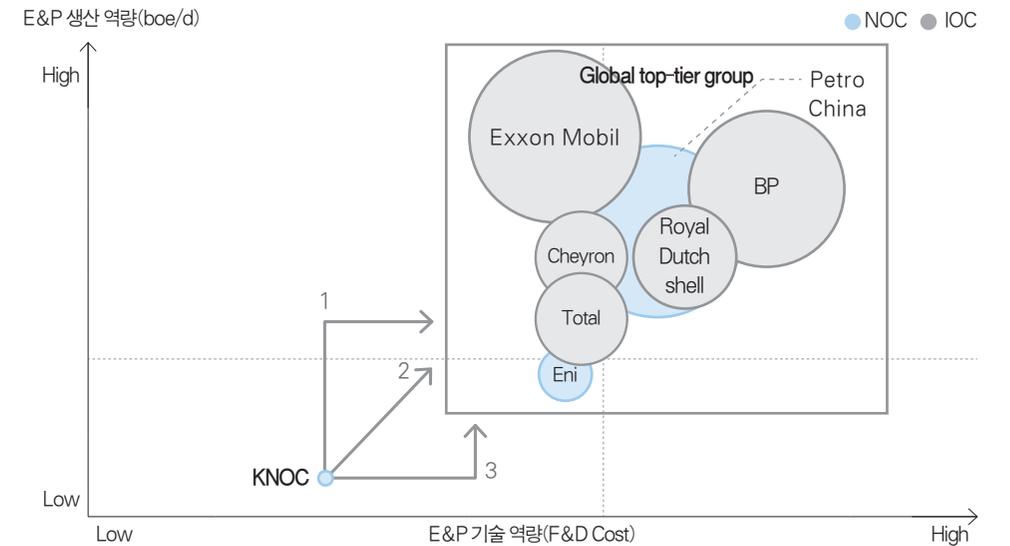
이명박 대통령, 비상경제대책회의(2012.3.5)



글로벌 자원개발 시장에서 규모의 경쟁력이 필수적 요소 중 하나이고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M&A를 통하여 한국석유공사를 대형화한 것은 자원확보 역량을 단기간 제고하는 전략적 선택이었으며 자원확보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한국석유공사의 대형화는 자주개발률 진작뿐만 아니라 당시 5만 B/D 수준에 불과한 한국석유공사의 기술력, 운영능력 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Big-bang 성장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북미, 남미, 중앙아시아, 유럽 등 석유기업들과 자산을 인수함으로써 국제 석유기업들의 노하우를 획득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자원 확보 거점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자원개발 기업 성장유형



1. Big-bang Growth - 대규모 투자를 통한 기술내재화
2. Hybrid Growth - M&A와 함께 탐사투자 병행
3. Organic Growth - 기술내재화 통하여 탐사에 주력

## 2. 광물

2011년말 기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포함한 우리기업들은 48개국에서 37개 광종, 307개 해외광물자원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그간 총 누적투자액은 9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1년 말에는 2007년 말 대비 진출 기업과 사업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투자 규모도 3배 이상 증가하여 최근 4년간 투자액(68억 달러)이 2007년 이전 31년간 투자액(30억 달러)의 2배를 상회하는 등 최근 우리기업들의 해외 광물자원 개발 진출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 6대 전략광물 개요

유연탄	우라늄	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대 소비 에너지 광물</li> <li>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40% 담당</li> <li>기타 제철용, 시멘트 제조용 등에 사용</li> <li>세계 8위 소비국(7천 6백만 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환경 에너지원</li> <li>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31% 담당</li> <li>세계적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라늄은 전량 수입에 의존</li> <li>세계 5위 소비국(3,800톤 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철/제강용(산업의 쌀)</li> <li>건설, 자동차 등 광범위하게 사용</li> <li>세계 5위 소비국(6천 7백만 톤)</li> </ul>
구리	아연	니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선·전자·IT 산업원료</li> <li>배선·배관 등 건축자재</li> <li>세계 5위 소비국(85만 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금, 도금 및 자동차 공업, 건축물 부식 방지 등 피복재료</li> <li>세계 4위 소비국(54만 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테인리스·합금용</li> <li>배터리 제조 및 촉매제</li> <li>세계 4위 소비국(10만 톤)</li> </ul>

※ 자료: 지식경제부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률이 2007년 18.5%에서 2011년 29%로 증가하였으며, 연간 생산액은 2007년 39억 3,000만 달러에서 2011년 121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리튬, 희토류 등 신전략광물 자주개발률도 2007년 6.1%에서 2011년 12%로 약 두 배 상승하여 당초 2012년 자주개발률 목표 12%를 조기에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연탄의 경우 호주 나라브리, 코카투, 와이웅 사업 신규 진출과 인도네시아 파시르 탄광 생산 확대 등으로 주요 유연탄 수급 거점을 구축하였으며, 2011년말 자주개발률은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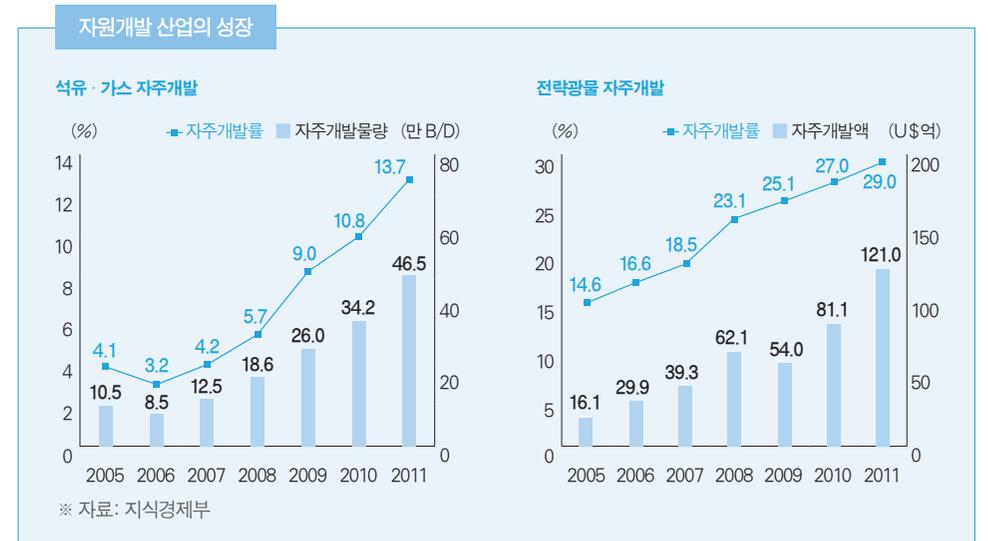
목표(50%)를 초과한 52%를 달성하였다.

우라늄의 경우 2009년 캐나다 데니스 광산에 최초 진출한 이후 니제르 테기다, 이모라렝 사업에도 진출하여 추가 생산 역량을 확보하였으며, 2007년 '0%'였던 자주개발률을 2011년말 6.5%로 제고하였다.

철의 경우 실수요 기업인 포스코를 중심으로 브라질 나미사 철광 등 대형 광산을 확보하였으며 자주개발률은 2007년 10.7%에서 2011년말 15.3%로 상승하였다.

자주개발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동광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중심으로 2011년 동광개발 전문기업인 캡스톤사, FWM사 지분을 인수하였으며,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미국 로즈몬트, 멕시코 볼레오, 페루 마르코나 사업 등 유망 광산 인수를 통하여 미주 동벨트를 구축하고, 자주개발률을 2007년 4.7%에서 2011년 10.2%로 제고하였다.

아연의 경우 실수요기업인 고려아연을 중심으로 호주, 볼리비아 등의 아연개발 사업에 진출하여 2011년 자주개발률 30%를 달성하였으며, 니켈의 경우 2011년 자주개발률 30.5%를 달성하였다. 2차전지의 원료로 각광받고 있는 리튬의 경우 세계 주요 리튬 매장국인 칠레와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에 신규 진출하였으며, 볼리비아와는 리튬 배터리 양극재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중장기적인 리튬 확보 기반을 마련하였다. 희토류의 경우 중국 서안맥스(2003년) 및 포두영신(2010년) 사업에 진출하여 세계 희토류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남아공 잔드콥스드리프트 희토류 개발 사업에도 진출하여 희토류 공급 다변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자원개발 산업의 성장(계속)

자원개발 진행사업 수



자원개발 투자규모



운영권 확보 유전사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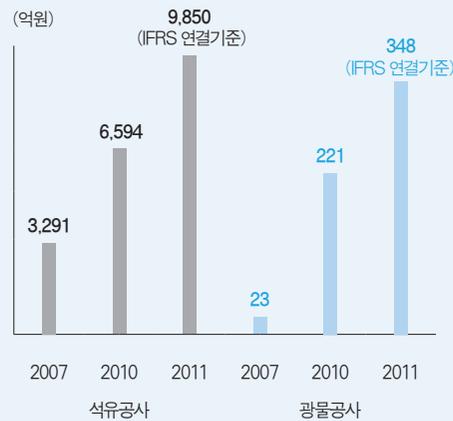
자주개발물량 1만 배럴 이상 유전사업 수



자원개발 펀드 조성규모



공기업 영업이익



※ 자료: 지식경제부

6대 전략광종 가격, 수입액, 자주개발액 (2008~2011)

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광



아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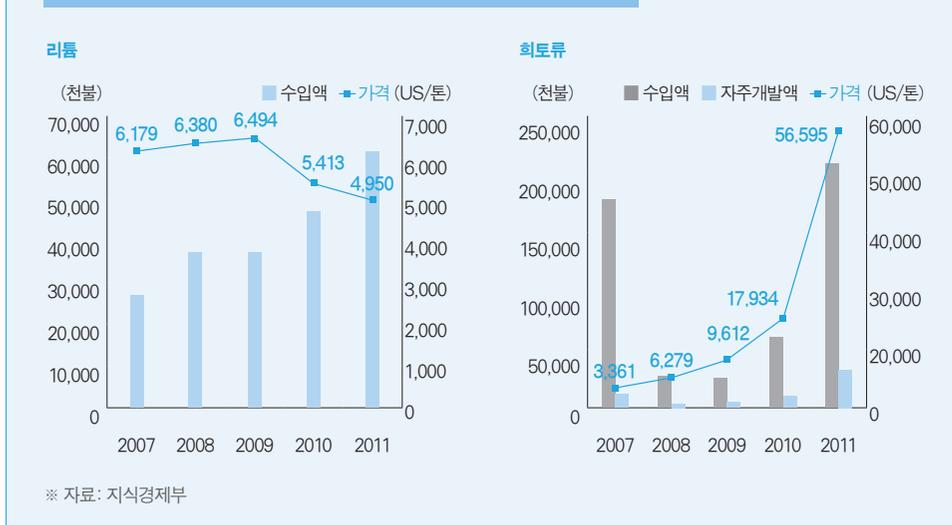


니켈



※ 자료: 지식경제부

신전략광종(리튬, 희토류) 가격, 수입액, 자주개발액(2008~2011)



“  
 원전을 계기로 맺어 진 양국 간의 100년 관계는 오늘을 계기로 또 다시 한 차원 높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1970년대 이후로 어느 나라도 진입하지 못하였던 UAE 아부다비 유전에 진출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양국 100년간의 동반자 관계는 무한한 가능성을 향하여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국민들은 맨 땅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어낸 열정을 가지고  
 이 소중한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 아부다비 기자회견(2011.3.13)

“관계”에 바탕을 둔 정상외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자원개발 사상 최대 규모의 유전개발 진출 기회를 확보하였다.

## (2) 정상자원외교로 이룩한 중동 핵심유전 지역 진출 쾌거

2011년 3월 13일 UAE 아부다비, 한·UAE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석유가스분야 개발 협력 양해각서(MOU)와 3개 광구 주요 조건 계약(HOT: Head of Terms)이 체결되었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최소 10억 배럴 이상 대형 생산유전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으며, 3개 탐사광구 광권에 대한 우선 참여권도 함께 확보하였다.

ExxonMobil, BP, Shell과 같은 석유메이저 및 소수 일본기업에게만 진입을 허용한 UAE 아부다비에 세계 77위의 석유기업인 한국석유공사가 진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이는 정부의 정상 자원외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당초 아부다비 정부는 한국의 석유개발 기술력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참여조건 협상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난관에 봉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전화 통화와 회담을 통하여 아부다비 최고위급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였다. 수차례의 특사 파견, 수십 차례의 협상팀 파견을 통하여 실무 협상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한국석유공사 합동팀의 수년간의 노력과 준비는 결국 아부다비 측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동 서명식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UAE 양국 간 이뤄낸 성과를 거듭 강조하였다.

## 제2절 정상급 외교로 중동지역 최초 진출

### 1. ‘석유개발 1번지’ UAE 아부다비 진출과 결실

#### (1) 소리없는 총성, 자원확보 경쟁 심화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는 고유가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은 안정적인 석유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석유개발 역사가 100년을 지나면서 쉽게 찾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Easy Oil’은 점차 소진되고 있으며, 중동 등 주요 자원부국들은 석유개발을 대부분 국가 직영체제로 운영하거나 외국 참여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상업조건을 재편하여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의 석유개발 지역은 심해나 기반시설이 전무한 오지 등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외 여건 속에서 역대 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한 자원확보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그 성과는 주로 상업성이 확인되지 못한 탐사광구 참여로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정부는 상업성과 탐사유망성이 확인된 중동 핵심지역으로 진출하는 데 주력하였고, 그 대상은 전 세계 석유매장량 6위국 UAE 아부다비였다. UAE 아부다비는 이미 기득권을 선점한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 메이저 기업 외에는 외국 기업의 자원개발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자원개발의 프리미어리그였다. 그러나 정부는 UAE와 ‘100년간의 전략적 파트너

### (3) 3개광구 본계약 체결, UAE 유전개발 사업 결실

2011년 3월 3개광구 주요조건 계약 체결 이후 양국 석유공사는 세부사업 조건 등을 확정하여 2012년 3월 5일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서 2009년부터 추진된 UAE 석유개발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UAE 석유개발사업은 탐사유망성과 안정적인 수익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정상외교를 통하여 참여한 사업에 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3개광구 사업’은 1960~1980년대 시추를 통하여 원유부존이 확인된 유망 탐사광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 공동운영권을 확보하여 중동지역 광구운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GS에너지와 한국석유공사가 한국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간기업의 자원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다.

이와 함께 추진 중인 ‘10억 배럴 유전사업’은 이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육상 대형유전 참여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아부다비 정부는 한국석유공사를 포함한 세계 약 10여개 석유기업을 초청하여 유전 참여사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 아부다비 석유개발사업 추진방식 및 기대효과

추진방식	Two Track 사업추진 - 탐사광구(유망성) 및 생산유전(수익성) 사업을 동시에 추진	
	Track 1 (탐사광구)	Track 2 (생산유전)
	3개광구 사업(계약체결) 원유부존을 확인한 유망 탐사광구 참여 (발견원시부존량: 5억 7,000만 배럴)	10억 배럴 유전사업(추진 중) 이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육상 대형유전 참여 (일산량: 전체 138만 배럴)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사유망성과 안정적인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사업리스크 상쇄</li> <li>• 3개광구 공동운영권 확보를 통한 광구운영 노하우 습득</li> <li>• 석유메이저와의 파트너십 형성으로 글로벌 수준의 E&amp;P 기술력 제고</li> </ul>	

※ 자료: 지식경제부

## 2. 이라크 대형 생산광구 및 가스전 개발 사업 참여

### (1) 우리 기업의 이라크 유전개발 참여 의의

이라크는 세계 3위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1991년 1차 걸프전쟁과 그 이후 유엔의 경제제재, 2003년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주둔 등으로 인하여 중동의 여타 산유국에 비하여 석유개발이 뒤처지게 되었다. 이는 의도적이지는 않았지만 이라크가 중동 최후의 ‘Easy Oil’ 지역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2008년 이라크가 국제입찰로 개발/생산광구를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전 세계 석유업계의 관심은 이라크 유전입찰에 집중되었다.

한국기업도 마찬가지였다. 한국기업이 이라크 유전개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이라크 석유부가 정한 생산량 기준이었다. 이라크 석유부는 유전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자격기준으로 생산량 50만 B/D 회사는 운영사, 지분참여사는 25만 B/D라는 한국기업으로는 넘볼 수 없는 높은 수준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당초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2만B/D 수준의 생산량을 유지하던 한국가스공사는 2009년 시작된 1차 이라크 유/가스전 입찰부터 2010년의 3차 입찰까지 참여하여 주바이르 유전(2009.6), 바드라 유전(2009.12), 만수리야 가스전(2010.10), 아카스 가스전(2010.10) 등 4개 개발·생산 광구를 확보하였다.

한국가스공사가 이라크에서 확보한 4개 유전과 가스전은 한국가스공사의 독자 노력만으로 따낸 것은 아니었다. 일본 경산성 장관이 폭탄테러 위협을 이유로 바그다드 시내가 아닌 바그다드 공항호텔에서 일·이라크 경제포럼을 개최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지식경제부 이윤호 장관(2009.6), 최경환 장관(2010.2), 최중경 장관(2011.2)은 폭탄테러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그다드 시내로 진입하여 한·이라크 경제협력 포럼을 개최하는 등 장관급 외교로 측면 지원함으로써 이라크 측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탈라바니 대통령(2009.2)과 말리키 총리(2011.4) 등 이라크 정상외교를 통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이라크 진출을 지원하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탈라바니 대통령과 ‘한·이라크 경제-에너지 협력 양해각서’에 직접 서명하여 우리 기업의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 진출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한국가스공사가 이라크에서 4개 유전과

말리키 총리는 2007년 4월, 2011년 4월, 2차례 방한한 바 있다. 말리키 총리는 방한 후, 내각회의에서 “한국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 산업분야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하고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이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한국 기업의 특장점을 인정하고, 이라크의 전후 재건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 발전·화학·산업플랜트 등 협력에 한국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말리키 총리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가스전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러한 정상급 외교관계가 긍정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평가된다.

## (2) 이라크 유전 개발 참여 성과

가스공사가 1차 입찰에서 확보한 주바이르 유전은 원시부존량 247억 배럴의 초대형 유전으로, 이탈리아 ENI사(운영사), 미국 Occidental사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에 성공하였다. 주바이르 유전은 세계 최대 유전지대인 이라크 남부 바스라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해외유전 개발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유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첫 사례로 꼽히고 있다.

2010년 1월 28일 본계약을 체결한 이 유전에서 운영사(ENI사)를 비롯한 참여사들은 일일 생산량 최대 120만 배럴을 7년 이상 유지할 계획이며, 계약기간 20년(2010.2~2030.2) 동안 총 64억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계획이다. 2012년 12월 말 현재 일일 약 31만 배럴 정도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주바이르 유전은 한국가스공사가 18.75%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말까지 약 319만 배럴(약 3.3억달러 규모)의 원유를 인수, 판매하였다.

한국가스공사는 2차 입찰에서 러시아 Gazprom사(운영사), 말레이시아 Petronas사 터키 TPAO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바드라 유전을 확보하였다. 바그다드 동쪽에 위치한 바드라 유전은 원시부존량 29억 배럴로 참여사들은 계약기간 20년(2010.2~2030.2) 동안 8억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계획이다. 2012년 12월 현재 평가정과 생산정을 시추 중인 바드라 유전은 2013년 하반기 최초 상업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일 최대 17만 배럴의 원유생산을 7년 이상 유지할 계획이다.

1, 2차 입찰 성공에 이어 한국가스공사는 2010년 10월 3차 입찰에서 만수리야와 아카스 가스전을 확보하였다.

만수리야 가스전은 터키 TPAO사(운영사), 쿠웨이트 KEC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확보한 유전이며, 2012년 5월 이라크 정부로부터 예비개발계획을 승인 받은 후 지상설비 건설을 위한 개념설계(Concept FEED)를 준비 중이다. 이라크 바그다드 북동부 약 100 km에 위치한 만수리야 가스전은 추정 매장량 2.65Tcf 정도로 평가되며, 계약기간 20년(2011.7~2031.7)동안 1.68Tcf의 가스를 생산할 계획이다.

아카스 가스전은 한국가스공사에 더욱 특별하다. 한국가스공사 최초로 가스전 운영사로 참여하여 낙찰받은 가스전이기 때문이다. 아카스 가스전은 시리아 국경으로부터 약 50km 떨어진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2년 9월 이라크 정부로부터 1차 가스처리설비 건설 및 상업생산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인 예비개발계획(PDP) 승인을 받은 후 개념

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아카스 가스전은 추정 매장량 3.3Tcf로 평가되며, 향후 20년간 약 2.1 Tcf의 가스를 생산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의 이라크 4개 유전과 가스전 사업 참여는 STX 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민간기업이 주바이르 및 바드라 지상설비 건설에 참여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하였으며, 향후 아카스 가스전 지상설비 건설 등 이라크 사업에 더 많은 국내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라크 4개 프로젝트에서 20년의 계약 기간 동안 약 2,000만 톤 규모의 천연가스를 확보하여 국내 에너지 자주개발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제3절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가스전 발견

### 1. 모잠비크 Area4 가스전 발견 성공 의의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한 동아프리카 모잠비크의 Area4 광구에서 초대형 가스전이 발견되어, 현재까지 발견된 자원량만 총 68Tcf(약 15억 톤)수준으로 한국가스공사 지분율 10%를 감안할 경우 1억 5,000만 톤의 LNG를 확보하였다. 이는 국내 연간소비량의 약 4배에 달하는 양이며 매장량 평가를 위한 추가 시추를 통하여 향후 매장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모잠비크 Area4 가스전은 금세기 동안 발견된 가스전 중 최대이며, 아나다코(Anardako)사가 개발 중인 Area1(자원량 70~100Tcf)과 합산할 경우 모잠비크 해상은 카타르(North Field)와 이란(South Pars)이 개발하고 있는 페르시아만 가스전(약 2,000 Tcf)에 이어 지구촌 제2의 천연가스 매장지역이 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의 모잠비크 해상광구 참여 배경에는 한국가스공사와 세계 8위의 석유개발 기업인 이탈리아 ENI사와의 협력관계가 긴밀하게 작용하였다. ENI사가 상류산업(유가스전 탐사·개발·생산)에 강점을 가진 기업인데 반하여 한국가스공사는 중·하류(액화, 저장, 수송, 판매)에 강점을 가진 기업인 점을 고려, 2006년부터 한국 가스공사는 ENI사와 제3국 공동 진출을 협의하였다.

모잠비크 Area4 사업은 현재 탐사단계로 한국가스공사, ENI(이탈리아), Galp(포르투갈), ENH(모잠비크 국영석유회사) 4개의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4개 기업은 모잠비크 동부 해상의 1만 2,956km<sup>2</sup> 면적에 대한 석유·가스 탐사권리를 공유하고 있다. 평균수

심이 1.9km의 심해에 달하는 악조건이었지만 2011년 10월 첫 탐사정에서 22.5Tcf의 가스부존량 확인을 시작으로 2012년 12월 현재까지 5개의 탐사정을 시추하여 62Tcf의 가스부존량(GIIP: Gas In Initial Place)을 확보한 상태이다. 본 발견은 국내 자원개발 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로 향후 추가 매장량 확보도 기대하고 있다.

## 2. 모잠비크 가스전 개발계획

모잠비크 Area4 광구 탐사사업의 탐사단계는 2015년 1월 종료되고, 이후 개발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개발계획의 수립이다. 사업 참여사들은 향후 LNG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모잠비크 육·해상의 기후, 지질, 지형, 환경 등 다양한 방면에 걸친 연구·조사와 플랜트 건설 부지 선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Area4 가스전에서 파생되는 LNG사업의 참여지분을 확대할 계획이고, 이를 통하여 LNG 액화 플랜트와 배관건설, 수송 등 연관 사업에서 국내 민간기업의 동반 진출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 제4절 프런티어 지역 진출 확대

이명박정부는 잠재력이 큰 프런티어 지역으로의 진출을 통하여 자원 확보 경쟁이 더욱 격화될 미래 자원전쟁에 대비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래 자원의 보고로 평가되는 북극권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북극은 극한의 기후로 인하여 석유·가스 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미탐사 지역으로 미래 자원 확보를 위한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미국 지질조사소는 북극권 내에 전 세계 미발견 석유·가스의 약 20%(석유 13%, 가스 30%)가 부존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유가의 상승, 지구온난화에 따른 북극해 해빙, 극지 자원개발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북극권 자원개발 진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2011년 1월 한국가스공사는 캐나다 우미악 광구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원개발의 시야를 북극권으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2012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그린란드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그린란드 자치정부간 자원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정부 간 협력의 첫 물꼬를 텄다. 이와 함께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그린란드 국영 광물기업인 누나 미네랄스(NUNA Minerals)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덴마크·그린란드 지질조사소(GEUS)가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최근까지 그린란

드는 미국,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일본 등 선진 각국이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각축장이 되어 왔으며, 이제 한국도 이들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비전통 자원 분야에서도 입지를 확보하였다. 비전통 자원은 기존 생산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생산·추출되는 자원으로서 오일샌드, 초중질유, 세일오일, 세일가스, CBM(탄층가스, Coal Bed Methane) 등을 일컫는다. IEA는 2035년 세계시장에서 비전통 오일의 점유율은 약 10%에 이르고, 비전통 가스는 약 18%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

### 세일가스 개발·도입 전략

목표	저렴한 세일가스 적기 도입을 통하여 LNG 도입선 다원화 및 가스가격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일가스 도입 비중: (2017) 7% → (2020) 20%</li> <li>• 세일가스 개발 비중: (2011) 3.4% → (2020) 20%</li> </ul>



추진과제	<b>북미산 세일가스 개발·도입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미산 세일가스 도입을 통하여 도입선 다원화</li> <li>• 세일가스전 개발 확대를 통하여 자주개발을 제고</li> </ul>
	<b>공기업·민간 협력형 수직일관 개발·도입체제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액화-도입을 연계하는 한국형 개발모델 구축</li> <li>• 세일가스 개발·도입 민관협의회 운영</li> <li>• 세일가스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li> </ul>
	<b>세일가스 투자 확대를 위한 자원 확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기업의 세일가스 투자재원 확충</li> <li>•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li> </ul>
	<b>세일가스 활용확대를 위한 기반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북아 LNG 트레이딩 허브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li> <li>• 국내 천연가스 저장 인프라 확충</li> </ul>	
<b>세일가스 개발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국 수준의 세일가스 개발기술 역량 확보</li> <li>• 세일가스 자원개발 핵심 전문인력 양성</li> </ul>	

※ 자료: 지식경제부

다. 비전통 자원은 현재 상대적으로 메이저의 장악도가 낮고, 자원보유국이 개발을 장려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미래 성장동력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비전통 자원 관련 기술개발 R&D를 추진하는 한편 자원개발 공기업을 통하여 비전통 자산을 확보하고 셰일가스의 경우 개발에서 도입까지 연계하는 종합전략도 수립하였다. 한국석유공사는 미국 이글포드 자산을 인수(2011.4)하여 셰일오일 개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시장분석기관 IHS Herold도 한국석유공사의 이글포드 진출을 예리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한 바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호주 GLNG 사업(2010.2)을 통하여 CBM(Coal Bed Methane, 탄층가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장 유망한 치밀·셰일가스 생산지역인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지역에 진출(2010.12)한 바 있다.

정부는 셰일가스 개발 확대에 대한 국제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부문의 선제적 대응전략을 제시하기 위하여 '셰일가스 개발·도입 및 활용전략'을 발표(2012.9)하였다.

셰일가스의 국내도입을 위하여도 선제적으로 움직여 2012년 1월 미국내에서 개발진척도가 가장 앞선 Sabine Pass 프로젝트로부터 2017년부터 20년간 연간 350만톤의 셰일가스를 구매하는 계약을 성사시켰다. 우리나라가 한중일 3국중 가장 빨리 미국 셰일가스를 도입하게 된 것은 한미FTA체결이 큰 역할을 하였다. 바로 미국이 FTA체결국으로의 LNG수출승인을 우선부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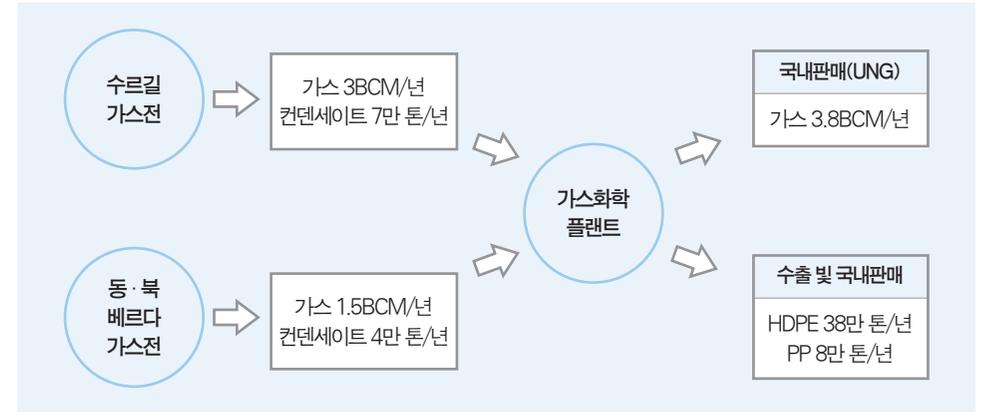
러시아産 천연가스를 북한 경유 가스관을 통하여 안정적·경제적으로 국내 도입하는 방안은 미국산 셰일가스로 인한 세계 가스시장의 변동, 국내수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협의가 추진될 전망이다.

## 제5절 자원과 기술을 결합한 동반성장 모델 구축

### 1.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프로젝트

수르길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령 아랄해 인근에 위치한 수르길 가스전을 한국컨소시엄(한국가스공사 22.5%, 호남석유화학 24.5%, STX에너지 3%)과 우즈베키스탄 국영석유가스공사인 UNG(50%)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원료로 가스화학공

수르길 프로젝트 개요



※ 자료: 지식경제부

장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약 40억 달러 규모이다.

수르길 가스전은 매년 약 1,400만 LNG톤을 20년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가스전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과거 자국의 가스전을 개발하여 파이프라인으로 러시아에 가스를 판매하는 사업만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1998년 외국자본으로 건설된 술탄 가스화학 공장이 천연가스에서 비닐류의 원소재인 폴리에틸렌을 생산, 수출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이 보유한 천연가스의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어디인지 살펴보던 중 아시아권에서 대한민국이 가스화학의 강국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에 천연자원 개발 및 활용을 위한 MOU 체결을 요청하여 2006년 3월 한국가스공사와 UNG 간에 MOU를 체결하였고, 2007년 10월 한국가스공사, 호남석유화학, STX에너지 등으로 한국컨소시엄이 구성된 후 2008년 5월에는 양국 간 합작회사인 UZ-KOR Gas Chemical이 타슈켄트에 설립되었다.

2010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양국 간 정상회담 계기에 한국컨소시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 간에 투자협정(Investment Agreement)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업은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경제성을 보장(IRR 15%) 받았다. 이로써 한국 측은 우리 자본과 기술의 해외 진출과정에서 국내 금융권의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 능력배양, 정당한 수출가격의 플랜트 공사수주, 자원보유국과 공정한 자원개발 이익분배라는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양국의 투자주체는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오랫동안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였다. 결국 2011년 8월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양국 간 정상회담 계기에 상류부문(가스전 개발 및 인프라시설)은 UNG가 약 5억 달러의 금액으로 수행하는 한편, 하류부문(가스화학공장 건설)은 한국의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이 부문별로 참여하기로 하고 총 20억 달러 규모의 EPC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한편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합작회사(UZ-KOR Gas Chemical)와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간에 금융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합작회사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뿐만 아니라 아시아개발은행, 중국개발은행, ING(네덜란드), HERMES(독일), NORDEA(스웨덴)등 외국의 금융기관과도 접촉하였다. 2011년 9월 합작회사와 대주단 간에 Financing Term Sheet를 체결하였다. 2012년 5월 합작회사는 최종 투자결정을 하고, 대주단과 Common Terms Agreement를 체결하여 재원조달 작업을 사실상 완료하였다.

2012년 4월 1일 UNG가 보유한 수르길 가스전 광권이 합작회사로 이전됨으로써 한국 측은 수르길 가스전 자원을 확보(50%)하게 되었으며, 동 사업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가스전 개발과 가스화학공장 건설·운영이 결합된 이 사업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이다.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상징이자 실질 협력 이행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발전 및 산업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자원개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원보유국과 협력하여 좋은 사업모델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나라는 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플랜트 수출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 2. 페루 56·88 가스전 개발, 액화플랜트 건설

페루는 남미지역 국가 중 우리나라의 해외자원 개발 최대 투자국이다. 2000년 12월 SK이노베이션은 페루에서 국제입찰을 통하여 페루 최대 천연가스전인 Camisea(88) 육상광구 참여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2002년 4월 Camisea 참여사들만 입찰에 참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페루 56개발광구사업에서도 2004년 9월 정식 광권계약 체결에 성공하였다. Camisea(88) 육상광구와 56개발광구는 자원과 기술을 결합한 동반진출 모델의 모범사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2004년 8월 생산을 시작한 Camisea(88) 육상광구사업은 8억 달러 규모의 파이프라인 건설사업과 연계되어 있다. Camisea(88) 광구에서 생산된 천연가스 및 액화가스(LNG)를 페

루의 수도인 리마와 서부해안까지 수송하기 위하여 가스 파이프라인 730km 및 액화가스(LNG) 파이프라인 550km를 건설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이 30여 년에 달한다.

2008년 9월 생산을 시작한 페루 56 개발광구는 Camisea(88) 육상광구와 함께 페루 LNG 공장 건설사업과 연계되어 있다. LNG공장 건설로 한국기업은 페루에서 LNG 생산에서부터 운송, 최종 인수기지 건설·운영에 이르기까지 참여하게 되었다. 페루 LNG공장 건설사업은 56개발광구와 Camisea(88) 육상광구의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연간 445만 톤의 LNG를 생산할 수 있는 LNG 액화공장 건설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약 40년이며 투자비가 38억 달러에 달한다.

SK이노베이션은 56 개발광구와 Camisea(88) 육상광구에 각각 17.6%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설사업에도 20%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대우조선해양, STX 및 한진중공업이 LNG 수송선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고, 삼성물산과 한국가스공사가 인수기지 건설 및 운영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등의 경쟁력을 자원개발과 연계한 동반진출 사업의 모범 모델로서도 의미가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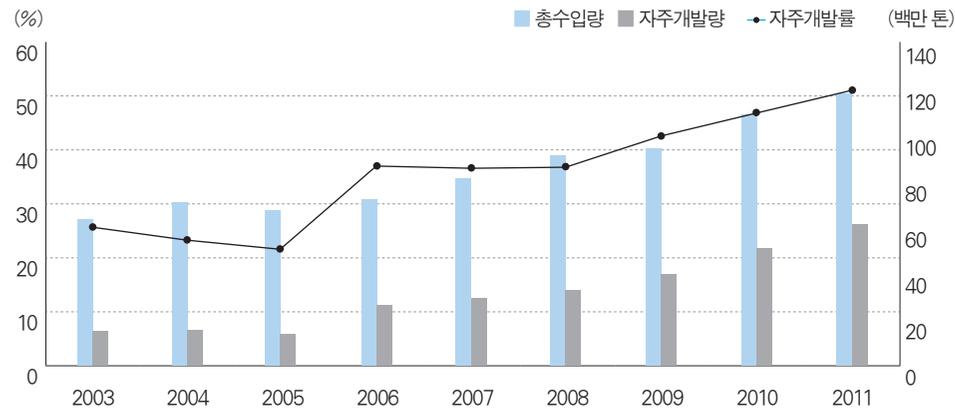
## 제6절 주요 전략광물 수급 거점 마련

### 1. 전력·제철산업의 근간인 유연탄 수급 거점 구축

유연탄은 화력발전 및 제철산업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핵심 광물로 우리나라는 매년 1억 톤, 100억 달러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그간 우리 기업들은 세계적인 유연탄 매장국이며,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수입이 용이한 호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유연탄 개발 진출을 확대하여 수급 거점을 구축하였다. 2011년 말 기준 우리 기업들은 세계 11개국에서 77개 유연탄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누적 투자액은 2007년 13억 6,000만 달러에서 2011년 38억 달러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자주개발률도 2007년 22억 달러에서 2011년 86억 달러로 약 4배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자주개발률은 2007년 37.7%에서 2011년 52.2%로 상승하여 2019년 자주개발률 목표(50%)를 조기에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8년에는 총 7억 3,000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포스코의 호주 맥아더 유연탄 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호주 몰라벤, 인도네시아 난또이 프로젝트 등 20여 개 사업을 신규 추진하였다. 2009년에는 포스코, 종합상사 등 기존 진출 기업들의 신규투자가 미흡한 가운데 한국전력공

### 유연탄 자주개발 추이



※ 자료: 지식경제부

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 투자를 선도하여 호주 나라브리, 인도네시아 아다로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17개 사업에 신규 진출하였다. 2010년에는 호주 몰라벤, 나라브리 및 인도네시아 뚜뚜이 사업이 생산단계로 진입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의 대형 유연탄 탐사·생산 사업 지분 인수 투자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비안리소스, 호주 바이롱, 남부칼리만탄 및 남아공 블락플라츠 유연탄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하여 총 11억 4,00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2011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신규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기존 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통하여 자주개발 물량을 지속 확대하였으며 호주, 인도네시아 진출뿐 아니라 러시아, 몽골 등으로 투자 지역을 다변화하였다.

## 2. 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새로운 자원개발 모델 확립

철은 '산업의 쌀'로 일컬어지는 가장 중요한 산업원료 광물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철 소비국이나 신예미 철광(연 45~50만 톤 생산) 등 일부 광산에서 생산되는 국내 생산물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물량을 호주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철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은 지속적인 기간산업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실수요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철광 개발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2011년 말 기준, 우리기업들은 탐사 7개, 개발 3개, 생산 5개 등 총 15개 철광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명박정부 들어 특히 포스코 등 수요기업의 적극적 진출이 두드러졌다. 포스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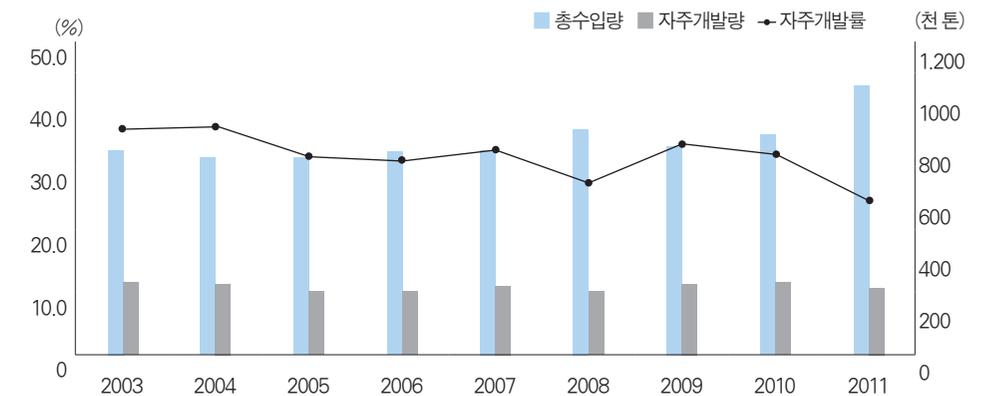
는 기 확보한 호주 포스맥, 잭힐스 철광의 증산을 통하여 자주개발 물량을 확대하고, 2008년 브라질 나미사 사업에 신규 진출하는 등 원료 공급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은 호주 API 및 로이힐, 브라질 MMX, 멕시코 GMC 등 신규 탐사, 개발, 생산 사업을 단계별로 확보함으로써 철광 공급 기반을 강화하였다.

특히 인도 오리사, 인도네시아 제철-철광 복합사업, 베트남 제철 사업 등 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원 보유국에 제철소를 신규로 건설하여 현지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자원개발 모델을 정립하여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향후 유망 자원개발 사업을 확보하는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 3. 자동차 산업의 핵심원료 아연 확보

아연은 아연도금강판, 자동차 및 건설업, 전기전자 제조업체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산업 원료 광물로 수입량 및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연 부존량은 부족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아연 제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적극적인 해외 자원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아연 개발은 실수요 기업인 고려아연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2011년 자주개발률은 24.7%로 다른 6대 전략광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최근 자원개발 투자가 미흡하여 몇 년간 자주개발률이 정체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보다 공격적인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아연 자주개발 추이



※ 자료: 지식경제부

현재 우리 기업들은 호주의 타운스빌과 마운트가넷, 볼리비아 포토시, 페루 빠차빠퀴 등 9개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이중 타운스빌 등 5개 사업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필리핀 라푸라푸, 캐나다 캡스톤 사업 등에서는 동의 부산물로 아연이 생산되고 있다.

#### 4. 녹색성장을 위한 청정 에너지자원 우라늄 확보

우라늄은 녹색성장을 위한 청정 에너지자원으로서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우라늄 소비국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국내 우라늄 생산은 물론, 2007년까지 자주개발 실적도 전무한 상태였다.

이명박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서 적극적인 해외자원 개발 진출을 추진하여 2011년말 기준 탐사 6개, 개발 1개, 생산 2개 등 총 9개 우라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007년 0%였던 자주개발률을 2009년 1.1%를 기록한 이후 2011년 6.6%까지 제고하였으며, 니제르 이모라렝, 호주 마리, 캐나다 워터베리레이크 등 미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공급 지역도 다변화하였다.

##### 우라늄 자주개발 현황

(단위: 톤U,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입량 (금액)	4,546 (160)	3,842 (184)	3,016 (522)	5,202 (747)	3,964 (598)	3,987 (376)	3,340 (417)
자주개발량 (금액)	-	-	-	-	45.6 (4.1)	134.8 (12.7)	219.6 (27.4)
자주개발률	-	-	-	-	1.1%	3.4%	6.6%

※ 자료: 지식경제부

##### 주요 우라늄 개발 사업

사업명	국가	추진업체	지분	매장량	생산량	주요 현황
이모라렝	니제르	한국전력공사, 한수원	10%	243,000톤U	6,300톤U/년	개발준비 중 / 2013 생산예정
니제르	니제르	KORES	4%	13,692톤U	700톤U/년	2011 시험생산 / 2012 정상생산

※ 자료: 지식경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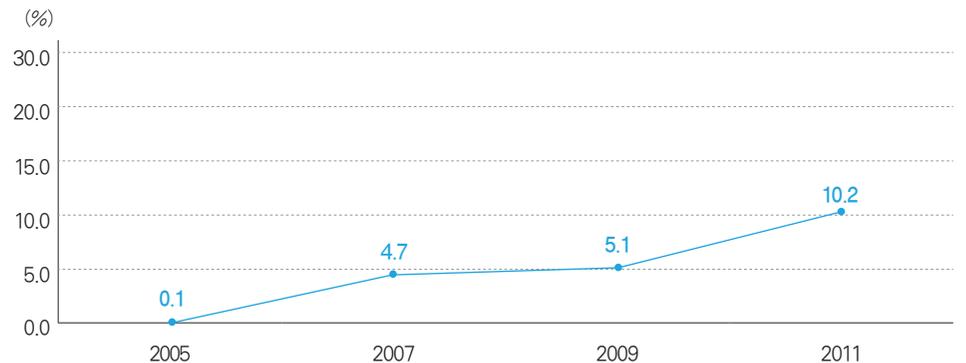
#### 5. 전기·전자산업의 핵심 원료자원 동(銅)의 자주개발 확대

전기·전자 및 IT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력산업의 핵심 원료인 동광에 대한 수요는 경제 성장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자주개발률은 저조한 상태였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적극적인 동광 개발을 추진하여 중국, 일본 등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2005년 0.1%까지 하락한 자주개발률을 2011년 10.2%까지 제고하였다.

이명박정부에서는 동의 안정된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장량은 풍부하나 미개발된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을 중점 진출대상으로 삼았다. 우리 기업들은 그간 진입 장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맞춤형 자원외교, 한국광물자원공사-수요기업-종합상사로 구성된 소위 '한국형 컨소시엄' 진출로 자원확보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전 세계 동 매장량의 51%가 부존하고, 우리나라 동 수입의 53%를 점유하는 미주지역 7개국에 진출하여 미주 동 벨트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파나마 최대 동광 사업인 코브레파나마 사업을 비롯하여 2011년 캐나다의 최우수 자원개발 M&A 사례로 선정된 칠레 산토도밍고 사업까지 총 7개국에서 7개 사업을 확보하였다.

미주 지역에 집중된 동광 투자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었다. DR콩고 동·코발트 광 기획탐사를 필두로 미얀마, 카자흐스탄, 그린란드와도 양국간 공동 탐사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광업 메이저 기업들의 진입이 활발하지 않은 미개척 신흥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미개척 지역에서의 중장기적인 전략적, 선제적 협력 관계 구축은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유망 프로젝트 확보를 위한 토대가 되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도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나라 동 자주개발률 추이



※ 자료: 지식경제부

## 6. 경제성장의 지표 니켈의 지속적 미래 공급원 확충

니켈은 스테인리스 원료 자원으로 세계 경제발전에 따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제3차 해외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 전략 광물 중 하나로 선정된 니켈은 주로 대양주나 아프리카 지역에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니켈 소비국으로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1년 기준 니켈의 자주개발률은 30.5%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향후 산업규모 확대와 신형시장의 수요증가에 따라 원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급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명박정부는 새로운 유망 니켈사업 확보를 위하여 신형지역이지만 부존량이 풍부하고, 생산원가 절감이 가능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위치한 암바토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은 세계 4위 규모의 니켈광산으로 우리나라 해외광물자원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인 총 투자비 6조 원 이상이 소요되었다. 이 사업이 정상생산에 돌입할 경우 국내 니켈 수요량의 약 25%에 해당하는 연간 3만 톤의 니켈을 공급할 예정이다. 암바토비 니켈사업은 친환경 광산개발은 물론 침출가공 플랜트, 화력발전소, 황산 및 수소공정 플랜트 등 복합플랜트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동반진출을 유도하여 현대건설의 발전소 수주 등 총 4,000억 원 이상의 부가적인 프로젝트 수주 효과를 창출하였다.

## 제7절 안정적 희유금속 공급기반 마련

### 1. 2차전지의 핵심원료 리튬 확보 기반 마련

이명박정부는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유금속 확보를 위하여서도 최선을 다하였다. 2010년 '제4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희유금속 중 자원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리튬과 희토류를 신전략광물로 선정하고 자주개발률 목표를 설정하는 등 안정적 희유금속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2차전지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리튬'은 전기자동차가 상용화될 경우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세계 각국들은 리튬 확보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2차전지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원재료인 리튬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73.5%가 리튬 트라이앵

글이라고 불리는 남미 3개국(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에 부존되어 있는 등 리튬은 매장량과 생산이 소수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수급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2차전지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경우 현재의 생산규모로는 급증하는 리튬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따르므로 주요 리튬 부존국들은 리튬에 대한 국가통제력 강화와 함께 자원민족주의를 내세워 외국 기업들이 자국의 리튬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리튬 트라이앵글

사업명	위치
엔엑스우노	칠레 아타카마
살데비다	아르헨티나 살타·카타마카
우유니	볼리비아 라파스

※ 자료: 지식경제부

이명박정부는 단기(칠레), 중기(아르헨티나), 장기(볼리비아)적으로 접근하여 중남미 리튬을 확보하는 전략을 펼쳐 리튬 트라이앵글을 선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리튬 최대 생산국인 칠레에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삼성물산이 공동으로 연간 2만 톤 생산규모의 엔엑스우노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기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움브레 무에르토 염호에 위치한 살데비다 리튬 탐사사업 투자를 통하여 중기 수요 물량을 확보하고,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볼리비아에서는 현지기업과 R&D를 수행하면서 자원개발 사업 참여기반을 마련하여 장기적인 접근을 추진하였다.

### 2. 첨단산업의 비타민, 희토류 자주개발 확대

희토류는 란탄, 세륨, 디스프로슘 등 총 17개의 원소를 통합하여 지칭하는 용어로, 형광체(TV, 형광램프), 연마재(반도체, 디스플레이), 영구자석(전기차, 풍력터빈) 등에 사용되어 핸드폰, TV, 자동차, 2차전지, LED, 항공, 의료,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소재로 자리하면서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로 각광받고 있다.

희토류는 중국, CIS, 미국, 호주 등에 편재되어 있으며, 최근 전 세계 생산량의 97%를 차지하는 중국은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생산 업체를 통폐합하고, 생산 총량을 제한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출 쿼터를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외부로 반출되는 물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시장 수급 불안이 가중되어 디스프로슈의 경우 2010년 30만 5,000달러/톤에서 2011년 7월 311만 6,000달러/톤, 산화네오디뮴은 2010년 4만 7,000달러/톤에서 2011년 7월 32만 8,000달러/톤으로 상승하는 등 가격이 급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부는 2010년 10월 이후 해외자원개발, R&D, 국내탐사, 수급점검 4개 분과로 구성된 '희토류 수급점검반'을 지경부에 두고, 국내외 희토류 수급·가격 동향을 지속 점검하는 등 국내 희토류 수급 안정을 도모하였다. 그간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우리 기업들은 중국 포두영신, 서안맥스 사업 등에 진출하여 2011년 자주개발률 15.7%를 달성하였으며, 2011년 12월에는 남아공 잔드콥스드리프트 희토류 프로젝트에 신규 진출하여 희토류 수급선을 다변화하였다. 향후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면 연간 6,000톤 이상의 희토류를 확보하여 국내 연간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보다 더 적극적이었던 이라크 정부

2010년 2월 24일, 이라크 총선을 2주 남겨 놓은 시점에 한·이라크 경제협력 사절단의 단장으로 바그다드를 방문하였다. 당시 이라크는 총선을 앞둔 시기였고, 바그다드는 시아, 수니 등 적대세력 간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우리 대표단은 총 57명으로 바그다드의 심장부인 그린 존(Green zone)을 방문한 외국 대표단으로서는 최대 규모였다. 우리는 바그다드 시내에서 말리키 총리, 각부 장관 및 이라크 언론과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협력 포럼을 개최하였다. 사절단은 이라크 군인들의 엄중한 경호를 받으며 숙소가 있는 시내로 이동하였다.

한·이라크 경제협력 포럼은 에너지·산업, 인프라, 방산, 개발경험공유 등 총 4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말리키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 등 정부 주요인사 외에 기업인, 언론 등이 참석하였다. 방송사에서 포럼이 진행되는 내내 녹화,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먼저 한국측 분야별 협력안과 참여기업들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후 4개 분과별로 따로 마련된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하였다. 이라크 각 주의 투자 담당 공무원들과 민간 기업인들은 우리 기업의 정보를 요청하고, 투자 유치가 필요한 분야를 제시하는 등 기대 이상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오하려 우리가 놀랄 정도였다.

말리키 총리 예방 시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말리키 총리는 양국 정부 간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한 찬성하며 한국 기업의 이라크 진출에 대하여 총리실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한국 기업이 바그다드시의 주택, 도로, 교량 등 어느 한 분야의 재건사업을 전적으로 맡는 것에 대한 의향을 물었다. 이 부분은 향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좋은 협력 주제가 되리라고 예상한다.

이라크는 총선 후 에너지·산업·주택·도로 등 분야에 6,000억 달러 규모의 국가재건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선제 진출을 통하여 거대 시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라크는 1,150억 배럴, 세계 3위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산 250만 배럴에서 2017년 이후에는 1,200만 배럴까지 증산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2차례의 유전입찰에 엑손, BP 등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참여하였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1,2차 입찰에서 2개 광구 개발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실 가스공사가 메이저 회사들과 함께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 유전개발 역사상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라크 사람들은 한국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한국을 경제성장의 롤 모델로 인식하고 있음을 바그다드 방문을 통하여 느꼈다. 우리의 개발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만의 강점으로 현실적인 재건계획을 제 공할 수 있다. 앞으로 다양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양국 간 협력의 깊이를 더하여야 할 것이다.

- 최경환(전 지식경제부 장관)

### 제3장

## UAE원전 수출의 쾌거

2009년 12월초까지만 하여도 국내외 전문가들은 일본이나 프랑스가 UAE원전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당시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이었다. 경쟁사들 또한 한국이 자신들의 상대가 되기 어렵다며 가볍게 여기고 있었으며, 국내에서조차 회의적인 시각들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런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으면서 2009년 12월 27일 한국 컨소시엄은 UAE원자력공사(ENEC)가 발주한 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4기 건설사업을 수주하였다. 발표 당일, 양국 정상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국전력공사와 UAE원자력공사는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1971년 고리에 최초의 상용원전을 짓기 시작한 지 40여 년 만에 얻은 쾌거였다.

원자력산업은 특성상 최고의 안전성과 품질 수준을 요구하며, 기계, 금속, 전기·전자, 토목 등 직접 연관 기술뿐만 아니라 핵의학, 정밀제어, 유전학 등 응용과학기술 발전이 동반되어야 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이다. 원전을 건설하고 수출하여 본 경험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를 통틀어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캐나다와 한국 6개국 뿐으로 올림픽이나 엑스포를 개최한 나라보다 훨씬 적고, 우주 로켓을 발사하여 본 나라보다도 적다. UAE원전 수출은 실력에 비하여 저평가되었던 기술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일시에 끌어 올린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UAE원전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와 기업의 짜임새 있는 공조, 끈 눈으로 밤을 지새운 실무자들의 노력, 최고위층의 적극적인 지원 등 여러 가지 유무형의 노력을 바탕으로 경제성, 안전성, 기술력 측면에서도 우위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부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였던 지난 세대의 해안을 잇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계적인 원자력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원전을 건설하여 오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도전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가 UAE원전을 수주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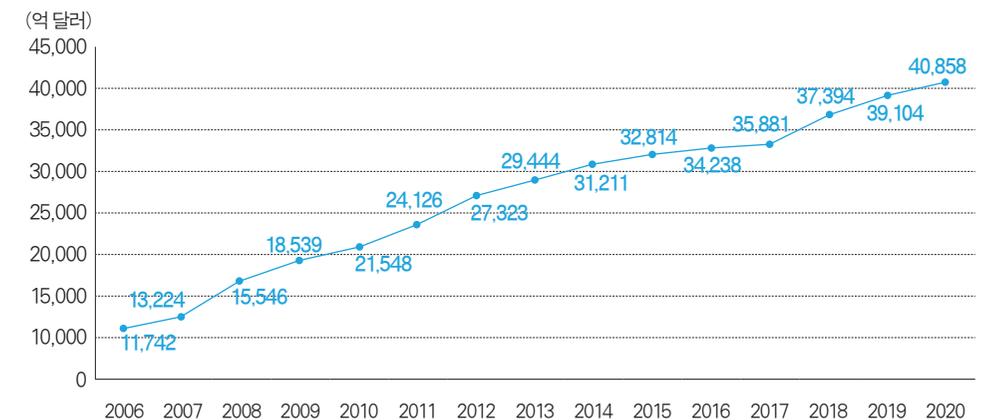
### 제1절 UAE원전 수주 과정

#### 1. UAE의 원자력발전 도입 배경

중동의 주요 산유국인 UAE는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오일머니 유입으로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였고,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발전소 건설 확충이 필요하였다. 당시 UAE전력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최대 전력수요는 2007년(12GW)의 3배(40GW)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UAE는 고온의 사막기후에서 전력과 용수(해수담수화)의 생산을 대부분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데, 자국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아 발전소 추가건설시 해외에서 천연가

UAE 전력수급 예측(아부다비행정청)(2008.8)



※ 자료: 지식경제부

스를 추가로 수입하여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UAE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전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UAE의 미래 에너지 수요 조사를 통하여 선택가능한 에너지원(천연가스, 원유, 석탄, 디젤, 신재생 및 대체에너지, 원자력)들의 자국의 상황에 따른 수요 충족 측면, 비용 및 환경 측면, 안정적 공급 측면 등을 고려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① 천연가스는 향후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 ② 원유 및 디젤은 적합한 자원이긴 하지만, 비용 및 환경영향 측면에서 부적합, ③ 석탄은 비용 면에서 적절하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안정적인 공급 측면에서 취약, ④ 신재생 및 대체 에너지 개발은 바람직하나, 2020년까지 필요한 전력의 6~7% 정도만 충족 가능함.

UAE는 원자력발전의 경제성(가장 효율적인 전력공급원),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연료공급을 통하여 18~24개월 운영 가능), 환경 영향성(기후변화 대응) 및 연관 산업 개발(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의 장점을 토대로 원자력발전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

**UAE 원자력행정기관 및 주요업무**

구분	기관명	업무	주요 인사
정책기관	연방 외교부	IAEA 등 국제협력, 양자간 원자력협정 체결	Hamad Al-Kaabi 대사 * FANR 이사 겸직
	아부다비집행위원회(EC)	원자력기본계획 의사결정	Ahmed Al Mazroui 사무총장 * FANR 의장 겸직
	아부다비행정청	원자력 도입계획 입안, ENEC 관리	Khaldoun Al Mubarak 의장 * ENEC 회장 겸직
규제기관	연방원자력규제청 (FANR)	원전안전성 평가, 원전건설운영 허가, 핵물질 통제	Ahmed Al Mazroui 의장 Bill Travers 청장
	아부다비환경청	원전 환경영향 평가	Ahmed Al Mazroui 의장 Razan Al Mubarak 청장
사업협조 기관	국가기간시설보호청 (CNIA)	원전 물리적 보안	Faris Al Mazrouei 의장
	국가비상사태관리청 (NCEMA)	핵사고 대응	Mohamed Al Romaihi 청장
사업기관	규제감독국(RSB)	전력사업자 시장규제	
	아부다비수전력청 (ADWEA)	송전선로 건설, 전기구매계약	Ahmed Al Mazroui 의장 Abdulla Al Nuaimi 청장
	UAE원자력공사 (ENEC)	원전사업 운영	Khaldoun Al Mubarak 의장 Mohamed Al Hammadi 사장

※ 자료: 지식경제부

UAE 정부는 2007년부터 원자력발전계획 추진방안에 대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영국, 일본, 한국 정부의 고위급 자문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2008년 4월 에너지수요를 충족시킬 대안으로서 원자력 에너지를 검토한다는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의 평가 및 개발가능성에 관한 UAE 정책’(‘Policy of the United Arab Emirates on the Evaluation and Potential Development of Peaceful Nuclear Energy’)을 승인함으로써 원자력발전 도입절차에 착수하게 되었다. UAE 원자력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크게 6가지로 요약된다.

- ① 원자력발전소의 투명성 확보, ② 최고 수준의 핵 비확산(非擴散) 추구, ③ 최고 수준의 안전 및 방호, ④ 원자력 프로그램 평가 및 개발을 위한 IAEA와의 공조 및 관련기준 준수, ⑤ 신뢰도 높은 기업 및 전문기관의 협력으로 원전도입, ⑥ 지속가능성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

UAE의 원자력산업은 적정 부지확보 및 재원조달 측면에서 UAE 석유자원의 95%와 국토면적의 87%를 보유한 아부다비에미리트가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원자력 행정체제 중 국제협력(외교부)과 안전규제(연방원자력규제청) 측면에서는 외형적으로 연방정부 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부다비가 모든 계획과 실행을 주도하고 있다. 아부다비 에미리트 정부는 2008년 3월 UAE 내 원자력사업을 전담하는 UAE원자력공사(ENEC: 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를 100% 아부다비정부 소유기관 형태로 발족하였다.

**2. 200억 달러 경쟁의 시작**

UAE의 원자력의 평화적 에너지 이용에 관한 정책 공표 후 ENEC은 2008년 9월 7일 원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컨설팅(PMC) 입찰서 발급을 시작으로 UAE원전사업을 본격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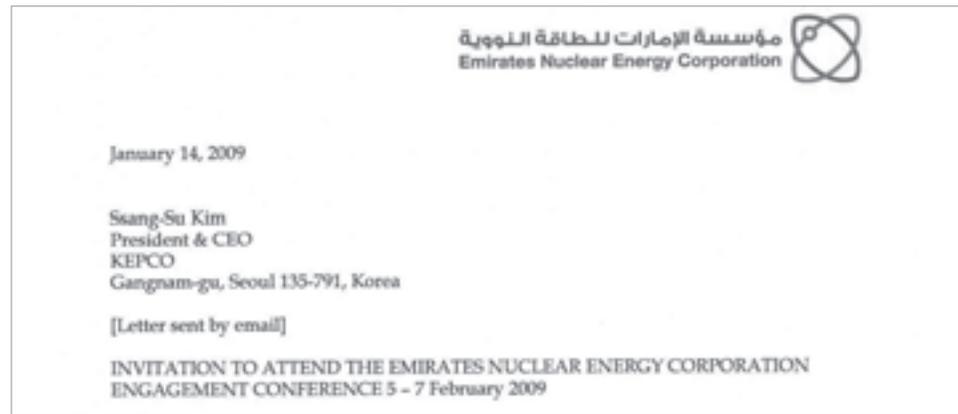
PMC 입찰에는 세계적인 업체인 Bechtel, CH2M Hill, Flour(이상 미국), PB Power(캐나다), Worley Parsons(호주) 등 5개사가 참여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미국의 CH2M Hill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어 10년 동안 UAE원전사업의 프로젝트 관리서비스를 맡게 되었다. CH2M Hill사는 주계약자 선정, 사업주 책임 대행, 마스터플랜 수립과 인허가 관련 업무 등 UAE의 최초 원자력 도입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UAE의 최초 원전 도입 계획은 최대 4개 호기를 건설하되, UAE 표준노형으로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2009년 3월에 유자격업체를 선정하고, 6월에 입찰서를 접수, 7월에 최종계약을 체결하는 목표를 세우고 도입절차를 빠르게 추진하였다.

이후 UAE는 원전 입찰에 초청할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여러 원전 공급국들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한국에는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특별대표단을 파견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협의를 통하여 UAE는 한국을 원전건설 및 운영 등 종합적인 원전능력을 보유한 최적의 잠정 공급자로 평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게 되었다.

UAE원전 경쟁입찰의 첫 단계인 ENEC 주관 입찰컨퍼런스(Engagement Conference, 2009.2.5)에는 한국전력공사, 미국의 Westinghouse, GE, Exelon, Bechtel, 프랑스의 AREVA, Suez, EDF, 일본의 Toshiba, Hitachi, Mitsubishi 등 전 세계 20개 우수 원자력기업이 참가하였으며, 중수로 공급국인 캐나다 업체 및 비서방권인 러시아, 중국 업체는 입찰참여가 배제되었다.

한국의 UAE원전사업 입찰설명회 참여 요청서, ENEC 서신일부(2009.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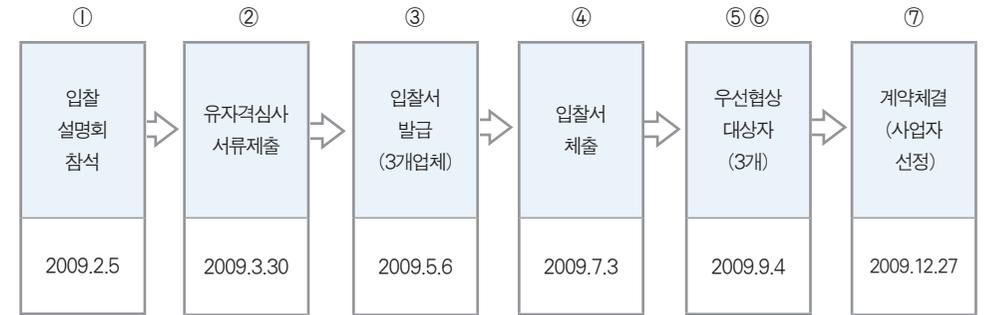
입찰 참여 국가 및 업체 현황

국 가	기자재공급사	운영사	건설사	노형
한국	KEPCO	KEPCO	KEPCO	PWR
미국	Westinghouse	Exelon	Shaw	PWR
프랑스	AREVA	EDF	GDF Suez	PWR
일본	Toshiba	도쿄전력	JGC	BWR
	GE-Hitachi	도쿄전력	JGC	BWR

※ 자료: 지식경제부

3. 험난하였던 원전 수주의 길

2009년 2월 입찰설명회를 시작으로, 최종 계약자 선정까지 UAE원전의 주요 입찰 과정은 아래의 일정과 같다.



※ 자료: 지식경제부

(1) 입찰설명회 참석

ENEC는 2009년 2월에 아부다비 현지에서 UAE원전사업 입찰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전력공사는 이 자리에서 한국 원자력의 우수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전공급사가 모두 모인 입찰 설명회에서 원전수출 실적이 전무하였던 한국의 수주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2) 유자격 심사 서류 제출

첫 관문은 입찰자격 획득이었다. 한국전력공사는 2009년 2월 UAE원전 수주전담 TF팀을 구성하여 가동에 들어갔다. 팀원들은 입찰 사전자격심사서류를 만들기 위하여 연수원 합숙에 들어가, 채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5권, 1,200쪽에 이르는 영문본 자료를 완성하고 3월 30일 UAE측에 심사자료를 제출하였다.

입찰 사전자격심사서류는 우선 UAE측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는 동시에 차별화보고서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 힘든 작업이었다. TF팀은 총 9개 항목에 대한 요구사항을 입증하였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APR1400이 3세대 기술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TF팀은 APR1400이 유럽·미국 등 국제 기술기준을 반영하고, 2002년에 한국 원자력규제기관에서 설계인증을 받은 3세대 기술임을 분명히 밝혔다. OPR1000 기술과 System 80+

설계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킨 진일보한 노형이며, UAE원전 참조발전소인 신고리 3·4호기가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준공된다는 사실도 명시하였다. 그 외 적기 준공 능력, 안전보장, 품질보증, 공급능력, 입찰팀 구성, 현지법인 설립, 재정 안정성 등을 모두 입증하였다.

차별화보고서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신뢰성 있는 주계약자로 원전 적기 건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집중하였다.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운영 실적을 부각시켰으며, UAE 인력자원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일괄 제공을 약속하였다. 특히 UAE 내 중동지역 원자력 허브 구축을 위한 이명박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하였다.

### (3) 입찰 안내서 발급

ENEC는 유자격 심사서류 검토 결과, 5월 6일 프랑스 AREVA, 미·일 연합의 GE-Hitachi 컨소시엄과 함께 한국전력공사에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입찰안내서를 발급하였다. 본 과정에서 아레바와 함께 세계 시장에서 원전 수출을 주도하여 오던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의 기반이 된 System80+ 설계는 물론 3세대 원전의 선두주자인 AP1000 노형을 보유한 회사였다. 이 회사의 탈락은 한국전력공사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환점이 되었다.

### (4) 입찰서 제출

두 번째 관문은 입찰서 제출이었다. 한국전력공사는 명품 입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TF팀을 확대 개편하였다.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공사를 필두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국내기업들이 참여하였다. 외국기업으로는 입찰자격 획득과정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벡텔, 영국 AMEC 등이 참여하였다. 이로써 국내외 11개사의 원자력전문가 80여 명으로 팀이 구성되었다. 이들은 한국전력공사에 마련된 'War Room'에서 모든 활동을 수행하였다.

입찰서는 요약서, 기술 및 사업관리, 법적·계약적 사항, 예상 공사비, 차별화보고서 등 총 8권, 1,800쪽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급범위, 목표원가, 공정과 기술적 사항, 거래조건, 계약적 사항, 법률적 문제, 재원조달방법 등을 담았다. 이런 내용을 담은 입찰서를 UAE측에 7월 3일에 전달하였다.

### (5) UAE측과의 협상

UAE측과의 협상은 입찰 자격을 획득한 시점부터 최종사업자 선정까지 진행되었다. 주요 협상분야는 인프라, 공정, 핵연료공급, 운영지원 등이었다. 인프라분야에서는 초기 일반공사 수행을 위한 인허가 사항, 발주자 책임으로 돼있던 전망대, 방문자 건물 건설, 공사수행을 위한 용수, 전력공급 범위 등이 주요사항으로 합의되었다.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수차례에 걸친 밀고 당기기 협상이 진행되었다.

또한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아부다비 현지에서 입찰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 당일 입찰서 주요항목 설명을 위한 프리젠테이션, UAE원전사업 비전을 제시한 홍보 영상 등을 보여줌으로써 UAE측 평가단으로부터 큰 호평을 얻었다.

### (6)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이후 두 달간 입찰제안서를 검토한 ENEC는 9월 4일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했다. 당초 1~2개사로 압축할 것이라는 계획과는 달리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하여 프랑스 아레바, 미·일 연합의 GE-히타치 등 3개사를 모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5월과 똑같이 3파전 구도가 유지되었다. 따라서 최종사업자가 되기 위하여는 계약서 내용에 대한 UAE측과의 협상이 승패의 분수령이 되었다.

한국전력공사는 입찰참여 자격획득에 이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연이어 세계 원자력업계를 놀라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쟁사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았다. 경쟁사들은 지속적으로 APR1400의 안전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켰다. 이들은 자국 언론은 물론 IAEA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로비를 벌였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전력공사는 최종계약자 선정까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밤과 낮을 잇고 바쁜 일정을 진행하였다. 아부다비와 서울을 번갈아 오가며 ENEC와 약 40회에 이르는 현장실사 및 계약서 협상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철저한 평가와 검증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원전건설을 통하여 축적하여 온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운영실적, 완벽한 원전 인프라, 월등한 가격경쟁력, 탁월한 사업 수행능력을 입증하여 경제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한 UAE 정부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켰다.

### (7) 최종계약자로 선정

2009년 12월 27일 드디어 한국의 첫 원전 수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이 UAE원전 공급자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상업용 원전 첫 해외수출에 성공함으로써 우리나라

는 원전 운전 30년 만에 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에 이어 세계 6번째 원전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한국으로서는 해외시장 개척 15년여 만에 결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원전 해외수출의 간절한 꿈이 현실화된 순간이었다.

#### 4.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 수주지원

민간과 정부의 역량이 집결되어 총력전 양상을 띤 UAE 원전 수주의 성공 배경에는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정치적 측면의 지원이 있었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프랑스(Areva)와 미국(GE)-일본(히타치)은 전통적으로 UAE와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었다. 미국은 아부다비의 정치외교 분야는 물론 에너지, 산업에도 뿌리 깊게 참여하고 있었고, 2009년 1월에는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원전 수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UAE 제1의 원유 수입국이며 오래 전부터 UAE 유전 개발에 파트너로 참여하는 등 에너지 분야의 협력에서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프랑스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최종사업자 선정 직전까지 한국과 경합을 벌였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9년 5월에 UAE를 방문하여 정상외교를 수행하였고, 방산, 군사 협력 부문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들 경쟁국들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수주가 확정되는 순간까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한국형 원전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원전건설과 함께 포괄적인 경제 협력을 패키지로 하여 고위급 외교에 나섰다. 2009년 6월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UAE를 방문하여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자를 면담하고 한-UAE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간 포괄적인 경제협력의 구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수주경쟁의 마지막까지 이어진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비즈니스 정상외교는 최종 사업자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UAE간 정부 차원의 협력을 제안하는 친서를 전달하고, 특히 입찰에 결정권을 쥐고 있는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자에게 수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과 양국의 신뢰 관계를 강조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와의 통화 이후 즉시 정부특사단 구성과 파견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 12월 18일 한승수 전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한 40여 명의 특사단이 비밀리에 UAE를 방문하였다. UAE가 한국형 원전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아이디어로 특사단이 마련한 한국과 UAE 양국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 패키지였다. 특사단은 왕세자 앞에서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하여 100년 동안

지속되는 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사업자로 선정되면 IT, 인력 양성 등 수많은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하였고, UAE측도 우리나라의 확고한 협력의지를 체감하면서 한국형 원전에 점차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2월 27일 계약 당일 에미리트 팰리스 호텔에서 칼리파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원전 수주를 최종 확정하였다. 이 회담에서 두 정상은 에너지 분야의 협력 성과를 기초로 양자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2010년 수교 30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자는데 합의하고,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 회담 직후 김승수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칼둔 알 무바라크 UAE 원자력공사(ENEC) 회장 간의 원전사업 계약서 서명식에 참석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일 생중계된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제 대한민국은 원전 수출국으로서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겨룰 수 있게 되었다."고 선언하였다.

#### 5. 국내외 반응

한국이 해외 첫 원전 수출의 신화를 창조하는 순간 국내외 언론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국내 모든 언론은 수일에 걸쳐 한국의 UAE 원전사업 수주를 톱뉴스로 내보냈다. 우리의 외교적·기술적·산업적 승리라고 격찬하였으며, 역사상 최대의 단일사업 수주라고 보도하였다.

해외의 반응도 뜨거웠다. 프랑스 정부는 UAE측의 결정을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으나 르몽드는 충격에 빠진 프랑스 현지 표정을 전하면서 자국 정부를 비판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부다비에서 200억 달러의 계약을 성사시켜 한국으로 돌아갔고, 사르코지 대통령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래성이 보장된 시장에서 심각한 패배를 당하였다."라고 보도하였다. 개별적인 국내외 반응은 아래와 같다.

##### (1) 국내 주요 종합 일간지 반응

조선일보는 '원전발전은 핵물리학·기계·전자·전기 등 공학의 쏠 분야를 망라한 기술이며 200만 개의 기기가 한 치 오차 없이 들어맞아야 정상 운전되는 첨단기술이 집합체이다. 이번 원전수출은 우리 공학 쏠 분야가 외국이 자국의 안전을 맡길 정도로 신뢰를 얻게 되었다는 증거다'며 우리의 원전 건설·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우리가 이런 기술 선진국이면서 핵 강국인 나라들과 경쟁하는 것은 언뜻 힘겨워 보이기도 하였다. 수주 전 과정을

막후 지휘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막판에 UAE로 직접 날아가 외교총력전의 마침표를 찍었다. 우리 기술력과 대통령의 경제 외교력이 합쳐지면 앞으로도 좋은 소식이 이어질 것이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

중앙일보는 '국내 원전 가동률이 세계 평균(70%)보다 훨씬 높은 90% 이상을 기록한 것이나, 원전 건설 단가가 경쟁국보다 훨씬 낮으면서 공기는 10개월 이상 단축한 것은 우리 한국 기술진의 노력 덕분이다.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및 운영 능력이 이번 계약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며 이번 계약에 대한 진정성을 거론하고, '원전 수출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는 기술력만 갖고는 성사되기 어렵다. 한 국가의 외교력과 국제금융 능력까지 총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아부다비를 방문하는 등 폭넓은 지원 활동을 벌인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명박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동아일보는 'UAE에서 날아온 낭보는 반세기 만에 원자력 불모지에서 원자력 발전소 수출국으로 변신하였음을 알려준 국가적 경사'라고 축하 하면서 'UAE원전은 중동지역 첫 원전이다. 물보다 기름이 싼 산유국조차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 건설에 뛰어 들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전하였다.

국민일보는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일궈낸 이번 쾌거의 의미는 크다. 무엇보다 1959년 연구용 원자로를 첫 설치한 이후 원자력 기술을 차곡차곡 쌓아온 지 50년 만에 비로소 원자력 수입국에서 명실상부한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며 원자력 반세기만의 쾌거를 치하하였다.

문화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대항전의 총감독'으로 나선 외교 총력전이 가능성 5%라는 초반의 세(勢) 불리를 딛고 막판 반전을 이뤄낸 것이다'고 UAE원전 수주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공을 높이 사고 'UAE원전 수주는 한국 원자력, 나아가 한국 경제의 열린 기회를 선취하였다는 의미가 더욱 크다. 또한 중동 지역의 첫 원전 프로젝트인 UAE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이 원전 건설 의사를 밝히고 있어 선점 효과에 따른 제2의 중동 붐도 기대할 만하다. UAE 개가는 원전 르네상스·중동·녹색성장 등 한국의 미래 시장을 잇는 가교로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UAE원전 수주의 후속 효과를 기대하였다.

서울신문은 '한국 원자력 역사를 새로 쓰게 한 이번 수주는 우리의 기술력과 외교력·협상력이 거둔 총체적 승리이다. 원자력 기술 자립을 위하여 열정을 바친 원자력 공학자들과 '열사의 나라'에 한국형 원전을 첫 수출하기 위하여 지난한 공을 들여 온 한국전력·현대건설·삼성물산·두산중공업 등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 수주전 막바지에 UAE를 방문하여 지원 외교로 힘을 실어준 이명박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2) 주요 외신 반응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프랑스, 미국·일본 등 강력한 라이벌을 누르고 UAE원전 수출을 따낸 사실을 타진하면서 이는 전략적인 이유로 다른 컨소시엄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던 각국 전문가들에게 경악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전하였다.

'DPA통신'은 한국의 원전 수주와 관련, 셰이크 칼리파 UAE 국왕이 이번 일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상대 국가에 이익이 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천명한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하였다.

'AP통신'은 UAE가 한국 컨소시엄에 원전을 맡긴 배경에 관하여 ENEC의 발표를 인용, UAE 정부의 사업요구 조건을 가장 충실하게 맞췄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AFP통신'은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이 원전을 수주한 것은 UAE측이 원하는 최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60년 동안 원전의 운영과 유지를 담당하는 200억 달러 규모의 추가계약도 따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과 현대그룹, 미국 웨스팅하우스, 일본 도시바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의 승리는 한국의 첫 원전 플랜트 수출로, 그간 프랑스의 아레바와 미국의 GE가 지배하여 왔던 전 세계 핵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한국의 위상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하였다.

'교도통신'은 'UAE의 칼리파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UAE 최초 원전 건설에서 한국 기업연합의 수주가 결정되었다'며 '수주 경쟁에 일본의 히타치와 미국의 GE연합, 프랑스의 기업연합도 참가하였지만, 기술과 비용 면에서 패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지지통신'은 '급거 UAE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27일에 칼리파 대통령과 회담, 프랑스 및 미국·일본 기업연합을 누르고 거액 프로젝트 수주를 따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는 한국 최초로 외국에서의 원전 건설 계약으로, 외국에서의 건설수주액으로서도 한국에 있어서 최대가 된다.'며 '현대건설 경영자 출신으로 경제중시의 외교를 전개하여 온 이명박 대통령의 집념이 실현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UAE가 첫 원전 건설을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기업연합에 발주하기로 결정하였다.'며 "히타치제작소와 미국 GE를 중심으로 하는 일·미 기업연합은 패배하였다"고 전하였다. 아울러 신문은 '발주액은 200억 달러(건설비 기준)이며, 2011년에 착공하여 2017년 이후 순차운전에 들어간다.'며 '사업에는 한국전력공사 이외에도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등이 참가한다.'고 소개하였다.

## UAE 공군사령관을 우리 원전의 홍보 대사로

UAE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는 영국의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서 수학하였으며, 호크 및 미라지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하였다. 과거 UAE 공군사령관을 역임하고 현재 군 총부사령관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 모하메드 왕세자의 군 경력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UAE군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으며, 최고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UAE 원전 수주 경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즈음 우리 공군이 주관한 '2009년 에어쇼' (성남비행장, 2009년 10월)에 UAE 공군사령관인 모하메드 소와단 알 감지 (Mohammed Sowaidan Al Qamzi) 소장 등 UAE 군 관계자들이 방한하였다.

UAE 공군사령관의 방한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연례적인 에어쇼 참관과 고등훈련기 T-50의 추가 협상 진행이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UAE 원전 수주를 위하여 프랑스, 일본과 3파전을 벌이고 있었으며, UAE와의 최종 계약협상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수십 년 간 중동국가와 수많은 비즈니스를 하여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UAE 공군사령관의 방한을 UAE 원전사업 수주와 연계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UAE 원전사업의 총 책임자는 모하메드 왕세자겸 군부총사령관이며, 당시 방한한 공군사령관이 왕세자의 최측근임을 간파한 것이다.

이에 UAE 공군사령관 일행이 UAE 원전사업의 참조발 전소인 신고리 3·4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UAE 공군사령관 일행은 헬기로 고리까지 이동하여 우리 독자기술로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 건설현장을 직접 보게 되었다. 이 일정은 단순 관람형식이 아니라 UAE 입찰 평가단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 우리 원전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충분히 이해시켜 모하메드 왕세자에게 감동이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약 2시간에 걸쳐 한국 원전 소개 영상물을 시청하고 신고리 3·4호기 전망대, 건설현장, 원전 시뮬레이터 센터 및 고리본부 홍보관 등을 방문하였다. 관람 도중 UAE 공군사령관은 별도의 질의응답시간을 우리 측에 요청하며 한국형 원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예기치 않은 기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수많은 경험이 없었다면 쉽게 얻기 힘들었을 것이다.

UAE 공군사령관은 UAE 원전의 참조발 전소인 신고리 3·4호기의 공사기간, 진행상황, 그리고 UAE 원전 건설계획 등을 질문하였다. 특히 외부세력의 대외침투에 대한 대비책, 군과의 협력 관계 등 원전관계시설의 방호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다.

UAE 공군사령관은 마지막 출국에 앞서 한국형 원전 건설현장 방문을 통하여 우리 원전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기술적, 가격적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어 UAE 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우리 관계자에게 남기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 강남훈(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

## 제2절 한국형 원전의 수주 성공요인

### 1. 고위급 외교전의 승리

원전의 기술적인 우수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외교적, 정치적 역량이 격돌하는 원전 수주 경쟁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비즈니스 정상외교가 한국형 원전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UAE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교육·경제 시스템 및 고급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여주는 패키지딜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독려하는 한편 수시로 협상진행상황을 직접 챙기면서 결정적인 순간 UAE 최고지도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통화를 통하여 UAE의 '마음'을 얻었고 그 결과로 사상 최초의 한국형 원전 수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계약 당일 UAE를 방문하여 칼리파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 수주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정상회담을 통하여 양국간의 관계를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토대로 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후일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자는 원전 사업의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이명박 대통령의 노력과 관심이라고 말하였다.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2010년 4월, 워싱턴)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UAE 아부다비 왕세자는 "사실 원전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하기 1년 전부터 여러 나라가 원전프로젝트를 신청하였고, 논의를 진척시켜 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진실된 노력과 관심이 판도를 완전히 바꾸었다."며 원전 건설의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저에게는 쉬운 선택이었다.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진실된 노력은 어느 나라에도 볼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 책을 쓸 때 이명박 대통령의 성함과 함께 업적을 쓰려고 한다."고 밝혔다.

### 2. 한국 원자력 기업들의 역량 집중

UAE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추진구조는 주계약자 한국전력공사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등이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연료공급, 운영지원 등의 전문영역을 하청으로 담당하도록 구성되었다. UAE 원전의 수주 과정에서 한국 원자력 기업들은 그간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원전사업 각 부문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하였다.

2009년 3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UAE 원전사업 참여사들은 입찰 과정에 대응하기 위

하여 각기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수주 전담팀을 확대 구성하였다.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공사와 더불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삼성건설 등의 원자력전문가 80여 명으로 구성된 팀은 한국전력공사 본사의 지하 2층에 마련된 '워룸'(War Room)이라 불리는 공간에서 수주가 확정될 때까지 밤샘작업을 하면서 속전속결로 진행된 입찰에 대응하였다.

수주 전담팀을 구성한 실무 전문가들은 각 사의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경쟁국과는 차별화된 입찰 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다. 한국 원자력 산업을 구성하는 기업들의 기술과 경험이 집약된 입찰 서류는 까다로운 기준과 촉박한 일정을 제시한 ENEC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이들 팀 실무진들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 최종 사업자 선정까지의 3개월간 아부다비와 서울을 오가며 약 40회에 이르는 현장실사와 계약서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발주자인 ENEC의 요구에 즉시 대응하기 위하여 UAE 현지 시간에 맞추어 업무를 진행하고 '워룸'의 야전침대나 인근에서 숙식을 해결하곤 하였다.

### 3.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및 우수성

#### (1) 40여 년의 원전기술 자립 노력

한국의 원자력 역사는 1971년 첫 번째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착공을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영광 3, 4호기를 건설하면서 한국형 원전의 기술자립을 이루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설계, 부품 및 기자재 공급, 사업관리 등 원전의 각 요소 기술을 수출하며 2009년의 UAE원전 수출로 꽃을 피웠다.

UAE원전 수주 과정 동안 세계 원전 시장을 독점하여온 프랑스의 아레바, 미국의 GE, 일본의 히타치 등 선진 원전 공급사와 치열한 수주경쟁을 치루었으며, 이들을 물리치고 원전 수주를 따낸 것은 지난 40년간의 지속적인 원전 건설 및 운영을 바탕으로 한국형 원전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였음을 UAE측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UAE의 첫 원전사업을 총괄하는 모하메드 알 함마디 ENEC 사장은 한국형 원전의 가장 큰 매력으로 안전성과 건설 능력을 꼽았다. 그는 수주 발표 당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한국 전력공사컨소시엄이 보여준 세계적 수준의 안전성과 UAE원전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입증된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또한 30년간 성공적 원전운영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UAE에 전수하여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 (2) APR1400 설계의 우수성

UAE에 수출한 APR1400은 영광 3, 4호기 이후 국산화되어 국내 주력노형 역할을 수행한 한국 표준형 원전인 OPR1000을 기반으로 설계된 1,400MW급 한국형 원자로이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2002년 5월 규제기관으로부터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였다. OPR1000의 건설과 운영 기술을 기반으로하여 개발된 3세대 원전으로 경쟁국의 노형에 비하여 경제적이며, 능동형 안전계통과 피동형 안전계통의 장점만 채택한 복합 안전계통으로 가장 우수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고리 3,4호기에 최초로 적용되어 우리나라 주력 노형으로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UAE에 건설하고 있는 APR1400에는 현지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UAE에서 소비되는 전기의 주파수가 한국의 60Hz와는 달리 50Hz인 점에 맞추어 관련기기의 크기를 증가시켰으며, 발전소 주위의 해수와 대기온도가 한국보다 높은 점을 감안, 냉각 기기의 용량을 증대시키는 등 한국과는 다른 환경을 충실히 설계에 반영하였다.

#### (3) 세계 최고의 운영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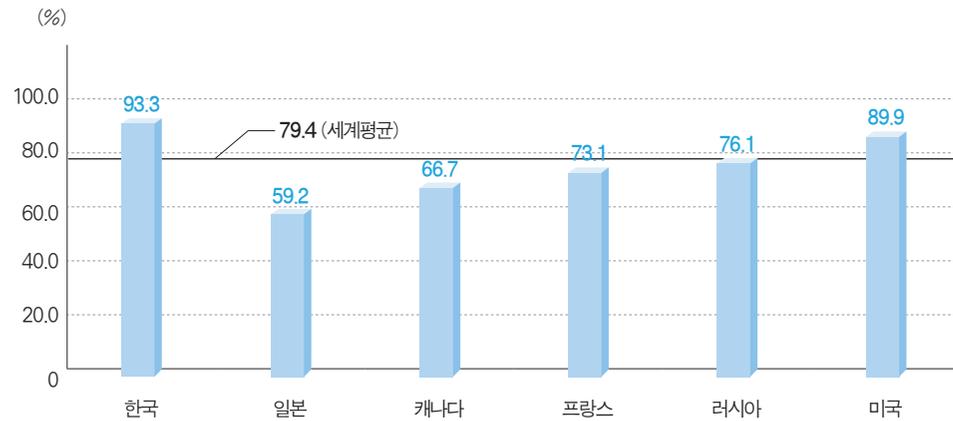
한국형 원전은 설비의 건전성과 운영인력의 우수성 등 발전소 운영기술 수준을 평가하는 직접적인 척도인 원전이용률(Capacity Factor)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원전 이용률은 2000년 이후로 9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의 원전 이용률은 93.3%, 2009년에는 91.7%, 2010년에는 91.2%, 2011년에는 90.7%로 세계 평균보다 10%이상 높으며, 주요 경쟁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갑작스런 고장 등으로 계획되지 않은 발전기 정지 시간을 나타내는 척도인 비계획 발전손실률(Unplanned Capability Loss Factor)은 2009~2011년 평균 0.4%(수주 당시 평균 0.8%)로 세계 평균 5%는 물론 세계 어느 경쟁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 (4) 풍부한 건설 및 운영 경험

1979년 TMI 원전사고 이래 원전 건설을 중단한 미국, 유럽과는 달리 한국은 1980년대 이후 거의 매년 1기씩 건설을 지속하여 풍부한 원전 건설과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국산화를 통하여 1998년에는 한국 표준형 원전 OPR1000을 울진 3호기로 완공하였으며, UAE에 수출한 노형인 APR1400은 2002년에 개발을 완료하였다. 원자력발전이 한국의 전력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말 기준으로 31.2%(UAE원전 수주 당시인 2009년에는 34.1%) 수준이며, 항상 일정한 전력을 공급하는 기저부하의 역할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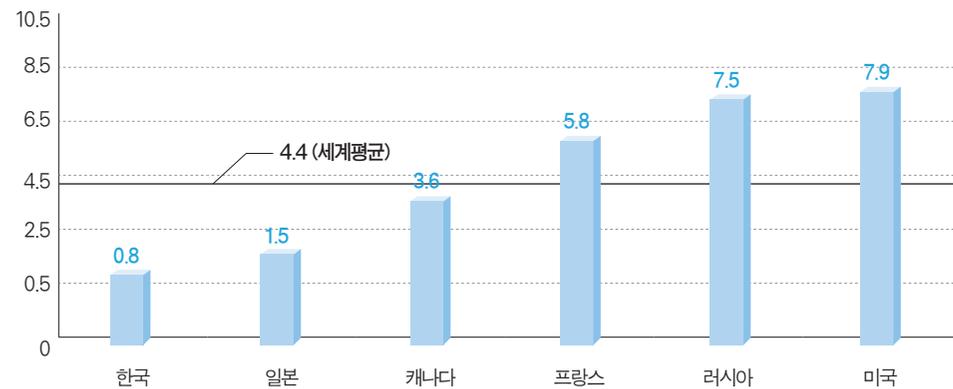
수주 당시(2009년) 한국형원전의 원전이용률 및 비계획 발전손실을 World Nuclear Association, 2008

Capacity Factor `Year 2008`



※ 자료: Nucleonics Week, March 2009

Unplanned Capability Loss Factor `Year 2005~2007`



※ 자료: IAEA 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 March 2009

(5) 최적의 건설 공기

한국형 원전의 건설 공기는 반복된 건설에 따른 경험의 축적과 설계의 표준화, 그리고 최신 시공기술이 적용되어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었다. 한국 표준 원전인 OPR1000의 경우 처음 건설시 61개월이 소요되었으나, 52개월로 단축되었다. APR1400은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신고리 3·4호기를 기준으로 할 때 최초 콘크리트 타설부터 상업운전일까지 58개월이 소요되어 프랑스의 CPR1000(60개월), 러시아의 VVER1000(83개월) 등 경쟁국가의 노형에 대비 최단 기의 건설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6) 최고의 가격 경쟁력

한국형 원전은 기술자립의 과정과 지속된 건설에 따른 경험 확보 등을 통하여 APR1400의 건설단가(Overnight EPC Cost)를 kW당 2,300달러 수준으로 낮춰 다른 국가에 비하여 20% 이상 저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주 당시(2009년) 국가별 원전 건설단가 비교(\$/kW) (World Nuclear Association, 2008)



※ 자료: World Nuclear News(World Nuclear Association, 2008)

(7) 전 단계에 걸친 강력한 공급체인

한국은 원전의 설계에서 기기제작, 건설, 연료, 운영 및 유지보수까지 원전 전단계에 걸친 강력한 공급체인을 보유하고 있다. 설계(한국전력기술), 기기제작(두산중공업), 건설(현대건설, 삼성건설 등), 핵연료(한전원자력연료), 운영(한국수력원자력), 유지보수(한전KPS)에 이르기까지, 전 범위에 걸친 일괄공급체계를 갖추고 있다.

### (8) 우수한 전문인력

한국은 40년에 걸친 원전의 지속적인 건설 및 운영으로 설계, 기자재 제작, 건설, 연료제조,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경험을 보유한 고급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설계, 제작, 건설, 운영 등의 분야에서 약 2만여 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 제3절 UAE원전사업 개요 및 경제협력

### 1. UAE원전사업 개요

#### (1) UAE원전사업 규모

UAE원전사업은 총 5,600MW급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총 계약금액은 불변가격 기준으로 186억 달러이다. 계약범위는 발전용량 1,400MW인 한국형 원전(ARP1400) 4개 호기 건설(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과 핵연료공급(초기 노심 및 2주기 교체노심) 및 시운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해외원전이 건설될 위치는 UAE의 수도인 아부다비 서쪽 약 270km 지점의 바라카(Barakah) 지역으로 2017년 5월 1일 1호기 준공에 이어 12개월 주기로 2020년 5월 1일 최종 4호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UAE원전 4개 호기는 한국이 해외에서 수주한 건설 사업중 사상 최대의 규모로 세계 최고 층 빌딩인 브루즈 칼리파(Burj Khalifa, 전체높이 828m)에 비하여 콘크리트는 약 2배(150만<sup>3</sup>), 철근은 4배(24만 톤)가 사용되며, 전체 배관의 길이는 서울-대전 간 거리의 약 5배(660km), 케이블은 약 90배(1만 2,000km)에 이른다.

#### (2) 사업추진 주요 일정

한국의 첫 해외 원전건설 사업인 UAE원전사업은 2009년 12월 공식 계약 이후 2020년 5월 1일까지 원전 4개 호기를 준공할 계획이다.

UAE원전 위치도



※ 자료: 지식경제부

UAE원전사업 주요 일정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2.27	12.31	3.1	4.1	11.1	-	7.1	4.1	2.1	10.1	5.1
사업착수	예비안전 분석 보고서 제출	부지 사전 준비	기초 공사	최초 콘크리트 타설	-	1호기 원자로 설치	전원가압	상온 수압 시험	핵연료 장전	1호기 준공	

※ 자료: 지식경제부

또한 UAE원전사업은 원전 건설 이외에도,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한국과 UAE가 공동으로 원전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지역의 원전시장 선점 및 동반진출을 추진하는 공통된 협력 목표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UAE의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원자력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UAE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원자력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2. UAE원전 건설 진행 현황

#### (1) 주요 경과

2009년 12월에 주계약이 체결된 이래로, UAE원전 건설은 주요 일정(Milestone)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2010년 1월 한국전력공사는 아부다비로부터 서쪽으로 약 270km 떨어진 UAE의 바라카(Barakah, 아랍어로 '축복', '은총'의 의미) 원전 부지에 현장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상반기에 한국전력공사와 협력사 간 주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에는 부지지질조사를 완료하였다. 2010년 12월에는 UAE 원자력 규제기관(FANR, UAE연방원자력규제청)에 약 1만 장 분량에 해당하는 건설허가 신청 서류 작성을 완료하고 이를 제출하였다. 2011년 3월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자가 참석한 가운데 원전 예정 부지 기공식을 거행하였으며, 9월에는 원전 건물의 기초 굴착 공사에 착수하였다.

2012년 6월에는 아부다비환경청으로부터 환경평가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7월 UAE연방

원자력규제청(FANR)은 시설물 설계 및 안전성 분석보고서, 건설품질관리체계, 방사선 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등 약 1,600여 개 안전성 평가 항목에 대한 약 1년 6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1·2호기 원전 건설허가를 발급하였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등 원자력 안전과 직접 관계된 본관 건물의 공사 착수가 가능하여졌다. 이 건설허가는 국내 건설 역사상 최초로 해외 원자력규제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을 평가받은 사례로 한국형 원전의 종합적인 안전성과 기술성을 실제 건설과정에서 대외적으로 입증한 계기가 되었다.

## (2) 본공사 착공 기념행사 개최

2012년 11월 21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자가 참석한 가운데 UAE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에서 'UAE원전 본공사 착공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자는 행사장에서 UAE원전사업의 주요 이정표(Key Milestones) 달성 현황에 관한 브리핑을 청취하였다. ENEC는 2012년 7월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부터 건설허가를 취득하여 본격적으로 원전건물(원자로 및 터빈발전기 건물)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당초 계획보다 8주가량 앞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UAE의 유력 일간지인 'The National(11.22)'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모하메드 왕세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놀라운 공사 진전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감사를 표시하며, "UAE의 미래 에너지 수요 충족 뿐 아니라 UAE원전을 안전성과 품질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젝트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한국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최초 해외원전 건설사업인 UAE원전사업이 주계약 체결 이후 약 3년간 주요 공정을 계획대로 달성하고 본공사에 착수함으로써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과 함께 우수한 건설능력을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 3. 한국-UAE 간 경제협력

원전 분야 협력은 건설에서 운영까지 약 100년 동안의 협력이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로서 양국 간의 다방면에 걸친 장기 협력체계 구축의 시발점이 되었다.

한국과 UAE 양국은 1980년 6월 정식 수교이후 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UAE원전사업을 계기로 그동안의 자원중심의 경제협력에서 경제 전 분야

에 걸쳐 장기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었다.

원전 건설 계약이 체결된 2009년 12월 27일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압둘라 UAE 외교부 장관은 한·UAE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양국간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경제 협력 파트너십의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원자력, 재생에너지, 첨단산업, 교육 등의 양국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풍부한 자원 및 자본을 지닌 중동은 세계 수준의 기술력과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한국으로서는 보완할 수 있는 최고의 협력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UAE를 비롯한 주요 중동국가들은 산업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IT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석유이후의 시대'(Post-Oil)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이미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들로 우리의 기술력과 우수인력이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하여 '제2의 중동붐'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한국과 산업 다각화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UAE 양국이 산업과 인력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상호 보완하여 나간다면 국가 간 동반성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UAE의 무역규모는 2011년 기준 약 220억 달러로 중동 국가 중 한국의 제2위 무역 상대국이며,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교역과 투자를 비롯하여 양국간 민간의 협력이 문화, 교육 등 제반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제4절 UAE원전사업의 의의 및 효과

### 1. 원전 수출의 의의

#### (1) 원자력 선진국으로의 도약

UAE원전 수주로 한국은 중동 산유국에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는 명실상부한 에너지 수출국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은 우수한 기술과 풍부한 건설 경험에도 불구하고 상용원전의 수출경험이 전무하다는 약점과 한국형 원전의 낮은 인지도로 원전 수출의 꿈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8년 미국기술에 의하여 고리원전 1호기를 처음 가동한 지 30여 년 만에 원전 수입국에서 원전 수출국으로 탈바꿈하여 원자력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은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 (2) 한국 원자력산업을 세계에 인정받은 계기

UAE원전 수출은 세계적으로 원전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프랑스(Areva)와 미국(GE)-일본(Hitachi) 컨소시엄과 결합 끝에 얻은 성과로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고도의 기술과 건설 및 제조 능력이 집약된 결정체로서 UAE원전의 수출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기술적, 산업적 역량을 세계에 인정받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원전은 현대 과학기술이 결집된 과학기술의 총아로서 안전성과 품질이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아야 수출이 가능하여 원전을 수출한 것은 항공기 수출, 우주선 발사에 견줄 만한 한 나라의 산업적, 기술적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3) 원전 수출 확대의 교두보 확보

UAE원전 수주는 세계 원전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원전을 새로이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동,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지역의 개도국들은 한국의 UAE원전 수주 소식을 접한 이후로 한국형 원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원전 기술도입, 자립화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 국가들의 전문 인력 양성과 안전규제 체제 구축 등 원전 도입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한국형 원전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고위급을 포함한 정부 간 협력은 물론, 민간의 협력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원전 수출을 계기로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원전산업 강국으로써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게 되었다. UAE원전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과 한국-UAE간 다방면의 경제 협력은 성공적인 사례로 세계에 인식되어 한국형 원전이 진출을 확대하여 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 UAE원전 수주 효과

### (1) 200억 달러의 직접 수출

UAE원전 수주는 1,400MW 급 한국형 원전 4기의 설계, 건설은 물론, 준공 후 시운전지원, 초기 연료공급을 포함하는 초대형 원전플랜트 일괄수출 계약이다. 발전소의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연료공급 등 건설부문의 계약금액만 약 200억 달러(물가상승분 고려)에 달한다. 또한 원전 건설 후 60년의 원전수명기간 중 원전의 운전, 기기교체, 연료공급 등 운영지원에 참여함으로써 약 200억 달러의 추가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UAE원전은 단일 계약금액으로 종전 리비아 대수로 2단계 공사 금액(63억 달러)을 훌쩍 뛰어넘는 사상 최대 수출규모로, 한국 역사상 최대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UAE원전 수출 금액은 중형승용차 100만 대,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을 수출하는 것에 맞먹는다. 한편 UAE의 전력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4기 외에 향후 추가적인 원전 수주도 기대되고 있다.

### (2) 한국 경제 기여

원전의 수출에 따르는 건설, 기기제작, 설계, 원자력 기술개발, 금융 등 원자력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고려시 UAE원전 수주를 통하여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의 수출을 통하여 기계, 철강, 전기·전자 등 유관산업에 대한 대규모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원전건설기간 10년 동안 신규 고용창출 효과는 1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향후 원전준공후 운영분야에서 매년 1,400여 개의 고급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UAE원전 수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해외 수출의 가능성을 높여 원자력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나갈 가능성을 열었다.

### (3) 한-UAE의 동반 성장

4기의 원전 건설과 함께 운영 및 정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한국과 UAE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며, 한국과 UAE 정부는 원전 프로젝트를 계기로 그간의 자원 중심 협력 관계에서 더 나아가 향후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는 형제국과 같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여 나갈 계기가 마련되었다.

UAE원전 건설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여 정치, 외교, 에너지, 플랜트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2010년 5월, 한·UAE 양국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UAE 아부다비 왕세자 일행이 신고리 3·4호기 건설 현장과 두산중공업을 방문하여 한국의 원전시설을 견학하였고, UAE원전 건설을 위한 양국 정부간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2011년 3월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UAE 아부다비 왕세자 및 원전 건설 관련 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라카 현지에서 UAE원전의 건설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2012년 3월에는 한국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UAE 아부다비 왕세자는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나갈 방안을 논의하였다.

UAE는 정상외교 등을 통하여 구축된 양국간 신뢰관계에 기반하여 한국에 자국 유전의 문

호를 개방하기도 하였다. 중동지역은 전세계 석유 매장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을 제외하고는 진출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UAE원전 수주 이후 가속화된 에너지 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2012년 3월 3개 미개발 유전 본계약을 체결하여 UAE 유전 개발에 참여를 구체화하게 되었다.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인 한국과 UAE의 협력 전망은 매우 밝은 상황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의 기조로 삼는 한국과 '석유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UAE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으며, 특히 UAE의 자본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이 만나면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역 강국으로서의 위상, 근면 성실한 한국인의 이미지, 정상 외교를 통하여 형성된 신뢰관계로 인하여 UAE 또한 한국을 우호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양국 간 협력 관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UAE와의 협력확대를 통하여 중동지역 진출 기반도 확고히 함으로써 제2의 중동붐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4) 국가 위상 제고

원전 수출은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서 장기간에 걸친 수출대상국과의 인적 교류와 각 분야의 협력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고도의 경험과 역량이 요구되는 장기 대규모 프로젝트로 기술, 마케팅, 정치, 외교 등 종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수주가 결정된다.

과거,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일본 등 5개국에 불과하였으며, UAE원전 수출을 계기로 한국은 새로이 원전 수출국의 대열에 합류하여 선진 기술력 및 원전 산업 강국으로써의 이미지를 드높였다. 더불어 정치, 외교 등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역량이 필요한 국가대항전 성격의 원전 수주경쟁에서 원전 수출의 성공은 국제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 3. 향후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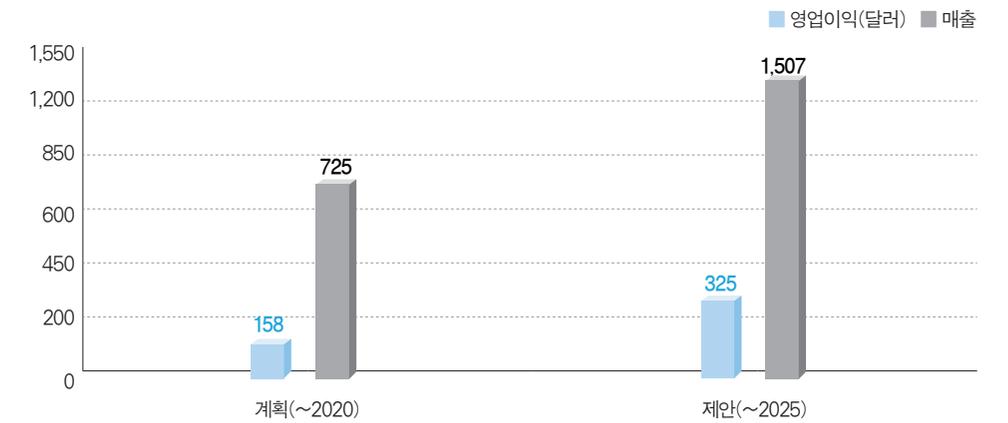
#### (1) 세계 원전시장 전망

2000년대 후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전 세계에 걸친 원전 건설의 증가 추세를 확산하면서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를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3월에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한국을 비롯한 원전 운영국들은 자국의 원전의 안전성을 재점검하고 안전성을 더욱 높여나가

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원전 정책 포기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고유가와 기후변화 등 에너지의 공급을 둘러싼 환경은 변함없는 가운데 안정적인 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여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경제성과 친환경 경성을 여전히 인정받아 앞으로도 세계가 의존하는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선택받을 수 있을 지 국제사회는 서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세계 원자력 관련 주요 기관들은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은 감소하지 않고 미래에도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최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셰일가스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전력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아직까지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공통적인 인식이 있다. 특히 수년 내 원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신규 원전도입 예정국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안전성을 강화하여 원전도입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며,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 기존 원전 운영국들 또한 기존 원전 건설정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 원전시장 전망 (WNA, OECD/NEA, IAEA 전망 종합, 20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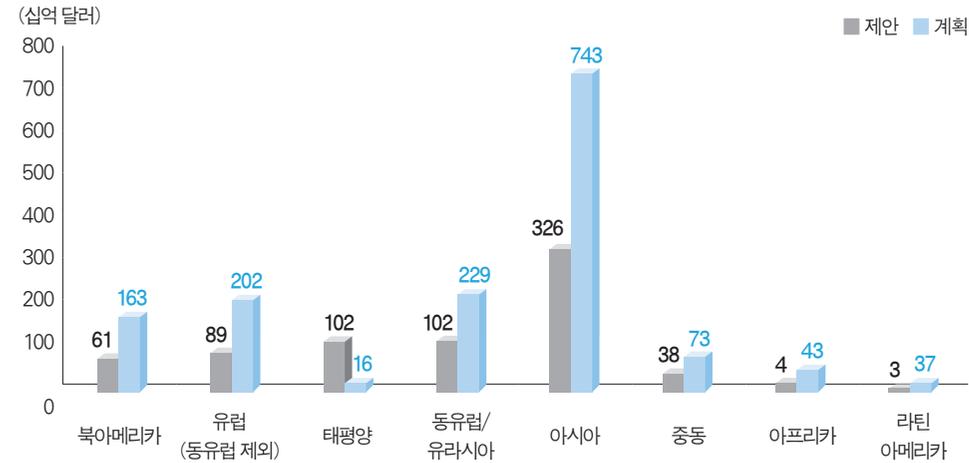


※ 자료: IAEA 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 March 2009

성장 Driver		
<b>화석연료의 고갈</b> • 전통적인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하여 대체에너지 개발 필요	<b>세계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b> •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발전원 필요성 증대 • 대체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 미흡(풍력 발전에 한하여 일부 사업성 확보)	<b>선진국 탄소배출 규제</b> •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에 의한 탄소 미배출 에너지원 필요성 증대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친환경 발전원 수요 증대

※ 자료: 지식경제부

**지역별 원전 건설 계획**



※ 자료: 지식경제부

지역별 시장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1 현재 원전 건설 계획</li> <li>- 계획 단계: 158기, 176.767MW 규모</li> <li>- 제안 단계: 326기, 370.995MW 규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 성장성이 매우 높은 BRICs 국가가 세계 원전 건설 계획의 약 52%를 차지</li> <li>유럽 시장에서는 영국, 터키, 이탈리아, 폴란드가 성장을 주도</li> </ul>

※ 자료: 지식경제부

**(2) 주요 경쟁국가 동향**

현재 전 세계에서 원전 수출국은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최근 원전 수출국 간에 수주 경쟁이 후쿠시마 사고 이전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입국들 뿐만 아니라 경쟁국들의 원전관련 정책변화 및 관련정보, 여론 추이 동향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선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한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상대인 프랑스의 경우 최근 EDF를 주축으로 하는 AREVA, Alstom 및 Bougues, Vince 등의 건설사 등과 'Team France'를 구축하여 연대를 강화하고

**6개국 9개 업체**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	러시아	캐나다
아레바	웨스팅하우스, GE	도시바, 히다치, 미쓰비시	KEPCO	아톰프롬	AECL

※ 자료: 지식경제부

있다. 최근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AREVA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대용량원전인 EPR1600의 수출을 주도하며 한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국의 원전정책 동향(2012.10월말 기준)**

- 후쿠시마 사고 이후 기존의 원전 운영국들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원전정책을 기존 원전정책을 유지하거나 재검토
  - 미국, 러시아 등 원전 선진국들은 기존 원전정책을 유지하되 안전성을 강조
    - 미국은 34년 만에 신규 원전건설 승인으로 4기의 원전 건설 진행 중
    - 러시아는 최근 5개국과 정부간협정(IGA)을 체결하여 신규 수출을 앞두고 있음
  - 중국은 2012년 10월 원자력발전 중장기 발전계획(2011~2020년)을 통과시켜 원전 건설을 재개하기로 하였으며 2010년 1,080만kWh인 원전 발전량을 2020년 8,000만kWh로 높여나갈 계획
    - 중국은 최근 터키 등에 원전 수출도 적극 추진 중
  - 현재 신규 원전 7기를 건설중인 인도는 2012년 9월 기존 계획대비 총 5,300MW의 원전용량 추가 확보계획을 승인
    - 인도는 기존 12차 경제개발계획(2012~2017년) 기간 중 신규 원전 16기(중수로 8기, 경수로 8기) 건설을 계획
  - 영국, 핀란드, 체코, 남아공, 헝가리 등은 수년 내 추가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미 입찰을 진행 중이거나 입찰 준비 중
  - 한편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이탈리아, 스위스, 벨기에에는 신규 원전 승인 중단 등 기존 원전정책을 재검토
    - 일본은 2030년까지 모든 원전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에너지환경 혁신전략' 초안을 발표하였다가 이를 유보하기로 함(2012년 9월)
- 터키, 베트남, 이집트,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수년 내 원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신규 원전도입 예정국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성을 강화하여 원전도입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
  - IAEA 회원국 중 29개국이 원전 도입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아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신규 원전 건설이 증가할 전망

**신규원전도입 관련 IAEA 회원국 현황(2012.9월)**

구분	내용	해당국가
3단계	원전 도입계약 또는 건설 중	UAE, 터키, 벨라루스(3개국)
2단계	원전 도입결정 및 인프라 구축	방글라데시, 이집트, 요르단, 나이지리아, 폴란드, 베트남(6개국)
1단계	원전도입 미정이나 인프라 조성	칠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태국(6개국)
	원전도입 고려 중	알바니아, 알제리, DR콩고, 크로아티아, 가나, 케냐, 리비아, 필리핀, 수단, 시리아, 튀니지, 우간다, 우루과이, 카자흐(14개국)

※ 자료: 지식경제부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할 정도로 원전산업이 엄청난 격변을 겪었다. 그러나 민관합동의 원전수출전담기구인 ‘국제원자력개발주식회사’(JINED)를 중심으로 다시 원전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TMI 원전사고 이후 30년간 거의 원전 건설이 없을 정도로 침체를 겪으며 원전수출을 위한 인력 및 기술력 등에서 일부 동력이 많이 약화된 측면이 있지만 러시아 노형 등의 일부 노형을 제외하고 전 세계 원전 대부분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원전 수출을 위하여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다.

러시아는 2007년 이후 원전수출조직을 정비하여 일원화된 지원체계를 갖추고 일사 분란한 수주활동을 전개하여 나가고 있다. 특히 베트남, 방글라데시, 터키, 인도 등 재원이 부족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차관 및 군사협력 등의 제공을 약속하면서 활발한 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다.

중수로를 수출하고 있는 캐나다는 한국이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가압경수로와는 직접적인 경쟁상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원전 도입국들이 가압경수로를 선호하고 있으나, 루마니아 등 일부 국가에서 중수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원전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하여 원전 선진국 업계간 제휴·통합 등 재편을 본격화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원전도입국들에게 군사협력이나 경제협력, 차관제공 등을 제시하는 등 원전 수출은 과거보다 훨씬 치열한 국가 대항전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 제5절 향후 과제

이명박정부는 UAE원전 수주를 계기로 원전 수출산업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42차 비상경제대책회의(2010.1.13)에서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인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수출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추진, 원전기술 자립화, 원전 전문 기술인력 양성, 원전연료의 안정적 확보, 원전 핵심 기자재 수출역량 확충, 수출형 원전 산업체제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UAE 이후의 원전 수출을 위하여 정부는 관련 기관 및 기업과 함께 원전 발주국의 여건, 수출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수주전략을 마련하고 선별된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역량을 집중하여 중점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하여 나갈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수년 내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 베트남, 핀란드 등을 중심으로 정부 및 원전 관련 기업간 체계적인 협력

###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

<b>추진전략</b>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수출산업 경쟁력 확보 •규모별(대형 및 중소형 원전, 연구로) 신규 건설시장 적극 개척 •노형별(경·중수로) 유지·보수 시장도 병행 진출
<b>중점 추진대책</b>	① 국가별 맞춤형 원전 수출 전략 추진 ② 원전기술 조기 자립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③ 원전 전문 기술인력 양성 ④ 원전연료의 안정적 확보 ⑤ 원전 핵심 기자재 수출 역량 확충 ⑥ 수출형 원전 산업체제 강화

※ 자료: 지식경제부

을 통하여 추가 수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나갈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신규로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최초 원전도입 예정국가들에 대한 수주여건 조성과 한국형 원전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인력 양성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한국형 원전의 진출기반을 조성하여 나갈 계획이다.

두번째로 한국형 원전을 세계적인 프리미엄 원전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보완·강화하기 위하여 원전 기술의 조기 자립완료를 추진하는 한편 신형 원전 개발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원전 핵심설계코드, 원자로 냉각재펌프(RCP), 원전제어계측장치(MMIS) 등 3대 미자립 핵심기술을 조기 개발하고,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토종 신형원전(APR+) 개발도 추진하여 나갈 예정이다.

세 번째로 UAE원전 수출 및 추가 수주에 따른 전문 인력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자력 5대 공기업의 정원 확보와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기술인력과 현장 전문인력의 양성에도 만반

### 3대 핵심 원천기술 자립화 현황(20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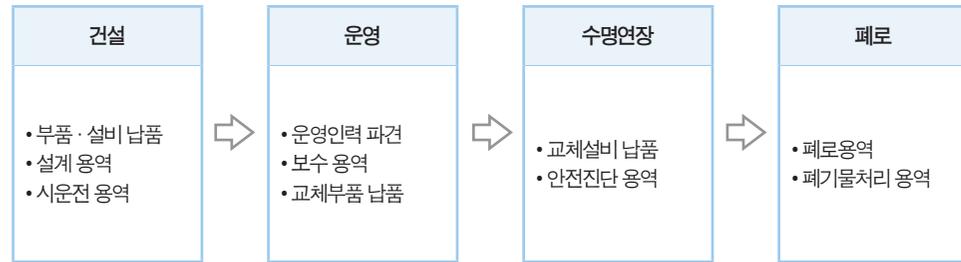
기술구분	종합공정률(%)	개발일정	주관기관
핵심설계코드	100.0	개발(2010) → 검증(2012)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등
냉각재펌프(RCP)	99.8	설계(2010) → 원형제작(2011) → 검증(2012)	두산중공업,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제어계측장치(MMIS)	100.0	시제품(2008) → 검증(2010)	두산중공업, 포스콘 등

※ 자료: 지식경제부

의 준비를 하여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15차 비상경제대책회의(2012.2.24)를 개최하여 '해외 원전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하여 첫째, 원전 마이스터고, 원전 특성화대학, 국제원자력대학원 등을 통한 수준별 원자력 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특히 UAE원전사업에 참여하는 원전 관련 공기업 인력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셋째, 수출노형(APR1400)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충분한 경험을 갖춘 숙련인력이 해외 원전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열악한 현지 근무 환경을 감안하여 해외 파견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노후 원전 증가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성 강화 움직임에 따라 가동원전과 관련된 기술·용역·기자재 시장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러한 틈새시장에 대하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운영 및 정비 능력을 활용하여 적극 진출하여 나갈 것이다.

원자력발전 life-cycle별 틈새시장



※ 자료: 지식경제부

아울러 추가적인 원전 수주에 대비하여 원자로 설비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중소 원전 기자재업체들에 해외인증, 시장개척단 파견,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여 이들 기업이 글로벌 부품공급체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수요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개발, 자금, 품질관리 지원, 해외 공동 진출 도모 등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출형 원전 산업체제 강화를 위하여 원전산업체 수출 조직을 보강하고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원전산업의 수출 조정기능 및 지원조직을 강화하고, 역할 분담 등을 통하여 원활한 수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웨스팅

하우스 등 세계 원전 공급사와 공동 진출 및 전략적 제휴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내 원전 및 해외 원전 수출에 소요되는 원전연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해외 광산 지분 인수, 해외 농축공장 지분 참여 확대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나감으로써 수주 역량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UAE원전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더 나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만,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동유럽 등 원전도입 예정 국가들에게까지 활발한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2의 원전수주 노력에 못지않게 UAE원전의 완벽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가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여 나간다면 원자력산업을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2030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원전 수출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5편

앞으로 남은 과제

## 경제영토 확장 노력 지속 추진하여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EU 등 선진경제권의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신흥경제권도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제의 위축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는 위협적인 환경 변화이다. 이에 대응하고 성장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 허브 완성, 무역 2조 달러 달성, 해외 자원개발 확대 등을 통한 경제영토의 확장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우선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장을 위하여는 협상이 진행 중인 FTA 체결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국, 일본 등 인접국과의 FTA 추진이 핵심과제이다. 중국과의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EU, 중국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가 되고 경제영토는 전 세계 GDP의 약 67%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로써 미국, EU 등의 중국 진출을 위한 투자확대, 중국의 미국, EU 진출을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명실상부한 FTA 허브 국가로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강화되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정치적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한·중 FTA 체결 시 농수산업, 경공업 등 우리 측 민간산업에 대하여는 피해 최소화 전략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중·일 FTA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한국, 중국, 일본은 3국 간 교역·투자의 상호의존성, 산업구조 간 상호보완성이 커 경제통합에 따른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3국 간 FTA 체결 시 NAFTA, EU 등 거대경제권에 비견할 수 있는 상당 규모의 역내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ASEAN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베트남 FTA, 한·인도네시아 CEPA를 지속 추진하고, 오세아니아 지역과의 안정적인 교역 확대를 위하여 한·호주 FTA, 한·뉴질랜드 FTA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ASEAN+3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포괄범위를 넓힌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나,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멕시코, 캐나다 등 참여범위가 광범위한 것으로 예상되는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파트너십 협정) 협상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시다발적 지역통합 논의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TPP, RCEP,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아·태자유무역지대)는 협상 과정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산적하여 있으므로 쉽게 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에 참여

하는 당사국이 많은 만큼 서로 다른 제도의 조화,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등의 과정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확보하여 나가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 무역 2조 달러 위한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 필요

우리나라는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경제사에 신화를 남겼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여는 안 된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등으로 세계 교역이 급격히 축소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역 1조 달러를 지키고 더 큰 무역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1년 12월 5일 역사적인 무역 1조 달러를 달성에 즈음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열린 무역대국’과 ‘2020년 무역규모 2조 달러 진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농업, 서비스업 등으로 수출 대상 분야를 다양화하고, 대기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며, 지속적인 FTA 확대를 통하여 해외시장을 더 넓혀 나가야 한다는 새로운 무역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포스트 1조 달러 시대에 맞지 않는 패러다임으로는 무역 2조 달러에 다가서기 어렵고, 설사 다가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을 보다 구체화하고 체계화하면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주력수출산업 외에 새로운 미래 수출산업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바이오헬스, 나노융합 및 원전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SW산업, 농식품, 문화콘텐츠 등의 미래 유망분야에서 R&D, 인력양성, 시장개척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체 브랜드를 수출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협력관계의 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 글로벌 역량을 배양하는 일이다. 동아시아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생산의 분업구조로 인하여 우리의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 그 역량을 글로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넷째, 미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출산업 육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조선, 자동차, 정보통신 등 현재 주력수출산업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주력수출산업의 고도화가 지체될 경우 중국, 일본등 주요 경쟁국과의 생산중복으로 인한 부작용의 역풍

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는 안 된다.

다섯째, 해외시장을 전략적으로 경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전략적 동반자인 신흥국과 UAE원전 수주와 같은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역확대를 뒷받침할 무역 인프라와 제도의 선진화이다.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의 인프라와 기금 지원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새로운 무역트렌드에 대비한 다양한 인력확보, CEES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브랜드 전시회 육성, One-Stop 무역서비스 구축 등이 앞으로 꾸준히 추진하여 나가야할 과제이다.

## 안정적 에너지 공급 위한 자원개발 역량 확충을

우리의 무역 강국 지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국민경제를 보다 안정된 반석 위에 두기 위하여는 그 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산업에 원자재와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원개발은 전후방 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고 자원가격 상승 시 초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상품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등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위축에도 불구하고 원유,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은 높게 유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을 위시한 신흥경제권의 부상으로 원자재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천연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는 해외자원개발과 원전 수출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으로 질적·양적 측면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다.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자원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해외자원개발 물량의 양적 확대를 넘어 국민경제 전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동반한 성장을 추구하여야 한다. 자주개발을 외에 자원개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보완을 통하여 유사시 대응능력과 개발역량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자원개발 공기업을 지속 육성하는 한편 민간부문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 전반의 자원개발 역량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석유공사가 탐사역량을 제고하여 전문적인 E&P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는 전문성이 고려된 경력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우리 자원개발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시장에서 글로벌 메이저와 경쟁하기 위하여 인력, 기술, 자본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등 인력양성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겠다. 특히 기업수요에 맞도록 현장 경험이 있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또한 셰일가스 등 비전통 자원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선발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면서 리스크가 큰 자원개발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업들의 자원개발 역량 강화는 물론 투자역량을 높이기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또한 강화되어야 하겠다.

자원개발 민간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성공불용자, 투자위험보증사업 규모가 지속 확대되어야 한다. 공적 연기금 등 공공투자기관의 투자를 유도하고 개인 투자자 투자참여를 위한 세제지속도 지속되어야 한다. 거시경제적으로 후방산업이자 연관효과가 큰 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을 살려 중소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고 조선·플랜트 등 후방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자원개발이 새로운 블루오션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자원개발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개발자원의 국내 도입을 통한 자원공급 안정화 등 국민경제적 실익을 제고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할 필요성도 있다. Easy oil 시장을 선점한 전통 메이저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후발 추격자는 제조업 등 산업강국으로서의 강점과 틈새시장을 활용하여 새로운 메이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장기 자원개발전략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원자력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신흥 개발도상국들의 전력수요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미래에도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전망이다. UAE원전 수주에서 경험하였듯이 향후 원전 수출은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포괄적인 장기적인 협력 관계 유지 등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한국형 원전을 세계적인 프리미엄 원전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원전기술의 자립, 신형 원전 개발 등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세계 원전 운영 및 정비 시장 진출 추진 등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 할 수 있다.

# 부록

[부록 1] 우리나라 원자력 개발 도전의 역사

[부록 2] 대한민국, 자원강국으로 가는 길

[부록 3] 정책일지

[부록 4] 집필참여자

## 부록 1

# 우리나라 원자력 개발 도전의 역사

### 1. 우리나라 원자력 개발 도전의 역사

#### (1) 한국 원자력의 시작

우리나라의 원자력 역사는 1955년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원자력평화회의에 3명의 과학자가 참가하면서 싹이 움트기 시작하였다. 1956년에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 체결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활동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진행되었다. 1957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출범하였고, 우리나라는 같은 해 IAEA헌장에 서명하고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1959년에는 원자력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발족되었다. 1962년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인 TRIGA Mark-II가 가동됨으로써 원자력 기초연구와 동위원소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59년 한양대학교, 1960년 서울대학교에 원자력공학과가 설치되어 원자력산업 발전의 절대적 선결과제인 전문인력 양성이 시작되었다. 전쟁의 상처가 가시지 않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당시 선진국의 최첨단산업 영역이었던 원자력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이례적으로 매우 높았고, 이후 원자력산업 태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 석유위기로 유가가 급등하자 세계적으로 대체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공업입국을 위한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안정적 전력공급원인 원자력발전의 도입이 결정되었고, 1971년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전인 고리원자력 1호기가 턴키 방식으로 착공되었다.

#### (2) APR1400의 개발

지난 40여년의 우리나라 원전건설사는 기술자립 및 기술독립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아무런 기술과 경험 없이 시작된 원전건설 초기에는 선진 외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미국, 캐나다, 프랑스에서 원전을 도입하면서 경험이 축적되고 지속적인 원전 건설 수요가 생겨나면서 표준형 원전설계 개발을 통한 반복 건설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식되었고, 기술집약적 준국산 에너지라는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는 원전건설 기술자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컨센서스가 이뤄졌다.

#### 국내 원자력 기술자립의 역사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2년
외국기술의존기 (Turnkey 계약)	기술축적기 (Non Turn-key 등)	기술자립기 OPR1000 개발 (1995)	APR 1400 개발 (2001)	기술독립기 100% 기술자립 추진
고리 1~2호기	고리 3~4호기	영광 3,~6호기	신고리 1~2호기	APR+ 표준설계 개발(2012) ※ 핵심원전기술 자립 국제 경제력 확보
월성 1호기	영광 1~2호기 울진 1~2호기	울진 3~6호기 월성 2~4호기	신월성 1~2호기 신고리 3~4호기	신울진 1~2호기

※ 자료: 지식경제부

1984년 당시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는 '원자력발전 경제성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기술자립을 위한 방향 및 역할분담을 확정하였다. 한전은 1987년 미국 ABB-CE사와 영광3·4호기의 주기기공급, 종합설계용역 및 핵연료공급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10년 기한의 기술도입계약(Technical Transfer Agreement)을 체결하여 기술전수, 교육훈련 등 체계적인 원전건설 기술자립계획을 추진하였다. 영광 3·4호기 건설과정에서 얻어진 기술과 경험은 최초 한국 표준형 원전(KSNP: Korea Standard Nuclear Power Plant)인 울진 3·4호기가 국내 기술진 주도로 건설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1980년대 들어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안전성, 경제성이 기존 원전보다 월등히 뛰어난 신형원전 개발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 국내 전력수요 증가 등을 감안, 우리나라도 국내 보급은 물론 수출까지 고려한 대용량 신규원전 설계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2년 종합과학심의회에서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을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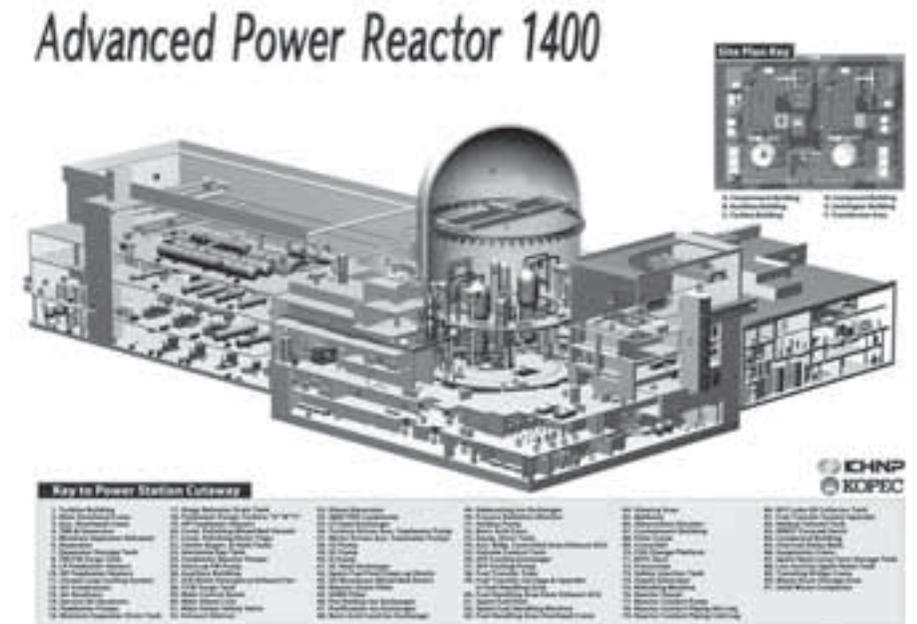
선도기술개발사업(G-7 Project)으로 확정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하였다. 당시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는 국가적 역량 집결을 위하여 범부처적인 기술개발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당시 과학기술부(현 교육과학기술부)는 인·허가 관련 규제요건 등 안전규제 기술개발을 지원하였다. 또 국내 원전기술 자립기반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산·학·연이 공동 참여하는 기술개발사업단을 구성·운영하였다.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은 10년에 걸쳐 3단계로 수행되었다. 1단계(1992~1994)에서는 노형 비교 분석을 거쳐 열출력 4,000 MWt급 개량형 원전으로 개발노형을 확정하고, 설계 기본요건 정립과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2단계(1995~1999)에서는 설계 세부요건 정립, 기본설계 개발, 그리고 표준 안전성분석보고서 발행, 주기에 대한 설계사양서 개발 및 제작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3단계(1999~2001)에서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조화된 발전소 설계를 최적화를 수행하였으며, 표준설계 인가, 설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설비들에 대한 상세설계를 수행하였다. 차세대원자로는 국내 원전건설 및 운전 경험을 토대로 세계 주요 신형원전에서 채택하고 있는 최신의 안전설비와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사고방지는 물론 만일의 경우 사고 발생 시에도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대사고 완화 개념을 설계에 대폭 반영하였다.

10년 동안 연인원 2,000여 명의 기술인력과 총 2,340억 원의 연구비가 투입된 차세대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은 2002년 5월 과학기술부로부터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하고 2003년 5월 특허청에 공식 상표를 출원·등록함으로써 마침내 'APR1400 (Advanced Power Reactor 1400)'이 탄생하게 되었다.

산업자원부는 설계개발결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2000년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 APR1400 적용 최초원전인 신고리 3·4호기 건설일정을 반영하였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07년 과학기술부로부터 신고리 3·4호기 건설허가를 취득하여 공사에 착수함으로써 국내 원전건설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해외 원전 수주경쟁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 APR1400 개념도



## 부록 2

# 대한민국, 자원강국으로 가는 길

### 1. 자원전쟁 속 우리의 현실

#### (1) 이미 시작된 자원전쟁

자원의 공급은 제한되어 있지만 자원수요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개발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하여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원의 안정적 확보문제는 최상위 아젠다이다.

자원은 이제 국가 간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핵심변수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20세기 냉전의 단초가 이념의 갈등이었다면 21세기의 냉전은 원유와 천연가스 같은 자원 문제에서 비롯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개척지역이 많은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은 자원의 전쟁터이다. 아프리카는 과거 미국과 유럽이 독차지하는 자원의 보고였으나 최근에는 중국이 막대한 규모의 저금리 차관과 인프라를 앞세워 자원을 선점하고 있으며, 일본과 인도 등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남미 지역에서 철광석, 리튬 등을 확보하려는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자원은 이해관계자들이 공급과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전략적 상품’이다. 특히 최근에는 희소성과 편재성을 이용하여 자원을 무기화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원 무기화’ 현상과 더불어, 자원부국들은 자원을 활용하여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자원민족주의’라고 이야기한다. 이들은 자원 국유화, 국영기업 우선 배분, 조세부과, 수출·생산 제한 등을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 사례

##### [사례 1]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가스 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분쟁은 그 좋은 예이다. 2006년과 2009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가스 분쟁이 일어났다.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 가스의 중요 수송로인 우크라이나가 중간에 가스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체불한 것이 분쟁의 원인이었다. 결국 러시아가 유럽으로의 가스 수송을 중단함으로써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 유럽연합(EU) 국가들에 연료 공급이 전면 중단되자 해당 국가의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겼으며 겨울철 난방 대란까지 일어났다. EU는 현재 매년 가스 수요의 약 2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핀란드와 슬로바키아 등 7개국은 가스의 100%를 러시아에서 공급받을 만큼 EU 국가들의 러시아산 가스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이 사건은 자원의 중요성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사례 2] 중국의 대(對) 일본 희토류 공급 중단 사건

2010년 9월 중국이 일본에 대하여 희토류 수출 제한을 감행한 사건 역시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일본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60%를 사용하고 있는 최대 소비국으로서 수입이 중단되면 첨단제품의 부품 공급망이 타격을 입는 산업구조이다. 이러한 일본에 대하여 희토류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전략적 목적으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국가관계에서의 자원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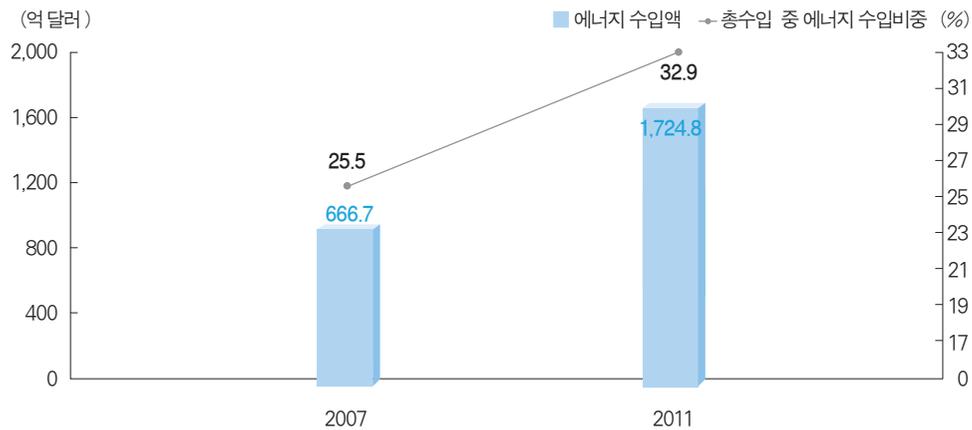
#### (2) 우리는 자원빈국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96%를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 4위의 에너지 수입국이다. 해외 의존형 에너지·자원 수급 구조로 인하여 에너지·자원 정세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자원이 국민 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우리 산업 내 고부가가치 첨단 제품 생산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핵심 자원으로 떠오른 희유금속을 들 수 있다. 희유금속은 대체제가 없는 자원인 만큼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우리 산업의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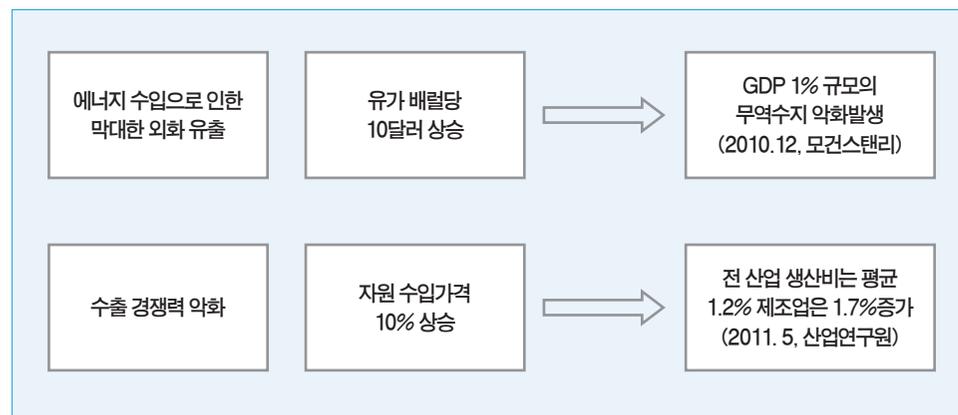
2011년 한 해,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에 총 1,725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이는 전 산업 분야 총 수입의 32.9%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자원 가격의 상승은 무역수지의 악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인하여 수출경쟁력까지 저하시키게 된다.

에너지 수입 현황



※ 6대 전략광종인 유연탄, 우라늄, 철, 동, 니켈은 거의 수입에 의존

자원 가격 상승에 따른 한국의 경제민감도



부 충격에도 흔들림 없이 지속 성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 자원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며 단순히 금전관계만으로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자원부국들과의 오랫동안 끊임없는 교류를 통하여 신뢰를 쌓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만 가능하다. 지금 당장의 성과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도 적극적인 자원외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2. 세계 각국의 자원 확보 노력

(1) 중국, 자원이 있는 곳은 어디든 간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자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 들고 있다. 중국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해외 자원개발 정책은 세계의 자원 시장 질서를 단시간에 변화시켰으며, 앞으로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정부는 자원 확보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에 대

(3) 해외 자원개발, 지속 가능한 성장 원동력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에너지 수급의 급격한 변화와 가격 상승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인 해법은 바로 '해외 자원개발'이다.

해외 자원개발을 통하여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게 되면, 국지적 요인에 따라 자원공급이 제한될 경우 직·간접적 자원 도입을 통하여 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자원수급의 불균형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해외 자원개발 투자수익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수지 악화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은 우리 경제가 외

하여는 전방위적인 자원외교를 펼치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 정부 주요 인사들이 수차례 아프리카를 순방하였고, 상하이협력기구,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등 다자간 협력 채널을 통하여 아프리카 자원에 대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중국은 2011년 전 세계 500대 기업에 포함된 4개의 국영기업을 통하여 적극적인 자원 개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 국영 석유기업(National Oil Company, NOC)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가격이 저렴해진 해외 광구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전 세계 석유 및 가스광구 지분 매입을 위하여 약 476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해외 석유·가스 개발 투자 금액 (2009~2010, I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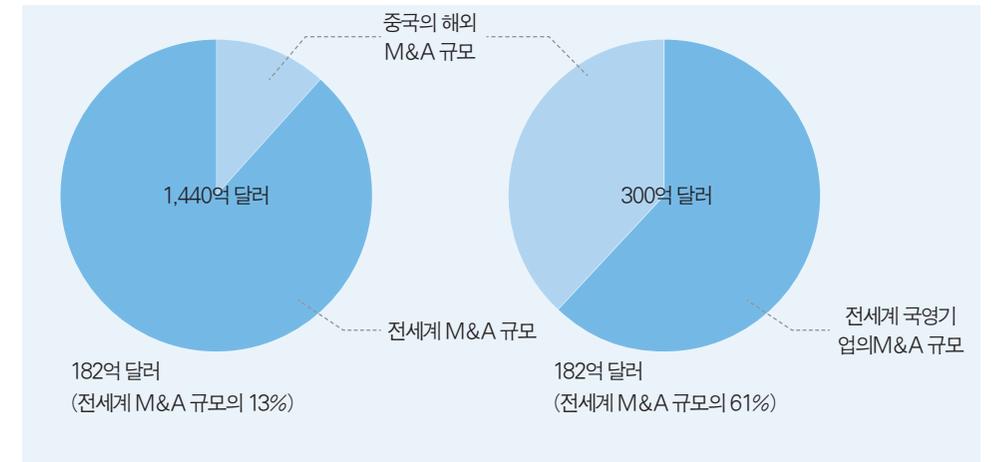
M&A 분야에서도 2002년 이후 전 세계 43개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였으며, 2009년 중국 기업의 해외 기업 M&A 규모는 182억 달러로 전 세계 M&A 규모(1,440억 달러)의 13%, 전 세계 국영 기업 M&A 규모(300억 달러)의 61%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지분 매입 대상 기업은 전 세계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최근 각광받고 있는 비전통 석유·가스 개발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풍부한 외환 보유고를 활용하여 유전 지분 매각을 꺼려하는 자원부국을 대상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자원에 대한 장기구매권을 확보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770억 달러의 자금을 해당국가에 장기 저리로 제공하여 12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국의 자원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IEA는 향후 5년간 전 세계 석유수요 증

가분의 50%를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자원 확보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그 만큼 우리나라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국 국영 석유기업의 M&A 현황 (2009)



(2) 일본,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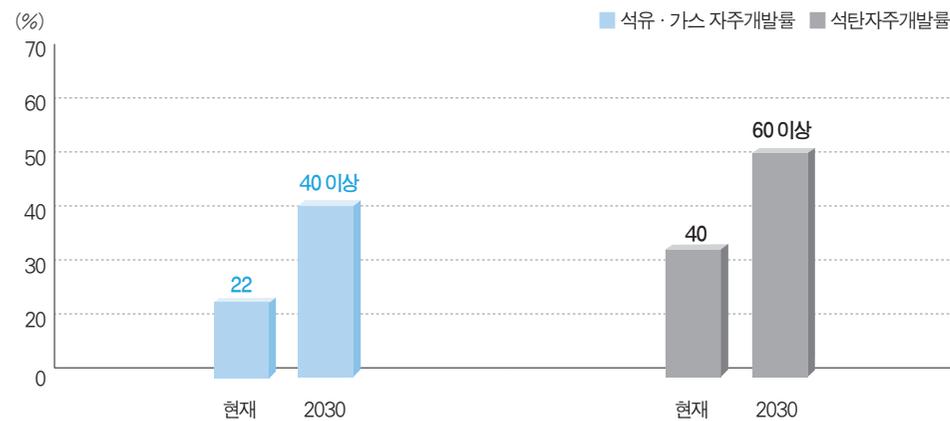
일본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2004년 이후 22%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0년 에너지 기본계획을 개정, 2030년 목표를 40% 이상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자원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과 민간기업 합병으로 탄생한 Inpex를 일일 생산규모 70만 배럴의 지역 메이저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석유·가스 확보뿐만 아니라 석탄·동·아연·희유금속 등 광물자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0년 에너지기본계획 개정 시 현재 약 40% 수준인 석탄 자주개발률을 2030년까지 60% 수준으로 높이고, 동·아연의 자급률은 80%, 희유금속의 자급률 50%를 달성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ODA(대외원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민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을 투자금의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하고, 자원에너지종합보험을 통하여 리스크를 보전하는 등 민간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일본 화석에너지 자주개발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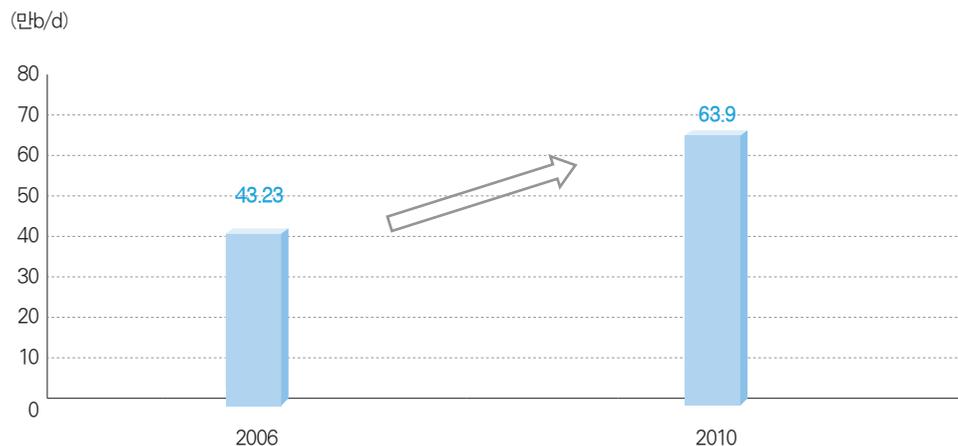
(3)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와 말레이시아는 산유국으로서 자국 석유개발을 통하여 축적한 경험, 기술,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외 자원개발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인도는 인접국인 중국과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고, ONGC 등 국영기업의 해외자산 인수를 위하여 2010년부터 10년간 300억 달러를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투자위험이 큰 개도국에 전략적으로 진출하여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외국

Petronas 해외 석유·가스 생산량



석유기업들의 국내 유전 개발 참여를 유도하여 경영 효율성, 기술 확보 등 내적 성장도 꾸준히 이뤄가고 있다. 특히 국영 석유사 Petronas는 짧은 자원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Shell과 같은 글로벌 메이저 회사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성장(2010년 기준 일일 생산량 180만 배럴), 말레이시아 자원개발의 주축이 되고 있다.

3. 글로벌 자원전쟁, 한국의 전략과 승부수는?

(1) 자원외교, 새로운 역사의 초석

우리나라 자원개발 역사는 30년 남짓에 불과하다. 기술, 경험, 인력 등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사례

1. 한국가스공사, 이라크 대형광구 지분확보

한국가스공사는 이라크 정부가 정한 '일일 생산량 20만 배럴 이상 규모 기업'이라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양국 정상간 양해각서(2009년 2월) 체결 후, 4개의 대형광구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자원개발 경험이 전혀 없는 가스공사가 1~3차 이라크 유전개발 입찰을 통하여 계약이 체결된 총 14개 광구 중 4개 광구에 참여하는 특혜를 얻은 것은 양국 정상 간의 협력의지가 있기에 가능하였던 일이다.

2. 정상급 외교, UAE 유전개발 진출 교두보

UAE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 6위의 핵심 산유국이다. 아부다비에만 10억~100억 배럴 규모의 대형 광구가 존재한다. UAE는 주요 산유국 중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등 최적의 투자환경을 지닌 곳이다.

UAE는 1930년대 일찍이 기득권을 선점한 소수의 메이저 석유개발사와 1970년대 진출한 일본 기업 외에는 외국 기업의 진출 사례가 전무하며, 그간 우리나라에는 참여 기회 자체가 부여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UAE원전 수출 이후 상호 국가 간 신뢰 관계가 공고하여지면서 양국은 '100년간의 전략적 경제 파트너'로서 협력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정상급 회담을 통하여 UAE가 개발을 예정하고 있던 3개 미개발 광구에 대한 개발권을 우리나라에 주기로 약속하고, 이와 별도로 10억 배럴 이상의 대형 유전 개발 참여 기회를 보장받았다. 이는 전 세계 석유 메이저 회사만 진입하여 있는 UAE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일로, 국가간 지속적인 신뢰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가 되고 있다.

3. 볼리비아와 협력을 통한 리튬 협력기반 강화

이명박정부는 이차 전지의 필수원료인 리튬의 최대 매장국 (540만 톤)인 볼리비아 진출을 위하여 특사 외교를 적극 추진한 결과, 2011년 7월 리튬배터리 합작사업 MOU를 체결하고 2012년 3월 리튬 확보를 위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일본 등 다른 경쟁국에 비하여 볼리비아 리튬 확보를 위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미래 리튬 자원확보를 위한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

로 부족한 상황에서 메이저기업, 거대 국영기업과의 경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은 바로 '자원외교'이다.

### ① 높아지는 진입 장벽, 자원 외교로 완화

자원 확보는 정상급 자원 외교로 큰 물꼬를 트고 장관급 협의, 자원협력위원회, 해외 공관 등을 활용하여 전략적 파트너로서 신뢰를 쌓는 것이 관건이다. 자원외교는 우리 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② 자원 미개발 지역 적극 공략

해외 자원개발의 핵심은 유망 자원을 선점하는 것이다. 부존자원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상대국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공동 연구와 탐사를 진행, 사업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있다.

#### 정상급 자원외교 주요 성과(대륙별 정리)

구분	추진내용
중앙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빌 광구 탐사계약 체결(2008.11, 카자흐스탄)</li> <li>• 서페르가나-취나바드 광구 탐사계약 체결(2010.2, 우즈베키스탄)</li> <li>• 수르길 가스전 개발 연계 화학플랜트 건설 계약 체결(2011.8, 우즈베키스탄)</li> </ul>
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쿠르드 지역 5개 광권계약 및 사회기반시설건설계약 체결(2008.11, 이라크)</li> <li>• 한-이라크 경제-에너지 협력 촉진 협정 체결(2011.4, 이라크)</li> <li>• 석유·가스분야 개발협력 MOU 체결(2011.3, UAE)</li> <li>• 3개 미개발 광구 유전개발 HOT(2011.3, UAE)</li> </ul>
아프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잔드콥스드리프트(희토류) 투자기본계약 체결(2011.7, 남아공)</li> <li>• 희토류 가공기술 협력 MOU(2011.7, 남아공)</li> <li>• PML(코발트) 투자기본계약 체결(2011.7, DR공고)</li> <li>• 무소시 동광 개발을 위한 협력 MOU(2011.7, DR공고)</li> </ul>
대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카투사(석탄) 지분인수 계약 체결(2009.3, 호주)</li> <li>• 볼리아 탐사사업 합작계약(2009.3, 호주)</li> </ul>
남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튬 배터리 사업 협력 MOU(2011.7, 볼리비아)</li> <li>• 페로벌바(철광) 탐사계약 체결(2011.5)</li> </ul>

### ③ 자원 외교 확대 통한 미래자원 확보 기반 구축

이명박정부는 세계적인 자원부국들과의 다각적인 유대관계를 구축하여 미래 자원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굳혀가고 있다. 이러한 자원 외교 노력은 10년, 20년, 30년 후에 자원확보 성과로 결실이 드러날 것이다.

### (2) 공기업 대형화로 추진력 강화

자원개발은 대규모의 자본, 고도의 기술력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성공할 경우 수익 규모가 매우 크지만 그만큼 투자 위험도 높은 사업이다. 따라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의 리스크를 적절히 분산·완화하기 위하여는 기업 규모의 대형화가 필요하다.

이명박정부는 해외 에너지개발 전문기업과의 M&A, 유망 자산 인수를 통하여 자원개발 공기업의 규모를 확대하였다. 정부는 2008년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을 수립, 한국석유공사가 메이저 기업, 경쟁국 국영기업과 같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한국석유공사 인수기업

인수기업	계약시점	인수 당시 생산(천 b/d)
미국 Ankor사	2008.3	12
페루 Savia Peru사	2009.2	7
캐나다 Harvest사	2009.12	48
카작 Sumbe사	2009.12	1
영국 Dana사	2010.10	48
카자흐스탄 Altius사	2011.3	8

\* 한국석유공사 지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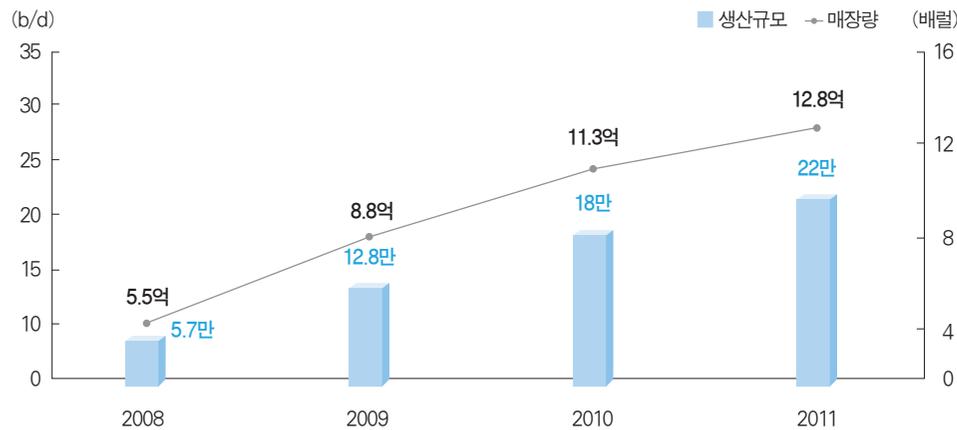
대형화의 핵심 내용은 일일 생산량 30만 배럴, 매장량 20억 배럴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략지역의 해외자원개발 전문기업과 유망한 대형 자산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말 한국석유공사 생산규모는 일일 18만 배럴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며,

#### 한국석유공사 생산 규모

구분	2008	2009	2010	2011
생산규모(만배럴/일)	5.7	12.8	18	21.9
매장량(억배럴)	5.5	8.8	11.3	12.8

한국석유공사 대형화 실적



2011년 말에는 22만 배럴까지 증가하였다.

한국석유공사는 그간 계획된 대형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수 기업과 기존 보유 자산의 생산성을 높이고 철저한 경제성 평가를 통하여 유망 자산을 신규로 인수하였다. 나아가 글로벌 석유기업으로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탐사역량 강화, 기술력 제고, 부채 관리, 인력 확보 등 내실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2008년 글로벌 광업 메이저 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지원중심의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투자 중심의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하고 주요 광물의 안정적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선도적 투자를 진행하였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자주개발이 부진한 동광에 대한 중점투자를 추진하여 미주 동벨트를 구축하고 유연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호주 지역을 공략하는 한편 아프리카에서 희유금속 확보를 적극 추진하는 등 대륙별로 특화 광종 거점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글로벌 메이저기업으로 육성하여 산업의 필수원료광물의 공급기반을 확충하도록 할 것이다.

(3)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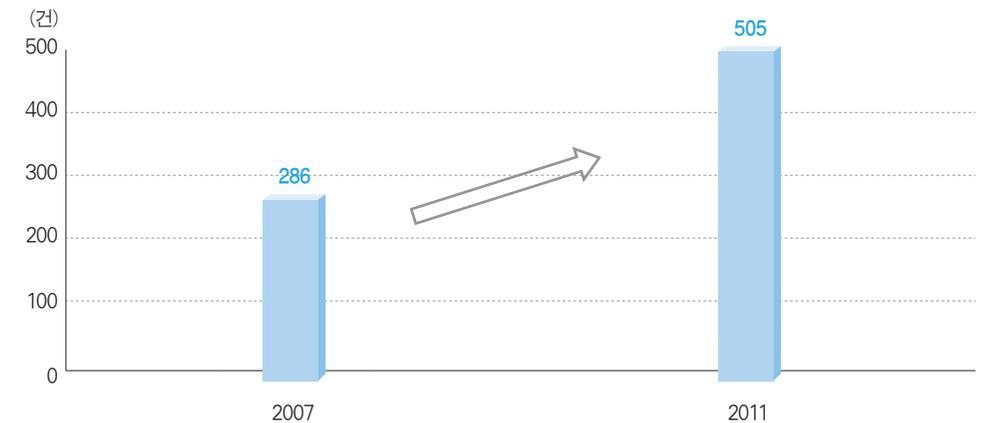
자원개발은 단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는 집념과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민간기업이 미래 유망성과 잠재력이 큰 지역은 어디든지 진출하여 자원영토를 넓힐 수 있도록 투자를 지원하였다.

자원개발 사업 분야 및 진출 국가는 2008년 이후 총 219개 사업에 신규로 진출, 2011년 말 현재 64개국에서 50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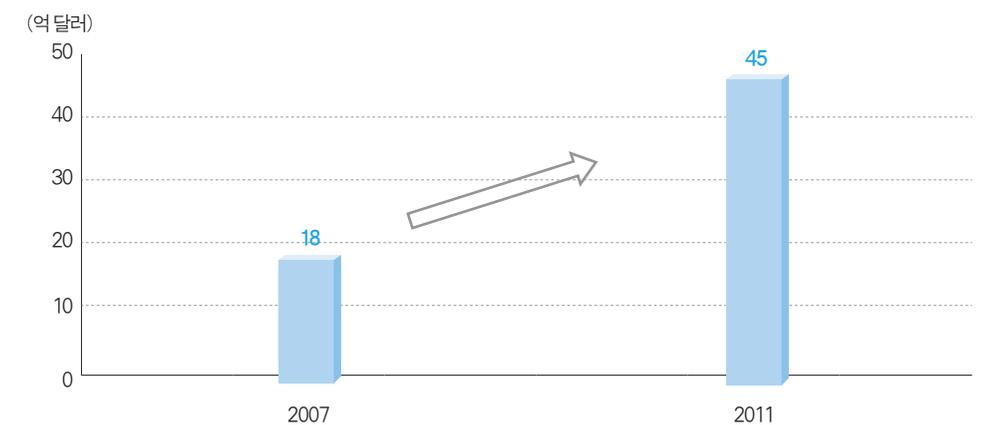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용자,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금융지원,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 공기업의 공동투자 등을 통하여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상승 완충 능력이 경쟁력과 직결되는 실수요 기업의 자원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2011년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투자규모는 45억 달러로 2007년 18억 달러 대비 약 2.5배 증가하였다.

해외자원개발 참여사업 현황



자원개발 민간기업 투자규모



사례

1. 브라질 유전개발

SK이노베이션은 2000년부터 7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한 브라질 유전개발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24억 달러에 매각(2011.7)하고, 매각 대금 전액은 자원개발에 재투자하기로 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로서 정부 지원을 통하여 탐사에 성공하고 그 성과를 통하여 유망 사업에 재투자하는 최초의 사례였다.

2. 미얀마 가스전개발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 개발에 진출하여 3개 가스전에서 대규모 가스를 발견, 4조 5,000억 입방피트(원유 환산 시 약 8억 배럴)의 매장량을 확보하였다. 미얀마 가스전은 과거 프랑스 토탈사 등 메이저 기업들조차 시추작업을 7회에 걸쳐 진행하고도 개발에 실패하였던 곳이다. 이렇듯 리스크가 매우 큰 상황에서 대우인터내셔널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탐사 기법을 적용하고 정부의 성공불 용자를 활용함으로써 높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미얀마의 3개 광구는 2013년부터 본격적인 자원 생산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4. 넓어지는 대한민국 자원영토

(1) 자주개발률, 획기적으로 상승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한 결과 해외자원개발의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인 자주개발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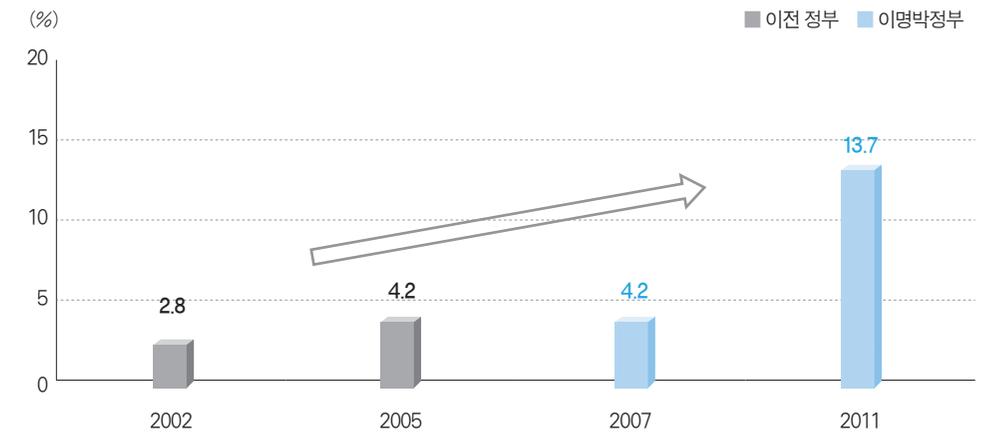
①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10% 돌파, 생산량 3배 상승

2007년 4.2%에 불과하였던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2011년 13.7%를 기록하였으며, 생산량은 2007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전 노무현정부의 자주개발률이 1.4% 증가(2002년 2.8%→2007년 4.2%)에 그치고, 일본도 최근 20%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괄목할 만한 증가세이다.

자주개발률은 비정상적인 자원 가격 급등, 공급 제한 등과 같은 자원시장 교란 시에도 우리나라가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원 확보 수준을 나타내며, 자주개발률이 상승할수록 위기 완충 능력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변화



2007~2011년간 전략광물 자주개발률(액) 실적

종류	연도	2007년 실적 (%)	향상	연도	2011년 실적 (%)
① 유연탄	2007	37.7%	⇒	2011	52.2%
② 우라늄	2007	0%	⇒	2011	6.6%
③ 철광석	2007	10.7%	⇒	2011	15.3%
④ 동	2007	4.7%	⇒	2011	10.2%
⑤ 아연	2007	33.2%	⇒	2011	24.7%
⑥ 니켈	2007	26.1%	⇒	2011	30.5%

② 6대 전략광물 자주개발률 급상승

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 광물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자주개발률이 2007년 18.5%에서 2011년 29.0%로 급상승하였다. 첨단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리튬과 희토류 등 신 전략광물도 2011년 12.0% 자주개발률을 달성하였다.

(2) 정상급 외교로 유전개발 분야의 프리미어리그 UAE 진출

전세계 석유 매장량 6위인 UAE는 중동의 핵심 산유국으로, 대형 광구가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이미 기득권을 선점한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 메이저 기업 외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외국 기업의 자원개발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자원개발 분야의 프리미어리그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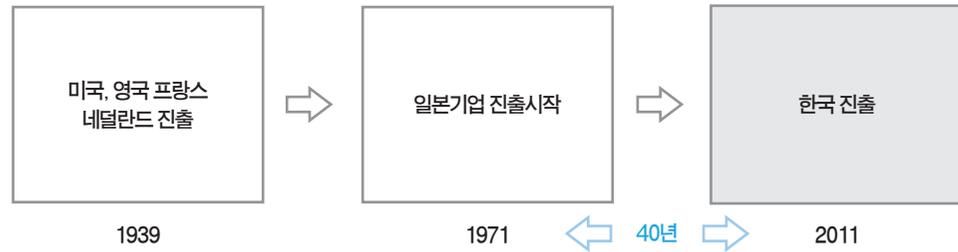
2009년 UAE원전 수출을 계기로 상호 신뢰가 돈독하여짐에 따라 양국은 '100년간의 전략적 경제 파트너'로서 협력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하게 되었고, 정상외교를 계기로 3개 미개

발 광구에 대한 개발권과 10억 배럴 이상의 대형 유전 개발 참여 기회를 보장받았다.

전 세계 메이저 기업들만 진출하여 있는 UAE에 자원개발 역사가 짧은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자원외교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이다.

**UAE 진출국가 연혁**

한국은 4대 메이저(1939년) 및 일본기업(1971년) 이후 40년 만에 UAE에 진입한 유일한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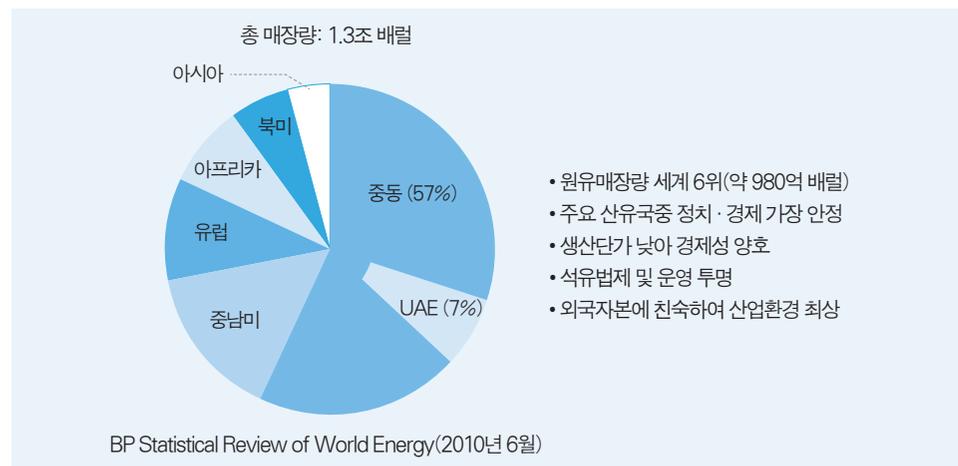


**(3) 세계 3위 원유 매장국 이라크 대형유전 개발**

이라크는 세계 3위 원유 매장국으로서 2017년까지 일일 1200만 배럴 생산 능력을 갖춰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에게 이라크는 얼마 남지 않은 ‘이지 오일’ (easy oil: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질 좋은 원유)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이 2008년부터 쿠르드 지역 5개 광구에서 탐사를 진행

**UAE 석유산업 현황**



하였으며, 2013년까지 탐사 시추를 추진하여 상업성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주바이르(2009.1), 바드라(2010.1), 만수리아(2011.6), 아카스(2011.10) 등 대형 유전과 가스전에 진출하였다.

특히 주바이르 유전은 매장량 63억 배럴의 초대형 유전(가스공사 지분 18.75%)으로, 2012년 9월 기준 일일 27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다.

**(4) M&A를 통한 지역별 거점 확보와 역량 강화**

M&A는 단기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규모와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또한 자원개발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지 개발 경험이 많고 제도에도 익숙한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이를 거점으로 인근 지역에 보다 효율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이에 이명박정부는 전략적인 M&A를 통하여 북미와 남미,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전역으로 자원 생산 거점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2008년 1월 미국 Ankor사 인수를 시작으로 총 6개의 해외 전문기업을 인수하였다. 북미(미국 Ankor사 광구, 캐나다 Harvest사), 남미(페루 Savia-Peru사),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Sumber사, Altius사), 유럽·아프리카(영국 Dana사) 등 전 세계에 걸쳐 지역별 거점을 마련하였으며, 약 2,000명에 이르는 자원개발 인력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석유공사는 세계 90위권 기업에서 70위권 기업으로 도약하였다.

한국광물공사는 자주개발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동광 확보를 위하여 미주 지역에 대규모 동광을 다수 보유한 캐나다 기업 Capstone(캡스톤)사와 FWM(파웨스트마이닝)사의 지분을 인수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미주지역을 관통하는 동벨트를 구축하였다.

**(5) 아프리카에서 대규모 가스개발 성공**

2012년 아프리카에서 낭보가 전하여졌다.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한 모잠비크 북부 해상 광구에서 초대형 천연가스전이 발견된 것이다.

2012년 12월현재까지 발견된 가스량만 총 22.5Tcf(약 5억 1,000만 톤) 수준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지분을 10%에 해당하는 5,100만 톤을 확보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1년 반 동안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이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자원량은 1개 탐사정만 시추한 결과로, 2013년 1월까지 추가로 2개 탐사정을 시추할 계획이기에 향후 가스 발견 물량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성과는 미개척 지역인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스부존을 확인한 것으로, 향후 자주개발을 제고와 천연가스 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모잠비크와 체결한 'LNG액화플랜트·배관 건설·수송·도입 등 연관분야 협력 MOU(2010.11)'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가스공사가 모잠비크에서 거둔 놀라운 결과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4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묵묵히, 과감하게 미래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투자한 우리의 노력은 이제부터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성과가 모여 대한민국은 에너지 독립국으로 성장하여 나갈 것이다.

#### (6) 산업자원 동반진출을 통한 성공 모델 구축

우리나라는 세계 4위 에너지 수입국. 하지만 자원 보유국이 필요로 하는 탄탄한 제조업과 IT기술을 등 떠어난 산업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보유국과 상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산업자원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1년 4월 체결한 '한·이라크 경제·에너지 협력 촉진을 위한 협정'은 산업자원 동반진출의 좋은 성공모델이다. 우리나라는 이라크 유전개발 진출과 더불어 비상 상황 시 최소 일산 25만 배럴의 원유 우선공급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였다. 산업 측면에서는 STX중공업이 총 30억 달러 규모의 디젤발전기 건설계약을 체결(2011.5)하였고, 한화건설은 이라크 정부와 총 7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주택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합의서(MOA)를 체결(2011.5)하여 이라크의 경제 재건에 참여하고 있다. 향후 이라크와의 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순방 때 우리 기업들이 아랄해 인근 수르길 가스전 개발과 연계하여 인근 지역에 가스화학플랜트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총 사업비 4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수르길 프로젝트'는 한·우즈베크 간 대표적 협력사업으로, 성공 시 자원과 산업기술을 결합한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사업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7) 우리나라 자주개발 물량 최초 확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31%를 차지하는 원전의 운영을 위한 필수 연료이기 때문에 안정적 확보가 어떤 자원보다 중요하다. 이명박정부에서는 해외 우리나라 생산 물량 확보를

위하여 광산개발에 주력하여 2009년 최초로 자주개발 물량을 확보하였다.

한국전력은 2009년 캐나다 테니스 우라늄 광산 개발에 참여하여 최초로 연간 135톤 규모의 우라늄 자주개발 물량을 확보하였고, 단기간 내에 6.6%(2011년 말 기준)에 달하는 자주개발 물량을 달성하였다. 캐나다 테니스 사업 외에도 우라늄 광산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하여 자주개발 역량을 높여가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니제르테기다(2011년 생산), 이모라렝(2013년 생산) 사업에 진출하여 생산,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탐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 우라늄 공급여건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8) 미래 핵심 산업의 필수 원료, 희유금속 집중 확보

희유금속은 IT, 녹색산업 등 첨단 하이테크 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필수 원료 광물로서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자원의 희소성과 비대체성 등에 따른 공급불안과 가격 급등 가능성이 높은 자원이다.

이명박정부는 희유금속 산업 종합대책(2009.10), 희유금속 안정적 확보 방안(2010.10) 등을 통하여 희유금속 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신산업 연계성이 높고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리튬, 희토류를 신전략광물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하여 나가고 있다.

#### ① 리튬, 국내 수요의 6배 규모 확보

2차전지산업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 칠레·아르헨티나 지역 개발 사업을 통하여 국내 수요의 6배 규모에 달하는 물량을 확보하였다. 2014년부터 칠레 엔엑스우노 광산에서 연간 4만 톤, 아르헨티나 살데미다 광산에서 연간 1만 2,000톤을 생산하여 반입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 최대 리튬 매장국인 볼리비아와도 정상급 자원외교를 통하여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09년 8월 연구협력에서 출발, 리튬 사업화 협력을 거쳐 배터리 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양국의 협력 사업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 리튬협력사업 경과

- '유유니 리튬개발 및 산업화 연구 MOU'  
- 특사 방문(2009.8)
- '볼리비아 리튬 소재산업 협력 MOU'  
- (2009.10)
- 리튬 산업화 협력 MOU  
- 볼리비아 대통령 방한(2010.8)
- 리튬 배터리 사업 협력 MOU  
- 특사 방문(2011.7)

② 희토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사업 확대

희토류는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인하여 공급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희토류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잔드콧스드리프트 탐사 사업에도 진출하여 개발 지역을 다변화하고, 중국 포두영신 개발사업을 통하여 희토 영구자석 1,500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9) 이제는 대규모 사업으로 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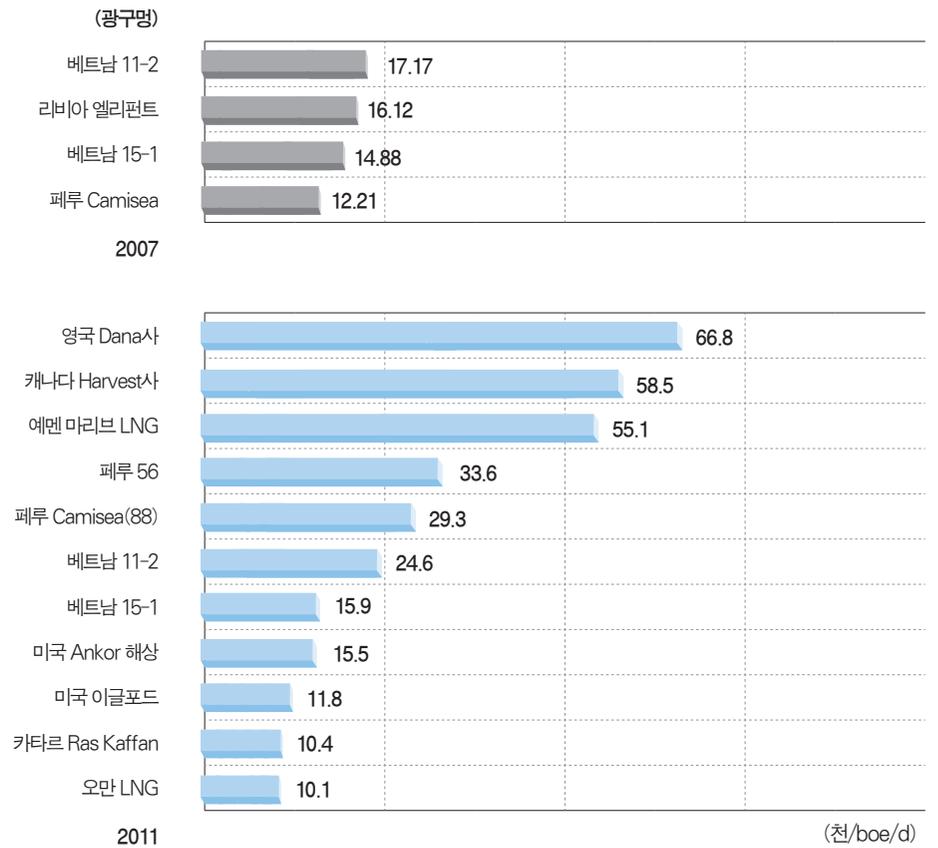
과거 우리 기업들은 투자 역량 미흡,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인하여 주로 소규모 사업에 단순 지분투자 형태로만 참여하였다. 하지만 해외 자원개발 여건이 급변하면서 소극적인 투자로는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대형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① 일일 생산량 1만 배럴 이상 대형 프로젝트 추진

2007년까지 추진된 해외 석유·가스개발 사업 중 우리 측이 확보한 물량이 일일 1만 배럴 이상인 사업은 베트남 11-2, 베트남 15-1, 리비아 엘리펀트, 페루 Camisea 등 4개에 불과하였다. 당시 우리나라가 확보한 총 물량이 일일 12만 배럴에 불과하였으므로 작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지분참여 형태의 소규모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이명박정부에 들어서서는 과감한 투자로 일일 생산량 1만 배럴 이상 사업이 11개로 증가하였다. 캐나다 Harvest(일일 5만 8,000배럴), 영국 Dana(일일 6만 7,000배럴) 등 일일 생산량 5만 배럴 수준의 대형사업도 추진하였다.

자주개발물량 1만 배럴 이상 광구 현황



② 주요 광물의 대규모 사업 확보

코브레파나마 동광 개발, 인도네시아 바안리소스 유연탄 개발, 브라질 MMX 철광석 개발 등의 대형 사업을 확보하여 산업원료 광물의 수급기반을 강화하였다.

## 5.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궁금증 Q&A

Q1: 리스크가 큰 해외 자원개발은 민간기업 중심으로 추진하면 된다?

A: 자원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최근 자원 보유국들의 통제가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런 여건 하에서 일부 메이저 기업을 제외하고는 정부와 연결된 공기업을 선호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기 지표에 민감한 민간기업의 투자는 한계가 있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자원개발 특성상 규모와 역량이 취약한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자원개발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등 많은 나라들이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고 있다.

리스크가 큰 해외 자원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정부와 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기업이 자원개발의 첨병이 되고, 민간기업과 협력함으로써 해외 자원 개발 동반 진출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다.

Q2: 자원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물량은 당장 도입이 어려워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

A: 해외 자원개발은 자원공급 제한, 가격 급등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평상시 우리 기업의 자원개발 생산량이 크지 않은 경우, 국내 자원 도입에 따른 수송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를 생산지역에서 바로 처분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당장 도입하지 않더라도 비상 상황에서 긴급히 필요로 할 경우 도입을 추진할 수 있고, 인근 지역으로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하여 자원개발 생산량을 늘려 미래 도입 가능성도 높여갈 수 있다.

따라서 당장 도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원개발 투자를 축소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개발된 자원의 국내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현재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Q3: 해외 자산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 있다?

A: 해외 자원개발기업 M&A, 신규 광구 매입, 지분참여 등을 추진할 경우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가격은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공기업 자체평가 외에 해외 유수의 컨설팅 회사와 함께 면밀하게 사업성과 기술성을 평가한 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하여도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통하여 검증하고 있다.

일례로, 석유공사가 Harvest사를 인수할 때 컨설팅 그룹 메릴린치를 통하여 자산 실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수 대상의 현재 가치·기술력·발전 가능성·유가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총 인수가격(39억 5,000만 달러)은 자문사 메릴린치에서 제안한 인수가격(39억~43억 달러)의 최저 수준이었다. 이에 대하여 파이낸셜 타임즈 등 해외 언론에서도 적정한 가격 수준으로 평가한 바 있다.

Q4: 투자회수율이 낮아지고 있다는데?

A: 자원개발 사업 추진은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가스공사가 초대형 가스전을 발견한 모잠비크의 경우, 2007년 가스공사가 사업 참여 여부 결정시 세계적인 자원평가 전문기관인 RPS와 공동으로 유망성을 면밀하게 평가하였다.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내 천연가스 소비량의 약 1년 반치인 5,100만 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우리 기업들은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추진사업의 유망성을 수시로 재평가하면서 필요 시 자산을 매각하는 등 투자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은 일반적으로 탐사(2~5년)-개발(2~5년)-생산(10~30년)단계를 거쳐 추진되며, 비용은 탐사, 개발단계에서 집중되는 반면 수익은 생산 단계 전 기간에 걸쳐 창출된다. 따라서 최근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투자회수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측면은 있으나 향후 생산이 본격화되면 안정적 수익 확보로 투자 회수율도 상승할 전망이다.

Q5: 탐사성공률이 낮은 이유와 개선방안?

A: 오랜 석유개발 역사를 갖고 있는 세계 주요 석유개발 기업의 탐사성공률은 20~30%, 그보다 작지만 글로벌 기업으로서 입지를 구축한 독립계 기업은 15~20% 수준이다. 우리 기업들은 아직 이보다 낮은 10~15% 수준이다. 우리 기업들의 탐사성공률이 낮은 이유는 1981년 처음 석유개발을 시작, 축적된 경험이 부족하고, 선진 기업에 비하여 우수인력과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탐사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우리 기업들로부터 이미 인수한 해외 석유개발 기업이 갖고 있는 지역 전문성, 우수인력 및 기술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기업이 처음부터 유망성이 높은 탐사사업을 선별·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국석유공사 등에 유망지역을 연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10~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해외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인적 역량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Q6: UAE 유전개발사업 진출은 단순한 참여 응모권에 불과한 것 아닌가?

A: 2011년 3월 UAE측과 우리나라는 개발을 예정하고 있던 3개 미개발 광구에 대한 주요조건 계약서(Head of Terms, 이하 HOT)와 10억 배럴 이상의 대형 유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HOT와 MOU는 칼리파 대통령 등 아부다비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공식 서명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에게 특별한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문서이다. 특히 UAE 정부가 기존에 이와 같은 유전개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MOU를 타국과 체결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최소 10억 배럴 이상의 UAE 아부다비 대형 유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은 것이며, 우리 측의 구체적 참여 방식과 지역은 2014년부터 종료 예정인 UAE측과 석유 메이저 회사들 간의 조광권 계약 재협상에 맞추어 결정될 예정이다. HOT를 체결한 3개 유전은 UAE측이 70~80년대 시추를 통하여 원유 부존을 확인하였으나, OPEC 생산 쿼터량 등을 감안하여 개발을 미뤘은 것으로, 한국석유공사 기술진이 평가(2010.8)한 결과 5.7억 배럴의 발견원시부존자원량(Discovered Petroleum Initially In Place)을 확인하였다. 양국 석유공사는 세부사업 조건 등을 확정하여 2012년 3월 5일 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탐사 시추 및 상업성 평가를 진행하여 구체적인 매장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 부록 3

## 정책일지

[FTA 일지]

2009년

일자	주요 정책
3.16	한·페루 FTA 협상 개시
5.1	한·ASEAN FTA 서비스 무역협정 발효
5.19	한·호주 FTA 협상 개시
6.2	한·ASEAN FTA 투자협정 서명
6.8	한·뉴질랜드 FTA 협상 개시
7.13	한·EU FTA 협상타결 선언
8.7	한·인도 CEPA 정식서명
9.1	한·ASEAN FTA 투자협정 발효
10.15	한·EU FTA 가서명
12.7	한·콜롬비아 FTA 협상 개시

2010년

일자	주요 정책
1.1	한·인도 CEPA 발효
4.26	한·터키 FTA 협상 개시
5.12-14	한·뉴질랜드 FTA 제4차 협상
5.24-28	한·호주 FTA 제5차 협상

일자	주요 정책
8.30	한·페루 FTA 협상 타결
10.6	한·EU FTA 정식서명
11.15	한·페루 FTA 가서명
12.3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2011년

일자	주요 정책
3.21	한·페루 FTA 서명
7.1	한·EU FTA 잠정발효
8.1	한·페루 FTA 발효
11.22	한·미 FTA 비준동의안 및 14개 부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22	FTA 활용 방안 발표

2012년

일자	주요 정책
3.15	한·미 FTA 발효
3.26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가서명
3.28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개시 선언 합의
5.2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
5.14	한·중 FTA 협상 개시
6.25	한·콜롬비아 FTA 협상 타결 선언
7.12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개시
8.1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정식서명
8.31	한·콜롬비아 FTA 가서명
9.3	한·베트남 FTA 협상 개시
11.20	한·중·일 FTA 협상개시 선언 RCEP 협상개시 선언
11.22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무역, 자원개발 및 원전일지]

※ 파란 색은 자원개발 및 원전 관련

## 2008년

일자	주요 정책
3.21	전시산업발전법 공포
5.15	디스플레이산업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선포
5.16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무역강국 실현계획 발표
5.22	LED산업 신성장동력화 발전전략 수립
6.10	부품·소재 Korea Business Plaza(일본 도쿄)
6.13	한국석유공사 대형화 계획 발표
6.24	주력산업과 IT산업의 융합촉진 방안 발표
6.25	시스템반도체산업 발전 전략 수립·발표
7.10	뉴 IT전략 발표(New IT산업 비전 달성 민관 추진전략)
9.5	2차 전자산업 발전전략 수립
11.4	수출확대 전략 및 대책 발표
11.17	부품소재 전용공단 투자유치 로드쇼, 한일 부품소재 수출 상담회 개최
11.21	제2회 에너지·플랜트 국제심포지움 개최
12.2	제45회 무역의 날 행사 개최
12.23	전시산업발전 5개년 계획 발표

## 2009년

일자	주요 정책
1.13	제2차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 발표
2.25	신성장동력 육성방안 발표
3.26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4.16	한일 부품소재 조달·공급 전시회 개최, 수출진흥대책 발표
4.30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5.21	최근 중국경제 동향 및 대중교역확대방안 발표
6.4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 발표
7.23	플랜트 수출확대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7.27	IT전략기술 로드맵 2015발표

일자	주요 정책
9.2	IT Korea 미래전략 발표
10.15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출범
10.29	소재산업 발전대책 발표
11.3	제46회 무역의 날 행사 개최(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2010~2014)계획 발표)
11.5	조선산업 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
11.12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 발표
11.23	IT융합 발전전략 수립
12.27	UAE원전 수주

## 2010년

일자	주요 정책
1.13	원자력발전 수출 산업화 전략 발표
1.14	글로벌 모바일클러스터 구축 선포
1.21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2010~2019) 발표
2.4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전략 발표
2.25	정상외교 경제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전략 발표
2.28	신고리 1호기 상업운전(준공)
3.18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 발표
4.5	무역보험법 개정(채권발행 등 제도 신설) 대외무역법 개정(단순가공 후 원산지 표시의무 도입 등)
4.8	3D산업 발전전략 발표, 콘텐츠-미디어-3D산업 발전전략 발표
5.6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
5.11	u-Health 신산업 창출전략 발표
6.23	전시·회의산업 발전방안 발표
7.13	2차 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7.21	IT융합 확산전략 발표
8.4	Invest KOREA 투자종합상담센터 개소
9.3	10대 핵심소재 WPM 사업단 출범·투자 협약식 개최
9.9	시스템반도체 및 장비산업 육성전략 수립 전기차 개발 및 보급 계획 발표 및 전기차 출시 행사
9.17	숙련집약형 패션산업 육성방안 보고
9.30	10대 핵심소재 WPM 사업단 출범·투자 협약식 개최

일자	주요 정책
10.12	IT산업비전 2020 발표
10.13	플랜트 기자재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
10.14	원자력 발전 인력 수급전망과 양성대책 발표
11.30	제47회 무역의 날 행사 개최(G20시대 무역정책방향 발표)
12.22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발표

## 2011년

일자	주요 정책
1.25	4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 보고 및 시연회 개최
2.10	2011년 수출입여건 및 대응과제 발표
3.13	UA유전참여 서명식
4.6	스마트 TV산업 발전전략 발표
4.28	한·이라크 경제·에너지 협력 촉진을 위한 협정 서명
4.29	창업성과 점검 및 글로벌 창업촉진 대책 발표
5.18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위한 MOU’ 체결
5.11	LED산업 제2도약 전략 발표,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 범부처 패션산업 지원연계 방안 발표
6.2	바이오헬스 융합의 글로벌 산업화 전략 발표
6.8	녹색 LED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 발표, 자동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제고대책 발표
6.16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방안 발표
7.28	국제경제 동향 점검
8.18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여건 점검
9.28	플랜트기자재 전시회(9.28~10.1),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개관 한국산업대전(전시면적 10만㎡) 개최
10.20	IT미래비전기획단 출범
10.27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 발표
11.1	소재·부품 미래비전 2020 발표
11.10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 절약대책 발표
11.14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시효 연장)
12.5	세계 9번째로 무역1조 달러 달성
12.12	제48회 무역의 날 행사 개최(무역비전 2020 선포)
12.19	자원개발기술 전략로드맵 수립
12.22	FTA 활용지원방안 발표

## 2012년

일자	주요 정책
1.19	수출 기업인 간담회 개최
2.3	무역 2조 달러 도약 전략, 문화수출 확대 전략, 농식품수출 확대전략 발표
2.16	자원개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발표(제114차 비상경제대책회의)
2.23	지식경제부-Boeing 소재부품 글로벌 동반성장 MOU 체결
2.24	해외 원전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방안 발표
3.5	UAE 3개 미개발 유전 본계약 체결
3.15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발표
4.23	Giga Korea 전략 발표
5.1	지식경제부 내 중견기업국 신설
5.9	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안 발표
6.14	2012년 하반기 수출여건 및 대응과제 발표
7.20	신고리 2호기 상업운전(준공)
7.26	수출·제작 금융 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
7.31	신월성 1호기 상업운전(준공)
8.9	중견기업 3,000+ 프로젝트 수립
8.16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방안 발표
9.6	최근 대외경제 및 수출여건 점검
9.6	‘세일가스 개발·도입 및 활용전략’을 발표
9.7	IT융합 확산전략 2013~2017 발표
9.13	카자흐, 발하쉬 화력발전소 착공식 참석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 수립
9.14	신규 원전부지 예정구역 지정고시
10.5	최근 수출입 동향 및 4분기 수출확대 지원과제 발표 Global Business Plaza 개최
10.25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
10.29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11.1	소재·부품산업 성과 보고대회 개최
11.21	UAE원전 본공사 착공 기념식 개최
12.5	제49회 무역의 날 개최(세계 무역 8강 진입)
12.14	해외 자원개발 성과 보고대회 개최

## 부록 4

# 집필참여자

### 대통령실

김대기 정책실장 겸 경제수석

강길성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이용욱 지식경제비서관실 행정관

강남훈 지식경제비서관

박찬기 지식경제비서관실 행정관

윤종원 前 경제금융비서관

### 외부전문가

송병준 산업연구원 원장

채 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